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9대 총선 선거기사심의백서를 펴내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그 결과물로 심의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과거에 비하여 금권선거, 관권선거 등 전형적인 불법 선거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일부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은 야권의 심판론과 여당의 쇄신론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점하려는 정당들 및 후보자들의 치열한 각축이 벌어져 격전지가 속출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55%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습니다만 일부 매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부정적인 내용을 연속 보도하였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였으며, 특정 후보자 명의의 기고문을 크게 게재하는 등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쇄매체인 신문이 다수 유권자들에게 주는 각인 효과 및 신뢰도가 매우 높은 매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후보 및 다른 후보에게 미치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각 정당의 정책, 각 후보들의 공약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겠으나, 언론은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과 형평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언론보도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심의결과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는 과감한 제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기 동



를 가하였습니다.

이번 선심위에서 처리한 132건 중 언론사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결정은 총 12건으로 사과문 게재 결정이 7건이었고,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5건이었습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법률유보원칙상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의기준 위반 정도에 비례해서 제재수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속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각종 제재조치가 실효적으로 정비되길 기대합니다.

언론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도 많았지만 고의적으로 편파보도를 해서 공정보도의무를 저버린 언론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고, 주의 등 이행을 요하지 않는 제재를 받은 매체 중 어떤 곳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결국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고 나서야 위반행위를 중지하였습니다.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고도 사과문이 게재된 지면에 해당 매체가 지지하는 후보 관련 기사를 나란히 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도적 미비로 인해 불공정한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속히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총 13차에 걸친 회의에서 열성적이고 진지하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해 주시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심위의 활동 내역이 담긴 백서가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차 례

심의위원장 인사말 / 제19대 총선 선거기사심의백서를 펴내며	6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제1장 위원회 구성	12
제2장 심의·의결 절차	15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7
제2부 심의·의결 현황	19
제1장 심의 운영방침	20
제2장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21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21
1. 자체 심의	21
2. 시정요구 심의	22
II. 자체 심의 분석	24
1. 위반유형별 분석	24
2. 결정유형별 분석	30
3. 매체유형별 분석	38
III.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41
1. 사과문 게재	42
2. 정정보도문 게재	43
3. 반론보도문 게재	43
4. 경 고	44
5. 기 각	44
6. 각 하	45
7. 취 하	46

제3부 종합평가	49
제1장 심의위원 평가	50
제2장 결산 좌담	56
제4부 심의·의결 사례	63
제1장 자체심의	64
1. 사과문 게재	93
2. 정정보도문 등 게재	96
3. 경 고	127
4. 주 의	271
5. 권 고	337
제2장 시정요구심의	337
1. 사과문 게재	337
2. 정정보도문 게재	352
3. 반론보도문 게재	359
4. 경 고	362
5. 기 각	371
6. 각 하	382
7. 취 하	383
제5부 부 록	397
1. 선거기사심의기준	398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402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12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425
5. 색 인	429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 위원회 구성
제2장 / 심의 · 의결 절차
제3장 /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1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기간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이며 2010년부터 보궐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심의위원회와 제19대 총선 심의위원회가 최초로 동시에 운영됐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 영 기 간	선 거 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보궐선거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2012. 5. 11.	2012. 4. 11.	

2. 구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신문협회, 공정언론시민연대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한나라당(후에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 민주당(후에 민주통합당으로 당명 변경)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장	박 기 동	현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원 병 설	현 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문 명 호	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공정언론시민연대	(시민단체)
	박 석 태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황 의 봉	현 세종대학교 초빙 교수	신문협회	
	김 택 근	전 경향닷컴 사장	민주당	
	이 성 섭	현 법률사무소 법현 대표변호사	한나라당	
	이 준 웅	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계)
	조 우 성	현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

체심의회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사진〉

1. 자체심의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 심의원과 심의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 기사 심의 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외부심의

정당(중양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illegible]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2년 3월 5일)

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언론중재위에서 준비함에 따라 선심위 규칙상 제재조치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 선심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를 통해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보도심시기구 제재조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07. 11. 29. 2007헌마290)을 존중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강도가 강한 것부터 열거하며 주의, 권고 외에 ‘경고’를 부활했다.

둘째, 선심위 안전에 대해 권고 등의 조치 및 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견진술을 생략하도록 했다.

셋째, 시정요구 및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를 결정문으로 송부함에 따라 별도 처리결과통보서 서식을 삭제하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2.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2012년 3월 7일)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첫째, 선거기사의 범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의 범위를 일반 보도 외에 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언론사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고금지규정에서 예외조항의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셋째, 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 중 경고조치를 부활하고 사과문 게재결정의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제재조치의 유형과 요건을 재정비했다.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제2부

심의 · 의결현황



제1장 / 심의 운영방침

제2장 / 심의 · 의결현황 및 분석

제1장

심의 운영 방침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의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활용되어 온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언론사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조치로서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변형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모 방송사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조치인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에서 아무리 약한 제재조치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강하게 천명하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7헌마290 2007. 11. 29. 전원재판부). 따라서 이번 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규칙 및 심의기준에만 변형결정을 유지하고 실제로는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거법상 규정된 사과문 게재 결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또는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기로 했다.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기로 했다. 그리고 언론사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 제재로서 주의 및 권고 외에 경고를 다시 부활시켜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는 사과문 게재의 바로 아래 조치로서 주의 결정이 너무 약하다는 내부 검토에 따른 것인데, 경고조치와 사과문 게재결정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서 이로 인해 제재조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의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제2장

심의 · 의결현황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시정요구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I. 심의 · 의결 현황 개요

1. 자체 심의

심의실무를 담당하는 기사심의팀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추천을 받아 채용한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심의위원들과 함께 대상매체(중앙일간지 31개, 지역일간지 101개, 종합주간지 32개, 지역주간지 220개, 특수주간지 1개, 월간지 25개, 뉴스통신 3개 등 총 413개)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심의위원회는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107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107건 중 주의가 58건(54.2%)로 가장 많았고, 권고 33건(30.8%), 경고 11건(10.3%) 그리고 사과문 게재 결정이 4건(3.7%), 정정보도문 등 게재결정이 1건(0.9%)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62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금지 위반 17건(15.9%), 광고 제한 위반이 15건(14%),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13건(12.1%)이었다.

【자체심의 회차별 의결현황】

구분 회수	결정 건수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2 차	3	3								2	1
3 차	5	3			1	1				1	4
4 차	14	7			2	5		1		6	7
5 차	14	9	2		2	1				11	3
6 차	17	8	4		1	4				9	8
7 차	10	8	1			1			3	6	1
8 차	11	5	5		1		1			5	5

9차	9	5	1			3	1		2	4	2
10차	15	5			8	2	1		5	7	2
11차	7	7					1			6	
12차	2	2							1	1	
계	107	62	13	0	15	17	4	1	11	58	33
	100.0%	57.9%	12.1%	0.0%	14.0%	15.9%	3.7%	0.9%	10.3%	54.2%	30.8%

각 매체 유형별 의결현황을 보면, 일간지는 65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종합일간지는 16건, 지역종합일간지는 49건의 제재를 받았다. 일간지 제재 65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7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10건(15.3%), 광고제한 및 외부기고 각각 9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내용별로는 주의가 30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권고 27건(41.5%), 경고 6건(9.2%) 그리고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및 사과문 게재가 각각 1건(1.5%)이었다.

주간지는 39건의 제재를 받았고 세분화해보면 종합주간지 13건, 지역주간지 25건, 특수 주간지가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 22건(56.4%), 외부기고 8건(20.5%), 광고제한 6건(15.4%),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3건(7.7%)이다. 결정내용별로는 주의가 25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권고 6건(15.4%), 경고 5건(12.8%) 그리고 사과문 게재가 3건(7.7%)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결정내용은 주의 3건이었다.

자체심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건으로 재심심의 결과 기각됐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간 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일 간 신 문	중앙	16	5	1		6	4			4	9	3
	지역	49	32	9		3	5	1	1	2	21	24
종합주간지		13	9	3			1	1		2	7	3
지역주간지		25	13			6	6	2		3	17	3
특수주간지		1					1				1	
월간지		3	3								3	
뉴스통신		0										
총 계		107	62	13	0	15	17	4	1	11	58	33
		100.0%	57.9%	12.1%	0.0%	14.0%	15.9%	3.7%	0.9%	10.3%	54.2%	30.8%

2. 시정요구 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23건으로 매

체별로는 중앙일간지 8건, 지역일간지 4건, 지역주간지 10건, 뉴스통신 1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전을 심의·결정했으며, 처리결과는 사과문 게재 3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 3건, 기각 5건, 각하 1건, 취하 8건이다. 취하된 8건 중 6건은 신청 후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게재됐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건으로 1건은 취하되었으며, 1건은 기각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시정요구심의 회차별 처리현황】

구분 회차	회차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외 부 기 고	객관성 및 사실보도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취 하	기 각	각 하
3차	2	1			1							1(1)		1
5차	1	1											1	
6차	3	2			1		1	1				1(1)		
7차	4	2			2		1					2(1)		
8차	1	1				1						1(1)		
10차	2	1			1				1			1(1)		
11차	6	2			4	1			1			1(1)	3	
12차	4	3			1	1			1			1	1	
계	23	13			10	3	2	1	3			8(6)	5	1
	100.0%	56.5%			43.5%	13.0%	8.7%	4.3%	13.0%			34.8%	21.7%	4.3%

* () 안의 숫자는 신청 후 정정(반론)보도 또는 보도약속 등으로 취하된 건수임

【시정요구심의 매체유형별 처리현황】

구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객관성 및 사실보도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취 하	기 각	각 하
일간 신문	중 앙	8	4					4			1				3 (2)	3	1
	지 역	4	2					2		1					2 (1)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10	7					3	3	1		3			2 (2)	1	
월간지																	
뉴스통신		1						1							1 (1)		
총 계		23	13					10	3	2	1	3			8 (6)	5	1
		100.0%	56.5%					43.5%	13.0%	8.7%	4.3%	13.0%			34.8%	21.7%	4.3%

* () 안의 숫자는 신청 후 정정(반론)보도 또는 보도약속 등으로 취하된 건수임

II.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해 제재조치를 한 선거기사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07건 중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62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금지 위반 17건(15.9%), 광고 제한 위반이 15건(14%),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가 13건(1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사건은 선거 직전에 건수가 늘어났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심의 중반에 제재가 몰리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2011년 재보궐 선거 및 이번 총선 선심위 출범 시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등 심의에 자주 걸리는 유형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으로 공정보도협조 공문을 각 언론사 등에 발송한 영향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할 경우 제재를 했으며, 특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중앙 일간지들이 경고 제재를 받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선거보도에 기고문 및 저술/의견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런 종류의 심의는 내용 규제보다 기술적인 형식 규제에 가까운 사안인 점,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이런 유형의 불공정 보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후보자 명의의 칼럼, 기고문 및 저술/의견 광고 등을 중점 심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부터 세분해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세부 유형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각한 보도

선거기사 중 대표적으로 제재를 받는 유형은 특정 후보자를 부각 홍보하는 기사다. 이번 총선에서도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와 인터뷰 기사가 많았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표현과 후보자의 업적을 과장해 보도함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언론사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가 있음에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 이들 매체에 대해서는 최고 사과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해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사주간지인 CNB저널은 2012년 1월 22일자 30~33면 「서울 중구 유권자 돕는 ‘특별검사’ 되겠다」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중구에 출마 선언을 한 검사 출신 모 변호사를 집중 인터뷰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매체는 3월 4일자(263호) 12~15면 「死地 강남을에서 선의의 경쟁 본선 경쟁력 높여주리라 확신

“」 제하의 기사에서도 서울 강남을에 출마 선언한 전현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를 집중 인터뷰했다. 이로 인해 주의보다 강한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월 11일자 12~15면 「“이제 수원을 위해 4G로 뚫다”」 제하의 인터뷰 기사에서 아무런 계기나 이슈가 없는데도 수원 장안에 후보로 나온 인사를 다시 부각하는 집중 인터뷰를 게재했고 인터뷰 기사 중 선거구호가 드러나는 사진도 크게 게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미 2 차례에 걸쳐 주의, 경고를 내렸음에도 해당 매체가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기사 역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수원 장안)와 관련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등을 인물 및 선거구호가 드러나는 사진과 함께 여러 지면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경남 거창 지역의 주간신문인 거창신보는 2012년 1월 18일자 7면 「강석진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가져」 및 「강석진 산청 · 함양 · 거창 국회의원 출마선언문」 제하의 기사를 시작으로 2월 7일자 1면 「강석진 예비후보 단독질주, 배성한 부각 돋보여」, 2월 14일자 1면 「강석진 전 군수 여전히 단독 선두」, 2월 21일자 1면 「강석진 전 군수 새누리당 입당 승인」, 2월 28일자 1면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 입당 최종 승인」, 2월 28일자 7면 「강석진 새누리당 입당 … 정책과 능력 인정받아」, 2월 28일자 7면 「진실과 올바른을 거합산 군문들의 힘으로 지켜주셨습니다.」, 3월 13일자 1면 「강석진 무소속 출마선언」, 3월 13일자 2면 「강석진 무소속 출마선언… ‘대결구도 재개편」 제하의 기사 등 무려 10회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후보자 출마선언문, 성명서, 출마 사실, 선거 공약, 여론조사 결과, 선거 활동, 경력 등을 연속적으로 부각하여 심의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경북 상주의 주간신문인 상주신문은 2012년 3월 21일자 1면 「김종태 후보 새누리당 경선 승리」, 3면 「중진같은 국회의원 힘으로 상주발전 · 정권재창출 할 터…」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경선 승리 소식과 인터뷰 기사를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결정을 받았다.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한 보도

특정 후보자를 부각 홍보하는 기사와 대척점에서 있는 유형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견 내지 선입견으로 인해 중립성, 형평성 의무를 저버리고 계속적인 비방보도를 낸 매체들이 사과문 게재결정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충청지역 주간신문인 충청리뷰는 3월 23일자 1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4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흔들린다」, 5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6면 「과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및 3월 30일자 1면 「손바닥으로도 하늘을 가릴 순 있다」, 4면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확인」, 5면 「그대는 정우택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및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추적 보도했다. 기사 제목과 본문에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한 점, 해

당 후보의 반론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사과문 게재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사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열린 재심 심의에서 언론사 편집국장이 출석하여 해당 보도는 충분한 취재를 통해 사실에 근거해 썼다고 진술했다. 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주장과 같이 정확한 근거 하에 본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인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재심을 기각했다. 해당 언론사는 재심기각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해서 심의위원회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되었다. 이 제재 건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사과문 게재 결정이 가능하다는 심의 기준 요건 중 전자의 요건이 적극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경남지역 주간신문인 경남여성신문은 2012년 3월 18일자 4면 「사상 손수조-문재인 대결은 사실상 박근혜-노무현의 대리전」 제하의 기사에서 부제목으로 <빨난 부산 민심 “새누리당 맞짱 보라” 성토>라고 게재하면서, 새누리당 정당 후보자에게만 비판적인 유권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다.

전북 완주지역 주간신문인 완주신문은 2012년 1월 18일자 1면 「최규성 국회의원, 4번째 잠 논란」, 2월 1일자 1면 「“도대체 왜...” 최규성 국회의원 잠 논란, 벌써 5번째」, 2월 1일자 6면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국회의원이 회의 도중에 졸고 있는 부정적인 인물 사진을 두 차례에 걸쳐 1면에 크게 보도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기사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의도적으로 게재하여 주의 결정을 받았다. 선거가 임박했다면 더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3) 동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보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고루 다루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부각 또는 배제하는 사진이나 기사를 게재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이다.

충청지역 일간 신문인 충청신문은 3월 20일자 1면 「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 3월 21일자 1면 「“대전의 미래 걱정하는 정치세력은 선진당뿐”」, 3월 22일자 3면 「지역 발전시킬 일꾼 뽑아 달라」, 3월 23일자 1면 「4·11 총선 본선 레이스 시작」 제하의 기사를 통해 4일 연속으로 1면과 3면 등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합동 기자회견, 후보자 등록 등을 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물 사진을 여러 차례 보도하여 사과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자체 심의가 아닌 시정요구 심의 안건 중 서울지역의 주간신문인 양천신문을 대상으로 내려진 사과문 게재결정도 주목할 만하다. 양천신문은 양천 갑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 장면만 보도하고 민주통합당 후보의 유세 사진과 기사를 누락시켰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양천신문이 경쟁 후보자의 유세 현장 기사와 사진을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의 유세 내용을 제외한 것은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

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과문 게재를 명했다. 언론이 선거운동 사실을 보도할 때에는 각 후보가 고루 실리도록 형평성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객관적인 기준 없이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보도

서울지역 주간지인 종로저널은 2012년 1월 2일자 4면 「“정치는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1월 16일자 4면 「“정치1번지 종로를 종로답게 지킬 것”」, 2월 20일자 4면 「“나쁜 정치 · 철새정치 추방할 때”」, 2월 23일자 4면 「“문화, 복지 1번지가 종로의 미래”」 및 3월 12일자 4면 「“종로주민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등 5회에 걸쳐 2명의 특정 예비후보자들의 이력 및 경력, 출마 포부, 치적 등이 드러난 인터뷰 기사를 인물 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보도 당시 종로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는 10명이 넘는 상황이었다.

중앙일간지인 경향신문은 2012년 3월 28일자 11면 「“가진 자들에게 정치 맡기지 말고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돼야”」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진보신당 1번 비례대표 후보인 김순자씨의 이력과 정견(政見) 등을 부각시켜 주의 결정을 받았다.

중앙일간지인 중앙일보는 2012년 2월 18일자 주말색션인 사람신문J 6면 「복지와 디자인, 오히려 ‘동의어’입니다」 제하의 인터뷰에서 서울 중랑 갑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인 김정희의 이력(서울대 미대 졸업), 18대 국회 의정활동, 저술활동 등을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해서 주의 결정을 받았다.

(5) 사실이나 내부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미화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도

중앙일간지인 한겨레는 2012년 2월 27일자 31면 「아! 김부겸」 제하의 칼럼에서 원래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에 출마하는 김부겸 후보에 대해 그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 후보를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부 필진의 글을 게재해서 주의 결정을 받았다.

경기지역 일간지인 경기일보는 2012년 3월 5일자 23면 「우호태 무소속 후보가」 제하의 칼럼에서 경기 화성시 을에 출마한 무소속 우 후보에 대해 눈에 띄는 후보 중 한 명이라면서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부 필진의 글을 게재해서 권고 결정을 받았다.

전북지역 일간지인 전북일보는 2012년 1월 11일자 19면 「정동영 불가론」 제하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정동영 후보예정자를 ‘골목대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묘사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상 심의 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살펴보면 내부 필진의 의견에 대해 언론사의 비평의 자유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제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6) 기사 제목과 본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 · 불리한 영향을 끼친 보도

충청지역 일간지인 충청일보는 2012년 1월 13일자 5면 「윤진식의 ‘힘’」 제하의 기사에서 충주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윤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과 과거 치적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매우 우호적인 기사 제목으로 보도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본문 역시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마이다스의 손’으로 등극했다>는 등 후보자에 대한 찬양 일색의 내용이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였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무등일보 2012년 2월 13일자 5면 「대항마 없는 이용섭 독주가도」 및 2월 14일자 5면 「‘박지원’ 흔들림 없는 아성 구축」 제하의 기사에서 선거 판도를 분석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단정적인 기사제목들 각각 게재해서 권고 결정을 받았다.

경기지역 일간지인 경기매일은 2011년 12월 27일자 3면 「허재안 의장 ‘성남의 가장 큰 공헌자’」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의 선거 출마 예정 사실을 전하면서 해당 후보예정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기사제목으로 게재하고 과거 치적 등을 부각시켜 보도하여 주의 결정을 받았다. 이 역시 선거기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기에 보도된 점이 제재수위를 정할 때 감안되었다.

나. 외부기고 제한

외부기고(칼럼) 제한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선거기사관련 위반사항으로,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총선 선심위에서는 17건의 기고에 대해 자체심의 의결했다.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는 2012년 2월 22일자 A33면에 서울 동작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정몽준 현 의원의 기고문(「주택정책 목표는 삶의 質 개선」)을 게재했다. 또한 동아일보 역시 같은 정 의원의 기고문(「김기삼 씨의 미국 망명을 보고」)을 2월 18일자 A27면에 게재했다. 양 일간지 모두 주의 결정을 받았다. 이 안건과 관련해 결산 좌담회에서 매체의 영향력에 비례해서 제재 수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합주간지인 월요신문은 2012년 3월 18일자 5면 「민주당, 탈북난민의 강제 복송 외면하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대구 수성구 갑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주의 결정을 받았다.

중앙경제지인 서울경제는 2012년 2월 20일자 A38면에 경북 영주시에 출마한 장윤석 현 의원이 쓴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진화」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역시 주의 결정을 받았다.

다. 광고 제한 위반

선거기사심의기준과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의견광고와 상업광고의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언론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되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는 저술 등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고제한을 위반한 건수는 총 15건으로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4건) 및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8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견광고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중앙일간지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은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본부> 의장 지만원씨가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을 거론하며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관해 말을 바꾸었다며 대화 자체가 안되는 특수 인종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제하의 광고로 동아일보는 전자, 문화일보는 후자의 광고만 게재하고 조선일보, 서울신문은 양자 모두 게재)를 2012년 3월 19, 21, 28일자에 실어서 경고 결정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해당 의견광고가 선거법 위반인 것을 확인하고 광고주인 지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남 지역 주간지인 완해진신문은 1월 19일자 12면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민주통합당 김영록 현역 의원의 「물가 잡는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의견광고를 실었다. 해당 신문 발행인은 광고가 아니라 기사라고 주장했으나 심의위원회는 후보자 일방의 성명서를 그대로 전제한 것을 기사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기사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는 여타 정당 또는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충청지역 주간지인 홍성신문은 2012년 3월 12일자 9면에 「1%만을 위한 한미FTA, 99%의 힘으로 폐기합시다!」 제하의 의견광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했다며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의 주장을 게재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다음으로 저술 광고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중앙일간지인 경향신문은 2012년 3월 28일자 12면 「정치검찰에 분노하라」 제하의 광고를 통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재화 변호사 명의의 저술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광고 금지를 규정한 심의기준 위반으로 주의 결정을 받았다.

중앙일간지인 한겨레 역시 2012년 3월 9일자 1면, 13일자 14면, 17일자 11면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3월 20일자 8면 「도종환의 나의 사람, 나의 시, 우직하게 리얼리스트의 길을 걸어온 영혼의 고백」, 3월 21일자 1면, 28일자 13면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이후 10년, 박노자가 말하는 ‘국가란 무엇인가’», 3월 21일자 25면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등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등의 명의를 드러난 저술광고를 게재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라. 여론조사 보도 공표요건 위반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 기

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타 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피인용 매체의 보도일자 및 매체명을 밝혀 독자들이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고, ‘최근 전북 지역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권고 이상의 제재를 했다.

종합주간지인 일요서울은 2012년 3월 5일자 12면에 「문재인, 압도적 1위 내달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과 큰 격차를 보이며 멀찌감치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도해 특정 후보에 치우친 단정적인 제목 표현과 여론조사 인용보도 공표 요건 미준수로 주의 결정을 받았다.

종합주간지인 일요시사는 2012년 2월 26일자(제842호) 13면 「‘얼짱’ 4년간 버르고 별러 외나무다리서 또 ‘맞짱’」 제하의 기사에서 나경원 후보와 신은경 후보 간의 공천 경쟁을 보도하면서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 후보와 신 후보가 각각 38.7%, 39.1%를 얻었다’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역 일간지인 인천일보는 2012년 2월 2일자 3면 「이윤성, 인천 중진의원 퇴진론 ‘찬물’」 제하의 기사에서 현역 의원인 이윤성 의원이 인천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요건인 조사 방법 등을 누락하고 이의원측에 유리한 내용을 부각시켜 주의결정을 받았다.

2. 결정유형별 분석

가. 사과문 게재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총 4건의 기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지역주간지가 2건, 종합주간지가 1건, 지역일간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역할을 고려한다면 언론이 공정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한 쪽 후보만 10번 가까이 우호적으로 부각시킨다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든지, 한 쪽 후보를 계속 비방하는 경우처럼 언론이 고의로 편파 왜곡보도로 민심을 호도하는 경우 과감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매체의 규모, 영향력, 심의 대상 보도의 양과 보도문 제목 및 본문의 표현, 독자에게 주는 인상, 배포 지역의 규모와 인구 수, 해당 지역 선관위의 의견, 언론사의 의견진술 내용, 발행 및 배포 시기가 선거에 임박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제재 수준을 정해 나갔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선거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선거법에 규정된 가장 강력한 제재인 ‘사과문 결정’을 내린다 해도 해당 매체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사과문 게재를 하면서 문제가 된 후보자 부각 또는 비방보도를 옆에 나란히 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심청구 등을 이유로 선거가 끝난 후 사과문을 게재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향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사과문 외에 심의위원회 차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체 고발권한 도입, 언론사의 고의적인 이행 지체에 대한 별도 제재조치 신설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80	CNB저널	2012.3.11.	12-15면	“이제 수원을 위해 4G로 뛴다!”
2012국선89	거창신보	2012.1.18.	7면	강석진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가져
		2012.1.18.	7면	강석진 산청·함양·거창 국회의원 출마선언문
		2012.2.7.	1면	강석진 예비후보 단독질주, 배성한 부각 돋보여
		2012.2.14.	1면	강석진 전 군수 여전히 단독 선두
		2012.2.21.	1면	강석진 전 군수 새누리당 입당 승인
		2012.2.28.	1면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 입당 최종 승인
		2012.2.28.	7면	강석진 새누리당 입당...정책과 능력 인정받아
		2012.2.28.	7면	진실과 올바름을 거함산 군민들의 힘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2012.3.13.	1면	강석진 무소속 출마선언
		2012.3.13.	2면	강석진 무소속 출마선언... ‘대결구도 재개편’
2012국선113	충청신문	2012.3.20.	1면	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
		2012.3.21.	1면	“대전 미래 걱정하는 정치세력은 선진당뿐”
		2012.3.22.	3면	지역 발전시킬 일꾼 뽑아 달라
		2012.3.23.	1면	4·11 총선 본선 레이스 시작
2012국선124	충청리뷰	2012.3.23.	1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4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흔들린다
			5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6면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2012.3.30.	1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4면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확인
			5면	그대는 정우택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나. 정정보도문 등 게재

금번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은 건은 1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16	경도신문	2012.1.17.	3면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14.6%' 정당지지율, 통합민주>한나라>자유선진> 통합진보당 순

다. 경고

자체심의로 의결한 107건 중 경고 결정은 11건으로 10.3%를 차지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4건, 지역일간지 2건, 종합주간지 2건, 지역주간지 3건이다. 중앙일간지에 대한 제재 4건은 모두 외부의 견광고로서 광고제한 규정 위반으로 받은 것이 특이한 점이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66	수도권일보	2012.2.22.	14면	"시민 기대에 부응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2012국선67	월요신문	2012.2.26. (제581호)	46-47면	"정신문화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
2012국선71	CNB저널	2012.3.4. (263호)	12-15면	"死地 강남을에서 선의의 경쟁 본선 경쟁력 높여주리라 확신"
2012국선88	종로저널	2012.1.2.	4면	"정치는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2012.1.16.	4면	"정치1번지 종로를 종로답게 지킬 것"
		2012.2.13.	4면	"문화, 복지 1번지가 종로의 미래"
		2012.2.20.	4면	"나쁜 정치·철새정치 추방할 때"
		2012.3.12.	4면	"종로주민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2012국선90	삼군신문	2012.3.14.	2면	심규철 예비후보 '새누리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 가져 박덕흠 예비후보 '새누리당 공천' 확정 박근혜 비대위원장 옥천서 박덕흠 예비후보 환담
2012국선112	남도일보	2012.3.23.	3면	박주선 광주 동구 '눈물의 출마선언'
2012국선132	상주신문	2012.3.21.	1면	김종태 후보 새누리당 경선 승리
		2012.3.21.	3면	중진같은 국회의원 힘으로 상주발전·정권 재창출 할 터...

【광고 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105	문화일보	2012.3.19.	30면	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2012국선106	동아일보	2012.3.21.	A31면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2012국선107	서울신문	2012.3.19.	30면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2012.3.21.	30면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2012국선108	조선일보	2012.3.21.	A34면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2012.3.28.	A34면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라. 주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 중 주의 결정은 58건(5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9건, 지역일간지 21건, 종합주간지 9건, 지역주간지 15건, 특수주간지 1건, 월간지 3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3건, 광고제한 위반이 9건, 외부기고 위반 10건이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 국선1	영남일보	2011.12.17.	1면	'깃발' 만 꽃던 시절 끝나나...TK정치 긴박
		2011.12.17.	3면	김부겸의 귀환...한나라 긴장감
		2011.12.19	30면	김부겸, '아름다운 결단'
		2011.12.22.	5면	'대구출마' 김부겸 당권 도전 선언
2012국선3	경기매일	2011.12.27.	3면	허재안 의장 '성남의 가장 큰 공헌자'
2012국선6	울산매일	2011.12.27.	3면	"출마, 혼자 결정할일 아니다" 여운
		2011.12.28.	3면	이경훈 전 현대차노조위원장 "총선출마 결심"
		2011.12.30.	3면	이경훈 전 지부장, 남구 갑 출마선언
2012국선12	충청일보	2012.1.13.	5면	윤직식의 '힘'
2012국선13	보은신문	2012.1.12.	9면	"'선거혁명' 일어나야 낙후된 보은발전 가능
2012국선15	우리일보	2012.1.16.	19면	통합민주당, 인천 합동연설회 개최
		2012.1.17.	18면	통합민주당 인천합동연설회 개최
2012국선17	CNB저널	2012.1.22.	30~33면	"서울 중구 유권자 돕는 '특별검사' 되겠다"
2012국선27	대구일보	2012.1.4.	3면	총선 출마자 막바지 출판기념회 잇따라
		2012.1.5.	4면	이노수 TBC 사장 출판회 5천여명 인파 대성황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27	대구일보	2012.1.12. 2012.2.6. 2012.2.9. 2012.2.14.	5면 4면 3면 3면	대구 수성을 이노수 출마로 요동 수성을 이노수, 선거사무소 개소 이노수 “여성 공천확대는 당연한 일” 이노수 신공항 건설 공약 포함 제안
2012국선28	완주신문	2012.1.18. 2012.2.1. 2012.2.1.	1면 1면 6면	최규성 국회의원, 4번째 잠 논란 “도대체 왜...” 최규성 국회의원 잠 논란, 벌써 5번째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2012국선29	전라일보	2012.1.31.	3면	유성엽 의원, 무소속이면 어때?
2012국선30	우먼센스	2012. 1월호	326-329면	세 자녀 키우며 정치인으로 성공하기까지
2012국선33	내외일보	2012.2.3.	7면	‘톡톡튀는 공약’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정건
2012국선34	전광일보	2012.2.3.	2면	배기운·박선원 예비후보 공동기자회견
2012국선35	폴리피플	2012. 2월호	49-53면	종로출마 정세균 “대선보다 의회권력 교체가 더 중요”
2012국선44	충청타임즈	2012.2.1.	2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국립청주미술관 확대 추진 다이아 게이트 몸통 캐내야
2012국선45	중부일보	2012.2.7.	5면	당 정체성 안 맞더라도 당선될 사람에게 공천 줘야
2012국선46	송파신문	2012.2.9.	2면	김영순, ‘최초는...’ 일본어판 출간
2012국선47	일요시사	2012.2.12.	14~15면	‘노무현 가치’ vs ‘이명박 가치’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2012국선50	경인매일	2012.2.20.	9면	새누리, 김태원 독주체제... 경쟁자 없어
2012국선64	동작신문	2012.2.16.	3면	전병헌 의원, 18대 국회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2012국선65	일요신문	2012.2.19. (1031호)	70-71면	부산 민심? “왜 나왔나” 뜨악해 하더라ㄴ
2012국선69	충북뉴스	2012.2.27. 2012.2.27.	3면 6면	흥덕보건지소 강서동 건립 확정 노영민 의원, 법안발의 가결률 우수
2012국선70	한겨레	2012.2.27.	31면	아! 김부겸
2012국선76	중앙일보	2012.2.18.	사람신문 6면	복지와 디자인, 오히려 ‘동의어’입니다
2012국선77	동양일보	2012.3.2.	16면	“병든 정치 타파 위한 건강한 3세력 필요하다”
2012국선78	충청리뷰	2012.3.2.	A19면	이재총, 민주당 후보 유력
2012국선91	광주일보	2012.3.19. 2012.3.19.	1면 3면	“새누리는 질리고 민주당은 미덥잖고” ‘盧風’ 대 ‘朴風’ 누가 썰까 ‘뱃사공’ 도 몰라 민주 ‘문·성·길’ 트리오 인터뷰 부산에 이는 바람
2012국선109	경남여성신문	2012.3.18.	4면	사상 손수조-문재인 대결은 사실상 박근혜-노무현 의 대리전
2012국선110	경기일보	2012.3.20.	20면	“120만 관중 시대 활짝...더 높은 도약 고민”
2012국선120	매일신문	2012.3.24.	4면	광주 친박 興 당선권...대구 野 김부겸은?
2012국선121	대경일보	2012.4.2.	3면	“경북지역 15명 후보 압승하도록 최선”
2012국선122	경향신문	2012.3.28.	11면	“가진 자들에게 정치 맡기지 말고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돼야”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123	미디어워치	2012.3.28.	8~9면	박영선, 아들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및 거짓 해명, 4·11 총선에서 이슈 될 듯
2012국선125	한겨레	2012.3.30.	8면	“복지, 부자증세만으로 안돼 '공정한 노동' 만들어야 가능“
2012국선126	여성조선	2012. 4월호 (제144호)	218-222면	손수조, 박선희, 전순옥, 박노자 · 총선 이색 출마자 & 화제의 승부처
2012국선133	시대일보	2012.4.2.	3면	시골장터에 몰려든 구름 군중 특검실시 · 법무장관 사퇴 요구 용산찾은 박근혜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36	인천일보/ 경기인천일보	2012.2.2.	3면/4면	이윤성, 인천 중진의원 퇴진론 ‘찬물’ 이윤성, 인천 중진의원 퇴진론 ‘찬물’
2012국선72	일요시사	2012.2.26. (제842호)	13면	‘얼짱’ 4년간 버리고 별러 외나무다리서 또 ‘맛짱’
2012국선81	일요서울	2012.3.5.	12면	문재인, 압도적 1위 내달려

【광고 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18	강원리뷰	2012.1.14 2012.1.21.	9면 9면	“동해 · 삼척지역 발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새로운 힘이 되겠습니다.” “햇줄에 묻힌 낙후된 고향 발전 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2012국선19	완해진신문	2012.1.19.	12면	물가 잡는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12국선38	시민사회신문	2012.1.30.	1면	노세극 정치경제평론집 “공생의 길”
2012국선39	아시아투데이	2012.1.30. 2012.2.6.	23면 23면	김성호의 행복한 반란 김성호의 행복한 반란
2012국선60	김포신문	2012.2.9.	8면	제2회 김포청년포럼
2012국선86	새전북신문	2012.3.2. 2012.3.5. 2012.3.9.	8면 10면 10면	신경민의 개념사회 신경민의 개념사회 신경민의 개념사회
2012국선101	경향신문	2012.3.28.	12면	정치검찰에 분노하라
2012국선102	한겨레	2012.3.9.. 2012.3.13.. 2012.3.17..	1면 14면 11면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102	한겨레	2012.3.20.	8면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우직하게 리얼
		2012.3.21.	1면	리스트의 길을 걸어온 영혼의 고백
		2012.3.21.	25면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2012.3.28.	13면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2012국선104	반월신문	2012.3.8. 2012.3.15.	2면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외부 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40	함평신문	2012.2.7.	5면	이낙연의원, 19대 국회의원 출마에 즈음하여
2012국선57	동아일보	2012.2.18.	A27면	김기삼 씨의 미국 망명을 보고
2012국선58	서울경제	2012.2.20.	A38면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진화
2012국선59	조선일보	2012.2.22.	A33면	주택정책 목표는 삶의 質 개선
2012국선73	파주저널	2012.2.13.	4면	GTX 파주출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 최대의 목표
2012국선93	경북자치신문	2012.3.5.	8면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천 확정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2012국선94	김천신문	2012.3.8.	5면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2012국선95	대한변협신문	2012.3.19.	4면	정치에 뛰어들다!
2012국선114	울진신문	2012.3.15.	8면	99% 서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2012국선115	월요신문	2012.3.18.	5면	민주당, 탈북난민의 강제 복송 외면하면 안 된다

마. 권 고

권고 결정은 33건(30.8%)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3건, 지역일간지 25건, 종합주간지 4건, 지역주간지 1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0건, 광고제한 위반 2건, 외부기고 위반 10건이다. 권고 결정은 심의위원회 설치 초기에 제도차원 및 언론사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주로 내려졌고, 내용상 언론사의 비평의 자유를 감안한 내부 필진의 칼럼 또는 여론조사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단순한 여론조사공표요건 일부 미비 등에 대해 주로 내려졌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2	송파신문	2011.12.15.	1면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012국선7	충청일보	2012.1.9.	5면	명함 보면 선거전략 보인다
2012국선8	서울일보	2012.1.10.	1면	민주통합 지지율 1위 '희희낙락'
2012국선11	전북일보	2012.1.11.	19면	정동영 불가론
2012국선14	경북도민일보	2012.1.13.	2면	이병석 의원, 독도평화재단 설립 "우리땅 독도 수호 작은 밑알 되겠다" "다음세대 위한 포항 밀거름 그릴 것"
2012국선31	아주경제	2012.2.2.	19면	탄탄한 조직기반 갖춘 3선 도전 민주 박기춘 의원 우세
2012국선32	충북일보	2012.2.2.	5면	박덕흠 · 홍상표 전 수석 남부3군 판도 뒤 흔들나
2012국선48	주간한국	2012.2.13.	7면	리틀 YS '삼세번 도전' 성공할까
2012국선49	무등일보	2012.2.13. 2012.2.14.	5면 5면	대항마 없는 이용섭 독주가도 '박지원' 흔들림 없는 아성 구축
2012국선51	인천신문	2012.2.20.	3면	남갑 김성진 후보 1인 시위
2012국선68	주간한국	2012.2.27. (2413호)	54-55면	그가 못다 이룬 꿈... 내가 나서 '2012년 점령하겠다'
2012국선79	경기일보	2012.3.5.	23면	우호태 무소속 후보가
2012국선87	경향신문	2012.3.9.	1면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심상정 여유 · 양철북
2012국선111	광주매일신문	2012.3.22.	4면	간신히 선대위는 발족했지만...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37	뉴스포스트	2012.2.5.	5면	정치1번지 자존심 건 한판
2012국선52	남도일보	2012.1.20.	4-6면	4 · 11 총선 격전지를 가다[광주], [전남]
2012국선53	광남일보	2012.2.13.	3면	주승용 대세론 굳어지나
2012국선54	매일신문	2012.2.13	1면	부산발 '노무현 바람' 북상할까
2012국선55	대구연합일보	2012.2.16	3면	"한번만 더 기회달라" 나홀로 선거운동
2012국선82	무등일보	2012.3.6.	4면	광주 · 전남 판세 '안갯속'
2012국선83	전남일보	2012.3.6.	3~4면	13곳 모두 만만찮은 승부... 현역들 살얼음판
2012국선84	서울경제	2012.3.9.	8면	경제부총리 VS 충북지사 출신 '충북 정치1번지' 거물급 대결
2012국선85	광주매일신문	2012.3.12.	3면	민주 경선 대혼전...텃밭 민심도 '요동'
2012국선92	울산신문	2012.3.16.	1면	지역 정치권 총선전략 명암 엿갈려

【광고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9	전라일보	2012.1.12	9면	정치에너지 2.0 / 정세균 지음
		2012.1.12	11면	이학노 자전(自傳) 에세이 「길」
2012국선103	홍성신문	2012.3.12.	9면	1%만을 위한 한미FTA, 99%의 힘으로 폐기합시다!

【외부 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국선10	전북중앙신문	2012.1.13.	12면	유능한 민주주의
2012국선20	서울경제	2012.1.18.	38면	사회적 자본 확충이 살 길이다
2012국선21	전라일보	2012.1.18.	15면	축산업 붕괴 막아야
		2012.1.25.	15면	난파선의 선장이 해야 할 일
2012국선22	호남신문	2012.1.18.	2면	물가 잡겠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않겠다
2012국선23	충청신문	2012.1.20.	19면	설, 대보름, 그리고 우리 놀이문화의 참된 의미
2012국선24	새전북신문	2012.1.25.	10면	영어책 때문에 영어가 좋았던 시절
2012국선56	공주신문	2012.2.16.	11면	해법을 찾아 현장속으로 · 통합진보신당 한준혜 후보

3. 매체유형별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지 132개(중앙지 31, 지역지 101), 주간지 253개(종합주간 32, 지역주간 220, 특수주간 1), 월간지 25개이며, 뉴스통신이 3개로 총 413개 매체였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16개, 지역일간지 49개, 종합주간지 13개, 지역주간지 25개, 특수주간지 1개, 월간지 3개 등 모두 107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지적돼 제재를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은 25.9%로 지역일간지(48.5%)와 종합주간지(40.6%)가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간지는 31개 자체심의대상 매체 중 16개 매체에 대해 경고 4건, 주의 9건, 권고 3건의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광고제한 위반이 6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5건, 외부기고 4건,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이 1건이다.

지역일간지는 자체심의대상 101개 매체 가운데 39개 매체 49건에 대해 결정했다. 결정 내용별로는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21건, 권고 24건이고,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9건, 외부기고 5건, 광고제한 3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는 32개 자체심의 대상 매체 중 13개 매체에 대해 제재를 했다. 사과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7건, 권고 3건이었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9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3건, 외부기고 1건이다.

지역주간지와 특수주간지는 심의대상 221개 매체에 대해 26건의 제재를 했다. 사과문 게재 2건, 경고 3건, 주의 18건, 권고 3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3건, 외부기고 7건, 광고제한 6건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는 3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주의 결정이 3건이었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이었다.

심의대상 매체 중 가장 많은 횟수의 제재를 받은 언론사를 살펴보면 중앙일간지는 경향신문(주의 2, 권고 1), 서울경제(주의 1, 권고 2), 한겨레(주의 3)가 각 3건의 제재를 받았고, 지역일간지는 전라일보가 3건(주의 1, 권고 2), 종합주간지는 CNB저널이 3건(사과문 게재 1, 경고 1, 주의 1)의 제재를 받았다.

【매체별 위반현황(자체 심의)】

간 별	구 분 매체명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중 앙 일 간 지	경향신문	3	2			1					2	1
	동아일보	2				1	1			1	1	
	문화일보	1				1				1		
	서울경제	3		1			2				1	2
	서울신문	1				1				1		
	조선일보	2				1	1			1	1	
	중앙일보	1	1								1	
	한겨레	3	2			1					3	
	소 계	16	5	1		6	4			4	9	3
지 역 일 간 지	경기매일	1	1								1	
	경기일보	2	2								1	1
	경도신문	1	1						1			
	경북도민일보	1	1									1
	경인매일	1	1								1	
	광남일보	1		1								1
	광주매일신문	2	1	1								2
	광주일보	1	1								1	
	남도일보	2	1	1						1		1
	내외일보	1	1								1	
	대경일보	1	1								1	
	대구연합일보	1		1								1
	대구일보	1	1								1	
	동양일보	1	1								1	

간 별	구 분 매체명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지 역 별 간 지	매일신문	2	1	1							1	1
	무등일보	2	1	1								2
	서울일보	1	1									1
	새전북신문	2				1	1				1	1
	수도권일보	1	1							1		
	시대일보	1	1								1	
	아시아투데이	1				1					1	
	아주경제	1	1									1
	영남일보	1	1								1	
	우리일보	1	1								1	
	울산매일	1	1								1	
	울산신문	1		1								1
	인천신문	1	1									1
	인천일보	1		1							1	
	전광일보	1	1								1	
	전남일보	1		1								1
	전북일보	1	1									1
	전북중앙신문	1					1					1
	전라일보	3	1			1	1				1	2
	중부일보	1	1								1	
	충북일보	1	1									1
소 계		49	32	9		3	5	1	1	2	21	24
중 합 주 간 지	뉴스포스트	1		1								1
	미디어워치	1	1								1	
	CNB저널	3	3					1		1	1	
	일요서울	1		1							1	
	월요신문	2	1				1			1	1	
	일요시사	2	1	1							2	
	일요신문	1	1								1	
	주간한국	2	2									2
	소 계	13	9	3		0	1	1		2	7	3
지역 주간지	강원리뷰	1				1					1	
	거창신보	1	1					1				
	경남여성신문	1	1								1	
	경북자치신문	1					1				1	

간 별	구 분 매체명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지 역 주 간 지	공주신문	1					1					1
	김천신문	1					1				1	
	김포신문	1				1					1	
	동작신문	1	1								1	
	반월신문	1				1					1	
	보은신문	1	1								1	
	삼군신문	1	1							1		
	상주신문	1	1							1		
	서울송파신문	2	2								1	1
	시민사회신문	1				1					1	
	원주신문	1	1								1	
	완해진신문	1				1					1	
	울진신문	1					1				1	
	종로저널	1	1							1		
	충북뉴스	1	1								1	
	충청리뷰	2	2					1			1	
	파주저널	1					1				1	
	함평신문	1					1				1	
	홍성신문	1				1						1
	소 계	25	13			6	6	2		3	17	3
특수 주간지	대한변협신문	1					1				1	
	소 계	1					1				1	
월 간 지	여성조선	1	1								1	
	우먼센스	1	1								1	
	폴리피플	1	1								1	
	소 계	3	3								3	
총 계		107 100.0%	62 57.9%	13 12.1%		15 14.0%	17 15.9%	4 3.7%	1 0.9%	11 10.3%	58 54.2%	33 30.8%

Ⅲ. 시정요구 심의 · 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23건이다. 처리결과별로는 사과문 게재 결정 3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2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1건, 경고 3건, 기각 5건, 각하 1건, 취하 8건이다. 재심청구는 2건이었으며 기각 1건, 취하 1건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8건, 지역일간지 4건, 지역주간지 10건, 뉴스통신이 1건이다.

1. 사과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사과문 게재 결정은 3건으로 모두 지역주간신문이다. 경북 상주시에 출마한 성윤환 후보가 지역 주간지인 상주고향신문이 1면 상단에 「성윤환후보 도덕성 논란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성 후보의 재산형성과정과 병역면제문제를 크게 보도하자, 이에 대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기사의 배포 과정 등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하고 또한 해당 언론사의 의견진술서에 나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등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해당 신문사가 특정 예비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재산 금액 및 병역 기피에 대한 의혹을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부각보도하고 이에 대한 해당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실지 않은 것은 심의기준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 사과문 게재결정을 내렸으며 사과문 하단에 성 후보의 반론을 신도록 했다.

두 번째 사과문 게재 결정은 서울지역의 주간신문인 양천신문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서울시 양천갑 민주당 차영 후보는 양천신문이 같은 지역구의 여당 후보 유세는 보도하면서 야당인 자신의 유세는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양천신문이 양천갑 지역구의 경쟁 후보자에 비해 차 후보의 네거티브 의혹사실을 부각하고 경쟁 후보자의 유세현장을 전하는 기사와 사진을 넣어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의 유세 보도를 제외한 것은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과문 게재를 명했다. 이에 대해 양천신문은 차 후보측이 취재 거부사를 밝혀서 어쩔 수 없이 차영 후보 관련 사진과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심의 결과 차 후보가 낸 자료에 따르면 차 후보측이 양천신문의 공용 이메일로 보도자료 및 유세사진을 송부하였고, 이를 언론사에서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설령 차영 후보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천신문은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하여 선거관련 보도의 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양천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양천신문은 재심기각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을 보도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가 서울시 선관위에 통보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조치 됐다.

세 번째 사과문 결정은 전남지역 주간지인 나주신문에게 내려졌다.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 무소속 최인기 후보는 나주신문의 기사 및 데스크칼럼 등 총 9건의 보도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가 나주신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나주신문이 경쟁 후보의 비판 발언 및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을 1면에 계속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 후보에 대해서 소탐대실하는 소인배로 묘사하는 등 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칼럼을 계속적으로 게재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최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신

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1면 좌측 상단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2. 정정보도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2건이다. 경북 상주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종태가 상산신문의 여론조사보도에 대해 각 후보별 지지율이 실제와 다르며, 같은 날짜에 두 번 같은 제목을 게재함으로써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했다면서 심의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상주시 선관위 및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대한 구두 조사 및 상산신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전화설문 여론조사는 인구분포 등을 반영한 가중치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실제 전화응답한 실측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것임에도, 피시정요구인은 정당별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는 실측 결과만을 보도하고, 나머지는 가중치 결과를 보도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명했다.

두 번째 결정은 경기지역 일간지인 중부일보에 대해 내려졌다. 민주통합당 평택갑 예비후보 소기숙은 중부일보가 본인의 시숙부인 우제향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부각시키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중부일보가 원 보도 후 우제향 전 의원과 관련해 게재한 정정보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인터뷰 내용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언론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3. 반론보도문 게재

시정요구에 대한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1건으로 서울신문을 상대로 내려졌다. 인천 부평구를 새누리당 조용균 예비후보가 다른 언론에서는 부평을을 총선 격전지로서 분류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신문이 공천 대진표에 총선 격전지로 분류하고, 해당 지역구의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김연광 전 청와대정무비서관을 새누리당 후보로 지목한 것은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언론사에서 해당 선거구에 여러 예비후보자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거론하여 선거기사의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신문에 해당 후보자의 반론을 게재할 것을 명했다.

4. 경고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청구 사건에 대해 총 3건의 경고 결정을 했다.

첫 번째 경고결정은 경기지역 주간지인 경기헤럴드를 상대로 내려졌다. 경기 군포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는 경기헤럴드가 이 후보의 과거 전과경력(부각시키면서) 도덕성 문제를 1면에 제기하자 심의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경기헤럴드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매체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의 과거 범죄 사실을 부각하며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당 후보의 반박 또는 해명 내용을 신지 않은 것은 심의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경고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경고결정은 경남 거창지역 주간지인 거창신문에 대해 내려졌다. 경남 산청·함양·거창 선거구 무소속 강석진 후보는 거창신문이 1면에 「이번 없는 총선, 1강(強) 독주체제 굳어졌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심의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해당 매체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매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세 번째 경고결정은 경기도 과천시 지역 주간신문인 과천저널에 대해 내려졌다. 경기도 과천·의왕 선거구 새누리당 박요찬 후보는 과천저널이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인이 불참통보를 하자 상대 후보인 송호창 후보를 부각 홍보하는 토론회 기사를 게재했다며 심의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가 언론사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과천저널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지선언, 후보 초청 토론회 내용 중 출마의 변과 공약 사항 등을 부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 후보가 토론회를 불참했다는 표현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박 후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토론회와 관계없는 후원회장과의 사진 등을 게재한 것은 심의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고결정을 내렸다.

5. 기각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5건이다.

첫 번째 기각 결정은 중앙일보 「정몽준·이계안 집전…인재군은 신지호 크게 앞서」 제하의 기사에 대해 민주통합당 동작을 지역구 허동준 예비후보자가 청구한 시정요구건에 대해 내려졌다. 중앙일보에서 총선 가상대결에서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의원, 진보신당 김

중철 부대표만의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허 예비후보는 동작을 선거구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선이 끝나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된 것처럼 비취지고 있다면서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언론사 답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언론사가 밝힌 여론조사 가상대결 대상자 선정기준 및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조사한 총선지지도 조사결과에 의해 가장 적은 지지율을 기록한 허 후보를 배제한 것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각 결정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서미경이 낸 시정요구건에 대해 내려졌다. 서 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신고액을 부채 5억여 원이라고 보도한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에 대해 이는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들이 모두 정정보도를 즉시 게재하였으나 서 후보는 취하지 않고 인터넷판에 있는 기사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신청된 후 언론사에서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시정요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요구는 심의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므로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네 번째 기각결정은 경남 산청·함양·거창 선거구 무소속 강석진 후보가 거창군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사건에 대해 내려졌다. 강 후보는 거창군민신문에서 신성범 후보가 44%, 본인이 24%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도하자 해당 지지율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심의위원회가 기초 통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매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의 방법 및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다른 이유가 없고 기사 제목 또한 다소 감정적이긴 하나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다섯 번째 기각결정은 대전 중구 자유선진당 권선택 후보가 중도일보를 대상으로 낸 시정요구사건에 대해 내려졌다.

권 후보는 해당 칼럼이 본인의 공약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칼럼의 주된 취지가 시정요구인의 도 청사 철거공약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미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 건축 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판단되고 의도적으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게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6. 각 하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각하 결정은 1건이다.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가 본인을 대선후보로 주장하면서 각 언론사에서 잠재적 대선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시 반드시 본인을 포함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선거기간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7. 취하(보도 또는 보도 약속)

후보자가 시정요구를 신청한 후 취하한 건은 총 8건으로 그 중 6건은 언론사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 또는 보도약속을 해서 취하되었다.

보도이유로 취하한 첫 번째 사건은 경북 문경·예천의 현역 의원인 이한성 의원이 낸 시정요구 건이다. 이 의원은 포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경북매일이 경북에서는 문경·예천 등 3곳 정도가 현직 의원을 배제한 전략공천 검토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었다고 보도하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시정요구를 제출했다. 경북매일에서 시정요구 신청 후 이 의원의 반박 및 새누리당 관계자의 해명을 보도하자 이 의원이 시정요구를 취하했다.

두 번째 시정요구 사건은 19대 총선 안성 미래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선진이 지역 주간신문인 자치안성신문을 상대로 낸 시정요구건이다. 언론사에서 정 예비후보가 한중FTA 추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자 본인은 전혀 찬성한 바가 없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문게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온라인(탐헤드라인)과 오프라인(1면 우측 상단)에 신속히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여 신청인이 취하했다.

세 번째 사건은 민주통합당 안양만안구 이종걸 예비후보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건이다. 동아일보에서 이 예비후보 측의 경선인단 모집이 불법이라는 경쟁 예비후보의 주장을 크게 보도하자 이 예비후보는 동아일보가 비록 인용보도의 형식을 취했지만 제목에서부터 불법모집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 후보측의 경선인단 모집이 불법인 것으로 보도했다며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동아일보가 대리등록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이 예비후보의 반박을 충분히 신지 못하였고, 또한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이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예비후보의 선거인단 모집 관련 사건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동아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심의위원회의 결정문을 일부 수정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후 언론중재심의위원회 조정에서 양측 간에 반론보도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 예비후보 및 동아일보의 각 신청은 모두 취하되고 동아일보에 반론보도가 게재됐다.

네 번째 사건은 민주통합당 김해율 광진업 예비후보가 경제 일간지인 헤럴드경제를 상대로 낸 시정요

구 사건이다. 헤럴드경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읍에서 김정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민주통합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고 보도하자 곽 후보가 이를 불공정한 기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요구 신청 후 해당 매체에서 ‘김해읍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김정수와 곽진업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중’이라고 보도하자 신청인이 시정요구를 취하였다.

다섯 번째 사건은 경기도 부천 오정구 국회의원인 원혜영 의원이 부천지역 주간지인 부천21을 상대로 낸 시정요구건이다. 원 의원은 부천신문이 2012년 1월 27일자 1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국회의원 공약 이행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원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0%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해당 매체에서 원 의원이 매니페스토본부에 소명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공약 8개중 5개를 완료했거나 올해 완료 예정으로 나왔다고 보도하자 원 의원이 시정요구를 취하였다.

마지막 사건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인 서미경이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시정요구 사건이다. 뉴시스는 2012년 3월 24일자에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을 분석하면서 새누리당 서미경 후보가 부채만 5억 4587만원을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전산입력 착오로 오보가 난 것으로 뉴시스에서 신청 후 즉시 정정보도를 내서 신청인이 취하였다.

제3부

종 합 평 가



제1장 / 심의위원 평가

제2장 / 결산좌담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선거기사 심의의 정당성과 원칙

이 준 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19대 총선 선심위 활동

이번 제19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107건과 시정요구 23건을 처리했다. 선심위의 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 총선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제18대 총선 선심위와 비교해서 자체심의를 19건이 증가했으며, 심의결과를 보더라도 사과문 게재결정 등 제재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일은 과거 제18대 총선 선심위 활동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그전 제17대 선거에 비해 자체심의로도 증가하고 제재수준도 높아졌다. 자료만 놓고 보면, 총선 선심위는 지속적으로 자체심의를 확대하고 제재의 수준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적 태도가 과도하게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러나 실제 언론의 불공정 보도가 더 많아지고 불공정함의 정도 역시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선거보도의 불공정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선보도에 대한 엄밀한 지면분석이 요청되지만, 이번 선심위에 제기된 시정요구가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2배 증가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적어도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당사자 요구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언론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 감시요구도 커지고, 그에 따라 선심위의 제

재 수위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총선 정국에서 공정보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보도를 엄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커지는 데 반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19대 총선 선심위 실적을 보면, 당사자의 외부기고 금지, 광고제한, 여론조사 공표요건 준수 등과 관련된 위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당사자의 외부기고 및 광고 제한은 언론사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문제이고, 여론조사 공표요건의 준수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많은 지적과 검토가 제시된 바 있다. 즉 언론사나 담당 언론인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기 어려운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알고도 범하는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선심위의 제재가 강화되기도 한다.

중앙 일간지보다 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에서 불공정 보도 위반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과거 선심위에서 계속 지적해 온 바이다. 선거보도 위반의 횟수와 정도는 언론인의 전문성에 달려있으며, 언론인의 전문성은 그가 속한 언론사의 윤리적 규범과 규율 수준에 달려있다. 일부 지역 언론은 조직적 수준에서 윤리적 규범과 규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흔히 지역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서, 일부 지역 언론의 사정이 열악하고 특히 인적 자원이 열악하기에 어렵게 보도를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능력부재론이 제기된다. 물론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일정한 능력과 수준을 갖추지 않으면 언론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무능해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할 지경이고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는다면 그 또한 민망한 일이다. 선심위는 이런 언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의된 사회적 규범의 범위가 어디인지 심의를 통해서 지적한다. 선심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이런 언론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보도와 언론의 자유

선거보도는 언론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과를 보면, 선거보도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선거보도는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관한 판단을 돕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선거보도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증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비록 미국의 연구결과이지만, 언론이 후보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만 일삼을 경우, 유권자가 정치과정 자체에 대한 환멸감이나 냉소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유권자가 환멸감이나 냉소적 태도를 갖게 되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

다. 이 두 명제를 연결시키면, 비난과 비판을 일삼은 선거보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가로막는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선거보도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와 저해 요인에 근거해서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즉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선거보도를 막고,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선거보도는 권장하는 방식으로 외부 규제기구가 언론의 보도에 간섭할 수 있을까? 언론자유에 대한 고전적 논의들은 이런 논리에 반대한다. 언론 보도의 정치적 결과를 보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규정된 보도 내용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사회 전체에 대한 억압과 규율로 진행하기는 너무 쉬우며, 무엇보다도 언론에 대한 간섭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한 합당한 대응방식은 사회적 비판과 논쟁, 그리고 더 많은 보도이다. 즉 언론의 보도에 대한 비판과 논쟁을 통해 언론 스스로가 문제점을 깨닫고, 자율적으로 보도 기준을 통해서 자기규율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언론이 많아질 때, 언론 환경 전체가 바람직한 담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충분함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선거 기사를 심의하는 것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위축을 초래하며 따라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다른 일부는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언론에게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의 게재를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 등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본다. 즉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심의기구로서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지적, 환기, 공시 등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기관의 최소한의 역할을 주장하는 입장도 역시 자유주의 언론관에 근거한다.

불안정한 언론의 자유

자유주의 언론관은 사실 불안한 기초에 놓여있다. (1) 더 많은 언론의 보도가 바람직한 정보의 유통을 낳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2) 자율적인 언론의 규제 역시 바람직한 기준과 그에 따른 결정을 낳으리란 보장이 없다. 더 많은 '자유로운' 언론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 자율적 언론의 결단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보도는 물론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미국의 선거보도를 보더라도 언론이 선거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관찰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유주의 언론은 억압적 통제에 대한 염려와 불확실한 성과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동요한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자유주의 언론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주의적 언론관을 따르는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언론에 대한 외적 통제의 논리가 있다.

언론이 스스로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배반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언론이 다른 주권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경우(자유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을 언론이 위협하는 경우)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보도하는 경우(자유주의의 방법론이 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경우), 언론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의 경우이며, 후자의 대표적 사례는 매수, 협박, 위장취재 등의 방법으로 습득한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이다. 언론의 자유는 흔히 다른 자유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자유로 인정받고, 심지어 그 자체가 공익으로 간주되는 자유이지만 언제나 보장되는 절대적 지위를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규제 논리는 선거보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위의 논리를 들어 ‘따라서 선거보도에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관련규정을 마련해서 규제할 필요 없이, 현행법에 의거해서 다른 언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의 경력을 뒤지고, 정당의 비리를 폭로하며,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도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절차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보도는 특수한 성격을 갖기에, 언론 자유와 규제 논리에 대한 일반적 자유주의 교의와 외적 통제의 조건에 대한 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선거보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규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의 막바지에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보도를 함으로써 선거결과를 뒤집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선거보도는 민주적인 권력 구성과정 자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후보와 정당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선거의 결의성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언론 보도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결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가 의존하게 될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와 활동의 필요성은 선거보도의 특수한 성격에서 도출된다. 선거보도가 초래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기사내용을 심의하고, 그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권리 및 공익을 대표해서 즉각적인 조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사회적 조정기구로서 신속하고, 적절하고, 정당하게 언론의 선거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지적, 환기, 공시하는 최소한의 심의만으로는 잘못된 선거보도가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결과에 대응하기 어렵다.

문제는 선거보도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곧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활동의 정당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잘못된’ 선거보도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에 대응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지에 동의하더라도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규제의 원리와 방법이 저절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거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가치의 충돌과 공정성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의 경력을 뒤지고, 정당의 비리를 캐며, 주요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등은 선거기간 중 언론에 대해 기대하는 언론 본연의 활동이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감시기능을 수행할수록, 그리고 언론의 폭로와 비판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그런데 그것이 ‘근거 없는 후보에 대한 비방 보도’와 같은 악영향이 우려되는 보도라면 문제가 된다. 언론이 선거보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게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에 따라 민주적 제도인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잘못된’ 보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선거기간 중 언론의 ‘잘못’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그것이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지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잘못’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어야, 어떤 보도가 그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보도는 물론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한 보도라도 내용에 전제된 가치를 들어 잘못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어렵다. 어떤 가치의 실현이 한 사람에게는 바라던 바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규범의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된 가치에 기초한 명제가 아닌 (예컨대 살인을 금하고 공동체의 타락을 막아야 한다는 명제), 어떤 가치에 근거한 명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은 그 자체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즉 한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교의, 종교적 신념, 문화적 취향 등의 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가 병존함을 전제한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거나 막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내릴 수 없다. 오직 다원적이며 상호 경쟁하는 가치들 간의 갈등이 아닌 조화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

공정성은 다원적이며 상호 경쟁하는 가치들 간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이다. 공정함(fairness)은 타당성(validity)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속성에 대한 가치라기보다 절차적 속성에 부여된 가치인데, 이는 특히 가치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가치들에 적용되는 가치’라고 부를 만하다. 즉 다원적이며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누구도 미리 어떤 가치의 실현이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다른 가치의 실현이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지 결정할 수 없다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해서 제시된 모든 가치가 정당하게 제출되고 평가받는 기회를 누림으로써 스스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장받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즉 공정성은 가치 간 갈등을 중재하는 가치가 된다.

나는 선거보도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원칙이 오직 하나의 가치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공정성이다. 앞서 말했듯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돕거나 방해하는 다양한 정치적 가치의 실현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선거에 임박해서 언론보도가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필요성만으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선거 기사가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실현하는 가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서 규제를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오직 개별 언론의 보도행위가 실현하는 가치들이 대립적이고 상호 갈등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조건에서 그 가치들을 중재하는 가치로서 공정성이 적용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인쇄 매체의 언론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일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떤 언론사가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면 그에 대해 비난하고 해명을 요청할 수 있을지언정 그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나설 수 없다. 왜냐하면 편파적 보도의 효과도 평가하기 어렵지만 애초에 그 보도가 편파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편파적’이라고 판단한 기사에 대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얼마든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논지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 언론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편파적인 보도’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그 규제의 원리와 방법은 역시 공정성 원칙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1) 보도 내용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나 정당이 공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해당 보도기사 내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 (2) 이미 충분히 알려진 특정 후보나 정당의 견해와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도함으로써, 다른 후보나 정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방해하는지 등이다. 전자는 개별적인 보도 내용의 ‘담론 내적 공정성’에 대한 것이며, 후자는 ‘전체적 선거보도의 균형성’에 대한 것이다. 이밖에 공정성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 언론 보도가 다양한 정보원에 기초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은 공정성의 이론적 전제조건일 뿐, 실제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원인적 근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 개념으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단일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언론의 통제에 관련된 법적 조항으로서 공정성 이외의 다른 어떤 별도의 가치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기사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게도 공정성 가치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규제의 방법 또한 공정한 선거보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프로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학사, 석사)
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일 시 : 2012. 4. 16.(월) 17:00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박 기 동 (심의위원장,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원 병 설 (부위원장, 배재대 초빙교수)
문 명 호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박 석 태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황 의 봉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김 택 근 (전 경향닷컴 사장)
이 성 섭 (법률사무소 법현 대표변호사)
이 준 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 우 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여 중 국 (선거기사심의팀장 및 기사심의팀 직원 3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보도 실태와 심의위원회 운영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위원장 : 오늘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12일에 구성되어 자체심의 107건, 시정요구 22건 및 재심청구 3건 등 총 13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사과문 게재 결정을 자제해 왔지만,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과문 게재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

박 기 동 위원장

기사심의팀장 : 금번 선심위의 처리 실적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자체심의는 19건이, 시정요구는 1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요구 신청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 특이할 만합니다.

자체심의 107건을 결정유형별로 보면 사과문 게재 4건, 정정보도문 등 게재 1건, 경고 11건, 주의 58건, 권고 33건입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61건, 외부 기고 금지 위반이 17건, 광고제한 위반이 15건, 여론조사 보도 공표요건 미준수가 13건입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전체 22건으로 결정유형으로 보면 사과문 게재 3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반론보도문 게재 3건, 경고 3건, 기각 5건, 각하 1건, 취하 6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의위원장 : 금번 선심위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보다 시정요구 건수는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은 사과문 게재 결정을 활성화한 것은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사과문 게재 결정을 자제해 왔지만,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과문 게재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원병설 부위원장 : 전반적으로 심의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행을 요하는 제재 수단으로는 사과문 게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기관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제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심의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미비로 인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원 병 설 부위원장



황의봉 위원 : 우리 심의위와 유사한 기관의 제재 결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고,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제재의 수위를 분석하여, 비슷한 유형의 위반 사례에 대해 비슷한 제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택근 위원 : 기사 내용에 따라 제재 수위를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외부 기고는 광고보다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위는 낮았습니다. 기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제재 수위 및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외부 기고는 광고보다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위는 낮아 ...기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제재 수위 및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김 택 근 위원



박석태 위원 : 기사와 칼럼, 광고 등에 대해 동일한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행물의 발간 주기와 특성에 따라 심의기준을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장 : 주간지와 월간지의 경우에는 보도된 후보자와 보도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의 편집권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에 관한 인터뷰를 게재할 때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의봉 위원 : 주간지의 인물 인터뷰는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인물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고, 일단 인터뷰를 하게 되면 홍보성 내용이 게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매체별로 세분화된 심의기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의 제재 결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각 기관별 제재의 수위를 분석하여, 비슷한 유형의 위반 사례에 대해 비슷한 제재 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

황 의 봉 위원

박석태 위원 : 지역일간지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를 부각 보도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일간지의 편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언론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언론사의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한다면 언론사에 보다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언론사가 많은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조 우 성 위원

원병설 부위원장 : 여론조사나 외부 기고의 경우에는 심의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의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회 상설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태 위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하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박 석 태 위원



문명호 위원 : 언론사의 자유와 편집권을 이유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남용되는 경우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사의 편집권 역시 책임이 따를 때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며 스스로 지키지 않는 책임을 법이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금번 심의에서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나는 매체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과 연대를 통해 언론사 및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재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남용되는 경우 책임이 따르고 언론사의 편집권
역시 책임이 따를 때 비로소 보장되는 것...스스로 지키지 않는
책임을 법이 지켜줄 수는 없어”

문 명 호 위원



이성섭 위원 :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가 현재와 같이 무질서하게 설립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기관을 설립할 때 일정한 자격 조건을 부여하고, 그러한 기준을 꾸준히 지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큰 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언론인의 자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설립할 때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가 현재와 같이 무질서하게 설립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언론인의 자질 및 언론사의 시설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

이 성 섭 위원

이준웅 위원 : 신문사 설립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고, 동일한 심의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택근 위원 : 언론사에 대한 교육 외에도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는 유형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언론사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발간되는 매체를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웅 위원 :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을 이유로 제제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공정성을 심의를 할 때에는 보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당사자의 반론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적인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형평성은 기사의 맥락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사만을 심의하기 보다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정적이



“공정성 심의를 할 때는 보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당사자의 반론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졌다고 생각...갈등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는지가 중요”

이 준 웅 위원

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제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재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가중 처벌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장 : 우리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심의위원님들께서 13차례에 걸쳐 선거기사심의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좌담회에서 이렇게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도 많았지만 고의적으로 편파보도를 해서 공정보도의무를 저버린 언론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금번 선심위의 활동이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부

심의·의결 사례



- 제1장 / 자체심의
- 제2장 / 시정권고심의

1. 사과문 게재

의결번호	2012국선8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씨앤비미디어(씨앤비저널(CNB저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53-109 대표이사 황 용 철
심의대상기사	CNB저널 2012년 3월 11일자 12~15면 「"이제 수원을 위해 4G로 뚫다!"」 제하의 인터뷰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 2. 위 언론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CNB저널> 목차면(3월 11일자의 경우 2면 또는 4면) 좌측 최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2012년 3월 11일자 CNB저널 4면 「42 김혜정 "저의 분신인 복길엄마, 저도 좋아요"」 제목 크기,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이 유	위 언론사는 본 위원회로부터 이미 2차례에 걸쳐 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 심의대상 기사 역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수원장안)와 관련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정견(政見), 선거구호, 출마 계기 및 포부 등을 인물 및 선거구호가 드러나는 사진과 함께 여러 지면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과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
2. 내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가 3월 11일자 12~15면 <심원섭 대기자가

만남 사람〉코너의 인터뷰 기사를 비롯해 1월 22일자 30~33면 〈서울 중구 유권자 돕는 ‘특별검사’ 되겠다〉제하의 기사(주의), 3월 4일자 12~15면 〈死地 강남을에서 선의의 경쟁 본선 경쟁력 높여주리라 확신〉제하의 기사(경고)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본지가 위 세 건의 기사에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정견(政見), 선거구호, 출마 계기 및 포부 등을 인물 및 선거구호가 드러나는 사진과 함께 여러 지면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이제 수원을 위해 4G로 뛰다!”

[인터뷰]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 장안 예비후보

검찰 개혁이 올해 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 출신 인사의 선거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사법 개혁이 여야를 불문하고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CNB저널은 지난 256-257호에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인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서울 중구)에 이어 이번에는 역시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원 장안구에 출사표를 내민 김용남 예비후보(새누리당)를 만나 총선에 나서는 각오를 들어봤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원칙을 떠받들어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신성하고 모든 책무를 다 하겠다.”

이 말은 지난 해 12월 27일 현직 부장검사로써 한창 잘나가던 때에 4·11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20여 년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뒤로 한 채 출사표를 던져 관심의 대상이 됐던 새누리당 김용남

수원 장안 예비후보의 일성이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시민단체 간담회, 장안구 내 전통시장, 사회시설 등 지역 내 여러 곳을 방문해 시민과 발로 뛰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김 예비후보는 최근 유명 통신회사에서 유행하고 있는 “4G로 뛰겠소!”라는 선거구호를 모티브로 ‘Going 장안!’(교통·물류 정책) ‘Good 장안!’(복지·교육·문화 정책) ‘Green 장안!’(환경·주거 정책) ‘Great 장안!’(지역경제 살리기 정책)등의 4가지 영역별 비전들을 발표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법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자와 법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몸소 느낀 김 예비후보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변호사업 등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직전 부장검사로써의 전관예우 문제가 있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세사업자들과 시장상인들을 만나다 보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제19대 총선의 당락과 상관없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법률자문과 무료상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심원섭 대기자가 만난 사람

“이제 수원을 위해 4G로 뛰다!”

[인터뷰]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 장안 예비후보

검찰 개혁이 올해 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 출신 인사의 선거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사법개혁이 여야를 불문하고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CNB자널은 지난 256-257호에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인원 민주당 합당 예비후보(서울 중구)에 이어 이번에는 역시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원 장안구에 출사표를 내민 김용남 예비후보(새누리당)를 만나 총선에 나서는 각오를 들어봤다.

심원섭 정치전문대記者 dailypen@cnbnews.com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원칙을 떠받들어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신성하고 모든 책무를 다 하겠다.”

이 말은 지난 해 12월 27일 현직 부장검사로서 한창 잘 나가던 때에 4·11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20여 년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뒤로 한 채 출사표를 던져 관심의 대상이 됐던 새누리당 김용남 수원 장안 예비후보의 일성이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시민단체 간담회, 장안구 내 전통시장, 사회시설 등 지역 내 여러 곳을 방문해 시민과 발로 뛰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김 예비후보는 최근 유명 통신회사에서 유행하고 있는 “4G로 뛰겠소!”라는 선거구호를 모티브로 ‘Going 장안!’ (교통·물류 정책) ‘Good 장안!’ (복지·교육·문화 정책) ‘Green 장안!’ (환경·주거 정책) ‘Great 장안!’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등의 4가지 영역별 비전들을 발표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법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자와 법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몸소 느낀 김 예비후보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변호사업 등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직전 부장검사로서의 전관예우 문제가 있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세사업자들과 시장상인들을 만나다 보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제19대 총선의 당락과 상관없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법률자문과 무료상담을 계속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말 일부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태스크포스팀(TFT) 구성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범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대의 글을 올리는 등 사회 전반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예비후보가 최근 수원 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에 발 벗고 나서 또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달 2월 2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과 만나 프로야구 제10구단의 수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감독은 “현재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를 위해 수원시와 전라북도가 가장 열성적으로 뛰고 있다”며 “그러나 프로 구단 유치에는 얼마나 많은 관객이 경기장을 찾느냐, 즉 시장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Going(교통·물류) Good(복지·교육) Green(환경·주거) Great 장안(지역경제) 아우르는 4G 정책으로 수원 장안을 경기 남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1200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110만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은 단일 관중시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며 “500만 이상 되는 경기 남부권의 프로야구 관중 시장을 사통팔달

의 수도권 교통 중심지인 수원시로 묶어 프로야구 제10구단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10구단 창단을 놓고 수원시와 경쟁 중인 전라북도가 도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하림과 손잡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원의 유치전략 또한 더욱 현실적으로 급진전 되어야 한다고 김 예비후보는 밝혔다.

그는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를 이번 총선에서 수원시 내 4개 선거구의 새누리당 공동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시의 제10구단 유치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작업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1970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출생으로 수원중·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검찰을 떠난 소감을 얘기해 달라.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20년간의 법조인 생활과 1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며 떠나는데 심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후회는 없다. 검찰생활을 통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에 정치입문을 앞두고 큰 망설임은 없었다. 특히 검사라는 옷만 벗었을 뿐이지 소외된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은 같다고 본다. 이 같은 마음을 먹었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가려 한다. 검찰 생활 동안 고마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정치권을 소위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 검찰에서 장래 유망한 검사로서 유명했는데 이를 뒤로 하고 굳이 ‘척박한 땅’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정치는 항상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는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다.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일하기에 정치권 밖에서 욕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발전 틀을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일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밖에서 옳다 나쁘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정치에 참여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고 싶었다.”

- 언제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수원 장안구다. 따라서 고향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장안구에서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고 그렇기에 장안구를 선택하게 됐다. 다른 정치인에 비해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 정치를 계속한 것이 아니고 법조계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오히려 제가 뉴페이스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이제 장안구를 저 김용남이 가진 플랜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검사 김용남’이 아닌 ‘정치인 김용남’으로서의 포부가 있다면?

“옛것과 새것이 잘 어울리는 장안구, 교통, 물류가 편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 법이 통하는 장안구, 아이나 자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자연친화적인 장안구를 만들기

심원섭 대기자가 만난 사람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수원 장안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다. 김용남이 만들겠다. 구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제게 많은 힘을 실어 달라.”

- 아직 공천 심사 중인데 일단 예선 통과를 자신하는가?

“본론부터 말하자면, 공천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한다. 모든 후보자가 다 그렇듯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 후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유권자들께서 가장 먼저 아시는 것 같다.”

-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약적으로는 의외로 눈물이 많아 검사 시절에도 생계형 범죄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기도 했다.”

- 최근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동지문정보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2월19일 대형마트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길을 잃고 당황해 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본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이 학생은 주말에 할머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왔다가 많은 인파가 몰려자 할머니와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겁을 먹고 마트 앞을 방황하는 학생을 진정시킨 뒤 학생을 할머니에게 잘 인도한 일이 있었다.

길을 잃어 방황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본 순간, '어이쿠, 저 아이가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다.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자 부모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경우는 다행히 길 잃은 손녀를 할머니께 인도해 드렸지만, 방송매체에서는 길을 잃고, 부모를 찾아 헤매는

미아 아동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와 우리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든다.

현재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미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17세가 돼야 주민등록증이 발급돼 국민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지적장애인에 한해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아동지문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홍보도 활발하지 못하다. 저는 미취학 학생 모두에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아동지문정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동지문정보 사전등록제는 Good장안을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이며, 정책이 시행되면 미아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고, 아동범죄 예방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의도의 입성할 경우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

속되더라도 다른 이에게 뒤처지지 않는 상임위 활동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고 자부한다. 우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연수 시절 쓴 '영국의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논문과 대학원에서 쓴 '내부자거래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라는 논문 집필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통해 국회 정무위에서 서민투자자들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거대 외국계 자본시장의 불·탈법적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 활동을 하고 싶다.

또한 법조인 출신으로서 당에서 상임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법사위에 배속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법 체제를 정비하고, 각종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에 배속된다면 장안구의 지역 숙원 사업인 4호선 복선전철 조기착공에 역점을 뒀 일하고 싶다.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역차별을 받으면서도 서울 도심의 인구가 경기도권으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종전의 지역인프라가 포화상태이다. 그런데도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장안 예비후보가 2월 28일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김인식 전 프로야구 국가대표 감독과 만나 프로야구 제10구단의 수원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 = 김용남 예비후보 사무실





심원섭 기자와 대담 중인 김용남 예비후보(오른쪽), 사진 = 장혜순 기자

그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지식경제위원회도 관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임위가 됐던 원론적인 이념과 사상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해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국민의 현실과 좀 더 부합되도록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 국민과 지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특히 수원 장안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한마디로 ‘4G’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Going 장안 (교통·물류정책)

재원 부족으로 2007년 7월에 백지화된 지하철 4호선 연장(인덕원~장안구청~화성동탄) 사업은 새누리당이 제17대 대선을 통해 부활시킨 지역 역점 숙원사업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하철 4호선 유치위원회’ (위원장 진성훈) 등과 협력해 조기 착공할 것이며, 장안구 내 복속의 정착역 신설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울권 출·퇴근 시

간대의 탄력적인 버스 전용차로 운용을 시행할 것이다.

Good 장안 (복지·교육·문화정책)

수원화성 복원사업과 프로야구 제10구단 수원유지를 임기 내 확정지를 것이며, 장안구 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정책,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입안할 것이다. 또한 SK케미칼, KT&G(구 연초제조창)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창출하고, 율천동 지역에 대학병원급 메디컬센터를 유치할 것이다.

Great 장안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공무원연수원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KT&G와 SK케미칼 부지에 지역인프라를 위한 건설경기 부흥책으로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지평을 열기 위해 지역민 우선고용제를 시행할 것이다. 영세 상공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매출 1주일 내 지급제도 신설, 과세특례 확대 및 연무·조원·정자·파장·서문 재래시장의 현대화 예산지원을 통한 풀뿌리 지역경제 대책을 모색하겠다.

Green 장안 (환경·주거 정책)

장안구에 산적해 있는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해당 주민들과 상설기구체를 구성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화동·송죽동·파장동 일대 민원은 법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광교산 일대는 도립공원화 사업을 추진, 수원천 일대는 수변정화사업을 통해 친환경 그린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살기좋은 도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 이제 시작단계지만 정계 은퇴 뒤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치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신분상승의 계층이동 통로가 막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경기도청 소속 하위 기능직 공무원으로 볼드체 기사였다. 집안 형평상 과외도 받을 수 없었고 학원도 다닐 수 없었다. 그 당시 일부 서을 부유층만이 비밀과외를 했을 뿐이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엔 믿겨지지 않겠지만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달라져 노력만으로 신분상승을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법조인이 되려면 제가 사법고사를 볼 때만 해도 사진과 2500원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생겨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게 로스쿨이다. 이러다 보니 계층과 신분 상승을 위한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다.” **CNB**

본지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0

의 결 번 호	2012국선8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거창신보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90-2 대표이사 박 정 자
심의대상기사	거창신보 2012년 1월 18일자 7면 「강석진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가져」, 1월 18일자 7면 「강석진 산청·함양·거창 국회의원 출마선언문」, 2월 7일자 1면 「강석진 예비후보 단독질주, 배성한 부각 돋보여」, 2월 14일자 1면 「강석진 전 군수 여전히 단독 선두」, 2월 21일자 1면 「강석진 전 군수 새누리당 입당 승인」, 2월 28일자 1면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 입당 최종 승인」, 2월 28일자 7면 「강석진 새누리당 입당 ... 정책과 능력 인정받아」, 2월 28일자 7면 「진실과 올바름을 거함산 군문들의 힘으로 지켜주셨습니다.」, 3월 13일자 1면 「강석진 무소속 출마선언」, 3월 13일자 2면 「강석진 무소속 출마선언... '대결구도 재개편」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사과문의 게재를 명한다. 2. 위 언론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거창신보> 1면 좌측 최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주제목 및 부제목은 2012년 1월 18일자 7면 「강석진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가져」 기사 주제목 및 부제목 크기,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강석진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가져」기사의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하여야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 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으로 할 것).
이 유	위 언론사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18일부터 10회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후보자 출마선언문, 성명서, 출마 사실, 선거 공약, 여론조사 결과, 선거 활동, 경력 등을 여러 차례 부각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2조(기고)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과문

1. 주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과문
2. 부제목 :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3.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 2012년 1월 18일자 7면 「강석진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가져」, 「강석진 산청·함양·거창 국회의원 출마선언문」 제하의 기사 및 2월 7일자 1면, 14일자 1면, 21일자 1면, 28일자 1면 및 7면, 3월 13일자 1면 및 2면 등 강석진 후보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본지가 2012년 1월 18

일부터 10회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후보자 출마선언문, 성명서, 출마 사실, 선거 공약, 여론조사 결과, 선거 활동, 경력, 공천심사 재심요청 내용 등을 여러 차례 부각시킨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과문의 게재를 명하였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

강석진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가져

더 큰 발전, 더 큰 변화를 강조하는 강석진 예비후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거합산을 만들기 위해 강석진(52) 전 거창군수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과 희망을 나누고,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며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서 거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로 거합산을 대한민국 최대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출마의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고, 거합산의 역량을 이끌어 내어 군민 누구나 안정된 지역공동체 속에서 일자리 · 육아 · 의료 · 교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거합산을 클러스터화로 만들어 문화 · 예술 · 교육 · 환경도시, 첨단산업과 물류 · 레저 · 산업 · 경제 · 한방 · 관광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

강석진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가져

더 큰 발전, 더 큰 변화를 강조하는 강석진 예비후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거합산을 만들기 위해 강석진(52) 전 거창군수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과 희망을 나누고,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며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서 거

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로 거합산을 대한민국 최대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출마의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고, 거합산의 역량을 이끌어 내어 군민 누구나 안정된 지역공동체 속

에서 일자리 · 육아 · 의료 · 교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거합산을 클러스터화로 만들어 문화 · 예술 · 교육 · 환경도시, 첨단산업과 물류 · 레저, 산업 · 경제 · 한방 · 관광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찾아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책과제로 △거창은 정보와 기술이 결합한 융합형 전략사업과 교육 · 의료사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개발 △한양은 관광레저 · 산삼휴양밸리, 물류의 중심지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 확보 △산청은 한약재와 생명에너지, 역사 · 문화가

넘쳐나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성장시킬 것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소망이 아닐 것이다”라며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합산의 미래를 열려는 사람들, 정의를 찾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 예비후보는 “오랜 세월 정당과 국회, 청와대와 군수로 재직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해 고민했다”며 “힘들고 짜박한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찾아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따뜻한 점이 살아 숨 쉬며, 교육격정 등 걱정 없이 농촌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국정 전반을 경험했으며, 중앙

정부에도 탄탄한 인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거창군수로 일하면서 다져온 지방행정가로서 정책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그는 두 번의 군수를 하면서 재임 당시 1700여억 원의 거창군 예산을 3200여억 원으로 늘려 경남에서 예산액 1위를 기록하면서 중앙정부의 탄탄한 인맥을 과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했고, 2004년 아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를 만드는 등 시민과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사범대와 교육발전 협정(MOU)을 체결해 교육도시 이미지를 다지는 등 자신의 최고 장강인 정책과 능력을 고루 갖춘 검증받은 일꾼으로서 거합산의 변화와 장래를 책임질 인물로 지역민들에게 새로이 각인되어 가고 있어 다가오는 총선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찾아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책과제로 △거창은 정보와 기술이 결합한 융합형 전략사업과 교육·의료사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개발 △함양은 관광레저·산삼휴양밸리, 물류의 중심지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 확보 △산청은 한약재와 생명에너지, 역사·문화가 넘쳐나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성장시킬 것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소망이 아닐 것이다”라며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창산의 미래를 열려는 사람들, 정의를 찾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 예비후보는 “오랜 세월 정당과 국회, 청와대와 군수로 재직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해 고민했다”며 “힘들고 팍팍한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찾아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생활속에서 따뜻한 정이 살아 숨 쉬며, 교육 걱정 돈 걱정 없이 농촌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울컥한 심정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국정 전반을 경험했으며, 중앙 정부에도 탄탄한 인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거창군수로 일하면서 다져온 지

— 강석진 산청·함양·거창 국회의원 출마선언문 —

“더 큰 발전, 더 큰 변화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거창·함양·산청 군민 여러분!

거창산의 아들! 강석진 거창산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창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농촌이 제대로 성장할 때, 국가의 올바른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며, 이 나라는 세계 속에 우뚝 솟는 국가로 부상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더 부강해지는 농촌,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창산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합니다. FTA문제, 해마다 오르는 농약 값, 사료 값,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과 과수농가, 감당할 수 없는 대학 등록금,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 육아 문제, 교육 문제, 등록금 문제 등 농촌의 해결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평생 농사일을 전직으로 여겨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걱정 없이 사셔야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멋있게 민주와 자유, 권위를 이기기할 수 있고, 미래를 꿈꾸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창산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거창산을 경제가 활성화 되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기술이 모이는 성장도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거창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산 군민 모두가 ‘희망’으로 넘쳐나는 도시로, 변화를 창조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정당과 국회, 청와대와 군수로 재직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힘들고 팍팍한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따뜻한 정이 살아 숨 쉬며, 교육 걱정 돈 걱정 없이 농촌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14만 산청·함양·거창 군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당당한 거창산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새로운 변화, 거대한 도전의 새 역사를 꿈꾸며, 저 강석진은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거창산 여러분의 변화와 열정,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거창산이 대한민국을 여는 핵심거점 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오늘 14만 산청·함양·거창 군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당당한 거창산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새로운 변화, 거대한 도전의 새 역사를 꿈꾸며, 저 강석진은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거창산 여러분의 변화와 열정,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거창산이 대한민국을 여는 핵심거점 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급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고, 농업 또한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거창산을 전체의 클러스터화로 만들어 문화·예술·교육·환경도시, 첨단산업과 물류·레저, 산업·경제·관광·관광도시로 특화시켜야 합니다. 또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찾아내야 합니다.

농업은 1차 산업에서 머물지 않고 행빙 트렌드에 맞춘 가공식품으로 확장하며, 카누와 체임으로 농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확대하고, 쌀·감·사과·딸기·포도·양파·화훼·한우·돼지·양봉 등 작목별로 산지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을 확대해야 합니다.

거창은 정보와 기술이 결합한 융합형 전략사업과 교육·의료사업 등 고부가 가치산업을 더욱 개발해야 합니다. 함양은 관광레저·산삼 휴양밸리, 물류의 중심지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청은 한약재와 생명에너지, 역사·문화가 넘쳐나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 혼자만의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또 이런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창산의 미래를 열려는 사람들, 정의를 찾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과 계층 간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거창산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군민 누구나 안정된 지역공동체 속에서 일자리·육아·의료·교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청·함양·거창 군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저, 강석진. 새로운 시대, 미래의 주역이 되는 거창산의 새 역사를 꿈꾸며, 도도한 역사의 물결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국민과 회합을 나누고,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서 거창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로 거창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가 되도록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저는 거창산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거창산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거창산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를 수 있습니다. 거창산 여러분! 우리의 꿈과 희망을 함께 다할까 손을 잡고 행진합시다.

새로운 거창산, 강석진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 강석진 (姜錫振)

생년월일: 1959년 12월 7일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87번지

본 직: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림리 102번지

학 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주요경력: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당무관 (전)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 (전)

여의도연구조 연구위원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보좌역 (전)

청와대 정부수석실 선임행정관 (전)

기장군수 (2대, 3대) (전)

현재 국민회당포럼 이사

방행정가로서 정책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그는 두 번의 군수를 하면서 재임 당시 1,700여억 원의 거창군 예산을 3200여억 원으로 늘려 경남에서 예산확보 1위를 기록하면서 중앙정부의 탄탄한 인맥을 과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했고, 2004년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피

해 조례를 만드는 등 서민과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사범대와 교육발전 협정(MOU)을 체결해 교육도시 이미지를 다지는 등 자신의 최고 장점인 정책과 능력을 고루 갖춘 검증받은 일꾼으로서 거함산의 변화와 장래를 책임질 인물로 지역민들에게 새로이 각인되어 가고 있어 다가오는 총선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4.11 총선 여론조사

강석진 예비후보 단독질주, 배성한 부각 돋보여 신성범 국회의원을 10.2%나 크게 앞질러

거·합·산 새누리당 성향 국회의원 적합도?
강석진 29.4%, 신성범 19.2%, 양동인 11.1%

지난 1월 29일(월) 거창신문, 거창중앙신문, 거창시사뉴스 등 지역의 3개 신문사가 합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덕유리서처에 의뢰 거창, 함양, 산청지역 성인 97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강석진 예비후보와 신성범 의원이 시소계열을 벌인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3개 군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은 강석진 예비후보가 신성범 현 의원을 10.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불과 28일 전 실시한 여론조사때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던 양상과는 크게 다른 유권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후보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투표여부를 묻는 2번째 문항에서는 배성한 후보의 부각이 돋보여 양동인 후보와 3위권을 다투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4\%$ 이며 조사대상은 거창, 함양, 산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

상의 성인 남녀이며, 표본의 크기는 975명이다.

표본 추출은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등을 사용,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대상 무작위 ARS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전화 응답대비 응답률은 7.8%였다. 참고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3개군 35,000명의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그중 연결된 전화수는 12709명이었고 조사에 응한숫자는 975명이었다.

(관련자료 8면)

4.11 총선 3차 여론조사

강석진 전 군수 여전히 단독 선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적합도

강석진 30.69%, 신성범 21.46%, 양동인 13.99%

본보와 거창중앙신문, 거창시사뉴스 등 지역 3개 신문사가 지난 11일(토) 덕유리서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강석진 전 군수가 변함없이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유리서처에서는 산청·함양·거창지역 성인 1072명을 대상으로 4월 총선에 관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월 29일(일) 조사한 결과와 큰 변화없이 강석

진 전 군수를 선두로 신성범 의원 양동인 전 군수 순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작은 변화는 김창호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신성범 국회의원 가장 많은 해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pm 2.99\%$ 이며, 조사 대상은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표본의 크기는 1072명으로 조사일은 2012년 2월 11일(토)이다.

표본 추출은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등을 사용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무작위 ARS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전화응답대비 응답률은 7.94%(연결된 전화 13795명)다.

(관련자료 8면)

강석진 전 군수 새누리당 입당 승인

타후보자들 충격, 지역정가 큰 파장 예상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 19일(일)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석진 전 군수의 입당을 승인했다.

강석진 전 군수는 그동안 경남도당을 통한 입당을 시도하였으나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을 이루지 못해 애를 태웠던 중 중앙당에 직접 입당 신청을 하면서 쉽게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진 전 군수의 새누리당 입당은 그동안 입당 불가능을 주장하며 강 전 군수를 압박해 오던 신상범 의원을

비롯한 타 경쟁후보자들에게겐 새로운 큰 짐으로 등장한 반면 강석진 전 군수는 발목에 매여 있던 족쇄를 풀고 훨훨 날게 되었으며 공천경쟁을 앞둔 지역정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다.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 입당 최종 승인

사기충천 강 후보진영 선의의 경쟁 주문. 타 후보진영 의기소침

27일(월) 오전에 개최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오 등 단독후보 21명을 확정된 후 뒤이어 계속된 회의에서 그동안 거창 등 당원자격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후보자들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면서 강석진 예비후보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강석진 예비후보의 복당여부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신청과정부터 논란이 되는 등 경쟁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나 이번 복당 확정으로 강석진 예비후보는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강석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게 사필귀정이라며 이보다 더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여 군민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고마움을 군민들에게 돌렸다.

한편 새누리당의 전라지역은 22곳으로 거창지구는 그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경선을 목표로 각 후보자들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강석진 새누리당 입당 ... 정책과 능력 인정받아



강석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에 입당하게 되면서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의 정치지형도가 요동쳤다.

새누리당은 27일 강 후보의 입당을 전격적으로 승낙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강 후보의 입당을 한때 보류했으나 23년간의 당직 경험과 국회경험, 거창 군수직과 청와대 근무경험을 인정받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

하고 입당을 승인했다.

강 후보의 입당은 그가 가진 막강한 경쟁력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세신과 통합의 이미지와도 맞는 결과로 풀이된다. 그는 정책과 능력을 갖춘 검증받은 일꾼으로 산청·함양·거창의 변화와 장래를 책임질 인물로 지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

강 후보는 이날 거창·함양·브리핑룸과 28일 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늦으나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형평성에 맞는 결정을 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진실과 올바른은 승리했고, 이 승리는 거창산 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승리"라고 일갈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정치를 거창산 군민 여러분이

앞장서 실천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바꾸어내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도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구태정치는 거창산 군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어 "앞으로 진행될 공천도 새누리당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다고 천명했다"며 밝히며, "확실하게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힘은 거창산의 주인인 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1차 여론조사에 이어 현역 하위 25% 탈락을 위한 현역 평가 조사를 마친 후, 내달 초순쯤 공천 후보자 확정이 예상된다.

강석진 무소속 출마선언

군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약속

거듭태어나겠다고 선언했던 새누리당이 기본정신을 망각한 채 단행한 원칙과 객관성이 결여된 공천을 바로잡겠다며 강석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3월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강석진 후보는 새로이 출발한 새누리당을 믿고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막상 공천과정은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등이 결여된 원칙이 없는 불공정 공천으로 그동안 심사자료 공개와 재심 요구 등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새누리당의 공천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거합산 군민들을 무시한 행위라며 공천심사위원회 회포에 치를 떨면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애착심은 감추지를 못했다.

원칙과 신뢰, 정의가 이기는 정치문화로 거합산 군민들과 함

께 하겠다는 강석진 후보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지역민들과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희망이란 작은 씨앗을 심는 길"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관련기사 2면>



성명서

진실과 올바름을 거합산 군민들의 힘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청·함양·거창 군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누리당에 복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늦으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형평성에 맞는 결정을 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간의 저에게는 5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진실과 올바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을 하나로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시간은, 믿음이 없었으면 안낼 수 없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모든 일은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진실과 올바름은 승리했고, 이 승리는 거합산 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정도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구태 정치의 거합산 군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정치를 거합산 군민 여러분이 앞장서 실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바꾸어내는 주역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저의 복당한 거합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거합산 주인은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천도 새누리당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힘은 거합산의 주인인 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거합산 군민과 당원 여러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합하고 전진하는 새로운 거합산 시대를 열어갑시다. 저 강석진, 23년간의 정당 경험과 국회 경험, 군수직 수행과 청와대 경험을 살려 산청·함양·거창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올바르고 함께 하는 정치로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합산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거합산 군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석진 올림

강석진 무소속 출마선언... '대결구도 재개판'

"정의가 승리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며 동참 요청

강석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2일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라는 비장 글 승부수를 걸치면서 여당의 뒷방으로 여겨졌던 산청·함양·거창 선거구가 본격적으로 요동치게 됐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지역신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출구 설문을 유지한 터라 거합산 지역은 새누리당과 야권후보, 무소속 후보의 대결구도로 재개편되면서 진검승부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후보들 간 경쟁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는 여론조사 경선이나, 선거인단 직접 경선을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도, 회고 경쟁력이 있는 산청·함양·거창 지역구를 단수 후보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며 "거합산 군민들이 이를 결코 과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또 "후보자를 승복시키지 못하고, 국민을 승복시키지 못하는 공천이었기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군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힘과 정의가 살아 있을수록 공천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2일~26일까지 5일 간에 걸쳐 여론조사가 실시됐지만, 29일 오전 10시경 새누리당 입당불허 파동이 일어난다. 강석진은 입당이 불허됐다"라는 문자가 대량으로 발

송되면서 지지자들은 무관한 여론조사로 인식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활동마지 중단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예비후보는 "올바름의 장으로, 구태정치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당당히 싸워이겨 거합산의 시원한 정치를, 군민을 섬기는 정치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반드시 만들 것"을 약속하며 마지막으로 "거합산 군민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게 하고, 원칙과 신뢰, 정의가 이기는 정치문화로 바꾸어가는 역사적 시발점의 주역이 되어달라"며 "희망이란 작은 씨앗을 심는 길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2012년 3월 7일 새누리당 공심위에 신청한 공천심사 재심 요청서 내용

1. 공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재심사와 경선 요구
2. 신성법, 강석진 후보간의 여론조사 결과 공개 요구
3. 신성법 의원 등 현역의원 25% 컷오프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

의결번호	2012국선11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청신문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대표이사 이 경 주
심의대상기사	충청신문 3월 20일자 1면 「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 3월 21일자 1면 「“대전의 미래 걱정하는 정치세력은 선진당뿐”」, 3월 22일자 3면 「지역 발전시킬 일꾼 뽑아 달라」, 3월 23일자 1면 「4·11 총선 본선 레이스 시작」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 2. 위 언론사는 2012년 4월 6일(금)까지 <충청신문> 1면 우측 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3월 20일자 심의대상기사(「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 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 처리할 것).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해 4일 연속으로 1면과 3면 등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합동 기자회견, 후보자 등록 등을 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물 사진을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제1항(사진게재)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과문

- 제 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과문
-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가 3월 20일자 1면 「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 21일자 1면 「“대전의 미래 걱정하는 정치세력은 선진당뿐”」, 22일자 3면 「지역 발전시킬 일꾼 뽑아 달라」, 23일자 1면 「4·11 총선 본선 레이스 시작」 제하의 기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하여 본지가 특정 정당 후보자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합동 기자회견, 후보자 등록 등을 전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 관련 기사와 인물 사진을 1면, 3면에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

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

한예종이나 방송예술원 유치할 것

“충남도청사는 일제의 유산이며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만 되고 있어 철거가 필수적이다.”

대전 중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선화동 선거 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을 철거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일제강점기 잔재인 충남도청사를 철거한 후, 이전부지에는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면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부지에는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캠퍼스와 방송예술원 등을 유치하고, 한류문화센터를 설립해 대전 중구를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함께 밝혔다.

권 의원은 “한예종이나 방송예술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청은 철거하겠다”며 “한예종과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기 때문에 대전 유치는 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청부지는 무언가를 없애는 파괴가 아니라 향후 이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가 될 것”이라며, “철거 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가적 차원의 전문예술가 양성을 지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4년제 국립예술 특수대학교로, 한예종 제2캠퍼스를 대전에 유치할 경우 중부권의 신 한류 문화예술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 역할은 물론, 주변지역 활성화와 원도심 지역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후보는 이밖에 중구발전 3배 끌어올리기 일환으로 △도시재생기금 신설 △공공기관 유치 △태평 · 유천 · 오류동 지역에 명문고 신설 △보문산-오월드-뿌리공원-아쿠아월드 간 신교통수단(바이케이بل) 도입 및 연계상품 개발 △아쿠아월드 조기 정상화 및 테마관광지로 육성 △뿌리공원 내 국내유일 효(孝) 테마파크 조성 △안영동 일대 생활 체육시설 집적단지 조성 △부사칠석놀이 문화유산 지정 및 지원 △중촌시민의 숲 조기완공 △게이트볼 전용 구장 설치 등을 제시했다. (후략)

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

한예종이나 방송예술원 유치할 것



자유선진당 권선택 후보가 19일 선화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충남도청사 철거 후 한예종 및 방송예술원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야심만만 3S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청사는 일제의 유산이며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만 되고 있어 철거가 필수적이다.”

대전 중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선화동 선거 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을 철거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일제강점기 잔재인 충남도청사를 철거한 후, 이전부지에는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면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부지에는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캠퍼스와 방송예술원 등을 유치하고, 한류문화센터를 설립해 대전 중구를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함께 밝혔다.

권 의원은 “한예종이나 방송예술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청은 철거하겠다”며 “한예종과는 어느 정

도 조율을 했기 때문에 대전 유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청부지는 무언가를 없애는 파괴가 아니라 향후 이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가 될 것”이라며, “철거 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가적 차원의 전문예술가 양성을 지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4년제 국립예술 특수대학교로, 한예종 제2캠퍼스를 대전에 유치할 경우 중부권의 신 한류 문화예술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 역할은 물론, 주변지역 활성화와 원도심 지역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후보는 이밖에 중구발전 3배 끌어올리기 일환으로 △도시재생기금 신설 △공공기관 유치 △태평·유천·오류동 지역에 명문고 신설 △보문산-오월드-뿌리공원-아쿠아월드 간 신교통수단(바이케이블) 도입 및 연계상품 개발 △아쿠아월드 조기 정상화 및 테마관광지로 육성 △뿌리공원 내 국내유일 효(孝) 테마파크 조성 △안영동 일대 생활체육시설, 집적단지 조성 △부사칠석놀이 문화유산 지정 및 지원 △중촌시민의 숲 조기완공 △게이트볼 전용 구장 설치 등을 제시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4·11총선에 출마하는 자유선진당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20일 시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선거실천을 다짐하며 서약문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대전의 미래 걱정하는 정치세력은 선진당뿐”

합동 기자회견… 4·11 총선 선전 다짐

대전지역 6개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후보들이 “대전·충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세력은 자유선진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동구의 임영호, 중구의 권선택, 서갑의 송종환, 서을의 이재선, 유성의 송석찬, 대덕의 이현 후보 등 6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20일 오전 11시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합동 회견을 통해 “여섯명의 후보들은 제갈공명의 위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촉한의 제2대 황제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린 결연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시민들 앞에 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 후보들은 ‘4·11총선 후보자 합동기자회견 및 공명선거 실천다짐 서약문 발표’ 행사를 갖고 이번 총선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선진당은 6개중 5석을 휩쓸었지만 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영호남

양당 패권주의 틈에서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못나고 부족해도 역시 내자식이라고 한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남의 자식 키우기 어렵다. 대전 충청을 대변하고 진정으로 대전 충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세력은 선진당 뿐”이라며 “한번 더 밀어달라. 선진당을 지켜 달라.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구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은 대전보다 인구가 30만 명이나 적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6곳으로 같다. 대전보다 인구가 5만 명이나 적은 광주는 8곳으로 오히려 2곳이 더 많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전은 고사하고 충남 천안시의 경우, 인구가 31만을 넘어 헌법적으로 분구자격을 받았는데도, 역 개리멘처럼 특정당을 폐어 내어 결국 분구를 무산시켰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세종시 출마와 관련해서 권선택 위원장은 “이 전 총리는 ‘세종시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심대령 대표는 지역을 토대로 커운 사람이고 지역민들을 위한 많은 일을 해온 분이다. 당당하게 싸워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들은 시민에게 드리는 서약문을 통해 △부정과 불법을 하지 않는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흑색 선전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싸움질 않는 선거풍토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메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시 △서민계층, 사회적 약자, 소외자 편에 서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 △대전 및 충청권의 대변정당임을 재확인하며 정치적 정책적 휴대 타파 등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제3당으로서 대전·충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지역 발전시킬 일꾼 뽑아 달라

권선택 후보, "대전의 만아들 역할 충실히 해 내겠다"

임영호 후보, "승리로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것"



자유선진당 권선택 후보

자유선진당 권선택 후보(대전 중구는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번 선거가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 정권과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꼭 당선돼 충청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전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

만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중구 구석구석 발로 뛰며, 여섯 개의 공공기관과 3개의 시설을 유치하고, 20년 숙원이던 보문산 일대 고도제한을 폐지시켰다"면서 "침체에 빠진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구를 잘 알고, 책임감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충남도청사 철거 공약'을 제시하면서 정책대결을 주도하고 있는 권 후보는 경쟁후보의 반대 의견에 대해 일장도 내놓았다.

권 후보는 "새누리당의 '대전시 주권포기' 주장은 행정을 해본 사람이 라면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유치 약속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국립한국예술대학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공격했다.

이어 그는 "심사숙고해 제시한 공약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관계는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원도심을 재도약시킬 수 없다는 신념에 변화가 없다"고 충남도청사 철거를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임영호 후보(대전동구)도 이회창 자유선진당 명예선거대책위원장, 이인제 공동선거대책위

원장, 신운표 전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임 후보는 출정사에서 "꽃피는 춘삼월이 다가오는 데 서민들의 삶과 마음은 봄을 실감할 수 없는 한 겨울이며, 촌래불사춘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같다. 오로지 경제만을 바라보고 섰던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서민을 생활고에 몰아 넣었다"라며 "이번 4·11 총선은 이러한 서민 말살정책을 편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시 수장안과 과학벨트를 대전광역으로 내세웠던 행정권은 표를 위해 이를 이용했을 뿐, 철저히 충청권을 농락했다"며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새누리당과 충청권을 세력화장에만 이용한 민주당을 심판하는 4월 11일, 승리로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남상식기자 nss5588@dailycc.net

4·11 총선 본선 레이스 시작

세종시 이해찬·심대평 등록... 대전 중구 세번째 격돌 성사

4·11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2일 전국 246개 지역구에 600여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에서는 대전 19명, 충북이 29명, 충남이 31명 등 7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6개 선거구의 경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자유선진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정통민주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이 등록했다.

대전·충청지역 후보자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충남 총선 예상에 출마하는 홍문표 후보와 대전 중구 강창희 후보 등 21명이, 민주통합당은 세종시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 등 19명, 자유선진당은 심대평 후보를 포함해 16명, 야권연대가 상사원 통합진보당은 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또 진보신당은 대전 서구에 도전장을 내민 김윤기 후보를 포함해 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정통민주당 서진희 후보도 대전서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강철 후보 등 무소속 후보 5명도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다. 특히, 이번 총선 지역구 중 관심있게 살펴 볼 지역은 자유선진당 심대평 후보와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가 맞붙는 세종시와 새누리당 강창희, 자유선진당 권선택 후보의 세 번째 리턴매치가 벌어지는 대전 중구이다. 새누리당 강창희 후보와 자유선진

당 권선택 후보가 3번째 격돌하는 대전 중구는 민주통합당 경선을 거쳐 올라온 이서영후보가 가세했고, 대전 동구는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윤석만 후보와 민주통합당 선병렬 후보가 모두 경선에서 이광우 후보와 강래구 후보에게 본선 진출자격을 내줬다.

또, 충남 천안갑에서는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와 민주통합당 양승조 후보가 등록을 마쳐 세 번째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 천안갑은 특히, 선거구 분구가 무산되면서 천안읍에 있던 쌍용 2동이 옮겨온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첫날 후보자 등록을 마친 총선 주자는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

선거구별로는 △청주 상당=새누리당 정우택, 민주통합당 홍재현, 자유선진 김중현 △청주 흥덕갑=새누리 윤경식, 민주통합 오재세, 자유선진 최현호, 진보 이용호 △청주 흥덕을=새누리 김준환, 민주통합 노영민, 무소속 김우택 △청원=새누리 이순훈, 민주통합 변재일 △충평=진천·괴산·음성=새누리 경대수, 민주통합 이재한, 무소속 심규철, 무소속 조위필 △충주=새누리 윤진식, 통합진보 김용현 △제천·단양=새누리 송광호, 민주통합 서재관, 자유선진 정영철 등이다.

/특별취재반



제9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실시된 22일 오전 9시, 권선택 자유선진당 후보(대전 중구)가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결정 후 보도문

충청신문

대면 010-510-1111, 010-510-1112, 010-510-1113
[제1531호] 대표(042)533-7470

www.dailycc.net

단가 4345원 (송별 3월 18일)
2012년 4월 6일 금요일

‘충청권 표심 잡아라’ 선거전 가열

경합 선거구 증가·후보자간 지지도 격차 좁혀져

세헌 의원 후보

민준 의원 후보

4·11 총선을 9월 앞두고 충청권 선거구의 경합지역이 증가하고 후보자간의 지지도 격차가 좁혀져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각 정당은 선대위원장을 맡은 유력인사들이 총 출동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수색을 통해 지지율을 조조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조짐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충북 후보 선출

선거법에서 충청권 표심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충북 일부 선거구이다.

프리카계하고 있다. 방송 공적보론에서 조차 정책 논쟁이나 지역개발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가보려는 학계와 전문, 추상론 등을 우회적으로 상대방을 폄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선출 승리의 변수는 세헌의원 박근태 선대위원장이거나 민주당 정책수 대표인 김충현당원의 지원 수준과 김충현의 자유선진당 후보의 목표에 얼마나 지직하고 있다.

충북 도청 등 주요기관이 자라한 청주 상당 선거구는 단순히 거를 정적인 지원을 넘어 충청권 출신

박관주 후보가 앞선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 당선된 후 충남지사 자리에 나선 자유선진당 박상문 후보도 그동안 2차례 선거에서 승리했던 정동영과 박근혜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승리를 자신하고 있어, 현직인 선거구는 충청권에서 결과 예측이 가장 어려운 선거구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수도권권을 운반 등으로 사실상 충청권 보다는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이렇듯 민선부터 정당을 보고

충남 보합 사전

충남에서는 보합·사형 선거구가 2곳 1곳 구도로 형성되면서 세력이 나뉘고 있다. 현재 이렇다 자유선진당 특강한 후보가 보합시를 결정해 주호민, 오현민, 천보현, 정소연 등 주로 보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세헌의원 김희를 후보는 보합시대를 주축에서 앞서고 있으며, 민주당계당 양승을 후보는 민주당계당과 박정을 등에 업고 밀릴 수 후보를 추격 중 인 양상이다.

특히 이 지역 후보들은 모두 보합 출신으로 보합에서는 승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 속에 세헌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 주력하고 있다.

최근 KBS 뉴스 메인 앵커였던 류 후보는 “자신은 매우 많은 정치권에

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이를 역이용해 “개인 기간 동안 도내 유권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 현재 의원의 프라이머임을 갖고 있는 류 후보가 약간 우세해 보이지만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충남도 부지사 출신인 김 후보가 “부지사 시절 지역을 잘 관리를 잘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형국이다.

충북 정책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4월 3일 충청권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있는 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과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가 3월 20일자 1면 ‘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 21일자 1면 ‘대전의 미래 걱정하는 정치 세력은 선진당뿐’, 22일자 3면 ‘지역 발전시킬 일꾼 뽑아 달라’, 23일자 1면 ‘4·11 총선 분석 레이스 시작’제하의 기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와 공평성,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와 인물을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해 본지가 특정 정당 후보자의 공약발표 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합동 기자회견, 후

보자 등록 등을 전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 관련 기사와 인물 사진을 1면, 3면에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4월 3일 충청권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있는 서

충남도 부지사 출신인 김 후보가 “부지사 시절 지역을 잘 관리를 잘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형국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4월 3일 충청권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있는 서

충남도 부지사 출신인 김 후보가 “부지사 시절 지역을 잘 관리를 잘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형국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4월 3일 충청권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있는 서

충남도 부지사 출신인 김 후보가 “부지사 시절 지역을 잘 관리를 잘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형국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4월 3일 충청권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있는 서

충남도 부지사 출신인 김 후보가 “부지사 시절 지역을 잘 관리를 잘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형국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4월 3일 충청권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있는 서

충남도 부지사 출신인 김 후보가 “부지사 시절 지역을 잘 관리를 잘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형국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4월 3일 충청권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 있는 서

충남도 부지사 출신인 김 후보가 “부지사 시절 지역을 잘 관리를 잘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형국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과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가 3월 20일자 1면 “권선택 후보, 충남도청사 철거하겠다”, 21일자 1면 “대전의 미래 걱정하는 정치 세력은 선진당뿐”, 22일자 3면 “지역 발전시킬 일꾼 뽑아 달라”, 23일자 1면 “4·11 총선 분석 레이스 시작”제하의 기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와 인물을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해 본지가 특정 정당 후보자의 공약발표 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합동 기자회견, 후

보자 등록 등을 전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 관련 기사와 인물 사진을 1면, 3면에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12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93-1 대표이사 권혁상
심의대상기사	충청리뷰 3월 23일자 1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4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흔들린다」, 5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6면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및 3월 30일자 1면 「손바닥으로도 하늘을 가릴 순 있다」, 4면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확인」, 5면 「그대는 정우택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 2. 위 언론사는 2012년 4월 13일(금)까지 <충청리뷰> 1면 좌측 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3월 23일자 1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의 각 글자 사이를 1칸 이상 두며, 기사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하고 제목과 본문 사이 최소 1줄 이상 간격을 둔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으로 할 것).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추적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과 본문에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제1항(사진제재)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과문

- 제 목 : 사과문
-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 3월 23일자 1면, 4면, 5면, 6면의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외 3건의 기사 및 3월 30일자 1면, 4면, 5면의 「손바닥으로도 하늘을 가릴 순 있다」 외 2건의 기사 등 총 7건의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관련하여 본지가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추적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과 본문에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위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130(재심) (원심결정 : 2012국선12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93-1 대표이사 권혁상
심의대상기사	충청리뷰 본지 3월 23일자 1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4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흔들린다」, 5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6면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및 3월 30일자 1면 「손바닥으로도 하늘을 가릴 순 있다」, 4면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확인」, 5면 「그대는 정우택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
주 문	1.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청구인은 2012년 4월 13일(금)까지 <충청리뷰> 1면 좌측 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재심대상기사 중 3월 23일자 1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의 각 글자 사이를 1칸 이상 두며, 기사본문은 재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하고 제목과 본문 사이 최소 1줄 이상 간격을 둔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으로 할 것).
재심청구취지	2012국선124(자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본 위원회 2012국선124(자심) 결정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 하에 본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사과문 게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본 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심청구인 대리인의 진술 및 추가 제출자료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재심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및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추적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과 본문에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였고, 해당 후보의 반론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사 재심요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확한 근거 하에 본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심요구인의 재심요구는 이유 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막장드라마의 막장을 꿈꾸며

갈등을 겪는 두 부부가 부딪치고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파트너 체인지가 된다는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현모양처가 요부로 돌변해 상대의 사업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과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시청자들이 욕을 하면서도 보게 만드는 드라마를 흔히 '막장드라마'라고 부른다.

정치판이 그렇다. 4·11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뉴스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격전지로 손꼽히는 청주 상당에서도 막장드라마가 흥행 중이다. 유권자들은 판단의 잣대를 상실한 채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에 푹 빠져있다. 정치에서 막장드라마가 막장에 이르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드라마 속에 뛰어들었다. (후략)

A이슈&포커스

지역인물+뉴스로 충북전남 www.cbnews.co.kr

충청리뷰

719호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막장드라마의 막장을 꿈꾸며

갈등을 겪는 두 부부가 부딪치고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파트너 체인지가 된 다든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현모양처가 요부로 돌변해 상대의 사업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과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시청자들이 욕을 하면서도 보게 만드는 드라마를 흔히 '막장드라마'라고 부른다.

정치판이 그렇다. 4·11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뉴스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격전지로 손꼽히는 청주 상당에서도 막장드라마가 흥행 중이다. 유권자들은 판단의 잣대를 상실한 채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에 푹 빠져있다. 정치에서 막장드라마가 막장에 이르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드라마 속에 뛰어들었다.

/ 글, 이재표 기자·사진, 육성준 기자

▶ 표지[01마기] A4~A6



손바닥으로도 하늘을 가릴 순 있다.

시선을 하늘에 두지 않고 손등에 둔다면 말이다. 그러나 한 사람을 오래 속이거나 대중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대중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충청리뷰는 정우택(청주 상당·새누리당) 후보들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지난 주 ‘표지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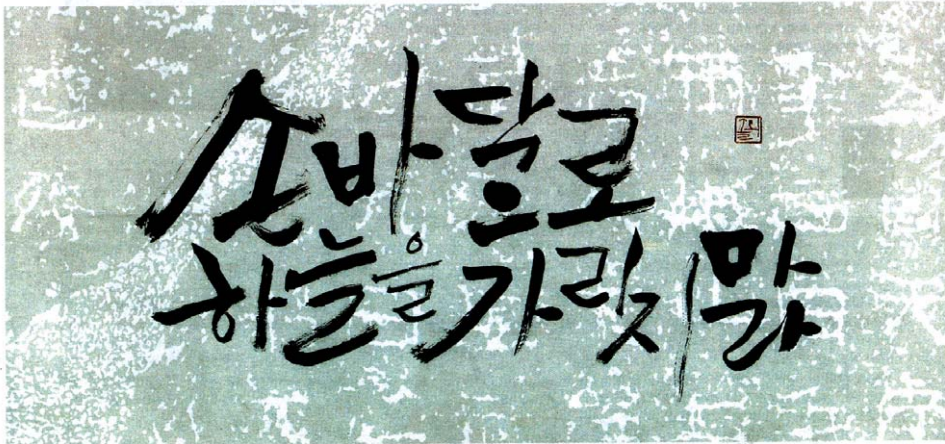
로 다뤘다. 정 후보는 이 가운데 <과정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등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2억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조정을 신청했다. 충청리뷰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번 호 표지이야기로 다뤘다. (후략)

A이슈&포커스

지역인터넷신문 충청민뉴스 www.cbnews.co.kr

충청리뷰

720호 2012년 3월 30일 금요일



손바닥으로도 하늘을 가릴 순 있다.

시선을 하늘에 두지 않고 손등에 둔다면 말이다. 그러나 한 사람을 오래 속이거나 대중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대중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충청리뷰는 정우택(청주 상당·새누리당) 후보들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지난 주 ‘표지이야기’로 다뤘다. 정 후보는 이 가운데 <과정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등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2억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조정을 신청했다. 충청리뷰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번 호 표지이야기로 다뤘다.

/ 글_이재표 기자·글씨_이희영

▶ 표지이야기 A4-A5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흔들린다

정우택 후보 성상납 진상 논란

기자회견으로 누명 벗었나

3월 18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 선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후보는 올마이더 간신히 기자회견을 남독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은 "성상납을 받았다는 등 사실이 아닌데도 혹색선전으로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저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며 시도한 범죄 혐의자 3명을 찾아내 오늘 오전 검찰과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이들은 손인석, 허○○, 양○○ 등 선출권 관계 3명입니다"로 시작됐다.

정 후보는 3명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으나 기사에서는 19일 해명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신원이 알려진 손인석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실명으로 처리한다. 허씨는 정우택 캠프의 SNS담당자, 양씨는 공연기획사 대표. 이들은 모두 충북청년경제포럼의 구성원이다. 또 정 후보가 언급한 약의 적인 혹색선전은 15일 새벽 'Crime to guilty'라는 제목의 이후 블로그에 올라온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청주 상당)의 반대적 성매매 의혹'이라는 글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 후보는 "흔집 내기 위해 조작된 허위사실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건디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제 아내가 조금의 흔들림 없이 보여준 자에 대한 관련한 신뢰와 믿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대목에서는 특이 매는 듯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정 후보는 "여러 없지는 허위사실을 공모한 이유, 공모장소, 합법분담, 범죄수법 등이 상세히 포함된 움직임 수 없는 누명 증거를 확보했다"며 누명증거의 일부 내용을 서면 공개했으며, 정 후보 퇴장 후에는 녹음기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내용이 현장에서 재생됐다.

정 후보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제시한 누명 증거는 정 후보 캠프의 선거기획자인 이 모씨가 고발된 3인과 선출권 관계에 있는 최 모(본문 광고고 직원)씨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24분4초 중 10분56초 분량이다. 이씨는 19일 언론에 배포한 의견서 등을 통해 "18일 아침 캠프로 출근하던 중 최씨가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내용이 상당히 많아 통화 후반부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공개한 '심상치 않은 내용'은 "손인석이 공원에서 낙한 것 다름날 서울을 다녀와서 3자가 하루 종일 자랑을 하였으며 이 때문에 (최씨) 양씨에게 연락을 해드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양씨에게 육두문자를 남겨주더니 양 모씨는 손인석에게 말이 생겼다고 답을 했고, 다시 (최씨)가 양 모씨에게 정확한 내역에서 황색수술하는 등의 사실이

누취 당사자 "불법누취하고 허락 없이 공표해" 鄭 고소
새누리당 잇단 성추문 속 '확실한 기자회견'이 급했다



씨가 손인석, 허 모씨와 함께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누취당한 최씨, 정 후보 고소

그러나 최씨의 말은 달랐다. "홍소 호형호제하던 선거기획자 이씨와 몇 차례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씨가 '캠프회의 과정에 허 모씨가 나와 양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말해 (나를) 혼란시켰고, 개인적인 신뢰를 전제로 추측 등 사건을 말했다는 뿐이다.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사전, 사후에도 알려주지 않았고, 당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의는커녕 귀찮다고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원소의 인간관계를 이용해 유도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이씨에 대해 심판스럽고, 자신이 고발한 선거기획자를 불법행위의 도구로 이용한 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 후보를 19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전날 밤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던 최씨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오면서 통화가 시작됐고 통화 중 후반부를 녹음한 것이므로 유도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의 이씨의 진실개입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루더라도 정 후보 캠프는 범죄 혐의자로 지목한 3명의 실명을 공개할 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선거기획자 이씨는 "범죄의 불모지 글 말미에 손인석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낙선한 홍명갑 공천에 대해 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어 손인석을 의심했다. 손과 친분이 있는 허씨도 캠프회의 과정에 황색수술하는 등의 사실이

정우택 새누리당 청주상당 후보는 자신을 향해 불거진 성상납 의혹을 단호하게 반박했다. 18일 기자회견에서는 "범죄 혐의자 3명이 공모했다"며 실명을 공개하고 고발했다. 정 후보는 녹취록을 근거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장담했으나 그 증거가 흔들리고 있다.

가 부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최씨와 통화를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18일 오전 8시36분 이씨와 최씨가 통화를 하고 이날 오후 2시 11분까지 밝혀지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3명의 혐의에 대한 확신보다는 적어도 흥신 전까지 진범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혹)에 '국면전환용'으로 이름을 희생양 삼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가의 소식통은 "블로그 글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유포된 상황에서 정 후보가 어떤 기자회견을 한들 유권자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그냥 '혹색선전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 오히려 여론에 더 회자될 것이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면 의혹이 더 증폭될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범인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기자회견이 필요했고 범행의 동기와 억압분담 등을 재확인하러 이들 3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야후 본사' 협조가 수사 관건

이 소식통은 또 "요즘 새누리당이 석호인, 유재중 후보 등의 여성비하와 불륜논란 등으로 '새누리당'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 후보가 신속히 의혹을 씻어내지 못할 경우 공천반납까지 예상되는 위기로 봐야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진위확인을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어찌 됐든 정 후보 측이 다급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씨와 최씨가 통화를 한 지 불과 1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이 열렸으니 말이다. 사건의 종대함을 인식한 경찰도 신속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허씨를 불러 조사했다. 허씨는 경찰에 불려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고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고발인 양씨는 '이날 낮 2시쯤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통화를 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경찰이 대전까지 찾아왔다. 인근 둔산경찰서로 동행해서 조사를 받으러다가 협조가 되지 않아 충북경찰청으로 와서 조사를 받고 집, 사무실 등에 있는 컴퓨터와 휴대폰까지 가져가도록 경찰에 협조했다. 셋이서 공모를 하는커녕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는 대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 측에서 셋이 공모한 장소로 지목한 곳은 청주시 용정동에 있는 한 카페다. 최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허씨가 14일 이곳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공모장소로 찍은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데이인 이날 허씨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허씨는 "해당장소의 CCTV를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 경찰도 내내 그곳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씨와 양씨 이외에 또 다른 피고발인 손인석씨, 누취록에 등장하는 최씨 등도 1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가 임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조사과정에서 고발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실명을 공개할 정도의 확정성은 무리라는 정 후보 측의 고발에 대해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북부수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여차피 수사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과학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고발인 말만 듣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 대장은 또 수사진척에 대해 "계시자가 미국 국적으로 야후 계정에 가입했고 홍콩에 합당한 법률을 적용했다. 그렇다고 꼭 외국에서 글을 올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수사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야후 본사에서 협조해야한다. 그래서 결과를 정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통신엔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기 기자 gajack@naver.com

충청리뷰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 719호

표지 이야기

이슈포커스 A05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정우택 후보 성상남 진실 논란

아는 몇 사람은 분명히 안다

3회에 걸친 제주골프와 1, 2차 술자리는 분명한 사실 '오야붕'이라고도 부르며 질편한 술판, 그 뒤엔...분분

■ 취재기법에 대하여

아주 불로 'Crime to guilty'를 통해 정우택 후보(당시 충북지사)와 함께 제주에서 골프대회를 갖고 변태적인 성상남을 했다고 지목을 받은 단체는 충북청년경제포럼이다. 2007년 5월22일 창립된 이 단체는 '정 지사를 지지하는 외연조직'라는 글지 않은 사선을 받아왔다.

취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 단체의 다음 카페의 글을 뒤져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해킹이나 단체회원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 컴맹수준인 기자에게도 카페의 담배를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후배기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료를 얻은 방법은 다음 두 가지다. 회원이 아니라도 게시글을 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방법을 공개한다.

① 다음에서 해당 카페를 검색한 뒤 검색창에 올라온 카페고리에서 '이 카페에서만 검색하기를 클릭하고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내용이 노출된다.'

② 해당 카페에 가입된 회원의 이름을 검색한 뒤에 '마이소셜' 카페고리를 클릭하면 그 카페의 내용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두 가지 방법은 키워드로 검색된 글만 볼 수 있으며 카페의 다른 글로 이동할 수는 없다.

'Crime to guilty'는 정 후보가 2008년 6월 21일과 2009년, 2010년 6월 13일 제주도에서 충북청년경제포럼(이하 청년포럼) 회원들과 골프를 치고 톨샷룸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변태수준의 성상남을 받았다고 골프장과 술집, 술값(6월21일 580만원), 호텔이름까지 적시했다. 다수의 청년포럼 회원들과 톨샷룸 한 겹과 골프회장과 1, 2차 술자리까지는 단 한 명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성상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A회원은 "우리는 동종업계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익집단이 아닌데 무엇이든 상남을 할 이유가 없다. 골프를 치고 1, 2차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면에서 상식의 선을 넘지 않았다. 성상남은 절대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B회원의 말은 달랐다. "2차 술자리는 늘 질편했다. 술자리가 절정에 달할 때쯤 늘 지사가 먼저 자리를 뒀고 이어서 10분쯤 뒤에 간부회원들이 지사의 여자를 포함해 여자들을 데리고 따라 나왔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솔직히 모른다. 그러나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증언했다.

청년포럼 카페에 2차 술자리와 관련한 사진은 없지만 골프장과 1차 술자리 등의 흔적은 분위기를 담은 사진은 여러 장 올라왔다. 주목할만한 것은 2008년 6월21, 22일 제주골프장과 관련한 사진이다. 행사개요를 적은 이 문건에는 일시 및 장소와 함께 항공편, 호텔, 이동경로 등이 자세히 적혀있다. 명단에 정 후보는 없고 지사를 지칭하는 듯한 '사장님'이 있다.



2008년 6월21일 제주골프를 마치고 당시 정우택 지사와 청년포럼 일행은 1, 2차 술자리를 가졌다. 2차 술자리 이후 성상남 의혹에 대해서는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청년포럼 카페에서 피음.

C회원은 "제주 현지에서는 (당시) 정 지사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술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오야붕(오야붕-무박을 뜻하는 일본어)이라고 부르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참가비는 골프회원 100만원, 비골프회원은 50만원이다. 정 후보가 회비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B·C 회원 모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술값, 지사가 145만원 결제 기록도

'Crime to guilty'에 게재된 정 후보 관련 또 하나의 비위는 K일식집 주인과의 불륜과 부적절한 술값결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B회원은 "해당일식집에서 1차를 하고 2차 톨샷룸으로 가면 누군가가 일식집 사장 P씨를 현장에 데려온 것은 맞다. 지사가 P씨를

데려다준다"며 먼저 나간 적도 있다. 그러나 P씨가 얼마 되지 않아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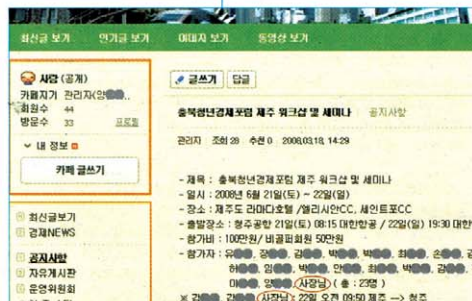
충청리뷰가 카페검색을 통해 찾아낸 2007~2010년 '청년포럼사업보고'에 따르면 이 기간 총 청년포럼이 가진 57차례의 모임 중 K일식집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10차례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정우택 지사를 초청해 가진 모임 6번 가운데 매직프라자 컨벤션에서 열렸던 청담총회를 제외한 5번의 만찬이 모두 K일식에서 열렸다는 것이다. 사업보고 비교판에는 1~3차까지 술자리를 후원한 회원들이 이름과 금액도 부기돼 있다. 이 가운데 2008년 10월15일 K일식에서 1차 술값 145만원의 정 후보가 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Crime to guilty'는 P씨가 톨샷룸에 동행한 날짜와 1, 2차 술값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8년 1차 술값과 사업보고에 일치한다. 'Crime to guilty'는 "정 후보가 술값을 내야할 경우 비서로 하여금 각 실과 및 실과별 판공비 카드를 수합하여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폭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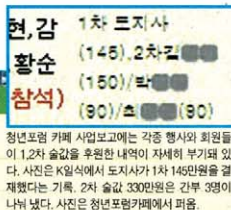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이명명을 요구한 도청공무원들은 "토·일요일에는 법인카드를 아예 쓸 수 없고 일정한 시간, 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외상을 쌓아놓고 나중에 분리결제하는 것은 사실상 관행에 가깝다"고 귀려했다.

송재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제주로까지 가서 도에 넘는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성매수에 대한 정청적 증거만 있다면이라도 철저의 수사에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표 기자 gapda@naver.com



사진은 당시 정우택 지사를 사장님이라고 기재한 제주행사 진행문건. 회원들은 2차 술자리에서도 정 지사를 사장님, 또는 오야붕이라고 호칭했다고 한다.



청년포럼 카페 사업보고에는 각종 행사와 회원들이 1, 2차 술값을 후원한 내용이 자세히 부기돼 있다. 사진은 K일식에서 도지사가 1차 145만원 결제했다는 기록. 2차 술값 330만원의 간부 3명이 나뉘 냈다. 사진은 청년포럼카페에서 피음.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정우택 후보 청산당 진심 논란

서로 너무 많은 것을 공유했다

“안마의자·스마트폰 선물에 현금 100만원도 건네”
“인맥의 빈곤” 해소하려다 결국에는 ‘잘못된 만남’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애정은 언제든 애증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이번 정우택 후보와 그를 정치적 멘토라고 받들었던 손인석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충주 흥덕갑 공천탈락)의 관계가 그렇다. 손 위원장은 자신이 정 후보에 의해 블로그 글 게시자로 고발된 뒤 하루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법적대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후보는 여전히 나의 정치적 멘토’다. 그럼 생각은 추후도 없다면서 ‘경험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충북청년경제포럼의 회장이지 아니 사무총장을 맡고 있지만 이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일 뿐 모임을 그에 의해 태동했다. 포럼 사무실도 그가 대표로 있는 공진건설 지하에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4살의 나이에 15대 국회원에 당선된 뒤 16대 재선, 해양수산부장을 거쳐 도박의 자리에 오른 정 후보는 청년정치인으로 주목을 받던 손 위원장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손 위원장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04년 9월,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



정우택 후보의 지사재임시절 발족한 충북청년경제포럼은 최근까지 다양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로와 고발, 그리고 또 다른 폭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사진은 2007년 청렴성 경령.

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지사 당선 이후에도 불신임 논쟁으로 이어졌다.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신경식 전 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선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기록을 제시하며 ‘대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었다.

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당선자의 사과를 촉구하며 상황에 따라 불신임 운동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때 성명서를 내는 등 문을 먼저 훑아보는 것이

충북지구JC였다. 손 위원장은 당시 JC연수원장으로서 중앙회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손 위원장은 이후 정 후보(지사의 미국방문 등에 동행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한때 정 지사만을 위한 청년포럼

각별한 관색의 결정체는 2007년 5월22일에 창립한 충북청년경제포럼이다. 정 후보는 창립식에서 특강한 것을 시작으로 6번의 만찬에 참여했다. 제주도에서 가진 3차례의 골프행사도 청년포럼과의 밀월관계를 입증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청년포럼은 정 후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선물공세로 표현했다. 회원 Q씨 등 다수의 회원들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안마의자(300만원 추정)와 스마트폰 등을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Q회원은 “정 지사가 ‘일이 힘들어 물어 물어’라는 말을 했고 일부 회원들이 ‘지사님이 건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선물하자’는 제안을 해서 이를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도 지사가 정보화에 뛰쳐나간 안 된다는 배려에서 구입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사님 스마트폰 구매금액 45만원’은 카페·결산서에 기재돼있지만 안마의자 구입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 후보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도 있다. 다수의 회원들은 “2008년인가, 지사생일에 즈음해 P일식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다. 현수막까지 걸고 고깔모자까지 쓰는 등 회기에에만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서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이재표 기자 gip@naver.com

“4년 뒷수발한 아들, 새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하길”

손광섭 공진건설 회장, “임기 말에 2000만원짜리 공사 하나 주더라”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19일 공진건설(신입) 손광섭 회장이 충청리뷰 편집국에 방문했다. 손 회장은 바로 정 후보가 고소한 3명 중 한 명인 손인석에 비호의 아버지로서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평소 진심이 있는 신문사 간부를 찾아온 것. 손 회장은 자신의 장남이 공천 탈락에 이어 정치적 멘토인 정 후보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 대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아들의 정치활동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게 한이다. 기왕 시작했으니 목표를 이룰 때까지 밀어주겠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왔다. 지난 4년 동안 그 사람(정우택 후보)을 위해 청년경제포럼도 만들고 지방선거도 돕고 해외 출장까지 수행하고 다녔다. 그러니 그 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느냐? 아무리 정치가 추하더라도 이걸 아니지 않느냐?”

손 회장은 블로그 글 내용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다. ‘너도 같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까지 뺏아내게 밝혀라.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판을 뒤엎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밝혀라’고 했다. 인터넷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들은 얘기가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말아달라.”

손 회장은 비공개를 전제로 몇 가지 새로운 의혹에 대해 보충설명한 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한부를 꺼내놓았다. “이게, 우리 인석이 4년간 뒷수발해주고 받은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지사 임기 말인 지난 2010년 4월 26일자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표지판 기초공사를 수의계약한 내용이었다. 도내 4개군의 6개 현장을 폭우 수의계약 한도인 2000만원보다 약간 적은 1932만원에 계약한 서류였다. 착공일은 3월 뒤인 4월 29일, 앞뒤 비교에도 허겁지겁 작

성한 계약이었다.

“우리 회사직원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한테 전화했었는데 현장도 출어저있고 소규모 공사라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사실은 지사 비서실에서 특별히 얘기해서 만든 건데, 안하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작은 거지만 그냥 해달라’고 통사정해서 할 수없이 계약했다.” 손 회장은 작심한 듯, “내 딸 그대도 한자로 빠지 말고 기사 좀 써달라”고 주문했다.

20일 오후 기사마감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손 회장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내가 얘기한 그대로 써달라. 그리고 모든 것을 공개해 우리 정치판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인석을 설득하고 있다. 선거자금 부분도 있고 해외 출장 시 부적절한 문제점도 있다고 들었다.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인석이 조만간 결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사도급계약서			
계약번호	20100426001-001	계약일자	20100426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종류	도로표지판 기초공사	계약종류	도로표지판 기초공사
계약장소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장소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기간	2010.04.29 ~ 2010.05.05	계약기간	2010.04.29 ~ 2010.05.05
계약내용	도로표지판 기초공사	계약내용	도로표지판 기초공사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금액	1,932,000원	계약금액	1,932,000원

모든 의혹에 대한 폭로를 충공하고 있다는 손광섭 회장과 임기 말 억지로 말았다는 1932만원 짜리 수의계약서 사본.

다. 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에게도 확인 전화를 걸었으나 예상대로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해 집행한 것이다. 지사 비서실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한 정치사는 5선 의원에게 정권까지 지낸 선친(정운갑)의 고할 전현에서 대선했지만 아무런 인고도 없는 청주지역에서는 빈약한 인맥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확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금품수수 관련 내용 사실로



청년경제포럼 결산서에 시기, 금액 구체적으로 기록
2009년 음력생일에 200만원...스마트폰은 2010년에

충청리부와 충북인뉴스(충청리부 인터넷·자회사)가 각각 3월23일자(719호)와 3월21일에 보도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후보의 '성상남'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익을 제기하며 심의를 요청했으나 후속 취재 결과 금품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본보는 719호 표지이야기 <충청리부 인터넷·자회사 사장님>을 통해 정 후보가 충북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3차례 골프회동을 갖고 2차까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성상남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대한 관련기사로 <편견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4년 뒤수발한 아들 세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해달라> 등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정 후보 측에서 문제 삼은 것은 <파견으로 끝난...> 등 관련기사 2건이다.

충청리부는 <파견으로 끝난...> 기사를 통해 <청년포럼은 정 후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선물공세로 표현했다. 회원 Q&A 등 다수의 회원들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안마의자(300만원 추정)와 스마트폰 등을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Q회원은 "정 지사가 일이 힘들어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고 일부 회원들이 '지사님이 건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선물하자'는 제안을 해서 이를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도 지사가 정보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배려에서 구입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사님 스마트폰 구매액 45만원'은 카페에·결산서에 기재돼있지만 안마의자 구입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 후보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도 있다. 다수의 회원들은 "2008년인가, 지사생일에 즈음해 K일식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다. 현수막까지 걸고 고깔모자까지 쓰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서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인터넷정보보호위원회에 낸 이의제거서면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라면 그 부피가 커서 보관 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인바 신청인은 안마의자를 보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신청인은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며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카페에·결산서에 기재돼 있다는 '지사님 스마트

2007년 안마의자 144만원



연월	금액	명칭	취급처
9/4	85,000	명품 현수막 기념품	도지사자문단
9/10	1,440,000	도지사자문단(1주년기념)	도지사자문단
9/11	140,000	도지사자문단	도지사자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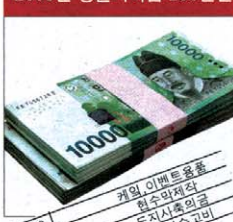
폰 구매금액 45만원 역시 상당히 고가인 스마트폰 가격과 맞지 않는다.", "도지사 재임시 매달 500만원씩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신청인이 포럼회원들로부터 생일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비방, 음해기사를 보도하게 된 경위와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말했다.

鄭·"안마의자 받은 적, 본 적도 없어"

본보는 719호 취재과정 중에서 청년포럼의 카페에 게시된 글 중 이번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의 글과 사진 등을 '이 카페에서만 검색하기' 등을 통해 입수했으나 예·결산서는 일부 내용만 구두로 확인했을 뿐 문건을 직접 찾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거정보도심의 위위가 충북인뉴스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후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2007~2010년 예·결산서를 확보했다. 청년포럼의 예·결산서는 총회 시에 인쇄돼 배포됐던 터라 익명을 요구한 A씨를 통해 입수할 수 있었다.

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건의 금품수수는 시기나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먼저 안마의자로 추정되는 도지사 선물(취급 1주년 기념)은 2007년 9월10일에 도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돼있으며 구매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144만원이었다. 안마의자 구입비가 300만원이라는 주장과 150만원이라는 주장이 엇갈려 719호 기사에서는 '300만원 추정'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 "안마의자가 도지사 집무실 내에 있는 휴식공간으로 배

2009년 생일축하금 200만원



연월	금액	명칭	취급처
1/30	40,000	캐시 이벤트 용품	도지사자문단
1/30	20,000	현수막의금	도지사자문단
1/30	2,000,000	도지사자문단	도지사자문단
1/30	50,000	비서관수고비	도지사자문단

달해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현 민선5기 지사실에는 문제의 안마의자가 남아있지 않다.

45만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정 후보에게 선물로 줬다는 기사의 내용은 예·결산서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스마트폰을 선물한 시기는 정 후보가 이의제거서면에서 밝힌 대로 2010년 5월이다. 또 다른 회원 C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필요한 것들이 선물로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명의를 지사 앞으로 했는지 다른 회원 앞으로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가 '매달 500만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돈 100만원을 받았겠냐'고 반문한 생일축하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며, 예·결산서에는 2009년 1월30일에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 후보의 양력 생일 1953년 2월18일은 음력으로 1월5일이다. 또 2009년 1월30일 역시 음력으로 1월5일이다. 결국 정 후보의 음력생일에 정확히 맞춰 돈을 전달한 것이다. K일식 내부에 현수막까지 걸었다는데 예·결산서에는 현수막 값 2만원도 적혀있다. 당초 생일축하금이 100만원이었다고 제보한 A씨는 "부릉에 넣어 전달했기에 대략 100만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鄭·"주말, 골프 치고 술 마실 수 있어"

정 후보는 성상남 의혹 등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제3자의 개입의혹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 후보는 26일 CJ비정방송 <시선집단-청주 상당 후보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홍재형 후보가 충청리부 보도내용을

2010년 스마트폰 45만원



연월	금액	명칭	취급처
4/30	1,000,000	4월 사무국장 급여	도지사자문단
5/1	450,000	도지사자문단 구입	도지사자문단
5/10	70,000	도지사자문단(11월~5월)	도지사자문단

청년포럼 예·결산서를 통해 정우택 후보가 지사 시절 현금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이런 의혹 일부는 예·결산서의 해당 부분

근거로 해명을 요구하자 '예전에 왔던 홍 후보가 아닌 것 같아 인품에 상심이 된다'며 "도지사도 주말에 골프를 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다. 특정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마쳤다. 세 사람(순인식, 허도, 양모세)을 고발한 것은 누락으로 근거한 것이었다. 세 사람 모두 결백하다고 소명하고 있어 지금은 이 세 사람에게 다른 제3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씨가 된 것은 향후와 성상남 의혹에 관한 것이었고 청년포럼에서 제공한 금품에 관한 것은 거론되지 않았다. 한편 정 후보는 선관위에 선거정보도심의 신청한 것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손해배상금 2억원(충청리부, 충북인뉴스 각각 1억원)과 함께 조정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마트폰 등 제공된 금품이 정치활동에 활용될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된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충재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치자금법을 틀어대지 말라"고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도지사가 이렇듯 어떻게 하위직들에게 청렴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는가. 일부 기업인들과 도를 넘어 친분을 쌓고 대접을 받은 것은 도덕적 밑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재표 기자 gade@naver.com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정우택 후보 성상남 진실 논란

이름은 몇 사람은 분명히 안다

3회에 걸친 제주골프와 1, 2차 술자리는 분명한 사실
'오야붕'이라고도 부르며 질펀한 술판, 그 뒤엔...분분

■ 취재기법에 대하여

아후 블로거 'Crime to guilty'를 통해 정우택 후보(당시 충북지사)와 함께 제주에서 골프대회를 갖고 번태적인 성상남을 했다고 지목을 받은 단체는 충북청년경제포럼이다. 2007년 5월22일 창립 회의 이 단체는 '정 지사를 지지하는 외연 조직'라는 글자 없는 사선을 받아왔다. 취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 단체의 다음 카페의 글을 뒤져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해킹이나 단체회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경쟁수준인 기자에게도 카페의 답변글을 남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후배기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료를 얻은 방법은 다음 두 가지다. 회원이 아니라도 게시글을 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자란하기 위해 방법을 공개한다.

- ① 다음에서 해당 카페를 검색한 뒤 검색창에 올라온 카테고리에서 '이 카페에서만 검색하기'를 클릭하고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내용이 돌출된다.
- ② 해당 카페에 가입된 회원의 이름을 검색한 뒤에 '마이소셜'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그 카페의 내용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두 가지 방법은 키워드로 검색된 글만 볼 수 있으며 카페의 다른 글로 이동할 수는 없다.

'Crime to guilty'는 정 후보가 2008년 6월 21일과 2009년, 2010년 6월 13일 제주도에서 충북청년경제포럼(이하 청년포럼) 회원들과 골프를 치고 토크쇼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번태수준의 성상남을 받았으며 골프장과 술집, 술값(6월21일 580만원), 호텔이름까지 적시했다. 다수의 청년포럼 회원들과 토크쇼를 한 결과 골프회장과 1, 2차 술자리까지는 단 한 명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성상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A회원은 "우리는 동종업계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집단이 아니라 무엇이란 상념을 할 이유가 없다. 골프를 치고 1, 2차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면에서 상식의 선을 넘지 않았다. 성상남은 절대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B회원의 말은 달랐다. "2차 술자리는 늘 질펀했다. 술자리가 절정에 달할 때쯤 늘 지사가 먼저 자리를 뒀고 이어서 10분쯤 뒤에 간부회원들이 지사의 여자를 포함해 여자들을 데리고 따라 나왔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솔직히 모른다. 그러나 수군거림이 있었으면 것은 사실이다"라고 증언했다.

청년포럼 카페에 2차 술자리와 관련한 사진은 없지만 골프장과 1차 술자리 등의 흔적은 분명히 담은 사진은 여러 장 올라왔다. 주목할만한 것은 2008년 6월21.22일 제주골프장과 관련한 문건이다. 행사개요를 적은 이 문건에는 일시 및 장소와 함께 항공편, 호텔, 이동을경로 등이 자세히 적혀있다. 명단에 정 후보는 없고 지사를 지칭하는 듯한 '사장님'이 있다.



2008년 6월21일 제주골프를 마치고 당시 정우택 지사와 청년포럼 일행은 1, 2차 술자리를 가졌다. 2차 술자리 이후 성상남 의혹에 대해서는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청년포럼 카페에서 피용.

C회원은 "제주 현지에서는 (당시) 정 지사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술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오야붕(오야, 붕, 두목을 뜻하는 일본어)이라고 부르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참가비는 골프회원 100만원, 비골프회원은 50만원이다. 정 후보가 회비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B·C 회원 모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술값, 지사가 145만원 결제 기록도

'Crime to guilty'에 게재된 정 후보 관련 또 하나의 비위는 K일식집 주인과의 불륜과 부적절한 술값결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B회원은 "해당일식집에서 1차를 하고 2차 토크쇼장으로 가면 누군가가 일식집 사장 P씨를 현장에 데려온 것은 맞다. 지사가 P씨를

데려다준다'며 먼저 나간 적도 있다. 그러나 P씨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충청리뷰가 카페검색을 통해 찾아낸 2007~2010년 '청년포럼사업보고'에 따르면 이 기간 총 청년포럼이 가진 57차례의 모임 중 K일식집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10차례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정우택 지사를 초청해 가진 모임 6번 가운데 매직프리카 컨벤션에서 열렸던 정립총회를 제외한 5번의 만찬이 모두 K일식에서 열렸다는 것이었다. 사업보고 보고문에는 1~3차까지 술자리를 후원한 회원들이 이름과 금액도 부기돼 있다. 이 가운데 2008년 10월15일 K일식에서 1차 술값 145만원이 정 후보가 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Crime to guilty'는 P씨가 토크쇼에 동행한 날짜와 1, 2차 술값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8년 1차 술값과 사업보고에 일치한다. 'Crime to guilty'는 "정 후보가 술값을 내야할 경우 비서로 하여금 각 실과 및 실과별 관공비 카드를 수합하여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을 요구한 도청공무원들은 "토·일요일에는 법인카드를 아예 쓸 수 없고 일정한 시간, 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외상을 쌓아놓고 나중에 분리결제하는 것은 사실상 관행에 가깝다"고 귀띔했다.

송재범 충북청년경제포럼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제주도까지 가서 도에 넘는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성향수에 대한 정황적 증거만 있다더라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표 기자 gdsks@naver.com

청년포럼 카페 사업보고에는 각종 행사와 회원들이 1, 2차 술값을 후원한 내용이 자세히 부기돼 있다. 사진은 K일식에서 도지사가 1차 145만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기록. 2차 술값 3302원은 간부 3명이 나눠 냈다. 사진은 청년포럼카페에서 피용.

현,감 1차 2차 지사

황순 (145), 2차 (150)/박 (150)/박 (150)

참석 (90)/조 (90)

청년포럼 카페 사업보고에는 각종 행사와 회원들이 1, 2차 술값을 후원한 내용이 자세히 부기돼 있다. 사진은 K일식에서 도지사가 1차 145만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기록. 2차 술값 3302원은 간부 3명이 나눠 냈다. 사진은 청년포럼카페에서 피용.

정우택 후보(당시 충북지사)와 함께 제주에서 골프대회를 갖고 번태적인 성상남을 했다고 지목을 받은 단체는 충북청년경제포럼이다. 2007년 5월22일 창립 회의 이 단체는 '정 지사를 지지하는 외연 조직'라는 글자 없는 사선을 받아왔다. 취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 단체의 다음 카페의 글을 뒤져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해킹이나 단체회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경쟁수준인 기자에게도 카페의 답변글을 남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후배기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료를 얻은 방법은 다음 두 가지다. 회원이 아니라도 게시글을 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자란하기 위해 방법을 공개한다.

※ 재심기각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가 이행을 거부해서 심의위원회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되었음

2. 정정보도문 게재

의결번호	2012국선1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도일보(경도신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3동 832-9 대표이사 신 순 하
심의대상기사	경도신문 2012년 1월 17일자 3면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14.6%', 정당지지율, 통합민주>한나라>자유선진>통합진보당 순」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경도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도신문> 3면 중앙 이상 위치에 <별지>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제목(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14.6%')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부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정당지지율, 통합민주>한나라>자유선진>통합진보당 순)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선 후보 및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민주통합당을 통합민주당으로 정당 명칭을 잘못 기재하고, 기사 부제목에 정당별 지지율 순서를 기사 내용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해당 정당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5조(기사제목)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14.6%'

정당지지율

통합민주>한나라>자유선진>통합진보당 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경신, 1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문재인 이

사장이 1주일 전 대비 5.9%p 상승한 14.6%를 기록, 작년 8월 안철수 원장의 등장으로 11.7%의 지지율을 고점으로 하여, 줄곧 하락했던 이래 자신의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철수 원장과의 지지율을 18.8%p에서 11.2%p로 좁히면서 3위를 유지했다.

대선지지율 다자구도 1위는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으로 1.9%p 하락한 27.3%를 기록했다. 당내 돈 봉투 논란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12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안철수 원장을 앞서면서 1위를 유지했다. 2위 안 원장은

1.7%p 하락한 25.8%를 기록했다. 3위 문 이사장 다음으로는 유시민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가 각각 4.7%를 기록했고 손학규 전 대표가 4.1%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이회창 전 대표(2.9%), 김문수 지사(2.2%), 정동영 최고위원(2.1%), 정세균 최고위원(1.7%), 박세일 이사장(1.5%), 정운찬 전 총리(1.4%)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른 민주통합당이 1.7%p 상승한 34.7%로, 창당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돈 봉투 논란으로 1.1%p 하락한 29.5%의 지지율을 기록, 4주 만에 20%대로 하락했다. 두 정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5.2%p로 벌어졌다. 다음으로 통합진보당은 1.3%p 하락한 3.2%로 3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자유선진당(2.4%), 진보신당(1.8%)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2.6%로

2.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동 사전 논란이 계속되고, 거기다 여당 내 돈 봉투 논란, 자원외교 '부풀리기' 논란이 더해지면서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6%로 3.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은 1.9%p 상승한 53.3%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근혜 위원장은 2.1%p 하락한 36.9%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6.4%p로 소폭 더 벌어졌다. 한나라당 내 돈 봉투 논란의 영향으로 양자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월~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5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6\%$ p였다.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14.6%'

정당지지율, 통합민주)한나라자유선진통합진보당 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경신, 1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문재인 이사장이 1주일 전 대비 5.9%p 상승한 14.6%를 기록, 작년 8월 안철수 원장의 등장으로 11.7%의 지지율을 고점으로 하여 줄곧 하락했던 이래 자신의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철수 원장과의 지지율을 18.8%p에서 11.2%p로 좁히면서 3위를 유지했다.

대선지지율 다자구도 1위는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으로 19%p 하락한 27.3%를 기록했다. 당내 돈봉투 논란의



문재인 이사장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12월 셋째주 이후 5주 연속 안철수 원장을 앞서면서 1위를 유지했다. 2위 안 원장은 1.7%p 하락한 25.8%를 기록했다. 3위 문 이사장 다음으로는 유시민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가 각각 4.7%를 기록했고, 손학규 전 대표가 4.1%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이회창 전 대표(2.9%), 김문수 지사(2.2%), 정동영 최고위원(2.1%), 정세균 최고위원(1.7%), 박세일 이사장(1.5%), 정운찬 전 총리(1.4%)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른 민주통합당이 1.7%p 상승한 34.7%로, 창당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돈봉투 논란으로 1.1%p 하락한 29.5%의 지지율을 기록, 4주만에 20%대로 하락했다. 두 정당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5.2%p로

벌어졌다. 다음으로 통합진보당은 1.3%p 하락한 3.2%로 3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자유선진당(2.4%), 진보신당(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2.6%로 2.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동 사전 논란이 계속되고, 거기다 여당내 돈봉투 논란, 자원외교 '부풀리기' 논란이 더해지면서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6%로 3.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은 1.9%p 상승한 53.3%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근혜 위원장은 2.1%p 하락한 36.9%로, 두 후보간 격차는 16.4%p로 소폭 더 벌어졌다. 한나라당 내 돈봉투 논란의 영향으로 양자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월~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6\%$ p였다.

강남주기자

inamjoo@kyungdoilbo.com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정정보도 결정'

정당지지율 '통합진보>자유선진당' 으로 바로잡습니다

선거기자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 1월17일자 3면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14.6%', 정당지지율, 통합민주>한나라>자유선진>통합진보당 순' 제하의 기사가 대선후보 및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정당 명칭 및 정당 별 지지율 순서를 잘못 기재했다며 정정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선심위 결정에 따라 정당명칭을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정당지지율 순서를 '민주통합>한나라>통합진보>자유선진당' 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3. 경 고

의결번호	2012국선6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39-3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수도권일보 2012년 2월 22일자 14면 「“시민 기대에 부응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인천광역시 남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의정 활동, 출마 포부 등을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 기대에 부응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윤상현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인터뷰

4·11총선이 앞으로 50일도 남지 않았다.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번 총선의 향배를 가름할 수도권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크게 뒤져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윤상현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의 바쁜 행보가 눈길을 끈다.

현재 인천지역 12개 지역구 중 10곳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현역의원 지역구 중 단일 후보 지역은 남구 갑·을과 계양을 서구 갑 뿐이다.

이 중에서도 윤상현 의원만 유일하게 공천이

확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3곳은 심사를 거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5일 중앙당에서 공천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지역에서는 참신한 인재를 영입한다는 현역의원 물갈이설이 끊임없이 뒤따르고 있어 이번 인천지역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시당위원장인 윤 위원장의 공천을 일찌감치 확정해 당선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전통적인 강세지역인 중동웅진과 연수구, 남동 갑 지역을 연결하는 인천 남쪽지역의 중심으로 이번 인천지역 총선의 분수령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당의 움직임에 문 의원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껴 지난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며 인천지역 다른 선거구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 결 번 호	2012국선67(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월요문화사(월요신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삼보빌딩 9층 대표이사 윤 철 호
심의대상기사	월요신문 2012년 2월 26일자(제581호) 46~47면 「“정신문화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서초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정견(政見), 출마 포부 등을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신문화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

화제집중 / 새누리당
서초을 공천에 나선 이충범 변호사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몇 안 되는 지역구중 하나인 서초을 지역에서 과연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서초을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10명. 이들 중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국민들에게 러브콜을 날려온 인물이 있어 본지 기자가 직접 만나 봤다. 바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이충범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이충범 변호사의 선거사무실에서 지난 2월20일 그를 만났다. ‘경제부’라는 부서명이 적힌 기자의 명함을 내밀

자 그는 대뜸 “저 경제 잘 모르는데...”라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이에 기자가 “우리나라 경제 살려주셔야죠”라고 답하자 이때부터 그의 조금 장황한, 하지만 깊은 철학이 담긴 설명이 시작됐다. 이는 곧 그의 정치 인생과도 연결됐다.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경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경제를 잘 아는 CEO출신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경제가 좋아졌나? 아니다. 소유에 대한 성찰과 진정 가치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 등 국민 의식의 보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충범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직접 만들어냈다. ‘정신문화’가 바로 그것으로, 이전에 한국이 물질만능주의였다면 이제는 ‘물질문화’수준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는 “정신문화”로 바뀌어야한

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신문화 개혁이 있어야 사법질서의 파경, 노년의 걱정, 양극화, 복지논쟁, 청년 일자리 부족, 학교폭력, 대기업과 영세업과의 상충, 비정규직 문제, 자녀 부양과 교육의 어려움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 이는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했다.

이렇듯 사회시스템 개선에 대해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그는 정신문화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존경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의 역할을 줄이고 개개인, 즉 각 소수 집단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 각 학교의 문제를 교육부에서 일일이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다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후략)

화제집중

새누리당 서초을 공천에 나선 이충범 변호사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몇 안 되는 지역구 중 하나인 서초을 지역에서 과연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서초을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10명. 이들 중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국민들에게 러브콜을 날려온 인물이 있어 본지 기자가 직접 만나봤다. 바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이충범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이충범 변호사의 선거사무실에서 지난 2월 20일 그를 만났다. '경제부'라는 부서명이 적힌 기자의 명함을 내밀자 그는 대뜸 "저 경제 잘 모르는데..."라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이에 기자가 "우리나라 경제 살려주세요"라고 답하자 이때부터 그의 조금은 장황한, 하지만 깊은 철학이 담긴 설명이 시작됐다. 이는 곧 그의 정치 인생과도 연결됐다.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경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경제를 잘 아는 CEO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경제가 좋아졌나? 아니다. 소유에 대한 성찰과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 등 국민의 의식의 보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충범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직접 만들어냈다. '정신문화'가 바로 그것으로, 이전에 한국이 물질만능주의였

다면 이제는 '물질문화' 수준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는 '정신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신문화 개척이 있어야 사법질서의 파경, 노년의 걱정, 양국화, 복지논쟁, 청년 일자리 부족, 학교 폭력, 대기업과 영세기업과의 상충, 비정규직 문제, 자녀 부양과 교육의 어려움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 이는 위에 서부터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했다.

이렇듯 사회 시스템 개선에 대해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그는 정신문화 개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존경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의 역할을 줄이고 개개인, 즉 각 소수 집단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 각 학교의 문제를 교육부에서 일일이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다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방제'에 관한 것으로 옮겨갔다. 그는 오랫동안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화를 주창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내가 연방제를 주장하니 고려연방제나 감태중의 연방제 등을 연상하며 선입관과 오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면서 자신이 말하는 연방제는 "외교·국방 등 국가적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문화·경찰·지역경제 등의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중앙집권제, 즉 서울중심의 국가구조로는 전체 나라에 대한 관리가 세심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더 지역 내부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연방제를 통한 분권화가 이뤄져야 서로 더 존중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다. 또 자기 고향과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도 더 깊어

지고 지역문화도 더욱 발전해 지역행사 등이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그는 여러 지역행사가 별다른 개성 없이 전편일률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연젠가 광주 지역을 방문했을 때 탑승했던 택시기사의 이야기도 떠올랐다. "자제 분이 몇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대뜸 딸과 아들 모두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분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꼈다.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그분의 자제도 그 지역에 남아 자신의 고향을 위해 더 전문적으로 힘써가며 일을 해서 고향에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너무 인제가 서울로 집중된다. 그런데 모두 서울로 온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고향에서도 충



의결번호	2012국선7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씨앤비미디어(씨앤비저널(CNB저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53-109 대표이사 황용철
심의대상기사	CNB저널 2012년 3월 4일자(263호) 12~15면 「『死地 강남을에서 선의의 경쟁 본선 경쟁력 높여주리라 확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강남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정치 이력, 정견(政見), 출마 포부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여러 지면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死地 강남을에서 선의의 경쟁, 본선 경쟁력 높여주리라 확신”

‘거인들’과의 일전 앞둔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 인터뷰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2월 23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 심각한 얼굴로 들어섰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정치적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전 의원은 “홍영표 당 대표 비서실장이 저를

만나 ‘송과잡으로 지역구를 옮길 수 없겠느냐’는 말까지 했다”며 “정동영 상임고문이 제 가족에게까지 다른 지역구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의사를 밝힌 정동영 상임고문이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와 공심위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지도부와 공심위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새누리당도 공천 개혁을 말하고 있고 과감한 실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권 주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천을 한다면 공천 개혁은 물 건너간다. 국민들도 민주통합당에 실망할 것이다. 부디 공정한 경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후략)

심원섭 대기자가 만난 사람



사진 = 장해순 기자

“死地 강남에서 선의의 경쟁, 본선 경쟁력 높여주리라 확신”

‘거인들’과의 일전 앞둔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 인터뷰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2월 23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 심각한 얼굴로 들어섰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정치적 텃밭인 서울 강남구에 출사표를 던진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전 의원은 “홍영표 당 대표 비서실장이 저를 만나 ‘송파갑으로 지역구를 옮길 수 없겠느냐’는 말까지 했다”며 “정동영 상임고문이 제 가족에게까지 다른 지역구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정동영 상임고문이 경선 없이 전락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와 공심위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지도부와 공심위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새누리당도 공천 개혁을 말하고 있고 과감한 실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권 주자의 가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천을 한다면 공천 개혁은 물 건너간다. 국민들도 민주통합당에 실망할 것이다. 부디 공정한 경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심원섭 정치전문대記者 dailypen@cnbnews.com

한마디로 정 고문이 경선 없이 전락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를 압박해서 전 의원의 지역구를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정동영 고문은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초창기부터 그러는 거지, 경선을 준비하다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돈급없는 얘기다. 내가 공심위원을 어떻게 점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선에서 진다면 두말없이 정동영 뺐겠다”

이처럼 두 현역 의원이 낯선 신경전은 별다른 때는 민주통합당이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벨트 물풍’을 일으켰다는 각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을 최고가 아파트촌인 대치동은 물론 정반대로 판자촌인 구룡마을까지 끼고 있어 민주당이 1% 부자와 99% 중산층·서민 구도를 설정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구호를 내세우기에 적합한 지역구라는 게 배경이다. 야권에서는 그 동안 강남을 사지(死地)로 여겨져 경쟁력있는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물급이나 참신한 후보를 내세우면 득표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현역 의원인 정동영 상임고문과 전현희 의원이 공천 경쟁에 나섰기 때문에 불모지에서 현역끼리 경선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면 바람이 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사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남쪽인 대치동·개포동·일원동·수서동·새곡동 등이 포함되는 강남을 지역구는 그동안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꼽혀왔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과거 홍사덕 의원이 14대와 15대 총선에서 각각 옛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로 내리 당선됐으나 2000년 16대 총선부터는 줄곧 새누리당 후보가 50~60%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지켰다. 민주당 계열 후보들은 강남에서 16대 총선 때 31.2%, 17대 총선 때 34.1%의 지지를 얻었지만 참여정부 심판론이 뜨겁던 2008년 18대 때는 18.7%의 득표율을 올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내수 경기 침체, ‘전대 돈봉투’ 살포 사건,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내곡동 사저 사건 등 악재가 속출하면서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야당의 공세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실제로 18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성진 후보가 62.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새누리당 득표율이 52.4%에 그쳤다.

물론 새누리당은 인물론을 앞세워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성진 전 의원의 의회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이정선 의원, 허준영 전 경찰청장, 권문용·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대거 공천 신청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죽음의 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열한 공천 경쟁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이런 시기를 맞아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을 2월 23일 CNB저널이 만났다.

정동영 상임고문의 압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에 달라

“홍영표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주위 의원을 통해 저를 비롯한 제 남편 등 가족에게까지 제 지역구를 ‘송파감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 압박을 하고, 측근들을 통해 저에 대해 허위 비방 하는 것은 직전 대선 후

보로서 큰 정치인을 지향하는 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뒤에서 단수 공천을 요구하며 저를 다른 지역구로 옮기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당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당 지도부에 어떤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민주통합당 후보에게는 사지(死地)로 통하는 강남을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당당당하게 경선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 주리라 확신한다. 지도부와 공심위에도 간곡히 요청한다. 새누리당도 공천 개혁을 말하고 있고 과감한 실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직권 대권 주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공천을 한다면 공천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다. 국민들도 민주통합당에 실망할 것이다. 부디 공정한 경선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정동영 고문과의 경선은 ‘가인 골라먹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이시고, 당의 중진이신 정동영 고문님과 후배로서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총선이 대권 후보 출마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와 정당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저는 승리를 자신하지만 만약 제가 패배할 경우에도 깨끗이 승복하고, 정 고문님의 승리를 위해 앞장서서 도움을 것을 약속한다.”

고향인 부산 등 나름대로 당선 가능한 지역이 적지 않았을 텐데 하필 험난한 강남을 선택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비례대표라는 기득권을 활용해 당선 안

심원섭 대기가자 만난 사람

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쉬운 곳엔 가고 싶지 않았다. 저는 영남 출신 민주통합당 의원으로서 보수와 영남패권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강남을에서 민주통합당 이름으로 당당하게 당선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선언했다. 많은 분들이 강남은 야당의 사지(死地)이자, 계급주의의 철옹성이며, 무모한 도전이라고 만류했지만 저에게 이번 강남을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소도 아니다. 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이 도전에서 반드시 성공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포부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 강남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강남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강남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제가 추구하는 변화의 진정한 의미는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며 모두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강남의 변화는 강남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강남의 변화를 위해 큰 틀에서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 도시, 교육희망 도시, 복지안전 도시, 가슴이 정화되는 문화 도시, 경제 활력 도시를 설계하고자 한다. 제2의 고향인 강남을에서 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정치인으로서 지역민의 마음을 살피고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전통적으로 여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강남의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지역구의 많은 분들을 만나 뵈고 있다. 그동안 강남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는, 다소 이기적인 지역이란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후원이나 봉사 활동에 뛰어들며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를 위해 나누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런 분들과 함께 내 것만 챙기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강남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여전히 여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응원도 많이 받고, 힘도 얻고 있다.”

— 정치 해신 바람을 타고 초선 ‘女鳳 주의보’가 불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여성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창조적인 감성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먼 파워’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으로 여성이 실질적인 파워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치과 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18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보건의로 전문 변호사 활동을 토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은 권위가 아닌 ‘기본과 상식’ ‘봉사’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건의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법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다양한 보육 및 가족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 노력해 왔다. 이미지 정치인이 아닌 부지런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가 인정하는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제1 야당 원내대변인으로 여당과 정부의 실정과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촛불살인의 논평으로 많은 국민들과 기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자부한다.”

— 최초의 치과 의사 출신 변호사 국회의원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가.

“어릴 적 꿈이 변호사였다. 법조인인 남편의 영향도 있었고 좀 더 활동적이고 사회 지향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안정적 직업인 치과의사라는 자리 대신 고시촌으로 향했다. 사실 치과의사로 남았다면 일정한 퇴근 시간과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었겠지만 늦게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자각이 제 내부에서 일어났다.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변호사 일을 하면서 혈액 질환이나 혈우병, 에이즈 환자를 위한 무료 집단소송을 많이 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도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해서 제도를 바꿔달라고 정말 많이 하소연했는데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결국 변호사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 남편을 비롯해 집안에 법조인 출신이 많다는 얘기가 돌리지만 집안 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밖에서 집안 얘기를 잘 안하는 성격이다. 남편과 남동생, 올케 모두가 법조인이다. 남편은 현재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고, 남동생과 올케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이는 모두 다르지만 서울대학교 84학번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제가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라면, 올케는 약사 출신 변호사다. 저희 남매 전부 모두가 사시에 합격했을 당



심원섭 기자와 대입 중인 전연혁 의원(왼쪽), 시민·경제·기자

시 최초의 사시 합격 남매 가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18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무엇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는가.

“18대 국회 4년을 돌이켜보면 촛불집회로 시작해 미디어법과 세종시 수정안, 4대강과 한미 FTA를 지나며 여야 간 반목과 대립이 거듭됐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막말과 날치기, 몸싸움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쉽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됐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불통의 정치로 갈등상황을 향해 달려가는 청와대의 일방통행, 여기에 수년 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사회 양극화 등 현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크다.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제대로 막지 못한 야당의 부족함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 인생의 면모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분 이시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고인이 되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헌신은 민주 대한민국, 인권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뒤 독립한 신흥국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개화시킬 수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하셨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옳은 방향을 제시했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서민을 대변하며 복지정책을 확대한, 가장 서민과 친숙한 대통령이시다. 또 권위주의 탈피와 소

통 강화를 위한 그의 소탈한 모습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의정활동의 목표는?

“정치인의 리더십은 봉사의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저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단 한사람의 의견도 청취하고 존중하자. 그래서 문턱이 낮은 국회, 열린 마음으로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치에 입문했을 때의 초심으로 그 다짐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ONB**

의 결 번 호	2012국선8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종로문화사(종로저널)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66 영창빌딩 2층 대표이사 이 병 기
심의대상기사	종로저널 2012년 1월 2일자 4면 「“정치는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1월 16일자 4면 「“정치1번지 종로를 종로답게 지킬 것”」, 2월 20일자 4면 「“나쁜 정치·철 새정치 추방할 때”」, 2월 23일자 4면 「“문화, 복지 1번지가 종로의 미래”」 및 3월 12일자 4면 「“종로주민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들의 이력 및 경력, 출마 포부, 치적 등이 드러난 인터뷰 기사를 인물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는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정세균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19대 총선거날 종로구 예비후보 등록” “소통능력 뛰어난 부드러운 카리스마 돋보여” “오랜 전통과 문화의 종로 친근감 느껴...”

“요즘 매우 행복합니다. 종로에 와서보니 왠지 포근함을 느낍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세균 국회의원, 그는 종로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힌다.

“저는 지방 출신이지만 종로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종로가 서울 대도심지 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전혀 낯설지 않고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제19대 총선을 겨냥한 종로구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내리 4선을 했으며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민주당 당대표 등을 역임한 유망 정치인이다.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긴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야당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통탄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반드시 야당 승리를 이끌어 의회권력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키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종로를 택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종로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전통과 명예가 어린 곳으로 이곳에서부터 총선 분위기를 고조시켜 수도권에서 야당의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위해 종로를 택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종로와 인연이 있는지 막상 종로에 와서 보니 주민들도 친절하고 동네도 친근감이 들어 매우 행복한 심정이라고 한다. (후략)



“정치는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정 세 군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19대 총선거를 종로구 예비후보 등록”
 “소통능력 뛰어난 부드러운 카리스마 돋보여”
 “오랜 전통과 문화의 종로 친근감 느껴...”

“요즘 매우 행복합니다. 종로에 와서 보니 왠지 포근함을 느낍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세균 국회의원. 그는 종로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힌다.

“저는 지방 출신이지만 종로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종로가 서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는 곳여서 그런지 전혀 낯설지 않고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제19대 총선을 겨냥한 종로구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내리 4선을 했으며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민주당 당대표 등을 역임한 유망 정치인이다.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긴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야당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통탄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반드시 야당 승리를 이끌어 의회권력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키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종로를 택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종로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전통과 명예가 어린 곳으로 이곳에서부터 총선 분위기를 고조시켜 수도권에서 야당의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종로를 택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종로와 인연이 있는지 막상 종로에 와서 보

니 주민들도 친절하고 동네도 친근감이 들어 매우 행복한 심정이라고 한다.

정 의원은 사실, 종로하고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고려대 1학년 재학 시절 팔관동 학교재 근방에서 누구(?) 집 가정교사를 약 1년 반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삼청공원을 자주 찾아갔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 때 그 정서는 여전한 것 같다고 술회한다.

“종로의 정서는 역시 문화라고 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문화적 숨결은 우리 모두의 자양이고 긍지입니다. 종로인들이 그러한 긍지와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야겠다는 의욕이 강렬하게 생깁니다.”

정 의원은 세계가 지금 문화중심국가로 변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그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종로의 문화야말로 우리가 잘 간직하고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일익을 보태고 싶다고 전한다.

정 의원은 특히, 종로라는 지역이 의외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음을 느꼈다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과감히 철폐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강조한다.

정 의원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라는 경제논리 아래 부자들만 더 잘살게 되고 중산층 이하는 모두가 어려운 세대를 맞고 있다며 이는 인생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미끄럼틀만 생겼기 때문이라고 혹평한다. 정 의원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정치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한다.

정 의원은 매우 온화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인다. 그러한 리더십으로 열린우리당의 당의장과 민주당의 대표를 어떻게 맡았는지 의구스러웠는데 그는 한마디로 ‘소통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소통’이라는 화두가 근래 정치권에서 크게 화자되면서 지금의 정부불신(?)이 소통부재 탓이라고 언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소통능력’이 매우 주목 시 된다.

“오늘날 정당정치는 매니지먼트 성격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곧 경영능력과 소통능력인데 저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만큼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전문가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리더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하면 상하좌우로 신뢰받는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 의원은 ‘실천하는 진보정치의 길’을 정치적 소신으로 내세운다 말로만 하는 진보정치가 아니라 더 민주적이고 더 서민적으로 실천하는 진보가 미래 희망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 국민 모두가 공생공영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위해 민주연합과 지역연합을 뛰어 넘어 민생연합을 이뤄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과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였습니다. 기성세대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올해는 모든 민생문제들이 술술 잘 풀려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가 되길 고대합니다.”

정 의원은 특히 종로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고 기원한다.

초·대·석



“문화, 복지 1번지가 종로의 미래”



정 세 군 민주당국회의원

“종로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주민 공동체가 살아있어 기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도 종로가 선도해야”

“저는 요즘 종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종로 사람, 종로 문화, 종로의 이야기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종로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심경을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이다. 전라북도 무주, 진안 등 지역에서 오는 4.11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 종로로 선거구를 옮겨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 공천과정이 남아 있지만 목하 종로에서 주민 만나기에 열심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해 8월경부터 종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종로에 나타났지만 그 때부터 정 의원의 종로 출마설은 대두되고 있었다. 어느덧 종로에 돌아다니는 지 6개월이 넘은 셈이다. 그런 그가 새삼 이메일을 통해 “종로가 좋다”며 종로의 매력에 흠뻑 빠진 구애(求愛)를 토로하는 듯 하다.

하지만 진정성도 엿보인다. 정 의원은 실제 종로의 자연과 환경과 문화가 좋다고 감탄(?)한다. 멀리 북한산 자락에서 이어져 오는 북악산과 인왕산 그리고 낙산과 동대문 등의 산세가 참으로 명당 다운

곳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대한민국 600년의 문화 전통이 그대로 잔재하고 있어 참으로 훌륭하다고 감탄한다.

“종로에 와서보니 주민 공동체가 살아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치 시골처럼 아니 시골보다 더 주민공동체 의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대도시 서울 한 북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골과 같은 주민 정서가 잔잔히 흐르는 종로의 모습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이러한 종로의 자원과 분위기를 온전히 잘 살려야 할 것 같다고 밝힌다. 역사적 문화재는 당연히 지켜야 할 동시대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종로 곳곳에 어려있는 문화 역시 옹골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 의원은 그래서인지 지난 1월 중순 종로구 송현동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대한항공 측이 추진하는 특급호텔 신축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이곳에 7성급 특급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의 불허가로 신축이 불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그러나 호텔신축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모종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에 정 의원이 민주당 통합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하여 관련법 개정을 적극 저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일과 관련해서 지난달 19일 민주당 종로구 당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경복궁

부근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추진 중인 7성급 특급호텔 신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부지는 경복궁과 북촌한옥마을 그리고 광화문 등이 있는 국가 상징거리로 영리목적의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문화환경이 훼손됨은 물론, 대한민국 품격 저하와 인근 3개 학교 교육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따라서 대한항공 측이 호텔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한나라당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낸 것이다.

“종로가 참 좋지만 그로인해 잘 지키고 가꿔야 할 책무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적 문화재와 그 주변의 환경은 우리 종로 주민들이 스스로 잘 보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은 또한 종로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은 아니라고 말한다. 주민들의 각종 생활편의와 복지증진 차원에서는 오히려 타 지역 보다 미흡한 것도 있고, 특히 창신동의 봉제공장 밀집지역 같은 곳은 그러한 생업을 지원하는 여건조성도 절실한 것 같다고 평한다.

정 의원은 그래서 자신의 이메일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다.

“종로는 600년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습니 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도 종로가 선도해야 합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1번지, 무한돌봄과 무한섬김의 복지 1번지, 99%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이 웃을지는 경제 1번지, 바로 제가 희망하는 종로의 미래입니다.”

정 의원은 종로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경험과 능력 모두를 종로에 바치겠다고 천명한다.



“정치1번지 종로를 종로답게 지킬 터”

남상해 (구) 하림각 회장



“평생 살아 온 종로의 영광 종로에 바치고 싶어”
 “종로인을 대변하는 진정한 종로정치 구현도”
 “국민소통 위해 헌신하는 정치쇄신 앞장을...”

남상해 (구)하림각 회장이 또 깃발을 들었다. 지난번 전국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 출마 이후 2년 만이다. 70을 넘겨 종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깃발을 들었다. 중앙당의 일방적 공천으로 빚어진 낙천으로 크나 큰 좌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남 회장은 지난 2006년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도 깃발을 들었다 역시 중앙당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그 때도 종로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민방의 출정 준비를 한 채 깃발을 휘날리지도 못하고 꺾어야만 했다.

사실 남 회장은 그 이전과 그 '전, 전'부터 깃발을 들려고 했고 들기도 했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남 회장은 종로를 지키겠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한번도 제대로 된 깃발을 끝까지 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중도에 내려야만 했다.

“종로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한 동네입니다. 가난이 싫어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참신동 토굴에서부터 삶의 역경을 시작한 곳이며 지금의 하림각으로 자수성가를 이룩한 인생의 총착지입니다.”

남 회장은 종로가 태어나지만 앉았지도 앉고 싶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종로와 함께 살아왔고 종로와 함께 성

장했으며 종로와 함께 끝까지 가야하는 입장에서 종로를 이렇게 바라만 볼 수가 없습니다. 종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흔히들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들 평하면서 엄청난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오백년과 근, 현대사 일백년, 모두 육백년이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간직한 종로는 박물관이 아니라 보물단지라고 봅니다.”

남 회장은 한마디로 종로를 보물이라고 단언한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진기한 곳이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있는 종로는 ‘우리시대 상징’이며 ‘미래세대 자랑’이라고 말한다.

“제가 종로에 살면서 종로에서 큰 성공을 이루면서 늘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종로에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 회장은 그래서 깃발을 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종로와 더불어 살아온 인생, 종로를 지키고 종로를 바르게 보존시키기 위해 깃발을 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제가 선거철만 되면 무조건 출마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한번 제대로 출마 해본적이 있습니까? 종로를 위해, 종로 주민들을 위해 진정한 일꾼이 한번 되어 보겠다고 해도 잘못된 중앙 정치권의 개입으로 항상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남 회장은 어린 시절 그 어렵게 고생고생 하며 오늘의 자수성가를 이루듯이 우리의 소중한 종로를 위해 진실로 진정한 일꾼이 한번 되어 보겠다고 기회가 올 때마다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좌절했다고 토로한다. 종로주민들이 원하고 종로가 부르는데 중앙의 정치인들이 항상 중간에 개입해서 자신의 ‘종로충정’을 무질러 버

린다는 것이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종로가 잘됐습니까? 종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종로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도 많습다. 그런데 번번이 중앙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철새처럼 날아와서 활개를 치고 또 때가 되면 날아가는 통에 종로는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을 못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회장은 종로를 잘 알고 종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종로를 바르게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종로의 일꾼이 되어야 종로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남 회장은 이번에는 말로 끝까지 깃발을 휘날리겠다고 말한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정치권 쇄신은 자신처럼 산전수전 겪으며 자수성가를 이룬 국민이 그 밥과 노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시작해야 함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고 말한다.

특히 너무나 귀족적이고 엘리트 집단으로만 보이는 한나라당에서 한 평생 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자신이,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서민 위주의 정당으로 변모시켜 서민과 소통하고 서민과 동고동락 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한다.

“발서 나이가 칠십대 중반입니다 건강은 사실대 못지않으니 걱정 없고 마음은 청년의 열정인데 조금 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야 말로 마지막 결심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 회장은 종로에서 얻은 영광을 종로에 되돌려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힌다. 이번에는 말로 종로와 종로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깃발을 들어 종로를 종로답게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초·대·석



“나쁜 정치·철새정치 추방할 때”

남상해 새누리당 종로구 예비후보



“지난 15일 남상해 종로지킴이 서포터스 발족”
 “종로인 자존심으로 종로자긍심 고취 주장”
 “국민에게 꿈과 희망 주는 정치 실현도”

상징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종로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온 곳입니다. 그러한 자랑스런 동네에 이제 더 이상 출세한 사람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동네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남 회장은 정치1번지 종로인의 자존심으로 철새정치인을 과감히 거부하고 종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 회장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당 공천을 신청해 놓고 있다. 남 회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다. 종로에서 세계 최대(?)의 중국요리 전문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십 년을 종로사회에 봉사해 온 그의 경력은 종로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태다. 불과 10살 어린 나이에 가난에 찌들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고 창신동 땅굴에서 생활하며 신문팔이, 구두닦이, 물장수로 시작, 오늘의 성공을 이룬 기적적 이야기는 TV 방송, 성공시대를 비롯해서 온갖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대서특필된 화제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남 회장은 그래서 기적을 일궈낸 사람, 희망을 만들어 가는 사람 등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누구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들고 기적같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 그리고 끈기와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회장은 자신과 같이 온갖 고생을 통해 자수성가를 이룬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역설한다. 오늘날 국민과 함께 맘 흘리려는 지도자 정신이 상실된 상황 아래에서는 국민적 희망과 국가적 비전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 엘리트 계층들만이 모여서 그들만의 특권

적 정치를 하는 행태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애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남 회장은 그래서 지금의 정치는 ‘나쁜 정치’와 다름이 없다고 강변한다. ‘나쁜정치’ 탓에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됐고 더불어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풍조가 만연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나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자신의 출세와 영달만을 위한 나쁜 정치는 과감히 몰아내야 합니다. 흙탕물에 더럽혀진 종로로는 결코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오염된 정치인에게서는 결코 희망의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 회장은 꿈과 희망을 일궈낸 장본인으로서 오로지 늘 푸름 열정과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종로인과 함께 온갖 희노애락을 함께 해 온 평범한 이웃으로서 종로만을 생각하며 종로인을 보듬는 그러한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전한다.

“종로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60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얼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네를 이제 더 이상 뜨내기 외지인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종로를 종로답게 가꾸고 종로를 종로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종로구민들이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남 회장은 조상의 얼과 함께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종로를 올바르게 지키고 또한 새로운 종로로 거듭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종로주민의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왔으며 이것이 바로 참여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종로구민의 힘을 총 결집시켜겠습니다. 종로인의 오랜 명예와 자긍심으로 종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오는 4·11 총선에서 종로구 예비후보로 나선, 남상해 하림각 회장은 정치1번지 종로의 자존심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일차적 목표라고 말한다.

남 회장은 지난 15일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남상해 종로지킴이 ‘서포터스’ 발족식을 열었다. 종로구 의회 전 의장 홍기서 씨를 위시해서 남재경 서울시 의회 의원과 전직 종로구 의회 의원 등 종로구 지역인사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상해 ‘서포터스’를 공식 발족한 것이다.

남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종로구 총선상황은 종로를 잠시 이용할 세력과 종로를 진정으로 지켜나갈 주민과의 싸움이 전개 중”이라며 종로인은 번지르한 감언이설로 종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종로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종로가 철새정치인의 도래지는 결코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다.

“종로에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종로를 대표하겠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신의 화려한 경력만을 내세운 채 입으로만 종로사람을 외치고 있습니다.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1번지의

의결번호	2012국선9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씨엔앰(삼군신문) 충북 영동군 영동을 계산리 445-3 영산타워 1층 대표이사 양재갑
심의대상기사	삼군신문 2012년 3월 14일자 2면 「심규철 예비후보 '새누리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 가져」, 3월 14일자 2면 「박덕흠 예비후보 '새누리당 공천' 확정」 및 3월 14일자 4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옥천서 박덕흠 예비후보 환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기고문(기자회견문)을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출마 포부, 선거 활동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언론사가 이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심규철 예비후보 '새누리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 가져

주민 섬기며 선거 임해 승리로 '새누리당공추위' 오픈 증명

4·11총선 영동·보은·옥천 선거구 새누리당 심규철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12일 십여년 동안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와 탈당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오늘 십여년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생활을 시작했고 오랜기간 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망감과 이를 넘어서는 절망감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공추위)에 대해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 공천의 제1원칙은 후보의 도덕성 아닙니까. 지금 제 선거구인 보은·옥천·영동 지역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혼탁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그런 불명예를 안겨버린 최대 장본인이 바로 박덕흠 후보입니다. 공추위는 과연 무엇을 심사한 것이며, 그런 후보와 '국민참여경선'을 하라니요. 이미 관광버스 사건을 일으킨 사람과 실어나르기 경쟁, 돈 경쟁을 하라는 게 과연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개혁이며 쇄신인지 반문합니다. 그러니 제가 경선 결정을 거부하고 아픈 마음으로 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후략)

심규철 예비후보 '새누리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 가져

주민 섬기며 선거 임해 승리로 '새누리당공추위' 오판 증명

4.11총선 영동·보은·옥천 선거구 새누리당 심규철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루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12일 십여년 동안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와 탈당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오늘 십여년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생활을 시작했고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망감과 이를 넘어서는 절망감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공추위)에 대해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 공천의 제1원칙은 후보의 도덕성 아닙니까. 지금 제 선거구인 보은·옥천·영동 지역을 총정복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혼탁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그런 불명예를 안겨버린 최대 장본인이 바로 박덕흠 후보입니다. 공추위는 과연 무엇을 심사한 것이며, 그런 후보와 '국민참여경선'을 하라니요. 이미 관공버스 사건을 일으킨 사람과 실어나르기 경쟁, 돈 경쟁을 하라는게 과연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개혁이며 쇠신인지 반문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선 결정을 거부하고 아픈 마음으로 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경선 상대인 박덕흠 예비후보는 먼저 서울에서 2006년 송파구청장, 그리고 친이계를 등에 업고 2008년 구로를 국회의원과 2010년 광진구청

장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 지역에서의 활동도 여러가지 불법, 부정 선거 운동의 배후인물로 관련성을 조사 받고 있어, 우리지역 주민 수백명이 수사를 받게 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설사 당선 된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될 위험마저 있고, 이미 상대당의 후보는 이를 감안한 역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런 후보는 걸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하여 그 경선 조건마저 투표소 경선으로 무려 4,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당에 납부해야 하고, 투표 장소 또한 보은 한곳으로 지정하여 그동안 박 후보의 행태로 볼 때 돈 경쟁, 실어 나르기 경쟁의 혼탁한 경선이 될 것이라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박 후보가 주장한 내용 그 대로인바, 저는 대안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제시했으나 당은 거부했고 이는 박 후보에게 기회를 주려는 당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명까지 바꾸는 새누리당의 개혁의지를 믿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가 법을 어기고 돈 선거로 세를 불러 나갈 때조차도 묵묵히 법을 준수하며 올바르게 경쟁하고, 유리한 곳을 찾아 기웃거리는 정치꾼이 아닌 수년간 주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올바른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천이어야 하며, 그

에 걸 맞는 후보는 바로 저 심규철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공천을 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에 따라 법을 준수하고 오로지 주민만을 섬기며 선거에 임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공추위의 오판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던 당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당에 입당하지 않고 저만의 비전으로 주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19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소통을 통해 합의된 확고한 원칙을 지켜가며 계속되는 것입니다. 훗날 제 자신이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이를 온 힘을 다하여 실행하겠습니다.

탈당이 배신이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며 진정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자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바로고 공정한 행동임을 우리 주민들은, 국민들은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몸담아야 할 당은 우리 국민이며, 우리 보은·옥천·영동이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심 규 철

박덕흠 예비후보 '새누리당 공천' 확정

더 낮은 자세로 주민 목소리 경청

새누리당은 지난 3월 9일 4.11총선 영동·보은·옥천 선거구 공천자로 박덕흠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박 후보는 "제가 공천자로 확정된 것은 남부 3군 군민 여러분과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남부 3군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는 살리고 복지는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정당당당한 경선을 통해



▲ 박덕흠 후보

새누리당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쉽게도 심규철 예비후보께서 경선을 거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새롭고 희망찬 남부 3군을 위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옥천서 박덕흠 예비후보 환담

"남부3군 군민의 민심과 함께 하는 후보 되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9일 옥천군 안내면 안사천사모(안내면을 사랑하는 천사들의 모임)와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가운데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 박덕흠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환담을 나누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감동인을 찾기 행사의 일환으로 8년째 주민사람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안사천사모 회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박 예비후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서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위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정책에 반영하기 총력을 방한 것은 남부 3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옥천을 비롯한 남부 3군 군민의 민심과 함께하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남부 3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결번호	2012국선105(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대표이사 이 병 규
심의대상기사	문화일보 2012년 3월 19일자 30면 「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일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국민 경계령〉 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금천구는 사람중심의 구”

이런 현수막들을 보셨습니까? ‘사람중심’ 현수막들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 걸쳐있습니다. ‘금천구가 북한의 해방구’라는 뜻이고, 전국적으로 해방구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로 규정했고, 제8조는 북한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 국민들은 그 말이 너무 좋다 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만을 의미합니다. 무산계급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유가 있

어야 하는데 남한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미국이 있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가 있고, 무산계급이 살 길인 주체사상을 탄압하는 파쇼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쳐야만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386 주사파를 포함한 지금의 진보들이 미국과 자본가와 남한정부를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략)

갈아엮자, 점령하자, 보복하자! 지금 진보들의 구호가 더 없이 강경해졌습니다. 2007년 노무현 밑에서 한자리를 했던 사람들.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 등은 FTA를 도전의 기회라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두를 갈아엮어야 한다며 몸싸움에 나섰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되는 특수 인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동영은 정권이 바뀌면 손볼 사람 있다고 하고, 또 다른 51세의 여성 골수 좌익은 “통일되

면 죽일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다가 지난 2월 15일경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정동영은 3월 7일 제주도에 건너가 정인양 제주해군기지 사업 단장(준장)에게 “충선과 대선에서 진보가 이긴

다. 그때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해군 준장이 “정동영 살생부”에 오른 것입니다. (후략)

대국민 경계령 **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급천구는 사람중심의 구" 이런 현수막들을 보셨습니까? '사람중심' 현수막들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 걸려있습니다. '급천구가 북한의 해방구'라는 뜻이고, 전국적으로 해방구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로 규정했고, 제8조는 북한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 국민들은 그 말이 너무 좋다 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만을 의미합니다. 무산계급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미국이 있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가 있고, 무산계급이 살 값인 주체사상을 탄압하는 파수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치자! 이런 사상은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 이시다 시피 386주사파를 포함한 지금의 진보들이 미국과 자본가와 남한정부를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진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진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45년부터 쓰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은 남한의 역사를 '진보와 보수반동 사이의 대결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보수반동은 미제와 그 앞잡이인 파수정권에 순종하는 비보통인대 반해 '진보'는 주체사상을 터득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빈민-반파수 투쟁에 몰 바치는 애국자반 정의였습니다.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널리 보급해야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는데 미제와 파수정권이 해방을 놓으니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화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진보'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공의 DNA를 타고난 사람들, 영웅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보다 잘나고 정사는 사람들을 배 아파하는 사람들, 아팠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상 성격의 사람들, 나사가 좋아하는 소영웅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진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에 대해 '말'과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동이 거칩니다. 이들이 한을 푸는 방법은 그들이 증오하는 남한사람들을 북한이라는 삼천기개로 차단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만 풀면 자기들이 굶어도 굶다합니다. 여기에 어쩌다 북한에 악점을 삽입한 사람들이 진보가 됩니다. 이들 있는 사람들, 북한 대내외면 악명이 잡힙니다. 이제 어쩌서 '진보'가 총학생위를 저토록 처참하게 하는지 아시겠지요.

같이있자, 장행하자, 보복하자! 지금 진보들의 구호가 더 많이 강경해졌습니다. 2007년 노무현 밑에서 한자리를 했던 사람들,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 등은 FTA를 도전의 기회라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판이 난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두를 같이해야 하며 한때 몸바람에 나섰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특수 인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동영은 정권이 바뀌면 손 불 사람 잊고하고, 또 다른 51세의 여성 골수좌익은 '통일되면 죽일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다가 지난 2월 15일경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정동영은 3월 7일 제주도에 건너가 정인양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준장)에게 "충선과 대선에서 진보가 이긴다. 그때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해군준장이 '정동영 살생부'에 오른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은 진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조목 조목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보의 묘자를 쓴 사람들은 '민족의 청룡상'이 북한에 있고, 대한민국은 천일파로 세운 정권이라고 태어나서는 안 될 대려운 정권으로 하루 빨리 없애 버려야 한다'며 손학규가 고백한 것처럼 논란 뜨면 이 나라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연구하는 반역의 괴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보'는 그래서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 나무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저들의 체제선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잘 되지도 하는 FTA, 한미연합, 해군기지, 합지력발전소 등을 위공하는 것은 역신을 묶은 진보들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끝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위압하며리고 척화종일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입니다. 진보는 국가를 복에 넣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진보'를 경계하십시오. 진보가 신상하고 보수는 코라타분한다? 신성한 이미지를 잃고 사는 영국의 골수보수 대차수상이 코라타분했으며, 언제든 보다 더 미국국민을 증경해 해준 레이건이 코라타분했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한 곳에 제대로 된 보수정치인이 박선영 말고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수를 망친 대표자인 정치인은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보수는 일어사야 합니다. '희한한' 학습 있는 보수는 국가를 지키지 못합니다. 보수는 '까바니' 오곡 알집이 보았으면 저들이 북한헌법 3조와 8조에 명시된 '사람중심'을 전국각지에 보란 듯이 내걸었습니까? 학습을 하더라도 총테이지 '치스'를 열거할 예 오십시오. 위장한 진보는 여당에도 많으니 조심하십시오! 바랍니다.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아전군 본부
의장 지만원(시스템공학 박사)
www.systemclub.co.kr

* 500만 아전군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 많아야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국제에서 수를 조작하려는 단체는 오직 '500만아전군' 뿐입니다.
 * 200쪽 분량의 활간 사국전문을 보시면 사국이 눈에 보입니다. 구독신청 (02-595-2563)
 * 활간사국전 및 사국독본: 매일 3주째 목요일 오후 5시
 방배대문문화원(2호선 방배역 2번출구로 나와 직진 2분)

의결번호	2012국선10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동아일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재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1일자 A31면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일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민주 등 중북좌익들이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면 12월 대선은 사실성 무의미합니다. 설사 박정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 된다 해도 그는 국회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월남처럼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직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뿐, 중북좌익들이 점령한 국회에 대해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은 그야말로 예측불허이며 대선 구도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판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말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오직 총선에만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표심이 위험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심초사, 국가를 염려하시는 노장년층 등 상당한 인구가 새누리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등 실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친북노선을 선택하고, 진보들과 앞을 다투며 무책임한 방법으로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망연자실 싸늘한 마음이 되어 새누리당에 등을 졌습니다. (중략)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것은 애국ियो, 이명박이 추진하는 것은 매국이다.” 진보당의 한 인사는 우리의 소중한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진보의 거두라는 정동영은 이종걸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중북좌파들에 호소했습니다. "촛불이 5만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못할 것이다. 국회담당 길이가 2,400m다. 비준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 달라, 5만 명이면 된다."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하고 공중부양도 잘하고 전기톱도 잘 다룹니다. 이런 정동영이 노무현 시절에는 FTA 체결에 가장 앞장섰던 사실, 기억들 하십니까? 노무현

시절 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 열우당 대표를 지낸 후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를 맡던 시절 그는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해줄 기둥이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이라며 FTA의 거룩한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한·미 FTA는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후략)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민주 등 중북좌익들이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보하면 12월 대선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실사 박정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그는 국회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종걸이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김대중처럼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직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을 뿐, 중북좌익들이 장악한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해를 도모가 없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거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선은 그리말로 예측불허이며 대선구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판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말하는 것은 예나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총선에만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표심이 위험하게 호프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가능성으로 노쇠하고, 국가를 망쳐놓는 노정권중 중 상당한 단구가 새누리당이 6.15선과 10.4선연설 준중 하겠다는 등 실라 총각적인 방법으로 친북노선을 선택하고, 진보들과 말을 대하며 무책임한 방법으로 무성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 싸늘한 마음이 되어 새누리당에 등을 짚습니다.

책임을 전담이 없는데 이번 총선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이는 안 됩니다. 실사 책임을 전담이 마땅치 않더라도 책임이 할 만한 인물은 비 진보 및 무소속 등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투표를 하십시오. 이종걸과 함께 한나라당을 놀라게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못할 것이다. 국회담당 길이가 2,400m다. 비준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 달라, 5만 명이면 된다.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하고 공중부양도 잘하고 전기톱도 잘 다룹니다.

‘사람중심’으로 운영되고 표현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진보에 다 모여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자택 발전소 등은 대한민국에 매우 유익한 존재입니다. 철책자 복습반에 든 북한인권관 사람의 말을 섰다면 반드시 시정시키는 데 참여해야 할 인물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민주 진보 등 중북좌익들은 기어이 이를 모두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한 달 더러운 장관이며 민족과 역사의 전통성이 복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적화통일 해야 한다"는 공문 산물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것이려면 무조건 파괴-재가하려는 것입니다.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송학규는 특유의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 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것은 대국이고, 이명박이 추진하는 것은 대국이다." 진보당의 한 인구는 우리의 소중한 '배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번 정동영이 노무현 시절에는 FTA 체결에 가장 앞장섰던 사실, 기억들 하십니까? 그는 노무현 시절 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 열우당 대표를 지낸 후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를 맡던 시절 그는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시켜줄 기둥이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이라며 FTA의 거룩한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한미 FTA는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진보는 또 김중환 통일선본부장을 향해 "제2의 이완용"이라는 악담을 했고, "FTA를 일사단락"이라 함으로써 "FTA협정이 성립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다름 바 없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은 정동영이 이완용을 아주 적 배설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동영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세력이 이완용을 배설했습니다. 이완용은 처음에 '한일합방'에 반대했습니다. 한일합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합판'을 먼저 들고 나온 송병준에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합방에 반대했던 이완용은 새로 부임한 대우치를 찾아가 자기 한일합방에 앞장섰다고 자랑했습니다. 주도권을 확보하자 국가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 있었습니디. 다른 편이 어떤 대국이고 무엇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색 사람 들을 무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생팔당 자제록 총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다 하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유대인도 팔남국인도 사후지 아서 죽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대총소 500만아전군 본부
의장 지만원(시스템공학 박사)
www.systemclub.co.kr

- * 500만 아전군에 참여 기업에 주식이 바뀝니다. 수가 많아 내보낼 바를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에서 수를 조제하는 단에는 오직 '500만아전군' 뿐입니다.
- * 200억 분량의 월간 사적잔고를 보시면 사적인 돈에 보십시오. 구독신청 (02-595-2563)
- * 월간사적잔고 및 사적잔고: 매일 3주씩 배당일 오전 9시
- 장세탁장(월간) 2주씩 장세탁 2주(월) 2주 (월) 2주

지휘부: 의장 지만원, 대표 송병준, 정동영, 임영택, 김우송
 상임고문: 이완용, 이대현, 조현철, 조현철, 조현철

의결번호	2012국선107(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2년 3월 19일자 30면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및 3월 21일자 30면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일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국민 경계령

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금천구는 사람중심의 구" 이런 현수막들을 보셨습니까? '사람중심' 현수막들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 걸려있습니다. '금천구가 북한의 해방구'라는 뜻이고, 전국적으로 해방구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로 규정했고, 제8조는 북한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화'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 국민들은 그 말이 너무 좋다 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만을 의미합니다. 무산계급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미국이 있고, 노동자를 학박하는 자본가가 있고, 무산계급이 살 길이 주체사상을 탄압하는 피조장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지만 사람은 사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 이따기 시대 3800수마를 포함한 3건의 진보들이 미국과 자본가와 남한정부를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진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진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45년부터 쓰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은 남한의 역사를 '진보와 보수반동 사이의 내전 격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보수반동은 민족과 그 앞잡이인 미국과 함께 온종일 반북을 위해 '진보'는 주체사상을 터득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빈민-빈민으로 투쟁을 할 바지를 애국자라 칭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널리 보급해야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면 민족과 파조장판이 해방을 놓으니 이를 최우선이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진보'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골의 DNA를 타고난 사람들, 영웅의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잡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 아파하는 사람들,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상 성격의 사람들, 나사가 좋아하는 소영웅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진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에 대해 '반'과 적대감을 키웁니다. 그래서 땅이 기겁한다. 이들이 한을 푸는 방법은 그들이 증오하는 남한사람들을 북한이라는 상인기개로 차단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만 풀면 자기들이 죽어도 좋다합니다. 여기에 여백도 북한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진보가 됩니다. 이를 있는 사람들, 북한 다내오면 악영향이 집합니다. 이제 여백서 '진보'가 증폭행위를 저토록 자질하게 하는지 이시겠지요.

같이애자, 잘행하자, 보복하자 지극 진보들의 구호가 더 없이 강경해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자리를 했던 사람들,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 등은 FTA를 도전의 기회라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다. 불만을 토출합니다. 재주해고까지 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일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두를 잡아잡아야 한다고 몸바움에 나섰습니다. 대한 자체가 안 되는 특수 인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동영은 장편이 바뀌면 손 바를 있다고, 또 다른 51세의 여성 불수좌악은 "불일적인 속성 사람'의 평단을 작성하다가 지난 2월 15일경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창동영은 3월 7일 재주도에 간사기 장영 재주해고까지 사업단장(창동영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가 이긴다. 그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일어서 하라'는 취지)로 협력했습니다. 해군준장이 '창동영 살상'에 오른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은 진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조목 조목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보의 모자를 쓴 사람들은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대한민국은 친일파로 세운 장관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으로 하루 빨리 없애 버려야 한다'며 순학위가 고백한 것처럼 노년 노년 이 나라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인 연구에 반박의 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보는 그래서 국가의 안전에 반하는 행동들 하나!' 나무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저들의 정세성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잘 되라고 하는 FTA, 한미연방, 해군기지, 원자력발전소 등을 뒤집는 것은 역삼을 좋은 진보들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끝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뒤집어버리고 적화통일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입니다. 진보는 국가를 복에 넣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재발 '진보'를 경계하십시오. 진보가 신선하고 보수는 코리타분히다? 신선한 이미지를 달고 사는 영국의 공수보수 대차수상이 코리타분했으며, 연애인 보다 더 미국국민을 즐겁게 해준 레이건이 코리타분했습니까? 만약까운 일은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정치인이 박선영 말고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수를 망친 대표적인 정치인은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보수는 일어나서야 합니다. '하지마' 학습 없는 보수는 국가를 지키지 못합니다. '보수는 가려야' 오직 앞장만 보았으면 저들이 북한헌법 3조와 8조에 명시된 '사람중심'을 전국각지에 보란 듯이 내걸었습니까? 학습을 하신다면 총합까지 '시스템클럽'에 오십시오. 위대한 진보는 여당에도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아전공 본부

의장 지만원(시스템클럽 박사)

www.systemclub.co.kr

- * 500만 아전공에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수 많아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애국세계에서 수를 표시하는 단위는 오직 '500만아전공' 뿐입니다.
- * 200여 분들의 합과 사귀고있을 날이면 사귀어 바랍니다. 구독신청 (02-595-2953)
- * 월간사귀고일 일 사귀고로: 매일 3주씩 사귀고일 오후5시
- * 발행처:대한민국 2호선 방배역 2호선출구로 나와 직진 2번

지휘부: 의장, 지만원, 대표: 송영민, 정현식, 임정택, 김우송

상임고문: 김성호, 박정진, 이대훈, 조재현, 조재현, 조재현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민주를 통해 개혁의 열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설사 박정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그는 국회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일본처럼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직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뿐, 중화권자들이 점령한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해를 도리도 없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가문해 주시가 바랍니다. 총선은 그야말로 예측불허이며 대수도구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말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오직 총선에만 관심을 집중해 주시가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표상이 위험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가능으로 노심초사, 국가를 염려하시는 노장선생 중 상당한 인구가 새누리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 하겠다는 등 일부 순종적인 방법으로 친박노선을 선택하고, 진보들과 일을 다투며 무책임한 방법으로 무성투표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 싸늘한 마음이 되어 새누리당에 등을 쳤습니다.

꼭어를 정당이 없는데 이번 총선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이는 안 됩니다. 설사 꼭어를 정당이 마땅치 않더라도 꼭어해야 할 만한 인물은 비 진보 및 무소속 등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투표를 하십시오 수 있도록 인 물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사람중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사람중심'이라는 단어는 북한 헌법 3조와 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체가 '사람중심'으로 표현돼 있고, 북한의 모든 사회제도가

'사람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표현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진보에 다 모여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자해 발전소 등은 대한민국에 매우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남북자 북송반대 등 북한인권을 사람의 일을 썼다면 반드시 사정사기는 데 참여해야 할 민족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한 민주-진보 등 중화권자들은 가 아이 이들 모두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는 안될 더러운 정권이며 민족과 역사와 전통성이 복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적 화통일 돼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파파-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진보의 성장만 정동원, 한영숙, 유시민, 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 기지에 대해 장으로 이어지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것은 애국이고, 이 영박이 추진하는 것은 애국이다.' 진보들의 한 인구는 우리의 소중한 애국'을 '애 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밤 진보의 거두라는 정동원은 이종걸과 함께 서울시장 광장에 서 말한 것을 진보에 참석하여 중화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충돌이 5만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 비준안 강행 시위를 못할 것이다, 국회당청 길이가 2400m다, 바론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24일 국회로 와서 당장을 예약해 달라. 5만 명이면 된다.'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 하고 공중부양도 삼하 고 전가들도 잘 다룹니다.

이번 정동원이 노무현 시절에는 FTA 체결에 가장 앞장섰던 사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는 노무현 시절 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 열무당 대표를 지낸 후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어당 대표를 일던 시절 그는 '한-미 FTA가 완 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시켜줄 기둥이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이라 FTA의 거두인 전두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한미 FTA는 한국을 미국의 51번 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진보는 또 김중환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제2의 이완용"이라는 막말을 했고, "FTA를 끝사늑"이라 했으며 "FTA협정이 성립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나 를 바 없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국가 막말 달은 정동원이 이런말을 아주 잘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동원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세력이 이런말 을 배웠습니다. 이완용은 처음에 '합일합방'에 반대했습니다. 합일합방이 싫어서 가 아니라 '합방론을 먼저 들고 나온 송병준에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합방에 반대했던 이완용은 새로 부임한 데라우치를 찾아가 자기가 한일합방에 앞장섰다고 자랑했습니다. 주도권을 확보하자 국가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 만 있었습니 다. 다른 편이 하면 애국이고 무엇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복은 복 사람 들을 우리는 어떤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명감만 자체로 총선을 준비해 주 시가 바랍니다. 귀찮다 하지만 나라가 망합니다. 유래인도 할남국민도 싸우지 않 아서 죽은 것입니다.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아전군 분부
의장 지만원(시스템공학 박사)
www.systemclub.co.kr

* 500만 아전군에 많이 가입해 주시가 바랍니다. 수가 많아야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해군사령에서 수를 조직화하는 단계는 오직 '500만아전군' 뿐입니다.
* 200여 명에게 불간 시민단체를 부세해 사대이 전에 부합시켜. 주북선형 (02-695-2563)
* 불간사각간 및 사각로로로: 매일 3주씩 필요할 오후5시
방배해당문화원2층선 방배역 2번출구로 나와 직진 2분)

지휘부: 의장 지만원, 대표 송병민, 정한식, 알장택, 김유송
상임고문: 이완용, 이대용, 전태원, 채병봉

의결번호	2012국선108(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3월 21일자 A34면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및 3월 28일자 A34면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일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민주 등 중화지역들이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보하면 12월 대선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설사 박정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그는 국회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탈남침 지구상에서 영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직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뿐, 중화지역들이 점령한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해를 도리할 없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거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선은 그야말로 예측불허이며 대선보다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단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말하는 것은 예지치 소모입니다. 오직 총선에만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의 사인들이 현 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표상이 위험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가상으로 노심초사, 국가를 염려하시는 노장년층 중 상당한 인구가 새누리당이 6.15선과 10.4선연을 존중하겠다는 등 실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친북노선을 선택하고, 진보파와 같은 다부 무책임한 방법으로 부정부패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민자살 싸늘한 마음이 되어 새누리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책임을 정당이 없는데 이번 총선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기를 계십니다. 이는 안 됩니다. 설사 책임을 정당이 마땅치 않더라도 책임자가 할 만한 인물은 비 진보 및 무소속 등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투표를 하십시오. 되도록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을 내거는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사람중심」이라는 단어는 북한 헌법 3조와 8조에 규정해 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체가 「사람중심」으로 표현해 있고, 북한의 모든 시책제도가 「사람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표현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진보에 다 모여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지력 발전소 등은 대한민국에 매우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남북자 북송반대 등 북한인권은 사람의 말을 썼다면 반드시 사정시키는 데 참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민주 진보 등 중화지역들은 기어코 이를 모두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는 단일 민족은 정관이며 민족과 역사와 전통성이 복에 있기 때문에 허무맹랑히 적화통일 해야 한다」는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파파-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진보의 성장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송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 기지에 대해 장으로 아이같은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것은 애국이고, 이 알박이 추진하는 것은 애국이다.」 진보파의 한 인구는 우리의 소중한 애국에 대해 「애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밤 진보의 거두라는 정동영은 이종걸과 함께 서울시장 경선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종북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촛불이 5만개가 되면 한나리당은 놀라서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장 김이가 2400m다. 미준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24일 국회의원 와서 달장을 애워해 달라. 5만 명이면 된다.」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 하고 공중무용도 할 줄 안다는 걸 드러냅니다.

500만 아전군에 힘이 가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가 많아야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애국세력에서 수를 조직하는 단체는 오직 「500만아전군」뿐입니다.
* 200여 분량에 달한 시국선언을 분신한 시국선언이 눈에 보였습니다. 구독신청 (02-595-2563)
* 불미스러운 것 시국선언을 해줄 30여 개로 되어있고, 구독신청 (02-595-2563)
* 불미스러운 것 시국선언을 해줄 30여 개로 되어있고, 구독신청 (02-595-2563)
* 불미스러운 것 시국선언을 해줄 30여 개로 되어있고, 구독신청 (02-595-2563)

이런 정동영이 노무현 시절에는 FTA 체결에 가장 앞장섰던 사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는 노무현 시절 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 열우당 대표를 지낸 후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를 지낸 시절 그는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시켜줄 기둥이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이라며 FTA의 거룩한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 보니 FTA는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진보는 또 김중환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제2의 이완용」이라는 막말을 했고, 「FTA를 잘사먹어」이라 함으로 「FTA협정이 성립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를 바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장으로 기가 막힐 일은 정동영이 이완용을 아주 잘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동영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세력이 이완용을 배웠습니다. 이완용은 처음에 「한일합방」에 반대했습니다. 한일합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합방론을 먼저 들고 나온 송병준에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합방에 반대했던 이완용은 새로 부임한 대라우치를 찾아가 자기가 한일합방에 앞장섰다고 자랑했습니다. 주도권을 확보하자 국가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 있었습니다. 그런 편이 어떤 애국이고 무엇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붉은 색 사람물을 우리는 이미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없이 자대로 총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아 하지만 나라가 망합니다. 유대인도 팔남국인도 싸우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대한민국대중소 500만아전군 본부
의장 지만원(시스템공학 박사)
www.systemclub.co.kr

121

의결번호	2012국선112(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남도일보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91-20 대표이사 박 성 호
심의대상기사	남도일보 2012년 3월 23일자 3면 「박주선 광주 동구 ‘눈물의 출마선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광주광역시 동구)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 후보자의 무소속 출마 사실을 전하면서 독자들의 동정을 유발하게끔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주선 광주 동구 ‘눈물의 출마선언’

민주통합당 탈당 무소속 강행…
속죄의 마음으로 “부당한 수사·음해
당당히 맞서 진실 밝혀낼 것”

눈물로 뒤범벅된 4·11총선 출마선언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자도 울고 이를 지켜보는 지지자들도 울먹이는 기자회견이 연출된 것.

22일 박주선 국회의원이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제19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는 동구 전·현직 시·구 의원과 일반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와 저를 돕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속죄의 마음으로 진심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적 책임을 떠나 인간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심사숙고 했지만 ‘남편에게 씌워진 불명예의 굴레를 벗겨 달라’는 유족의 호소는 야인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면서 “저를 돕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읽는 도중 ‘당신의 피를 팔아 자식을 공부시킨 어머니의 헌신’, ‘사법시험 수석합격’,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서러움에 복받친 듯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를 바라보던 기자회견장에 모인 지지자들 대부분은 눈이 충혈됐고, 일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해 숙연함마저 들게 했다.

박 의원은 투신사건으로 촉발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신속한 수사와 사실 규명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장기화하는가 하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강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투신 참극과 관련한 가혹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 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와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온몸으로 싸워 온 박주선을 죽이려는 정치적 탄압이고 음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음해에 당당히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광주 동구 ‘눈물의 출마선언’

눈물로 뒤범벅된 4·11총선 출마 선언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자도 있고 이를 지켜보는 지지자들도 울먹이는 기자회견이 연출된 것.

22일 박주선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제19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는 동구 전·현직 시·구 의원과 일반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와 저를 돕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속죄의 마음으로 진심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적 책임을 떠나 인간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심사숙고했지만 ‘남편에게 석워진 불명예의 굴레를 벗겨 달라’는 유족의 호소는 아인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면서 “저를 돕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백의종군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읽는 도중 “당신의 피를 받아 자식을 공부시킨 어머니의 헌신”, “사법시험 수석합격”,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서러움에 북받친 듯 울음을 참지

민주통합당 탈당 무소속 강행…속죄의 마음으로
“부당한 수사·음해 당당히 맞서 진실 밝혀낼 것”



눈물…또 눈물

전직·동정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관련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선 광주광역시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출마 회견을 갖던중 유족을 떠올리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news.com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를 바라보던 기자회견장에 모인 지지자들 대부분은 눈이 충혈됐고, 일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해 숙연함마저 들게 했다.

박 의원은 투신사건으로 촉발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신속한 수사와 사실

규명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장기화하는가 하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강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투신 참극과 관련한 가혹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 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와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온몸으로 싸워 온 박주선을 죽이려는 정치적 탄압이고 음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음해에 당당히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news.com

의결번호	2012국선132(자심)
언론사	상주신문 주식회사 경북 상주시 남성동 48-8번지 대표이사 이 사 윤
심의대상기사	상주신문 2012년 3월 21일자 1면 「김종태 후보 새누리당 경선 승리」, 3월 21일자 3면 「중진같은 국회의원 힘으로 상주발전·정권재창출 할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북 상주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의 경선 승리 소식과 인터뷰 기사를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정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사진 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종태 후보 새누리당 경선 승리'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가족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상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주지역 새누리당 국민참여경선에서 김종태 후보가 성윤환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3월18일 오후 2시부터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당원, 일반시민 등 전체 선거인단 1,238명중 1,1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김종태 후보가 608표를 득표해 588표를 얻은 성윤환 후보를 20표차이로 따돌리고 가산점과 관계없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날 경선이 치러진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양 후보자 지지자와 시민 등 3,000여명이 찾아 후

보결정 순간을 지켜보면서 4·11총선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선에서 승리한 김종태 후보는 “저는 오늘 깊은 감사와 겸허한 마음으로 제19대 상주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지명을 받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신 경선선거인단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그간 우리 고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분열된 상주시의 화합을 간절히 원하시는 시민 염원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라면서 “저는 단지 새누리당 후보로 지명받았을 뿐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른 후보와 함께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후보는 이어 “경선으로 인해 흐트러진 민심을 아우르고 화합된 하나의 마음으로 20여일 남짓 남은 4·11 총선에서의 압승과 18대 대선 정권 재창출로 당원과 시민성원에 보답하겠다”

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중동사격장 부지의 첨단산업단지 활용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 농가 지원 예산 확보, 낙동강권 관광단지 조성과 예절, 문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에게 제시한 공약들을 반드시 이뤄내 옛 상주의 명성을 되찾고 상주를 살맛나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확’ 바꾸는데 그동안 쌓아온 저의 경험과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종태 후보 새누리당 경선 승리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가족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상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주시에 새누리당 국민참여경선에 출마한 김 후보가 상주향교에서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경선에서 탈락한 김 후보를 위로하고 당선된 김 후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후보는 “저는 단지 새누리당 후보로 지명받았을 뿐입니다. 이산 이후부터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른 후보와 함께 주어진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어 “경선으로 인해 호프락친 민심을 아우르고 똘똘한 한나라 마음으로 20여일 남짓 남은 4.11 총선에서의 압승과 18대 대선 정국 재창출로 당원과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경북도당 경선관리위원장으로 부터 당기를 받고있는 김종태 예비후보

역인재 육성,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에게 제시한 공약들을 반드시 이뤄내 옛 상주의 명성을 되찾고 상주를 살맛나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확’ 바꾸는데 그동안 쌓아온 저의 경험과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상고 취재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생기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감문 전문》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제 19대 상주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김종태입니다.

3월 18일 새누리당의 공천 확정 소식을 여러날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를 믿고 지지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 고향의 발전을 저해하는 분열된 상주시의 화합을 간절히 원하는 이는 상주시민의 열정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20여일 남짓 다가온 총선에서 힘드려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총선 승리를 통해, 중동사격장

을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의 입지비 용출과 고밀화와 인구 급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회복 시키기 위해 문화, 관광, 문화컨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에 입하는 농축산 농가 지원대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는 깨끗하고 밝은 선거로 우리 지역 주민의 희망을 도모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시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공약과 정책안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 상주에 밝은 미래를 위하여 새누리당의 김종태를 선택해주시길요. 여러분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상주시 새누리당 후보 김종태



중진같은 국회의원 힘으로 상주발전 · 정권 재창출 할터...

‘상주발전위해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화합과 단합으로 신바람나는 상주 건설에 총력

김종태 새누리당 후보는 경선을 마치자마자

지역화합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경선때의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 뜻을 한곳으로 결집,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상주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김후보는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어르신들 복지향상과 농·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청취 등 민심의 밑바닥을 두루 살피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실천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후보는 특히 상주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종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공약사항을 들어보았다. (후략)

중진같은 국회의원 힘으로 상주발전 · 정권재창출 할터...

‘상주발전위해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화합과 단합으로 신바람나는 상주 건설에 총력

김종태 새누리당 후보



합하고 시민들을 한곳으로 결집, 화합과 행복이 넘치는 상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김후보는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어르신들 복지향상과, 농·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청취 등 민심의 발바닥을 두루 살피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후보는 특히 상주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종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공약사항을 들어보았다.

김종태 새누리당 후보는 경선을 마치고마자 지역화합을 위한 한 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경선포의 강동을 봉

▲도청과 경마장의 연이은

유치실력에 시민들이 많이 허탈해 하고있는데요...

경마장이 밟지 아니라 생 각하심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경마장은 상주시 연간 수입이 1000여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총당 국회의원이라 함은

장 해야 할 일은?

저는 농업도시 상주를 위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자녀들이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농업도시 기반 조성의 정책요소인 사격장 활거를 정부관계자와 만나 단반 짓고 각종 피

간이 적다. 이에 대한 배려는 있는가?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꽃 피울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으로 상주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지금, 상주 경기 정책의 요인중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태 후보

상주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봅니다.

영적인 요소를 끌어내고, 거기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다스릴 상주로 돌아오고 산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해 보상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본 대지진으로 갈 곳 잃은 취업단 산업단지를 상주에 유치하고 8방의 교통 중심지라는 장점을 살려 중화지역 물류기지를 만들어인구가 증가하고 장사는 상주를 만드는데 힘조하기 위해 상주 시민을 대변

근본적 이유는 젊은이들이 상주에 몰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슴에 품은 꿈과 열정을 꽃 피울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고향인 상주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켜 놓았는데 지역의 여건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야말로 애절한 것 아닙니까?

무죄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지 않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에 맞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얼마 전 상주대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10대에서 30대까지의 젊은 세대가 고향

하는 것이 바로 극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극장이 아닌 젊은이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의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젊은이와 시중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계신 시민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철현 편집부장〉



4. 주 의

의결번호	2012국선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영남일보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손인락
심의대상기사	영남일보 2011년 12월 17일자 1면 「깃발만 꽃던 시절 끝나나...TK 정치 긴박」, 같은 날짜 3면 「김부겸의 귀환...한나라 긴장감」, 12월 19일자 30면 「김부겸, '아름다운 결단」 및 12월 22일자 5면 「'대구출마' 김부겸 당권 도전 선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경북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에 대해 칼럼과 스트레이트 기사 등의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단기간에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깃발’만 꽃던 시절 끝나나...TK정치 긴박

무게가 있는 野후보 출현
다원주의 통한 경쟁 예고
輿는 ‘토종TK론’이 화두
역동적 신진 거센 도전장

TK정치권이 드디어 변화할까? 내년 총선(4월 11일)을 앞두고 대구·경북 정치권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한나라당 일당독점 구조에 대한 피로감, 신규 세대교체와 뉴리더론, 세대간 정치적 성향의 격차, 야권의 정치적 승부수들이 그 긴장의 중심에 서 있다. 과거와는 다른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 긴장과 희망이 교차한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환골탈태해야 하고, 야권은 한나라당 성벽을 타

고 올라야 한다는 명제에 각각 직면해 있다.

일당독점의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특정 정당의 지지여부를 떠나 대구·경북의 정치적·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바로 ‘정치적 다원주의(多元主義)’를 통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고는 지역발전의 동인(動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신공항 무산과 ‘부스러기’ 과확벨트 유치의 경험은 지역의 정치 스펙트럼을 넓혀야 지역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연결됐다. 대구·경북은 현재 27명 국회의원 전원이 한나라당이다.

독점의 피로감이란 틈새를 먼저 치고나온 쪽은 역시 야당이다. 경북고 출신 3선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이 고향으로의 정치적 귀환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경북여고를 나온 추미애 의원과 함께 TK 정치다원주의를 위해 대

구 U턴 출마를 끈질기게 권유받아 왔다.

그의 귀환은 일차적으로 대구에서도 비중있는 인물군으로 무장된 야권 단일후보 결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노무현 정권의 지역핵심인사들과 지식인그룹의 가세가 점쳐진다. 역대 선거구도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총선에서 지역의 편중된 표집결은 기준에도 미달하는 야권 후보의 출현이 한몫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맞서 지역 범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진정한 지역TK론과 세대교체론'도 정치지형 변화 조짐에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젊고 역동성 있는 인물로의 교체를 말한다. 특히 서울에서 거주하는 '무늬만 TK'가 아닌, 지역에서 지역문제에 천착해온 '토종TK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치신진군에는 대구시 국장직에서 과감히 물러난 김상훈 전 경제국장을 비롯해 경찰대 1기인 윤재옥 전 경북경찰청장, 출마설이 나도는 지역언론사CEO, 달서구·북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40대 전후 전문가그룹과 당관료, 지방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신진 후보군의 출현은 기존의 다선의원을 향한 압박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불출마 선언이 대구·경북에도 상륙할지 모른다는 관측의 근거에는 이같은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재건에 나설 박근혜 전 대표의 향후 당쇄신 및 인

적쇄신안이 어떤 모습을 띌지도 이 같은 변화를 재촉할 것이다.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의 어깨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종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변화의 바람을 외곽에서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변수는 여·야 선호를 초월한 2040 신세대(20~40대)의 움직임이다.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는 작금의 2040 트렌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상징되는 2040성향은 일종의 시대조류가 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그 강도가 다소 약한 듯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크든 작든 의미 있는 정치적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의 현역 국회의원 중 20~40대가 전무하다는 점은 이런 정치적 결집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야권도 젊은 인재 수혈을 공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 주역들을 내세워야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공감대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시대 조류,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젊고 참신한 이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세월의 흐름은 기성 정치권에 결코 유리한 요인이 아니지 않느냐"고 진단하고 있다.

대구 한나라당과 범야권이 시대트렌드를 감안해 어떤 인물들을 실제 영입하고 포진시킬지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다. (후략)

'깃발'만 꽃던 시절 끝나나...TK정치 긴박

■ 뉴스분석

TK정권이 드디어 변화할까?
내년 총선(4월11일)을 앞두고 대구·경북 정치권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한나라당 일당독점 구조에 대한 피로감, 신규 세대교체와 뉴리더론, 세대간 정치적 성향의 격차, 야권의 정치적 승부수들이 그 긴장의 중심에 서 있다. 과거와는 다른 한파 승부가 될 것인 긴장과 희망이 교차한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완결할데야 하고, 야권은 한나라당 성벽을 타고 올라야 한다는 명제에 각각 직면해 있다.

3면에 관련기사
일당독점의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특정 성향의 지지여부를 떠나 대구·경북의 정치적·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바로 '정치적 다원주의(多元主義)'를 통한 경쟁능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지역발전의 동인(動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산광항 무산과 '부스러기' 과락벨트 유지의 경험은 지역의



김부겸 의원

무게감 있는 野후보 출현
다원주의 통한 경쟁 예고
흔는 '토종TK론'이 화두
역동적 신진 거센 도전장

정치 스펙트럼을 넓혀야 지역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연결됐다. 대구·경북은 현재 27명 국회의원의 전원이 한나라당이다.

독점의 피로감이란 틈새를 먼저 치고나온 쪽은 역시 야당이다. 경북과 출신 3선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이 교향으로의 정치적 귀환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경북여고를 나온 추미애 의원과 함께 TK 정치다원주의를 위해 대구 U턴 출마를 끈질기게 권유받아 왔다.

그의 귀환은 일차적으로 대구에서 또 비중있는 인물군으로 무장된 야권 단일후보 결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재웅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노무현 정권의 지역책임인사들과 지식인그

룹의 기세가 점쳐진다. 역대 선거구도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총선에서 지역의 편중된 표집결은 기존에도 나타나는 야권 후보의 출현이 한복궤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맞서 지역 밖 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진정한 지역TK론과 세대교체론'도 정치지형 변화 조짐에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결코 역동성 있는 인물로의 교체를 말한다. 특히 서울에서 거주하는 '무늬만 TK'가 아닌, 지역에서 사회 문제로 천착해온 '토종TK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치신진군에는 대구시 국장직에서 과감히 물러난 김상훈 전 경제국

장을 비롯해 경찰대 1기인 이재욱 전 경북경찰청장, 출마설이 나오는 지역 언론사CEO, 담사구·북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40대 전문 전문가그룹과 당관료, 지방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아같은 신진 후보군의 출현은 기존의 다선의원을 향한 압박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불출마 선언이 대구·경북에도 상륙할지 모른다는 관측의 근거에는 아같은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비선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재건에 나설 박근태 전 대표의 향후 당색인 및 안색새안안이 어떤 모습을 띌지도 아같은 변화를 재촉할 것이다. 진박계 의원들이 '박근태의 어깨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박종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인 관측이다.

변화의 바람을 외곽에서 들리치고 있는 토박이 큰 변수는 야·야 선호를 초월한 2040 신세대(20~40대)의 움직임이다.

안철수 현상에도 표현되는 직급의 2040 트렌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소셜네트

워크서비스로 상징되는 2040성향은 일종의 시대조류가 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그 강도가 다소 약한 듯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큰 작은 의미있는 정치적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의 현역 국회의원은 20~40대가 전무하다는 점은 이런 정치적 결집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야권도 젊은 인재 수혈을 곤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 주역들을 내세워야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공감대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하루같이 "시대 조류,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젊고 참신한 아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세월의 흐름은 가시 정치권에 결코 유리한 요인이 아니지 않나"고 잔탄하고 있다.

대구 한나라당과 범 야권이 시대 트렌드를 감안해 어떤 인물들을 싣게 영입하고 포진시킬지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다.

박재일 정치부장
parkji1@yeonam.com

3면 계속

"대구정치 30년간 경쟁없었다. 더 이상 한나라 텃밭일 이유 없어"

김부겸의 귀환...한나라 긴장감

대구 기자회견장 복석
어느 지역구 나치적 속삭
내일 15일 이후 결정될 듯

대구·경북 야권이 들끓고 있다. 3선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이 마침내 고향 대구로 정치적 귀환을 선언한 때문이다.

한남 서울 여의도에서 대구 출마를 전격 선언했던 김 의원은 16일 대구 민주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고향 함께 신고식을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랜만에 북적었다.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김준근 변호사, 남철우 수석입법지원관, 이한진 혁신과총괄대구경북본부장, 임태준 전 동구구청장 등 출마경쟁자의 당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다들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이제 해빙판타는 득의를 숨기지 않았다.

대구에서만 다섯번 떨어진 이강철 전 수석비서관은 "아닌 단말대로 간다면 다르지 않겠다. 대구 분위기도 바뀔다"고 말했다.

이 수석비서관은 그러면서 "전당 노무현 정권의 불발도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은 반발할 이거니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면적 정권 들어 전척이 없다. 이런 점을 대구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야권에서는 김 의원의 가세로 현재 무소속으로 중·남구 출마를 선언한 이재웅 전 환경부 장관 정도 야당 타이틀을 달고 함께 인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량감 있는 후보병을 편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거구도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든 지역이든 야·야간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고 좋은 정책이 개발된다. 대구

는 30년간 전당의 경쟁이 아예 없는 정치가 지속됐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며 "이제 대구는 더 이상 한나라의 텃밭이 될 이유도 없고, 텃밭으로 치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상상으로 대구시민들이 봐주길 기대한다. 새로 정치할 때의 상상으로 또 내 인생을 정리한다는 각오로 몸을 던지겠다. 대구시민에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소조했다.

그는 신문시절이던 1983년 대구문화원 취직이후 배후조종 용의자로 지목돼 공안단속으로부터 시달렸으며, 이때 대구를 떠났다. 경북고(56학),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김부겸 의원의 대구 출마는 야권, 한나라당에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그가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 지에 대해 여러 예비후보들은 속삭임을 건네주고 있다. 자칫하

면 야권의 강력한 후보에 맞서 견제하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성갑을 지역구를 비롯해서 어디든 나눌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남나 중지와 또 다른 정치세력과 협의하고 조정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5일 예정된 통합 야당의 연대대회가 끝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합 야당의 당권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다.

한나라당 야권의 대구시장 사무처장은 김 의원의 대구 출마에 대해 "그분도 정치 출마를 사실 한나라에 아니냐. 지역 정치권의 변화와 긴장감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도 분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로 호남 출신 한나라당에 입당한 의원같은 분도 그쪽에서 출마한다면 같은 차원에서 살펴봐야만 좋겠다"고 응수했다.

박재일 기자 parkji1@yeonam.com



대구 출신 민주당 3선 김부겸 의원이 16일 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총선 대구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재일 기자 parkji1@yeonam.com

‘대구 출마’ 김부겸 당권 도전 선언

“민주통합당 혁명에
모든 것을 걸겠다”
전대 출마 공식화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내년 1월15일 개최되는 당 대표 경선 출마를 21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의 모든 것을 민주통합당 혁명에 걸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사무총장과 정세균 의원이 함께 했다. 그는 “나름대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했지만, 보다시피 전부 국회의원 안 하겠다는 분들”이라며 “세력은 없지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너무나 악착 빠른 반면 공공선을 실현하는 데는 너무나 무능하다. 그래서 국민이 등 돌리고 안할수 현상을 좇는다”며 “그런데도 아직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 기성 정치행태가 너무도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은 통합된 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싶어 한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구태 청산부터 시작하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청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15일 개최되는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권오성

야 한다”며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만 열안이 된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대 최대의 정치개혁은 기득권에 갇혀 노쇠해진 정당정치를 부수는 일”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 그리고 과거의 벽을 넘어서겠다. 민주통합당을 내부로부터 혁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석

패를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의 면담과정에서 석패를 제도 도입이 논의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 제도(석패율 제도)는 민주당 불모지 대구에서 30년을 버틴 분들의 몫”이라며 “이미 3선을 한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맡아겠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주의와 싸우

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대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품에서 전배가 끊겼고 3선까지 했으니 이제 당에 무언가 돌려줄 차례”라며 “고향으로 내려가 민주당의 마지막 과제, 지역 주의를 넘어서 보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아성을, 30년간 앞다퉀 독재의 아성을 총선·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최종우기자 skinf@yonseonam.com



서울취재본부장

송/국/건/정/치/칼/럼

김부겸, ‘아름다운 결단’

“
수도권 정치기반 둔
야당 중진 대구출마
용감한 선택 돋보여
지역정서 극복해
다양성 부족 메울까
”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 세력은 파벌, 부패, 지역본위로 어지러운 우리 정치의 틀을 바꿔보겠다고 새로운 집권정당(열린우리당) 창당에 나섰다. 하지만 김대중 전임 대통령 계열의 기존 세력이 거세게 저항했고, 신진세력의 추진력도 약했다. 자칫 여권개혁이 무산될 순간에 든든한 원군(援軍)이 나타났다.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김부겸·이부영·이우재·안영근·김영춘 의원이 정치 개혁에 동참하자마자 신당 합당을 선언했다. 개혁파들은 이들이 위기에 빠진 정치를 구했다며, 다섯 형제가 지구를 구하는 만화영화의 이름을 따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독수리 5형제’ 가운데 현재 18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이 유일하다. 16대 때 한나라당 간판으로 경기도지역에서 첫 급배지를 달았으나 뿌리는 진보다. 상주 고령으로 경북고를 나온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권의 핵심이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 군중을 휘어잡은 대중연설은 지금도 전설처럼 들린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재입학 후 대구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며 부인과 단칸방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정치입문 역시 진보정당에서였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소속된 ‘교미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합당하는 바람에 한나라당에 잠시 몸담았다가 진보정당으로 되돌아간 김 의원은 어느덧 민주당의 3선 중진위원이 됐다. 하지만 번번한 당직을 맡지 못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지냈지만 선출직인 원내대표 선에는 세 번 출마해 모두 떨어졌다. 새해 1월15일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나설 예정이나 이번에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본인은 소속 정당의 입장을 배려하느라 말하기 조심스러워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안에서 ‘TK’ 출신의 입지는 그만큼 좁다. 지난 9월에 파낸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 TK 출신 김부겸의 인생과 정치’를 통해 지역주의의 늪에 빠진 한국정치에서 자신과 같은 ‘경계인’의 앞에 놓인 백이 얼마나 높은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5일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역주의와 기득권, 과거라는 세 개의 벽을 넘겠다”고 했다. 또 “대구에서 박근혜 시작하겠다. 대구의 시민의식에 다시 불을 질러 놓겠다”고 했다. 대구 출마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평소에도 “한강 전선”

이 제일 치열하면 이 곳을 지켜야 할 것이고, ‘낙동강 전선’이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 되면 그곳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언제나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다는 각오가 대안했다. 기존 지역구인 경기도 군포에서의 인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야당이 힘을 갖기란 관측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결단이 더욱 빛을 발한다.

관건은 대구정서가 그를 받아들일지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 30여년 동안 대구에선 정통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2004년 16대 총선 때도 야당의 거목인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수성구에 출마했지만 유권자들은 외면했다. 만일 김 의원의 실험적 모험이 성공한다면 지역정치권의 한계였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우리 정치 전반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경화 ‘진구’에서 주인공이 꼭 팔리게 살고 싶지 않아서 사실대로 털어놓고 중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국회의원 노릇 제대로 하라는 질책에 ‘꼭’ 팔리고 싶지 않아서 대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매일신문(경기매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1-1번지 3층 대표이사 우정자
심의대상기사	경기매일 2011년 12월 27일자 3면 「허재안 의장 '성남의 가장 큰 공헌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의장의 선거 출마 예정 사실을 전하면서 해당 후보예정자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제목을 게재하고 과거 치적 등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5조(기사제목)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허재안 의장 '성남의 가장 큰 공헌자'

사실상 출마 선언 '최종 결심은 아직...'

경기도의회 허재안(민·성남2)의장이 26일 사실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해오던 허 의장은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도의회 출입기자 단과의 간담회에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한 장본인으로 성남에서는 가장 큰 공헌자”라면서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성남은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고, 관철시키는데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도 성남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그대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미 성남 수정구 출마를 선언한 김태년 지역위원장과의 깊은 친분을 의식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게 정치라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 “최종 결심은 아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 단 둘만의 경쟁이었다면 충분히 양보했겠지만 현재 우리당에서만 예비후보가 7명”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김 위원장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허 의장은 “가족이나 지역 유지·어른들 사이에서도 총선 출마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출마 찬성이 8, 기다렸다가 시장 출마하라는 여론이 2정도 된다”고도 했다.

그는 “성남 출신 도의원으로는 최초로 도의회의장을 했고, 경기도의회 최초로 전국 의장단 협의회 회장도 맡았다”며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총선출마를 전제로 공석이 될 의장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 수석부대표 등과 논의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직 등에 대한 정리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사직서는 총선 출마 도의원들의 사직서를 모

두 처리한 뒤 가장 나중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다.

허 의장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행보와 관련해서는 “의회를 존중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재안 의장 ‘성남의 가장 큰 공헌자’

사실상 출마 선언 ‘최종 결심은 아직..’

경기도의회 허재안(민·성남2) 의장이 26일 사실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해 오던 허 의장은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도의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된 장본인으로 성남에서는 가장 큰 공헌자” 라면서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성남은 균형항공기지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고, 관철시키는데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도 성남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그대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미 성남 수정구 출마를 선언한 김태연 지역위원장과의

깊은 친분을 의식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게 정치라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이라면서 “최종 결심은 아직”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 단둘만의 경쟁이었다면 충분히 양보했겠지만 현재 우리당에서만 예비후보가 7명” 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김 위원장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허 의장은 “가족이나 지역 유·무관·연속 사이에서도 총선 출마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출마 찬성이 8, 기다렸다가 시장 출마하라는 여론이 2정도 된다”고도 했다.

그는 “성남 출신 도의원으로는 최초로 도의회 의장을 했고, 경기도의회 최초로 전국 의장단 협의회 회장도 맡았다”며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총선출마를 전제로 공석이 될



의장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 수석부대표 등과 논의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직 등에 대한 정리 방안을 정할 것” 이라면서 “사직서는 총선 출마 도의원들의 사직서를 모두 처리한 뒤 가장 나중에 제출할 생각” 이라고 했다.

허 의장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행보와 관련해서는 “의회를 존중할 줄 아는 정치인” 이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민창 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6(자심)
연론사	주식회사 울산매일신문사(울산매일)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88-4번지 리버타운빌딩 2층 대표이사 이연희
심의대상기사	울산매일 2011년 12월 27일자 3면 「“출마, 혼자 결정할일 아니다” 여운», 2011년 12월 28일자 3면 「이경훈 전 현대차노조위원장 “총선출마 결심”」 및 2011년 12월 30일자 3면 「이경훈 전 지부장, 남구 갑 출마선언」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울산 남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 예정자의 출마 거론 사실, 출마 결심 사실, 출마 사실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단기간에 집중보도함으로써 타 후보예정자에 비해 해당 후보자가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출마, 혼자 결정할일 아니다” 여운

노조위원장엔 불출마선 그어 정계진출 가능성 현역 조승수의원 출마선언으로 현실은 한계

조승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한 ‘남구 갑’ 지역구에 이경훈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울산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3년간 금속노조 제3대 현대차지부를 무분규로 이끈 실리 성향의 이경훈 전 지부장이 예비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인사 A씨는 “이 전 지부장이 주변으로부터 ‘내년 4·11총선에 남구 갑 예비후보로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추천

을 받고 현재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면서 “남구 갑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건, 같은 당원이었던 김진석 전 민주노동당 남구지역위원장이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하는 남구 을 지역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지부장의 측근에서 활동해 온 노동활동가들도 “최근 들어 노동계 인사와 정치인, 언론인 등으로부터 이 전 지부장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전 지부장이 지난달 치러진 현대차 지부 임원 선거 당시 연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자신이 소속된 현장노동조직(전진하는 현장노동자회) 조직원들과 가진 해단식을 통해 ‘현대차지부장 선거는 이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불출마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며 “때문에 이 전 지부장이 향후 정계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

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현노는 이날 이 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 격인 중앙위원회 회의를 조직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지부장의 남구 갑 출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현대차지부 내 활동가들이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지부장의 내년 총선 출마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단정짓기 힘들어 보인다.

우선은, 그가 개인 신분이 아닌 현대차지부 내 현장노동조직인 전현노가 배출한 전임 지부장이자, 이 조직의 실세라는 점에서 조직차원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전 지부장은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지금은 새로 출범한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된 만큼, 당 차원의 논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이 전 지부장이 주변에서 추천한 대로 남구 갑에 출마할 경우, 현역 조승수 국회의원과 단일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경훈 전 현대차지부장은 “주변에서 그런(내년 4·11총선에 출마하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깊이 있게 고민한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지부장은 이어 “몇 일 전 현대차지부 정기대의원 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인수인계 등의 작업이 마무리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도 “출마 여부는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후략)

■이경훈 전 지부장, 총선 '남구 갑' 출마할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출마, 혼자 결정할일 아니다” 여운

노조위원장엔 불출마 선 그어 정계진출 가능성

현역 조승수의원 출마선언으로 현실은 한계

조승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한 '남구 갑' 지역구에 이경훈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울산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3년간 금속노조 제3대 현대차지부를 무분규로 이끈 실리 성향의 이경훈 전 지부장이 예비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름을 요구한 노동계 인사 A씨는 “이 전 지부장이 주변으로부터 ‘내년 4·11 총선에 남구 갑 예비후보로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추천을 받고 현재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면서 “남구 갑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건, 같은 당원이었던 김진석 전 민주노동당 남구지역위원장이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하는 남구 을 지역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지부장의 측근에서 활동해 온 노동활동가들도 “최근 들어 노동계 인사와 정치인, 언론인 등으로부터 이 전 지부장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전 지부장이 지난달

처리지 현대차지부 임원 선거 당시 연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자신이 소속된 현장노동조직(전진하는현장노동자회) 조직원들과 가진 해단식을 통해 ‘현대차지부장 선거는 이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불출마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며 “때문에 이 전 지부장이 향후 정계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현노는 이날 이 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격인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지부장의 남구 갑 출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현대차지부 내 활동가들이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지부장의 내년 총선 출마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단정짓기 힘들어 보인다.

우선은, 그가 개인 신분이 아닌 현대차지부 내 현장노동조직인 전현노가 배출한 전임 지부장이자, 이 조직의 실세라는 점에서 조직 차원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전 지부장은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지금은 새로 출범한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된 만큼, 당 차원의 논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이 전 지부장이 주변에서 추천한 대로 남구 갑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내년 4·11총선 진보통합당 남구 갑 후보로 출마할것이라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에 출마할 경우, 현역 조승수 국회의원과과의 단일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경훈 전 현대차지부장은 “주변에서 그런(내년 4·11총선에 출마하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깊이 있게 고민한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지부장은 이어 “몇일 전 현대차지부 정기대의원 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인수인계 등의 작업이 마무리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도 “출마 여부는 나 혼자 결정할 일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현대차지부 활동가 중에서 정계로 진출한 현역 정치인은 윤종오 북구청장을 비롯해 홍성부



조승수 국회의원(북구)이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남구 갑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상만 기자

남구의원, 황세영 중구의원, 윤치용 북구의원이 있으며 지역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한편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해 온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현대차노조 역사상 15년 만에 강성 노선의 후보들을 다 제치고 실리 집행부 출범에 성공했다. 그때까지만해도 ‘파업의 대명사’로 꼽혔던 현대차지부는 이후 3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우며 노사상생을 실천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투쟁을 경계해 온 그의 실리 기조는 강성 활동가들로부터 ‘노사협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연임에 실패했다.

조혜정 기자 jhj74@usm.co.kr

이경훈 전 지부장, 남구 갑 출마선언

〈현대자동차·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이경훈 전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이 29일 내년 총선 남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지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다수의 노조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회견을 갖고 출마배경과 각오 등을 밝혔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년간 조합원의 권익과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무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왔던 경험을 되살려 노동자·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이에 현장 밀착 민생정치를 위해 25년간 정든 현대차 울산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보수정치의 텃밭인 남구 갑에 도전을 선언하게 됐다"고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지부장은 이날 남구 갑 출마배경에 대해 "현재 남구 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일터인 북구는 우리 통합진보당의 전략지역으로 다른 막강한 정치선배들이 포진해있었고, 남구 을도 당내 김진석 후보가 어려운 시절을 홀로 버티면서 터를 닦아왔던 만큼 꽤 오래 전부터 남구 갑 출마를 준비해왔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지부장은 얼마 전 북구에서 남구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지부장은 "조 의원은 몇 주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인 고향인 북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면서도 돌연 남구 갑으로 방향을 선회, 그 전부터 남구 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며 "김창현 위원장과의 경쟁에서 밀린 조 의원은 그냥 북구에서 장렬히 산화하는 게 옳았다"고 지적한 뒤 "어쨌든 함께 후보경쟁을

벌리게 된 만큼 공정한 경선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부장은 "그 동안 사회복지단체 차량지원과 사랑의 난방유 지원, 1사12촌 자매결연마을 지원, 저소득층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사회적 기업지원,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온누리상품권지급)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힘써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성필 기자 juss0213@usm.co.kr



이경훈 전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이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남구 갑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00@usm.co.kr

이경훈 전 현대차노조위원장 “총선출마 결심”

“상생노사 경험 이젠 지역사회에 헌신”

현역 조승수 의원과 당내경선 불가피

경선 승리면 심규명후보와 야권 단일화

▷속보=이경훈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사진)이 내년 4·11총선에서 '남구 갑'의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히기로 했다. (본보 12월27일자 3면 보도)

그가 출마하려는 '남구 갑'은 같은 당에 소속 조승수 의원이 먼저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인데, 이 전 지부장은 지역구를 바꿔 출마한 조 의원을 비판하면서 “당내 경선을 거쳐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써 원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텃밭이었던 '남구 갑'은 조승

수·이경훈 두 통합진보당 후보와 심규명 민주통합당 후보 등 3명의 야권 후보가 경쟁하는 최대 승부처로 급부상하게 됐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루겠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총선 출마는 길게 고민한 바도 없고, 혼자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며 말을 아끼던 이 전 지부장은 27일 출마를 선언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자·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과거 2년간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의 수장으로 조화원 권익과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무를 우선으로 여기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꾀왔다”며 “그런 경험을 살려 이제는 공장 담 안에서가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현장에서 가뭄때 물허가며 일해 본 노동자가 정치에 입문해야 진정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왜 남구 갑인가=이 전 지부장은 남구 갑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노동계 인사들과의 내부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이전에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만큼, 함께 활동해 온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북구)-김진석 전 민노당 남구지역위원장(남구)-이은주 민노당 출신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동구) 등 ‘동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구 갑을 택했다는 것.

◆지역구 비관 조 의원 비관=조 의원에 이어 이 전 지부장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심규명 변호사의 단독 출마가 유력했던 ‘남구 갑’ 지역구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동선이 꼬이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지부장은 “진보화장을 위해 가득관(북구)을 버리고 남구 갑에 출마한다”고 밝힌 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울산 안에서 지역구를 바꾼 건 선택도 없을 뿐더러,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조 의원과는 당내 경선을 통해 대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야권단일화를

위해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와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차노조의 역할론=현대차지부 안에서 이 전 지부장이 소속된 현장노동조직인 ‘전진하는현장노동자회(전현노)’는 지난 26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선거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대차지부도 이번 주 안에 정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최상급노동단체인 민주노동의 지지를 받아 후보단일화 및 단일후보 지지를 위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나 조율을 거쳐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면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만약 그 과정에서 진통이 생긴다면(누구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중재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usm.co.kr

의 결 번 호	2012국선1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충청일보재단(충청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대표이사 조 승 남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2년 1월 13일자 5면 「윤진식의 '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의 의정 활동 실적과 과거 치적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 제목으로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5조(기사제목)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윤진식의 '힘'

초선의원 불구 굶직한 충주현안 해결 금감원 출장소·롯데맥주공장 유치 등

윤진식 의원 (한·충주·사진)의 힘이 놀랍다.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재선 3선 의원 못지 않은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해 윤 의원은 초선 의원도 아니다. 지난 2010년 7·28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만큼 '반쪽짜리' 초선 의원이다. 하지만 그는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짧은 시간 내에 변방의 지방도시 충주를 첨단산업 도시로 뒤바꿔 놓는 기력(?)을 발휘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확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예산을 가져

가기 마련이다. 나름대로 안배가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달랐다. 단순한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파워'와 '인맥'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감원 충주출장소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충북의 도청소재지인 청주에 출장소가 설립되는 것이 순리인데 충주에 출장소가 설립된다는 사실에 지역 금융권도 매우 놀라는 눈치다.

비록 금감원 충주출장소에 상주하는 인원이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이 충주에 등지를 튼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엄청난 피드백이 예상된다. 롯데의 맥주공장 충주입지도 윤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롯데가 충주에 맥주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힌 것도 바로 윤 의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북도가 충주 입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윤의원이 밝힌대로 롯데는 충주에 맥주공

장을 설립키로 하면서 다시 한번 윤 의원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밖에 충주대-철도대 통합, KT&G 가주공장 재구축, 오성엘에스티를 비롯한 대기업 유치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등극했다.

충주지역의 한 상공인은 “과거 수십 년간 충주는 발전의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뎠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도 청주에 치우치는 바람에 박탈감이 컸다”며 “지금 당장 청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정된 기관과 기업들이 충주에 입주하게 되면 충주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핵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청주권의 경제인들은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권 한 경제인은 “명색이 충북의 대표도시라고 하는 청주는 이렇다할 만한 대기업 유치와 기관 유치소식이 없는데 충주는 잇단 낭보로 도시가 활력을 찾고 있는 것 같다”며 부러워했다. 윤 의원의 ‘힘’을 지켜 본 지역 정가와 경제계에서는 향후 윤 의원이 또 어떠한 ‘작품’을 선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진식의 ‘힘’

윤진식 의원(한·충주·사진)의 힘이 놀랍다.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재선 3년 의원 못지 않은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해 윤 의원은 초선 의원도 아니다. 지난 2010년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한 만큼 ‘반쪽짜리’ 초선 의원이다. 하지만 그는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짧은 시간내에 변방의 지방도시 충주를 첨단산업도시로 뒤바꿔 놓는 과업(?)을 발휘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확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려면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예산을 가져



다고 밝힌 것도 바로 윤 의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주보다가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윤 의원이 밝힌대로 롯데는 충주에 맥주공장을 설립키로 하면서 다시 한번 윤 의원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밖에 충주대-철도대 통합, KT&G 가주공장 재구축, 오성엘에스티를 비롯한 대기업 유치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등극했다. 충주지역의 한 상공인은 “과거 수십년간 충주는 발전의 속도

초선의원 불구 굵직한 충주현안 해결 금감원 출장소·롯데맥주공장 유치 등

가기 마련이다. 나름대로 안배가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달랐다. 단순한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과위’와 ‘인택’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감원 충주출장소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충북의 도청소재지인 청주에 출장소가 설립되는 것이 순리인데 충주에 출장소가 설립된다는 사실에 지역 금융권도 매우 놀라는 눈치다.

비록 금감원 충주출장소에 상주하는 인원이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이 충주에 둥지를 틀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엄청난 피드백이 예상된다. 롯데의 맥주공장 충주 입지도 윤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롯데가 충주에 맥주공장을 설립한

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뎠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도 청주에 치우치는 바람에 박탈감이 컸다”며 “지금 당장 청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정된 기관과 기업들이 충주에 입주하게 되면 충주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핵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청주권의 경제인들은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권 한 경제인은 “명색이 충북의 대표도시라고 하는 청주는 이렇다할 만한 대기업 유치와 기관 유치 소식이 없는데 충주는 잇단 낭보로 도시가 활력을 찾고 있는 것 같다”며 부러워했다. 윤 의원의 ‘힘’을 지켜 본 지역 정가와 경제계에서는 향후 윤 의원이 또 어떠한 ‘작품’을 선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호기자

의 결 번 호	2012국선1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보은신문사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387 대표이사 조 충 길
심의대상기사	보은신문 2012년 1월 12일자 9면 「“‘선거혁명’ 일어나야 낙후된 보은발전 가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하남)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과 과거치적, 포부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지면의 상당 부분을 들여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선거혁명’ 일어나야 낙후된 보은 발전 가능”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1총선 준비로 밤낮없이 중흥무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현재(63) 하남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을 만났다. 충북 보은(회안면 예곡리 출신)이 배출한 인물인

그는 32년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지 오래다. 공직에 입문, 말단부터 시작해 차관까지 지낸 경력에서 보듯이 인생에서의 훈장처럼 얻은 명예스런 계급장이다. 강한 추진력과 결과를 중시하는 성격이다 보니 총선 철에 보은·옥천·명동에서 출마하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일에 그 누구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 (후략)



..... 여기 이 사람 - 한나라당 이현재 경기도 하남시당협위원장 겸 제2사무부총장

“‘선거혁명’ 일어나야 낙후된 보은발전 가능”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준비로 밤낮없이 총력무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현재(63) 하남시당협위원장의 당협위원장을 만났다. 충북 보은(화인면 애곡리출신)이 배출한 인물인 그는 32년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지 오래다. 공직에 입문, 말단부터 시작해 차관까지 지낸 경력에서 보듯이 인생에서의 훈장처럼 얻은 영예스런 계급장이다. 강한 추진력과 결과를 중시하는 성격이다 보니 총선 참에 보은·육탄·영동에서 출마하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일에 그 누구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

미래발전 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전전긍긍 심 패한

그는 “낙후된 보은을 살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망을 뽑아야 하는데 제일 조건으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며 “지역을 이끄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라고 쓴 소리를 토해냈다.

또 “보은이 낙후된 것은 5~10년을 바라보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군수나 국회의원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에만 급급하다보니 보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며 “이번 총선에는 보은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정성 CEO군수영입 ‘정성아카데미’로 성공사례

이어 “전남 정성군을 보면 민간기업인 CEO를 군수로 뽑아 ‘정성아카데미’를 개설해 우수 유명 공사를 초청해 대주 300여명의 군민들이 이 특강을 통해 지역발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되고 있다.”며 “이처럼 보은을 살리기 위해서 보은군의 유일한 관광자원이 속리산을 부각시켜 전국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호텔 등 숙박업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혁명’ 위해서 지역민 모두 책임 있는 의식 필요

이밖에 또 “보은-충주 간 권경도도를 내면 1시간 30분-2시간 거리의 운천종합레저지구로의 연계가 가능해 군수나 국회의원의 인식 제고 변화 5~10년 계획을 일단 속리산IC 보다 보은IC를 거점으로 도모하지가 지나치는 속리산으로의 연계가 아닌 관광을 거점으로 한 주요도로로 연계시키는 열린 마인드가 적극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하며 일단 반드시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소신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살 길”이며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민 모두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년 하남시인 숙원사업인 하남 지하철거장 확장해

2008년에 이어 당협위원장을 다시 추대된 그는 이번 선거 탓에 2년을 남기는 시간 속에서 하남시민의 2년 숙원이었던 지하철거장 확장을 확장시켰다.

지하철 5호선을 미시보급지리주변단지-원천동 구간까지 위와 함께 6월 국토부에 건의로 시작, 토론회 개최 등으로 시민 20만여 명이 서명을 받아 김문수 경기도지사, 국회에걸위원회 및 국토해양위원장 등에 서명부를 전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비 1조사업인 전철연장을 놓고 작년 7월부터 세부계획에 들어가 국토해양부와 재정경제부의 심의결과를 마치고 현재 공역철도 회합 중인 지, 아난지의 예산(75~65%)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만 남게 놓고 있는 상태다.

49회 최인호 동문 국무총리실 시작 중소기업청장까지

최인호 애국2리 임영 복우삼·소가 누워있다 출신인 그는 결혼한 인물을 많이 배출해 낸 곳인 인물답게 최인호(49회)를 졸업하고 출향, 대성중, 황주고를 거쳐 연세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76년 국무총리실 근무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인수팀에 참여한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당에서는 제2사무부총장, 일지리 나누기 만들기 특위 간사, 도시개발특위 위원, 비상대책위원회 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의 바람으로 한 시민정책 실현에 정치활동형 선진화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역화장장 박지환을

통한 반대여론의 녹장대력으로 낙선의 고배를 거울삼아 이번 19대 총선은 현 과정을 복습하되 민의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시민정책 실현에 나서고 있어 그의 정치적 흥분은 정신호를 띄고 있다.

물론 소의계종과 청년일자리 등 골어안이 정적을 살기만 당 차원의 정책 재산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대의의 정책노선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주요관건이었던 시민과의 약속에 따른 당당한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때문이다.

고향위해 보은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에 340억 도움

수구조심이라 했던가. 고향 발전을 위한 관심만큼은 누구에게 뒤처질까 끊임없는 그는 “지식경제부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인 전 박종기 군수 때 구경산 만공문 사업관련 약내내 340억(국비 210억, 지방비 도비 포함)으로 보은체육관 공설운동장을 마비했는데 개장식 때 초창기 80만여 명을 보내지 않고 넘어간 일은 지금도 씁쓸함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도움이 됐고 중소기업청에 있을 때는 보은테크시장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지역발전기금으로 150억의 구경산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보은을 비롯 육탄·영동 등 재래시장 현대화, 영동대에는 50억, 육탄공설시장 등에 70억을 지원한 등 기가 한 바 있다.”

국회의원 지역발전엔 실질적 이익 못주는 것 안타까움

그는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정안이 하는 일과 관련 무엇인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니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이번 총선만큼은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세심하게 따져보는 그런 신중한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의 소의계종을 위해 일회성 아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의 장을 연 결과로 지난 2009년에 이어 2011년 11월 21일 51개 지역구 중에서 하남시 당협이 모범당협으로 선정, 표창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고향에 인물을 없으면 외부영입해서라도 지역일꾼 찾아야

그는 “낙후되고 있는 고향 소식을 듣는 안타까움이 이제는 종식되어 이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고향에 인물이 없다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라도 고향발전을 위해서 역량있게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지역민 모두의 책임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학력 · 경력 · 상훈

- ▲창조고 졸업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미국USC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한국대학교(경영학박사)
- ▲뉴욕주립대 경영교수(현)
- ▲한나라당 하남시당협위원장(현)

▲하남지하철유치원장(현)

- ▲전 중소기업청장
- ▲전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 ▲전 산자부 기획관리실장
- ▲황조근정훈장(03.12월)
- ▲저서 ‘나는 현장을 떠돌아다니다’(07년 12월), ‘하남의 꿈’(11년 12월)

서 영입을 해서라도 고향발전을 위해서 역량있게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지역민 모두의 책임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태숙(53년생)과 2남1녀를 두고 있다.

/전성남 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15(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우리일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592 두손브릿지 3층 대표이사 김 대 호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2년 1월 16일자 19면 「통합민주당, 인천 합동연설회 개최」 및 1월 17일자 18면 「통합민주당 인천합동연설회 개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합동 연설회 개최 사실을 유사한 내용으로 이를 연속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여타 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정당의 명칭 또한 잘못 기재하였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통합민주당, 인천 합동연설회 개최

당대표 격려사·후보자 정견발표 순서 등 진행

민주통합당(공동당대표 원혜영, 이용선)은 13일 오후 2시, 인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합동연설회에는 이용선 공동당대표, 양춘승 선거관리부위원장, 문병호, 홍성복 인천시당 공동위원장과 한명숙, 이학영, 이인영, 이강래, 박용진, 박영선, 문성근, 박지원, 김부겸 후보(기호

순)를 비롯해, 송영길 인천시장, 신학용, 홍영표 국회의원, 이호웅, 안영근, 김고흥, 한광원, 최원식, 서준석, 나완수 지역위원장,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본부의장 등 700여 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했다.

이 날 합동연설회는 당대표 격려사, 시당위원장 환영사, 인천시장 축사에 이어, 연설회 진행 방법 설명, 후보자 무대인사 그리고 90분간의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대회 개회사에서 양춘승 선거관리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은 역사상 유래 없는 온라인-오프라인 선거, 당원-비당원 구분없는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높은 투표율로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고 말했다. (후략)

통합민주당, 인천 합동연설회 개최

당대표 격려사·후보자 정견발표 순서 등 진행

민주통합당(공동당대표 원혜영, 이용선)은 13일 오후 2시, 인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합동연설회에는 이용선 공동당대표, 양춘승 선거관리부위원장, 문병호, 홍성복 인천시장 공동위원장과 한명숙, 이학영, 이인영, 이강래, 박용진, 박영선, 문성근, 박지원, 김부겸 후보(기호순)를 비롯해, 송영길 인천시장, 신하용, 홍영표 국회의원, 이호웅, 안영근, 김교홍, 한광원, 최원식, 서준석, 나완수 지역위원장,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본부의장 등 700여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했다.

이 날 합동연설회는 당대표 격려사, 시당위원장 환영사, 인천시장 축사에 이어, 연설회 진행방법 설명, 후보자 무대인사 그리고 90 분간의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대회 개회사에서 양춘승 선거관리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은 역사상 유례 없는 온라인-오프라인 선거, 당원-비당원 구분 없는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높은 투표율로 이 실험을 성공적

으로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용선 공동대표는 격려사에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합당한 지 얼마 안됐지만,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 축제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문병호 인천시장 공동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인천은 사통팔달의 도시, 민심이 집약되는 도시이다. 그런 만큼 인천에서 승리하는 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인천시당은 인천에서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성복 공동시당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민생파탄의 폐기를 박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패자지침을 털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 주는 가난한 서민들의 심정을 아는 진정한 지도자를 뽑자"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수도권에 서 인천시가 꺼져가는 남북화해협력의 불꽃을 지켜가고 있다. 인천의 큰 잔치인 아시안게임을 통해 서해 앞바다가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인들의 축하에 이어, 민주통합당

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첫 번째 연설회자로 나선 박지원 후보는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또한 한미 FTA는 닦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설회자인 이학영 후보는 "우리 후손들이 제2의 식민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민주통합당에 들어왔다. 생명·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연설회자인 박영선 후보는 "선진국에서는 경제관련 법안은 날치기 하지 않는다. 집권하면 날치기 법안을 제자리로 돌리고 그 주도자들에게 대한 수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연설회자인 박용진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소금이 되겠다. 부자증세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노인과 장애인 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연설회자인 문성근 후보는 "저는 어떤 정파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

리고 지역구도를 붕괴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연설회자로 나선 김부겸 후보는 "국민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원하고 있다. 정치혁명, 민주혁명을 해야 한다. 대구로 내려가 지역주의라는 괴물과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일곱 번째 연설회자로 나선 이인영 후보는 "민주통합당을 젊은이의 꿈의 정당으로 만들겠다. 정권교체의 깃발을 들고 박근혜 대세론을 안방부터 부수겠다"고 주장했다.

여덟 번째 연설회자로 나선 이강래 후보는 "이번 총선승리의 승배는 수도권에 달려 있는 만큼 수도권의 승리를 일깨워냈다. FTA재협상을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설회자로 나선 한명숙 후보는 "오늘 의자가 돈봉투를 받았다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을 위협하는 칼날로 사용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꼭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는 구립 28일, 제주 연설회를 시작으로 이번 인천 연설회까지 17일간의 대장정으로 진행했으며,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됐다.

통합민주당 인천합동연설회 개최

당대표 최종 당선자 한명숙 후보 결정

민주통합당(공동당대표 원혜영, 이용선)은 최근 인천고 체육관에서 이용선 공동당대표, 양춘승 선거관리부위원장, 문병호, 홍성복 인천시장 공동위원장과 한명숙, 이학영, 이인영, 이강래, 박용진, 박영선, 문성근, 박지원, 김부겸 후보를 비롯해, 송영길 인천시장, 신하용, 홍영표 국회의원, 이호웅, 안영근, 김교홍, 한광원, 최원식, 서준석, 나완수 지역위원장,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본부의장 등 700여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합동연설회에서 양춘승 선거관리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은 역사상 유례 없는 온라인-오프라인 선거, 당원-비당원 구분 없는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선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시민통합



당이 합당한 지 얼마 안됐지만,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까지 순조롭게 이

루어졌으며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 축제를 마련하자"고 격려했다.

문병호 공동위원장은 "인천은 사통팔달의 도시, 민심이 집약되는 도시인 만큼 인천에서 승리하는 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인천시당은 인천에서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인천시가 꺼져가는 남북화해협력의 불꽃을 지켜가고 있다. 인천의 큰 잔치인 아시안게임을 통해 서해 앞바다가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는 구립 28일, 제주 연설회를 시작으로 이번 인천 연설회까지 17일간의 대장정으로 진행했으며,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선자로 한명숙 후보가 결정됐다.

/박영재 기자
je@woorilbo.com

의결번호	2012국선17(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씨앤비미디어(씨앤비저널(CNB저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53-109 대표이사 황 용 철
심의대상기사	CNB저널 2012년 1월 22일자 30~33면 「“서울 중구 유권자 돕는 ‘특별검사’ 되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중구)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출마 사실과 포부, 과거 이력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여러 지면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 중구 유권자 돕는 ‘특별검사’ 되겠다”

[인터뷰] 특수부 검사 출신 김인원 변호사

민주통합당 후보로는 드물게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인원 변호사(50)가 지난 9일 PJ호텔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총장, 양승조 의원, 양정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을 비롯한 법조계와 정계 그리고 중구 지역 인사 등 다양한 지지자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눈 크게 떠도 코 베가는 세상’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오는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중구 출마를 선언한 김 변호사의 이날 출판기념회는 평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하객이 자리를 지켜 그의 진솔함이 드러난 토크 콘서트가 됐다. 그는 출판기념회에 앞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설립

기념식 행사도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한 인사말에서 “김인원 변호사는 법조계에 몸담으며 서민의 대변인 역할을 자청했다”며 “김 변호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에도 부러질지언정 휘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꿋꿋이 지켜온 노승 같은 사람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이 강조되는 검찰 조직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총장도 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료 법률상담, 무료 변론을 자청한 일은 동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김 변호사의 넓고 따뜻한 가슴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도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이 책을 내놓게 됐다”며 “책에는 서민들을 상대로 자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기 수법들

을 포함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쉽게 간과되는 여러 범죄 수법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책이 서가 한 가운데에 꽂혀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지만 화장실에 있어도 좋다”면서 “요즘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사기꾼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므로 화장실에 놓고 조금씩 읽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광주·제주·순천시청의

각 특수부 검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금융조사부 수석검사로 재직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교수로 법조계 후배를 양성했다. 그리고 서울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제3-4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 8월 사직했다.

현재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부회장과 전국 쉐어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후략)



그리고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총장도 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료 법률상담, 무료 변론을 자청한 일은 동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김 변호사의 넓고 따뜻한 가슴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도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이 책을 내놓게 됐다”며 “책에는 서민들을 상대로 자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기 수법들을 포함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쉽게 간과되는 여러 범죄 수법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책이 서가 한 가운데에 꽂혀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지만 화장실에 있어도 좋다”면서 “요즘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사기꾼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므로 화장실에 놓고 조금씩 읽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광주·제주·순천지청의 각 특수부 검사들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금융조사부 수석검사로 재직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교수로 법조계 후배를 양성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제3-4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 8월 사직했다.

현재 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부회장과 전국커뮤니티수사사업자협회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본인 소개 해 주시죠.

“법과대학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

은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을 한 동안은 법학도로, 한 동안은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로, 한 동안은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의 교수로 법과 함께 살았고, 지금은 변호사로 법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가슴속에는 대학 입학 당시 가졌던 ‘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약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에 뿌리박힌 악을 척결하여,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만들어진 법의 수동적인 적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법. 그리고 99%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적극적인 입법기관이 되도록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여당 가는 시대 지났다”

— 김 변호사는 왜 특수부 출신 부장검사로서 앞길에 보장된 검찰을 떠나 정치를 하려 드나요?

“많은 분들이 여쭙보는 질문입니다. 검사, 변호사, 정치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자면, 우선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 관계인의 유·무죄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변론을 잘 하기 위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경청은 본능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상대와의 관계를 증진시켜 주는 효과 만점의 마법 지팡이지만, 노동과 고통이란 통과의례를 거쳐야 획득할 수 있죠.

정치인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

의 이야기를 20년간 경청해온 제가 좋은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정치인이 서로 다른 점은 도움을 줄 대상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돕지만, 정치인은 입법 활동을 통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와 역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끄럽지 않은 선구자가 되고자 정치 입문을 결심했습니다.”

— 민주당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전 의원을 고려한 전략공천이라는 설도 있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구태정치, 낡은 인물’로는 절대 새 시대를 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 전 의원이 비록 서울시장 선거에서 져고 지금 한나라당 인기가 사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나 전 의원의 인물 경쟁력과 조직 기반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의 존재는 민주당통합당에게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통합당 입당에서는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서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나 전 의원에 맞선 대항마가 필요합니다. 정치 1번지인 중구에서 민주당통합당의 압승은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와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민주당통합당에서는 드물게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기존의 정치문화에서 검찰 출신이라면 의례적으로 보수 성향의 정당과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검찰 출신이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진정성, 개인의 정체성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민주진보 진

심원섭 대기자가 만난 사람

영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루한 편견을 답습하기보다는 민심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해 민주통합당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는 사람이 정치권에 늘어날수록 소통하는 정치, 사랑 받는 정치인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중구를 지역구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이름이 ‘서울센트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서울센트럴은 서울의 중심 중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 법무법인이 되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담았고, 중구에 대한 제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동안 중구는 정치 1번지로서 각종 선거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구민들이 서로 분열돼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구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듬어줄 포용력을 갖춘 사람, 화합하고 소통해 중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가슴 넓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구민들을 대하는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 중구는 종로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서 과거 민주당세가 강했지만 최근 10여년간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신지?

“정치 1번지 중구의 14만 구민들은 매우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잘 해왔을 때에는 적극 지지해주셨지만 반대로 잘못 했을 때는 투표로써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만하고 부패한 권력은 냉정하게 심판 받아야 합니다. 중구민의 지지와 성원은 늘 국민의 편에서 겸손하고 소통하는 당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구민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화합하여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책임자가 누구일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페이지를 넘기고 2012년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중구민들은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실망스런 정치인 보면서 정치 꿈 키워”

- 정치는 언제부터 꿈꿨나요?

“정치는 서민과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고, 그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구부러진 허리를 곧게 펴주는 것이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거쳐 검사가 돼서도 정치는 늘 국민에게 실망과 냉소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특정 계파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갔고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은 불법과 탈법, 각종 비리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치권을 보면서 ‘나라면 정말 저렇게 하지 않을텐데...’ ‘나라면 이렇게 했을텐데...’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 한쪽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2012년은 대한민국에서 낡은 페이지를 넘기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런 나라를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순 없다’라는 변화의 열망이 SNS를 통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변화를 명령한 국민의 뜻을 묵도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 여의도에 입성하면 어떤 분야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지요?

“차기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파탄난 민생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며, 언론과 검찰의 개혁 등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시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서민과 약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개선돼야 하지만 그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입법 활동을 통해 99%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국회의원인 될 것입니다. 고소득자보다 기부금을 더 많이 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나눔과 배려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김인범 변호사가 지난 1월 9일 서울 중구 소재 PJ 호텔에서 한명숙 전 총리, 박원순 서울 시장 등 2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 눈 크게 떠도 코베기는 세상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인범 변호사실

32 _ 2012 01 22 씨앤비저널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김인원 변호사가 CNB 저널 심원섭 대기자들과 대담하고 있다. 사진 = 정매순 기자

— 지난 9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해준 한영숙 전 총리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시죠? 그리고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정치인은 있으시죠?

“구태 정치의 틀을 벗고 새 시대를 맞아 민주시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제가 특정 정치인과의 인연을 과시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보입니다. 애국심으로 당과 국가에 헌신하고자 앞서 정치를 하신 선배님들 모두가 저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결심과 각오를 지지해 주는 정치 선배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정책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해 계파를 나누거나 갈등하는 구시대적 정치보다는 앞으로 저의 행보를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전 의원과는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나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는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반에서도 앞뒤자리에 앉아 공부하던 사이였죠. 저와 나전 의원이 본선에서 맞붙는다면 저는 친구의 아내와 경쟁, 그리고 나전 의원은 남편의 친구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흑색선전이나 검증을 가정한 헐뜯기 등 구태정치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 은퇴 뒤 국민에게 기억되고 싶은 정치인 타입은?

“새 도전을 시작한 정치인 김인원의 정치 여정은 나무만 볼 것인지 숲을 내다볼 것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의 머슴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머슴은 일을 못하면 혼나는 하지만 책임질 의무는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 이유는 책임감을 몸소 역사에 남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임감은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었고, 부하들을 전쟁터에서 보호하고 격려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이순신은 패해도 될 싸움이었던 노량해전에서 목숨을 걸고 앞장섰습니다. 그 책임감이 그를 죽게 했지만, 그가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로 인해 실망을 거듭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끈기를 갖고 갈등을 봉합하고 설득하는 데 앞

장섰던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 최근 여야 모두에 쇠신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입문 각오를 한마디 해 주신다면?

“기득권 정부, 1% 정부, 고소영 정부 등 온갖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달고 있는 나라당은 이제나마 쇠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되긴 했지만 실패한 MB와 단절할 수 있을지, 비대위가 MB의 실패한 정책노선을 과감하게 폐기할 것인지, 시대변화를 진정으로 직시하고 국민을 위해 변화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서 계속되는 친이계와의 단절 노력은 얼핏 보기에 쇠신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99%의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각종 비리를 또 다른 비리로 덮는 ‘비리의 퇴적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맞춰 민주당은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출범은 대통합의 결과 아닌 시작일 뿐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민주당과 함께 오랜 세월을 지켜온 선배 당원들의 빛나는 역사를 저와 젊은이들이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CNB**

의결번호	2012국선18(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강원남부신문사(강원리뷰)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11 중앙빌딩 6층 대표이사 석영준
심의대상기사	강원리뷰 2012년 1월 14일자 9면 「“동해·삼척지역 발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새로운 힘이 되겠습니다.”」 및 1월 21일자 9면 「“땀줄에 묻힌 낙후된 고향 발전 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동해·삼척)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명목이 드러나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위 언론사는 해당 광고가 기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사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학력, 경력, 약력, 사진, 공약 등을 부각하는 출마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4조(산업광고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이재 한나라당 예비후보

“동해·삼척지역 발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새로운 힘이 되겠습니다.”

이이재 한나라당 동해·삼척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제 19대 동해·삼척시 선거구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 예비후보는 희망을 주는 정치, 시대정신에 충실한 가치 중심의 정치, 새로이 일으켜 세우

고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를 위해 자기희생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과거 한나라당 개혁조직인 미래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상임자문위원과 서울특별시 체육회 사무처장, 차관급 공직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형성한 강력한 중앙인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발전을 중앙정치가 주도하고 책임지던 시대는 지났다”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부응하는 동해·삼척지역발전의 방향을 잡고 청사진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이이재 한나라당 예비후보

"동해·삼척지역 발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새로운 힘이 되겠습니다."



이이재 한나라당 동해·삼척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제 19대 동해·삼척시 선거구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출마표를 던졌다.

이 예비후보는 희망을 주는 정치, 시대정신에 충실한 가치 중심의 정치, 새로이 일으켜 세우고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를 위해 자기희생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과거 한나라당 개혁 조직인 미래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상임자문위원과 서울특별시 체육회 사무처장, 차관급 공

다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부응하는 동해·삼척지역발전의 방향을 잡고 청사진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한태평양 경제권을 겨냥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상 교통망인 38번 국도 조속 완공, 수도권권의 원활한 철도운송 물류를 위해 원주~강릉 복선 고속화 철도의 동해삼척 연장 건설을 이루어 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척은 "동북아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동해는 "북극항로 시대의 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과,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통한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동해시와 삼척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연구·추진할 것이며,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동해시와 삼척시의 문화관광자원의 시설확충을 통해 일회성 방문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 예비후보는 강원도 동해시 출생으로 북평초등학교 5년 재학 후, 서울로 전학해 홍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명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연구과정수로 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직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형성한 강력한 중앙인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발전을 중앙정치가 주도하고 책임지던 시대는 지났

○ 학력

- 강원도 동해시 북평초등학교 입학
- 서울 동대문구 홍릉초등학교 전학
- 서울 동대문구 홍릉초등학교 졸업
- 서울 동대문구 경희중학교 졸업
-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수료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 경력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동해지부 상임자문위원(현)
- 백두대간보전회 운영위원장
- 강원도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강원도 민방위 소양강사
- 강원신문보존재단 감사
-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 및 상임이사
- 한강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현)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약력

-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선거대책위 기획단장
-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조직위원장 및 사무처장
-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선거대책위 기획단장
-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 2030위원회 전국조직단장
- 한나라당 서울시장선거대책위 시민참여네트워크 단장
- 제 33대 서울시장직무임수위원회 인사위원
-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 한나라당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위 위원
- 한나라당 강원도발전특위 부위원장(현)
- 한나라당 동해시·삼척시 당협위원장(현)

이화영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땃줄에 물린 낙후된 고향 발전 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화영 민주당 예비후보가 제 19대 총선 동해·삼척 선거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에서 "땃줄이 물린 낙후된 고향을 발전시키고, 민주진보진영이 취약한 동해·삼척 지역에 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삼척지역은 지난 50여년 동안 한나라당 소속이나 출신의 국회의원과 시장,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어 오면서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지역 발전이 날로 뒷걸음치고 있다"며 "무상보육 실천과 반값등록금 실현, 경제자

유구역 지정,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동해·삼척 연장, 기업 및 관광객 유치 등의 산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략)

이화영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탯줄에 묻힌 낙후된 고향 발전 점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지역 발전이

이화영 민주당 예비후보가 제 19대 총선 동해·삼척 선거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탯줄에 묻힌 낙후된 고향을 발전시키고, 민주진보진영이 취약한 동해·삼척 지역에 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삼척 지역은 지난 50여년 동안 한나라당 소속이나 출신의 국회의원과 시장, 지방의원들이 선출되 오면서 비

"무상보육 실천과 반값등록금 실현, 경제자유구역 지정,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동해·삼척 연장, 기업 및 관광객 유치 등의 산적한 지역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더불어 러시아산 명태 동해·삼척 직수입, 중국·러시아 관광객 지역 유치, 북한 지역에서의 어로환경 조성 등 국제통으로서 남다른 공약도 제시하였다.

이 예비후보는 개발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40대 50대 가장의 일자리 창출과 식당, 숙박업, 택시업 등 모든 사업이 잘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과 혁신과 통합의 새로운 정치, 남북통일의 대의,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할 동해·삼척의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지역을 빛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치와 사람을 바꾸면 동해·삼척 시민의 삶의 질이 바뀐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의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예를 들며 통합야권의 단일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 예비후보는 강원도 동해시 출생으로 남호초등학교, 묵호중학교, 서울 중대부속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7대 국회의원(통일외교통상위), 민주당 남북화해협력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 학력

- 남호초등학교 졸업
- 묵호중학교 졸업
- 중대부속고등학교 졸업(서울강남구)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원 정치외교학(재학 중)

○ 경력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위원
- 한·러국회의원교협회 회장 간사장
- 원내부대표(전략 담당)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한민족평화네트워크 대표의원
- 국회 공무원(10년)
- 17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 (재)광장(이사장 이해찬) 이사·편집위원(현)
-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현)
- 한국방정환재단 총재(현)
- (주)동로건설 대표이사(현)

○ 약력

- 민주화운동 관련 3회 투옥(민주화운동 관련자)
- 참여연대 기관지(참여사회) 기획편집위원
-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이사장 노무현) 연구위원
- 동북아평화연대 기획위원
- 민주당 중앙위원(현)
- 민주당 남북화해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현)
- 시민주권 운영위원(현)
- 민주당 강원도당 전략기획위원(현)
- 17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의 결 번 호	2012국선19(자심)
언 론 사	유한회사 완도투데이(완해진신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63-79 대표이사 이 철
심의대상기사	완해진신문 1월 19일자 12면 「물가 잡는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위 언론사는 해당 광고가 기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 일방의 성명서를 그대로 전재한 것을 기사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기사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는 여타 정당 또는 여타 정당의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2조(기고 등) 및 제13조(의견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물가 잡는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새해 들어 정부는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쌀·배추 등 중요 농산물이라는 것이다. 피땀 흘려 농사 짓는 농산물을 제값 받도록 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될 품목이라니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비축제로 사들인 물량을 무차별 방출하여 산지 쌀값을 억지로 낮추는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반발하여 2011년산 쌀 공공비축미 수매를 거부하여, 현재 수매 목표량 36만톤의 26만톤 수매로 76%달성에 그치고 있다.

쌀값은 2008년 120,000원(80kg)대 바닥을 치고 이제 겨우 목표가격 170,083원에 근접하는 167,2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소시장접근수량(MMA의무도입물량)을 조기에 도입·방출하여 쌀값을 또 다시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 (후략)

성명서

물가 잡는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새해 들어 정부는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책임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쌀·배추 등 중요 농산물이라는 것이다. 피파 홀려 농사 짓은 농산물을 제값 받도록 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될 품목이라니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비축제로 사들인 물량을 무차별 방출하여 산지 쌀값을 억지로 낮추는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반발하여 2011년산 쌀 공공비축미 수매를 거부하여, 현재 수매 목표량 36만톤의 26만톤 수매로 76%달성에 그치고 있다.

쌀값은 2008년 120,000원(80kg)대 바닥을 치고 이제 겨우 목표가격 170,083원에 근접하는 167,2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소시장접근수량(MMA의무도입물량)을 조기에 도입·방출하여 쌀값을 또 다시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산 20만톤을 2012년 1월 3일 방출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2010년산 의무도입물량 98,193톤을 kg당 1,095원에 도입하여 764원(30.2% 낮은 가격)에 손절 판매하고 있는 중이다. 2011년산 의무도입물량 104,297톤에 대해서는 6,158톤을 1,021원에 도입하여 1,016원에 손절매하면서 까지 쌀값을 낮추겠다고 방출하고 있다.

2012년산 마저 내년에 도입하지 않고, 금년 1~6월에 조기에 앞당겨 도입하여 방출하려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산 도입 분까지 무려 4개년 분을 한꺼번에 금년에 도입하여 방출함으로써 쌀값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정부가 수입쌀을 무차별 방출하면, 민간의 방출량과 겹쳐 결국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하는 역제철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쌀값 폭락의 시장의 실패를 조장하면, 우리 농민들은 또다시 크게 손해 볼 것이다. 정부는 쌀값인하대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쌀 생산농가에 대한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농자재값 안정대책부터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포기한 정권이며, ▲쌀을 포기한 대통령 ▲쌀포대

가 확실하다.

정부는 쌀 차관, 배추국장을 임명하여 서민물가안정에는 힘쓰면서, 왜 폭락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방치하는가? 왜 농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또한 배추 값은 산지 겨울배추 1포기당 1월 11일 948원(1/10, 896원)으로, 평년가격 1,360원 대비 30.3% 폭락하여, 출하조차 포기한 상태이며, 산지 대파 값은 1kg당 1월 11일 기준 786원으로 평년 1,199원 대비 34% 폭락하였다. 정부는 민간 자율메기에 맡기며 방치하지 말고, 즉시 산지폐기를 하여 배추 값과 대파 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한우 값은 전년대비 20% 하락(송아지 가격 49% 하락)하였고, 심지어, 육우 송아지 가격은 최근 1만원까지 추락하였지만, 쇠고기 값은 내리지 않아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사료 값은 전년대비 10%, 2007년 대비 51% 상승하여, 한우 30개월 비육하여 팔 경우, 사료비 등 생산비를 빼면 마리당 100~150만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 값 안정대책 수립과 함께 소 값 하락에 따른 사료가격안정자금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 처리하고 22조원의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눈가림대책에 불과하다. 지금 농민은 소 값 폭락, 배추 값 폭락, 대파 값 폭락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핵심은 수급조절이다. 왜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무차별 수입해서 폭락시키고, 정작 농산물 가격폭락 시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가? 물가상승의 주범인 고환율·저금리정책은 그대로 두고 물가잡는다고 농민만 희생하는 것이 공정한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①계약재배로 계획적인 생산조절을 하면서, ②품목별 월별 조사로 시기별 생산량을 예측하도록 농업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③공급 부족 시에만 국영무역 물량(할당관세·MMA 등)을 적정 한도 내에서 방출해야 한다. 물가 잡는다고 농민을 잡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농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12년 1월 13일

국회의원 김 영 록

의 결 번 호	2012국선27(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0 대표이사 이 태 열
심의대상기사	대구일보 2012년 1월 4일자 3면 「총선 출마자 막바지 출판기념회 잇따라」, 1월 5일자 4면 「이노수 TBC 사장 출판회 5천여명 인파 대성황」, 1월 12일자 5면 「대구 수성을 이노수 출마로 요동」, 2월 6일자 4면 「수성을 이노수, 선거사무소 개소」, 2월 9일자 3면 「이노수 “여성 공천확대는 당연한 일”」, 2월 14일자 3면 「이노수 신공항 건설 공약 포함 제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대구 수성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저서, 과거 이력, 출마 계기 및 포부, 선거 공약 등을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총선 출마자 막바지 출판기념회 잇따라

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 개최 가능 시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막바지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1월 12일) 부터는 개최할 수 없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출판기념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구 달서구 지역출마를 고려중인 TBC대구방송 이노수 사장은 4일 오후 4시30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부레가 없는 바다상어, 바다의 1인자가 된 이야기’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사장은 책을 통해 자신을 ‘바다상어’에 비

유하고 있다.

책 제목은 부레가 없는 바다상어가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움직임과 적응과정을 거쳐 바다의 1인자가 된 것처럼, 이 사장도 핸디캡과 역경을 극복하고 국내 최연소 언론사 CEO에 오르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사장은 성장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한편 우리 시대의 고민들을 서술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이노수 사장은 대구대를 졸업한 후 1983년 KBS PD로 방송계에 들어선 후 95년 TBC대구방송 부장, 편성제작국장, 경영정책본부장을 거쳐 2006년 만46세에 대구방송 사장으로 취임했다.(후략)



이노수



김석준



김진항



곽창규



박창달

총선 출마자 막바지 출판기념회 잇따라

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 개최 가능성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막바지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1월 12일)부터는 개최할 수 없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출판기념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구 달서구 지역 출마를 고려중인 TBC 대구방송 이노수 사장은 4일 오후 4시 30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부레가 없는 바다상어, 바다의 1인자가 된 이야기'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사장은 책을 통해 자신을 '바다상어'에 비유하고 있다.

책 제목은 부레가 없는 바다상어가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움직임과 적응과정을 거쳐 바다의 1인자가 된 것 처럼, 이 사장도 핸디캡과 역경을 극복하고 국내 최연소 언론사 CEO에 오르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사장은 성장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한편 우리 시대의 고민들을 서술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이노수 사장은 대구대를 졸업한 후 1983년 KBS PD로 방송계에 들어선 후 95년 TBC 대구방송 부장, 편성제작국장, 경영정책본부장을 거쳐 2006년 만 46세에 대구방송 사장으로 취임했다.

5일에는 김석준 대구 달서병 예비후보가 알리앙스예식장에서 지지자 등 1천5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춘남의 도전출판기념회'를 진행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실패와 시련에 대한 무한도전을 통해 부활하는 패자부활의 연속으로 규정하면서 "나는 날마다 패자부활전을 치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6일에는 김진항 대구 달성군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 26일 가진 대구출판기념회에 이어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람사랑 조국사랑의 길'과 '아내에게' 등 2권의 저서를 갖고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곽창규 금융보안연구원장이 대구 DBS웨딩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평을 넓힌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소셜커머스가 만날때'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박원장은 대구 서구 출마를 준비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자유를 말하다'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책은 민의와 정치가 소통하는 장이 되겠다는 저자의 의지는 물론 그동안 흘렸던 땀과 현장의 기록 등이 담겨있다.

박 회장은 중·남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14·11 현장속으로

수성을 이노수, 선거사무소 개소



대구 수성구에 출마하는 이노수(52) 전 TBC 사장이 지난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 예비후보는 총선 출마 배경

과 정치적 신념을 밝히면서 "국회의원을 하려면 정직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한다"면서 "나라와 국민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이 다시 국회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1천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대구 수성을 이노수 출마로 요동

지역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

주호영·김형렬과 3파전

“좋은 선택인가, 잘못된 판단인가?”

·이노수 전 TBC 대구방송 사장이 오랜 광고 끝에 대구 수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사장은 11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그는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 전 사장은 당초 불출마한 이해봉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서출마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수성으로 유턴했다.

달서출마는 같은 고향출신인 윤재옥 전 경기 지방경찰청장이 출마제비를 하는 점이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달서구 내 합천출신이 많지만, 지인들에 기대는 구시대 정치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성을 출마에 대해 그는 “평생 변화와 혁신으로 살아온 CEO출신으로서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정치 1번지인 수성을 출마가 명분에 맞는 것 같다”며 “TBC 대구방송이 이곳에 있고 18년간 저와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라며 지역밀착, 구태정치 탈피 의지를 보였다.

이 전 사장은 특히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8년째 꼴찌와 신공항 무산 등을 거론하며 “지역 정치인, 장관, 시장 누군 한 사람도 이에 대해 분기탱천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대구를 쿼터 점프(Quantum Jump·대약진)시켜 GRDP를 10위권 내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구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의 수성을 출마는 당장 이 지역을 대구 최고 격전지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재선



주호영



이노수



김형렬

의원으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의원이 3선 고지를 버리고 있고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도 무소속으로 권토중래를 노리며 국회 배지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 의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점 때문에 지역 내 반 MB 정서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 의원은 이날 “이런 마당에 피할 방법이 있느냐”며 “공정하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세 확산에 돌입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전 사장과는 평소 친구사이다. 최근 두 사람은 출마와 관련,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수성구청장 공천 탈락과정에서 주 의원과 양금이 되어 세 사람 간 인연이 눈길을 끈다.

김 전 청장은 오는 2월께 한나라당 입당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입당이 성사되면 세 사람 간 한나라당 공천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 의원, 이 전 사장, 김 전 청장 등 세 사람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따져보니 선뜻 누가 적임자인지 모르겠다”며 “서로 패어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승탁 기자 kangst@idaegu.com

14·11 현장속으로

이노수 “여성 공천확대는 당연한 일”



이노수(52)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는 8일 ‘여성 후보의 공천확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각 정당에 정한 여성후보 의무할당 비율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강승탁 기자 kangst@idaegu.com

이노수 신공항 건설 공약 포함 제안



이노수(52) 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3일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자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 공항 11곳이 수 십억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다시 신공항 문제를 꺼내 드는 것이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칠 수도 있겠지만, 1천500만 명 이상의 수요를 가진 국제공항을 소규모 지방공항과 비교하여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노수 TBC 사장 출판회

5천여명 인파 대성황

이노수 TBC대구방송 사장의 출판기념회에 5천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4일 오후 4시30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이 사장의 저서부레가 없는 바다상어, 바다의 1인자가 된 이야기 출판기념회에는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조해원 전 대구시장 등 지역민을 포함해 각계각층 인사들의 방문이 줄이 이으며 5천여명이 참여했다.

이같은 수치는 그동안 지역에서 열린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사상 유례없이 많은 인파로 보인다.

이 사장은 19대 총선 출마의 뜻을 세웠으며, 오는 11월께 출마 지역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 합천 출신인 이노수 사장은 대구대를 졸업한 후 1983년 KBS PD로 방송계에 들어선 후 95년 TBC 대구방송 부장, 편성제작국장, 경영정책본부장을 거쳐 2006년 만 46세에 대구방송 사장으로 취임했다.

강승탁 기자

kangst@idaegu.com

의결번호	2012국선28(자심)
언론사	유한회사 완주신문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거리 127-4 대표이사 송관용
심의대상기사	완주신문 2012년 1월 18일자 1면 「최규성 국회의원, 4번째 잠 논란」, 2월 1일자 1면 「도대체 왜…」 최규성 국회의원 잠 논란, 벌써 5번째», 2월 1일자 6면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부정적인 인물 사진을 이틀에 걸쳐 1면에 보도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기사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의도적으로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민들 “이럴 수가…” 한탄

“잠만 자면 도대체 일은 언제하나”

비난 봇물

거듭된 잠자는 모습에

건강 이상설까지 등장

최규성 국회의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또 잠을 잤다. 벌써 4번째다. 최 의원의 잠자는 모습이 무려 4번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잠자려고 국회의원 하나”, “이럴 수는 없다”면서 한탄하며 “건강이 나빠진 것 아니냐”는 건강 이상설도 등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잠만 자면 우리 군민들의 이미지도 망가지지 않겠느냐”면서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실추된 군민 이미지에 책임지고 반성하며 사죄하라”고 격양들 하고 있다.

최 의원의 잠자는 모습을 본보에 계속 제보하고 있는 서울 독자 K씨는 “완주군민들이 잠자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게 아닌데도 최 의원은 서울에서 잠만 자며 군민들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끝까지 잠자는 모습을 추적. 군민들에게 계속 제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완주생활정치넷발포럼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잠을 자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자는게 공인으로서 도리”라며 최 의원의 맹성을 촉구했다. (후략)

최규성 국회의원, 4번째 잠 논란



① 지난해 11월 15일 새만금 관련 회의석상에서 잠자는 모습 (첫 번째)



② 지난해 12월 30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잠자는 모습 (두 번째)



③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잠자는 모습 (세 번째)



④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잠자는 모습 (네 번째)

군민들 “이럴 수가...” 한탄

“잠만 자면 도대체 일은 언제하나” 비난 봇물
거둬들인 잠자는 모습에 건강 이상설까지 등장

최규성 국회의원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또 잠을 잤다. 벌써 4번째다. 최 의원의 잠자는 모습이 무려 4번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은 “잠 자려고 국회의원 하나”, “이럴 수는 없다”면서 한탄하며 “건강이

나빠진 것 아니냐”는 건강 이상설도 등장하고 있다. 군민들은 특히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잠만 자면 우리 군민들의 이미지도 망가지지 않겠느냐”면서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실추된 군민

이미지에 책임지고 반성하며 사회하라”고 격앙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의 잠자는 모습을 본보에 계속 제보하고 있는 서울 독자 K씨는 “완주군민들이 잠 자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게

아닌데도 최 의원은 서울에서 잠만 자며 군민들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끝까지 잠자는 모습을 추적, 군민들에게 계속 제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완주생활정치닷컴포럼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잠을 자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자는게 공인으로서 도리”라며 최 의원의 행성을 촉구했다. /제출자 최원

4·11 제19대 총선, 완주·김제 선거구

무능·부패·철새 정치인 안 된다

후보들마다 승부처인 완주 공략에 총력
완주 단결론 "좋은인물 뽑아내자" 여론

4·11 국회의원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완주·김제 선거구에서 완주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무능·부패·철새 정치인 배척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군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만은 완주사람들이 단결하여 사대정신에 맞고, 완주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봉사할 좋은 인물을 선택하고자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완주·김제 선거구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신권아 등록후보 6명, 최규성 국회의원이 가세하여 7명의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5명이며 정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민주통합당 후보가 4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유력 후보는 김제출신 이남기, 최규성 등 세 후보가 모두 김제출신이다.

이들 3명의 후보는 텃밭인 김제에서 일찌감치 표발을 다져 일정자본을 확보해놓고 완주 쪽에서 포 모으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2월 말이나 또는 3월 초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 사실상 곧 고래리라고 보며, 완주에서 지지도를 높여 경선 우위를 점하고자 조직정당과 인지도 높이기에 혼신하고 있다.

김제출신 후보들은 특히 완주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역 공약개발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주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민심은 아직 말쑥하진 않은 편이다.

"언제부터 이들이 그렇게 완주를 걱정하고 똥장노냐"는 힐난과 함께 갑작스레 비전 없이 출마하는 아이없는 행태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군민들 중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완주군민들이 경각을 하나쯤 모아서 진정으로 완주를 걱정해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완주 결집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제가 유력후보 3명으로 분

산될 때 완주가 하나로 결집하여 표를 몰아주면 완주사람들의 의중대로 정말로 완주를 사랑하자는 좋은 인물이 국회의원이 될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다.

이상목 완주생활정치발전포럼 회장은 "제면을 앞 댄한 분들이 출마할 김제출신 후보들을 따라 다니는 모습이 흡사하다"면서 각성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무능한 정치인,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완주의 속원사업을 통한치한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면서 군민들의 수준 높은 심판이 있기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완주 사람이 힘을 모으면 완주를 사랑할 좋은 정치인이 탄생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완주사람들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그들 호소했다."

/제출자명



"도대체 왜..." 최규성 국회의원 잠 논란, 벌써 5번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계속된 잠 논란으로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최규성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완주·김제 선거구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신권아 등록후보 6명, 최규성 국회의원이 가세하여 7명의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잠을 5번씩이나... 너무 하십니다

최규성 국회의원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벌써 공식 회의석상에서 5번씩 잠자는 모습이 언론에 공식 나왔습니다.

공인, 그것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회의 때마다 잠을 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같은 지난해 11월 15일자 새만금 회의석상에서 길게 누워 자는 모습을 언론이 보도했을 때 우리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던 지랄까지 체면불구하고 잠을 자겠느냐 하는 연민의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잠자는 모습과 불과 3일 뒤인 금년 1월 2일 최고위원회에서 잠자는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그 집근대 씨의 상종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인, 그것도 천하공당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졸다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함께 동의했습니다.

최 의원님,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 1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잠자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인 1월 16일자 최고위원회에서 잠자는 5번째의 모습이 지면에 다시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최 의원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편소에 잠 이는 의사 선생님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최 의원님 심본은 안 밝혀줬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회적 공인이 5번씩이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잠을 잔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신체적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공식 회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



이상목 회장

는게 아니냐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겨울에는 대개 나이를 드신 분들이 감기약을 습관적으로 먹는다는 이런 경향을 밝는 경우가 많으면서 그러나 회의 참석 5번

째 매번 감기약을 먹더라도 없으니 신중하십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출사할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자 사당에 큰절을 올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졸다니요.

눈을 부릅뜨고 쫓고 또 쫓고 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공직자의 참 모습이었습니까.

최 의원님, 국회의원은 비서가 8명이나 되고 매달 1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면책특권의 권리까지 가지고 장관들에게 호통까지 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회의 때마다 나라의 근간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회 일면때 여기서 졸다니요.

우리 군민들은 최 의원님을 국회로 보낼 때 성실히 일 잘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믿어 왔습니다.

한데 일 잘하기는 고사하고 회의 때마다 여러번 잠을 자 우리 군민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잠자는 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5번씩 보도가 되어도 군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니 군민들을 정말 뭉클 보시는 것 아니냐. 이렇고도 표를 다시 얻었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 의원님은 도덕적 수준이 좋은 분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으니 군민들이 팔을 걷고 얼굴을 붉히게 되는지요.

최 의원님, 잠자는 사연을 군민들에게 반성하고 깊이 사과하십시오. 시골 거들 촉구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완주생활정치발전포럼
회장 이상목 올림

의결번호	2012국선29(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전라일보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유 춘 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2년 1월 31일자 3면 「유성엽 의원, 무소속이면 어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정읍)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 활동과 치적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성엽 의원, 무소속이면 어때?

전북대 정읍캠퍼스 유치 등 4년간 예산 확보 능력 발휘 차기 전북 간판주자로 근접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반에 걸쳐 불고 있는 물갈이론 속에서도 그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전북의 대표 정치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정읍에 선거구를 둔 무소속 유성엽 의원.

유 의원은 18대에 국회에 입성한 초선이지만 화려한 행정경험과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하며 지난 4년여 동안 지역 예산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대여 투쟁가로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특히 낙후 정읍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가 일궈낸 성과는 주목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유 의원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전북대학교

정읍캠퍼스를 유치하는 주역이 됐으며, 이에 따른 엄청난 국가예산 확보로도 그 저력을 입증해 보였다.

여기에 신정동 국책연구기관 연구센터 확충 성과차원에서 RI-Biomics센터(180억원), 친환경 바이오소재 R&D 허브센터(188억원), 방사선 육종센터(150억원), 미생물 가치평가센터(250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을 따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북정치권은 이제 유 의원의 미래에 대해 시선을 맞추고 있다. 정통 토종 정치인(대학시절 및 초급 사무관 시절을 제외하고 전북에서 근무)으로서 더욱 큰일을 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다소 선부른 평가일수도 있지만 이미 지역 정치가에서는 전북의 간판 정치인이라 불리는 정동영·정세균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는 상황에서 차기 간판주자로 유 의원이 가장 근접해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젊음과 패기, 그리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도청의 고위직과 정읍시장 등의 경험, 무

엇보다 초선의 국회의원으로 지역민들과의 약속이행 등이 그가 이 같은 반열에 올라선 이유다.

한 정치 전문가는 “만약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인 유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역

구도 정치 고착 이후(이른바 황색바람)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뭐라 예단할 수 없지만, 특히 중앙의 정치권에서의 유 의원의 입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이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유성엽 의원, 무소속이면 어때?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반에 걸쳐 불고 있는 물갈이론 속에서도 그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전북의 대표 정치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정읍에 선거구를 둔 무소속 유성엽 의원.

유 의원은 18대에 국회에 입성한 초선이지만 화려한 행정경험과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하며 지난 4년여 동안 지역 예산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대외 투쟁가로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특히 낙후 정읍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가 일궈낸 성과는 주목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유 의원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전북대학교 정읍캠퍼스를 유치하는 주역이 됐으며, 이에 따른 엄청난 국가예산 확보로도 그 저력을 입증해 보였다.

여기에 신정동 국책연구기관 연구센터 확충 성과차원에서 RI-Biomics센터(180

전북대 정읍캠퍼스 유치 등

4년간 예산 확보 능력 발휘

차기 전북 간판주자로 근접



파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북정치권은 이제 유 의원의 미래에 대해 시선을 맞추고 있다. 정통 토종 정치인(대학시절 및 초급사무관 시절을 제외하고 전북에서 근무)으로서 더욱 큰일을 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억원), 친환경 바이오소재 R&D 허브센터(188억원), 방사선 육종센터(150억원), 미생물 가치평가센터(250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을

다소 삼부른 평가일수도 있지만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전북의 간판 정치인이라 불리는 정동영·정세균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는 상황에서 차기 간판주자로 유 의원이 가장 근접해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젊음과 패기, 그리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도청의 고위직과 정읍시장 등의 경험, 무엇보다 초선의 국회의원으로 지역민들과의 약속이행 등이 그가 이 같은 반열에 올라선 이유다.

한 정치 전문가는 “만약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인 유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역구도 정치 고착 이후(이른바 황색바람)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뭐라 예단할 수 없지만, 특히 중앙의 정치권에서의 유 의원의 입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이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gari@

의결번호	2012국선3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우먼센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35 대표이사 유 승 삼
심의대상기사	우먼센스 2012년 2월호 326~329면 「세 자녀 키우며 정치인으로 성공하기까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송파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치적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여러 지면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 자녀 키우며 정치인으로 성공하기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회장 인터뷰

서울시 최초 여성 구청장, 최연소 차관, 대학 교수, NGO의 리더... 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회장이 거처온 명함이자, 늘 따라붙는 수식어다. 30년 정계 생활 동안 숨 쉴 틈없이 달려온 그녀에게 ‘일’은 삶의 에너지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동안 그녀는 세 자녀를 키워낸 엄마이기도 하다. ‘워킹맘’의 롤 모델 김영순 회장을 만났다. 정치, 육아, 여성으로서의 철학과 신념에는 그녀가 깨달은 삶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다.

서울시 최초 여성 구청장, 성공한 행정가로 거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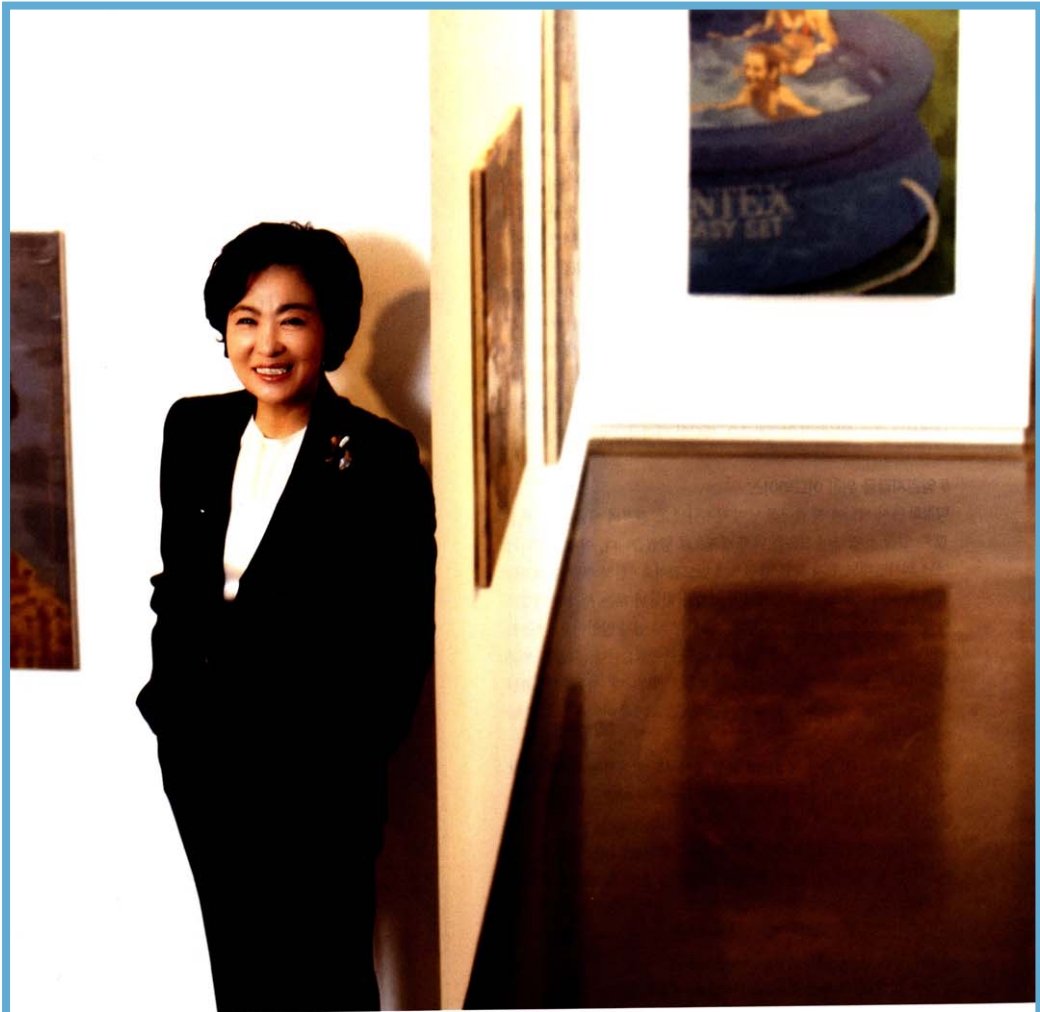
갤러리에서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업무에 치여 늘 시간에 쫓기는 김 회장에게 갤러리는 큰 위안을 주는 휴식 공간이다. 사무실이 광화문 근처일 때는 식사 후에 잠깐 시간을 내 삼청동의 크고 작은 갤러리에 산책삼아 들르기도 했고, 영 째미 안 날 때는 하루 날을 잡아 여러 곳을 한 번에 둘러보기도 했다. 일찌감치 도착해 간단한 티타임을 즐긴 김 회장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마음 같아서는 틈나는 대로 갤러리에서 여유를 부리고 싶지만, 여건상 쉽지는 않아요. 저와 아들의 취향이 비슷해 갤러리는 우리 모자의 훌륭한 데이트 코스인데, 자주 다니지 못해 아쉽죠.(웃음)”

그녀의 책 이야기가 나왔다. 30년 넘게 NGO, 대학, 정계, 중앙부처 등 다양한 조직의 리더로 활약해온 김영순 회장, 그동안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늘 김 회장을 따라 다녔다. 서울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구청장. 창의적인 혁신 정책

으로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김영순 스타일’, 심지어 관료 조직에서는 보기 드물게(?) 감각적인 김 회장의 스타일도 종종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도전과 성취를 바탕

으로 김 회장은 2년전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바로 이 책이 일본에서 그대로 번역돼 출간된다. 일본에서의 책 제목은 <알과겉의 일하는 기술>이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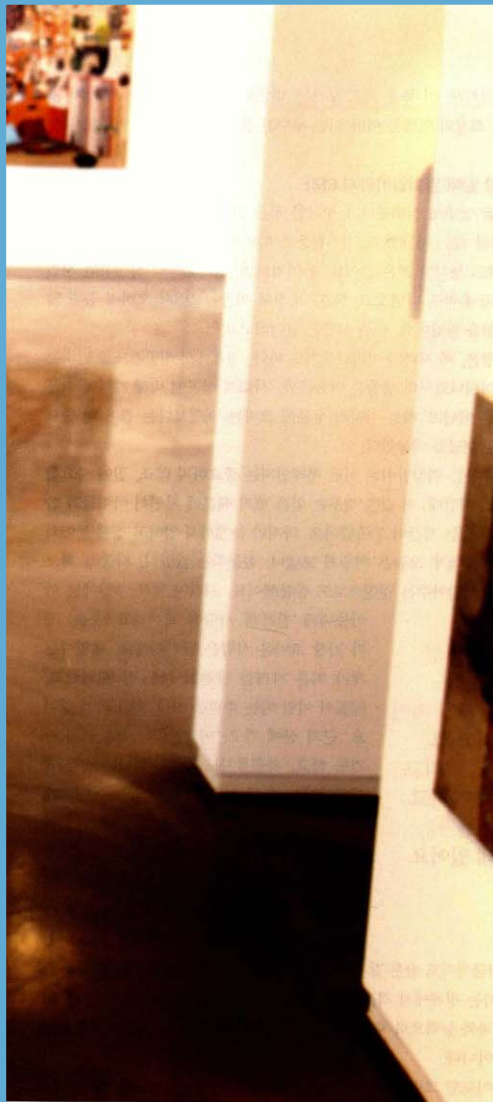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회장 인터뷰

세 자녀 키우며 정치인으로 성공하기까지...

서울시 최초 여성 구청장, 최연소 차관, 대학 교수, NGO의 리더... 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회장이 거처온 명함이자, 늘 따라붙는 수식이다. 30년 정계 생활 동안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그녀에게 '일'은 삶의 에너지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동안 그녀는 세 자녀를 키워낸 엄마이기도 하다. '워킹맘'의 롤 모델 김영순 회장을 만났다. 정치, 육아, 여성으로서의 철학과 신념에는 그녀가 깨달은 삶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다.

하세, 김은영 기자 사진, 산뜻 장소현한. LEE C GALLERY(02-3210-0457)



서울시 최초 여성 구청장, 성공한 행정가로 거듭나다

갤러리에서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업무에 치여 늘 시간에 쫓기는 김 회장에게 갤러리는 큰 위안을 주는 휴식 공간이다. 사무실이 광화문 근처일 때는 식사 후에 잠깐 시간을 내 삼청동의 크고 작은 갤러리에 산책 삼아 들르기도 했고, 영 편이 안 날 때는 하루 날을 잡아 여러 곳을 한 번에 둘러보기도 했다. 일찌감치 도착해 간단한 티타임을 즐긴 김 회장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마음 같아서는 틈나는 대로 갤러리에서 여유를 부리고 싶지만, 여건상 쉽지는 않아요. 저와 아들의 취향이 비슷해 갤러리는 우리 모자의 훌륭한 데이트 코스인데, 자주 다니지 못해 아쉽죠.(웃음)”

그녀의 책 이야기가 나왔다. 30년 넘게 NGO, 대학, 정계, 중앙부처 등 다양한 조직의 리더로 활약해온 김영순 회장. 그동안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늘 김 회장을 따라 다녔다. 서울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구청장, 창의적인 혁신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김영순 스타일’, 심지어 판교 조직에서는 보기 드물게(?) 감각적인 김 회장의 스타일도 종종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도전과 성취를 바탕으로 김 회장은 2년 전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바로 이 책이 일본에서 그대로 번역돼 출간된다. 일본에서의 책 제목은 <알파걸의 일하는 기술>이다.

“올해 창립 1백 주년이 된 요시모토북스는 일본 최대 규모의 출판 기획사예요. 제 책이 요시모토북스의 2012년 첫 출간 작품이래요. 올해는 ‘여성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회’라는 취지로 다양한 출판을 기획 중이고, 그 시작으로 제 책이 선정됐다는 것이 기쁘요. 일하는 여성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가정에서 제 몫을 해내는 여성들이 자랑스럽죠.”

김 회장의 책에는 ‘워킹우먼’을 위한 그녀의 모든 경험담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녀가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여성 특유의 소통 능력은 조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멀티플레이’에 능한 타고난 기질은 일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 물론, 이는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다.

“집에서 가족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엄마하고 얘기해.’(웃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 자체가 여성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예요. 자녀와 대화가 순조롭게 안 풀리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엄마하고 말하랴’고 하고 문제를 떠넘기죠. 또, 여성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소리만 듣고도 파악해요. 멀티플레이에 능하다는 소리예요. 순간적인 집중력은 남자들이 높을지 몰라도 소통, 멀티플레이 능력은 여성들이 더 탁월해요.”

여기에 남다른 결단력과 추진력도 갖춘 김 회장은 자타공인 최고의 행정가로 인정받고 있다. 남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거들떠보지 않는 수많은 정책을 그녀는 ‘최초’라는 이름으로 보란 듯이 성공해 보였다. 특히 여성 최초 서울시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 회장의 탁월한 감각은 빛을 발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 돼버린 ‘우측통행’은 그녀가 송파구청장으로 재직 당시 정착시킨 정책이다.

“‘우측통행’은 애초 어린이들 때문에 나온 정책이에요. 말로는 ‘좌측통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건너야 하니까 헛갈릴 수 있잖아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미 ‘우측통행’은

글로벌스탠더드가 됐는데, 굳이 좌측통행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 유지원생들의 교육 현장에서부터 '우측통행'을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점차 확산돼 지금은 비교적 잘 정착된 것 같아요."

구청에서 바로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는 것도 송파구청에서 처음 시도한 정책 중 하나다. 그 외에도 구립 보육시설을 두 배 이상 늘렸고, 어린이 안전 도시, 학교 보안관,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등은 모두 김 회장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정책들이다.

"태양광발전으로 부족한 전기를 수급해 에너지 극빈층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기도 했어요. 서울시의 각 구마다 이런 에너지 극빈층이 최소 2~3%는 있어요. 이들에게 고정적으로 전기 에너지만 공급해줘도 생활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이걸 보고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었느냐'면서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웃음) 농담처럼 '저작권'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웃음)"

우스개로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한 번 들으면 알 만한 정치권의 캐치프레이즈 중 그녀가 처음 만든 말이 적지 않다. '세계가 송파를 주목한다' '내가 꿈꾸는 세상' 등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 말이다.

"저는 정치인은 훌륭한 카피라이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피라이터는 단 한 줄의 카피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움직여야 해요. 행정이란 정치든 예술이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감동'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와 예술이 같다고 봐요. 진심이 담긴 말 한 마디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김 회장은 단 한 줄의 카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시로 책을 읽고, 틈나는 대로 생각에 잠긴다. 행정의 기본은 자신이 아는 만큼, 본 만큼, 느낀 만큼 나온다는 것이 나름의 철칙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단순

좋은 엄마 되기, 아름다운 여성 되기, 좋아하는 취미 갖기 등 바라는 것이 있다면 메모지에 적어 곳곳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늘 상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돼 있어요

한 진리지만, 이 틀을 깨고 모르는 세상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 회장의 인생은 아마 이런 무수한 틀을 깨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경험'했을 뿐이죠. 어릴 때는 가난했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시련도 많았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돌아켜보면, 정치적으로 방황하던 시절에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NGO 조직도 이끌어보면서 오히려 훨씬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헛된 시간은 없더라고요."

김 회장은, 세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정계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어머니로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사회적 성공에 비해 가정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기자의 우문에 그녀는 '외형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현답을 내놓았다.

"전업주부든 워킹맘이든 어떤 형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오늘은 어떻게 보냈니. 힘들지는 않았니. 사랑해' 하고 힘껏 끌어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간이 많은 주말에는 아

이들에게 '진하게' 사랑을 표현했죠. (웃음) 제가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남편이에요. 평일에는 제가 비운 자리를 남편이 너무 잘 채워줬고, 애들이 어릴 때는 주말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근처 산에 가고, 미술관이나 동물원에 가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같이 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엄마인데,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라니 제가 복이 많은가 봐요. (웃음)"

밤에는 잠깐이라도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김 회장은 오랜 정계 생활을 하는 동안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마흔여섯에 술을 처음 마셨

고, 지금까지도 술은 잘 입에 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모임과 친분을 중요시하는 정계에서 적잖이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그 부분은 그 외 업무 성과와 능력으로 채웠다. 물론 엄마로서 시행착오를 전혀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되돌아보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성적이 좀 안 나오면 어때요. 다른 것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큰딸에게 미안한 점이 그거예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제가 딸에게 바라는 것과 달라서 많이 부딪혔어요. 결국 지금 영화를 안 만들고 일본어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힘껏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둘째 딸은 전도사예요. 어릴 때부터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가면, 첫째나 막내는 몇 번 가다가 안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둘째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녔어요. 나중에는 아예 무리를 만 들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더니 결국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죠. 막내아들은 변호사인데, 패션 스타일이 아주 독특해요. (웃음) 걸려풀한



김경순 회장은 요즘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며 수시로 트위터를 확인한다. 또 감작스러운 모임이 있거나 그 날의 의상에 따라 코르사주로 옷에 포인트를 준다. 이는 그녀만의 감각적인 패션 노하우다. 따로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이동 중에 틈틈이 독서를 하기도 한다.



줄무늬 양말에 바지 밑단을 둘둘 말아 올리고 입는데, 제 스타일과는 영 맞지 않지만 본인이 좋다고 하니 저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인생의 행복 찾아주는 ‘꿈의 메모지’

제각각 개성 넘치는 삼남매를 생각하니 왠지 재미있다.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각기 다른 인생을 사는 자녀들을 보면서 김 회장도 자녀들의 선택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사실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둘째 딸과 막내아들이 아직 미혼인 것이 부모로서 조금 조바심이 난다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시집간 큰딸은 걱정이 안 되는데, 둘째 딸과 막내아들이 서른 중반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니까 아직은 제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해 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문득 아이들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면 부모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짐이구나...(웃음) 요즘 그 짐을 벗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김 회장은 만나는 ‘엄마’들에게 자식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다. 심지어 큰딸이 손녀딸에게 “몸이 아프더라도 학교에는 꼭 가라”고 말하면, 김 회장은 “몸이 정말 아프면 하루 쉬도록 해줘라. 하루 결석한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니다”라고 말리는 쪽이다. 이것도 ‘돌이켜보니 아무 일도 아니더라’는 그녀만의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약속이나 규칙, 예절 같은 기본적인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줘야 해요. 아이들을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틀에 가두고 속박하는 것이 옳은 걸까? 엄마들의 교육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엄마로서의 깨달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가족과의 대화와 공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의 공통분모가 ‘문화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미술관에 가고 공연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특히 아들이 저와 취향이 많이 비슷한 편이에요.”

그녀는 ‘꿈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자신이 바라는 꿈이 있다면 이루기 위한 의지를 가지라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메모지에 적어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좋은 엄마 되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 되기’ ‘승진시험에 합격하기’ ‘좋아하는 취미 갖기’ 등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상에서 꿈꾸는 크고 작은 꿈을 늘 상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돼 있어요. 각자의 꿈을 적어서 집에 붙여놓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그녀의 말에 믿음이 가는 건, 그녀의 인생 자체가 이 간단한 명제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㉞

의결번호	2012국선3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내외뉴스(내외일보)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45-51 광장빌딩 4층 대표이사 김 광 탁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2년 2월 3일자 7면 「'톡톡튀는 공약'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정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인천 연수)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톡톡튀는 공약’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정건

현역병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부담 공약 ‘눈길’

홍정건 예비후보는 그야말로 톡톡 튀다. 선거 캠프에서 내미는 명함 하나하나에도 특색이 있다. 일괄적인 명함 형태가 아닌 각동에 맞는 공약을 적은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내밀어 자신을 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청학동인 경우 ‘청학역 신설, 개통 후 추가건설 추진 옥련동인 경우 ’옥련동 석산공원 및 일몰 전망대 설치’와 같이 명함에도 차별화를 두었다.

이것은 그만큼 홍정건 후보가 각동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홍정건 후보가 내건 36가지 공약 중,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공약이 있다. 그것이 바로 ‘현역병 일반학자금대출이자 전액 국가 부담’이란 공약이다. 이 공약은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에게 있어 상당부분 어필될 수 있는 튀면서도 차별화된 공약이다. 가뜩이나 등록금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생들로서는 반가운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에 대학을 들어가다 보면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고 또 4.9%란 이자를 꼬박 물어야 한다. 이 이자를 갚는 것도 형편이 좋지 않은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군대까지 간다면 이자는 군에 들어가서도 계속 쌓이게 돼, 결국 제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빚더미에 앉게 마련이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신용불량이 된 대학생이 2007년도 3,785명, 2008년 10,250명, 2009년 22,142명, 2010년 9월 29,896명, 2011년 3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후략)

‘톡톡튀는 공약’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정건

현역병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부담 공약 ‘눈길’

홍정건(사진) 예비후보는 그야말로 톡톡 튀다. 선거캠프에서 내미는 명함 하나하나에도 특색이 있다. 일괄적인 명함 형태가 아닌 각동에 맞는 공약을 적은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내밀어 자신을 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청학동인 경우 ‘청학역 신설, 개통 후 추가건설 추진’ 옥련동인 경우 ‘옥련동 석산공원 및 일몰 전망대 설치’와 같이 명함에도 차별화를 두었다.

이것은 그만큼 홍정건 후보가 각동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홍정건 후보가 내건 36가지 공약 중,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공약이 있다. 그것이 바로 ‘현역병 일반화 자금대출이자 전액 국가 부담’이란 공약이다. 이 공약은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에게 있어 상당부분 어필될 수 있는 뛰면서도 차별화된 공약이다. 가뜩이나 등록금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생들로서는 반가운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에 대학을 들어가다 보면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고 또 4.9%란 이자를 꼬박 물어야 한다. 이 이자를 갚은 것도 형편이 좋지 않은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군대까지 간다면 이자는 군에 들어가서도 계속 쌓이게 돼, 결국 제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다 해도 빚더미에 안게 마련이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신용불량이 된 대학생이 2007년도 3,785명, 2008년 10,250명, 2009년 22,142명, 2010년 9월 29,896명, 2011년 30,000명

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홍정건 후보는 이밖에 수인선과 관련, 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청학역 신설, 수인선 선개통 후 착공’, ‘수인선 소음 분진 방음 시설 설치’가 그것이다. 연수구가 수인선 전철의 통과로 인해 도시가 양쪽으로 갈라지면 발전이 저하되고 또 철도주변의 아파트와 가옥들이 소음과 분진 등에 노출돼 집값 하락을 비롯해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면 연수구는 종전의 평화를 되찾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홍정건 후보가 이러한 현안을 안고 있는 연수구의 수인선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지금껏 아무도 풀지 못한 이 숙제를 홍 후보가 풀게 하는 일은 그를 국회로 보내는 길뿐이다.

윤광석 기자

남구, 어린이 생태학교 운영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숲이 학교, 자연이 선생님’이란 주제로 숲에서 쉬고, 만지고, 보고, 느끼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을 부모와 함께 익혀나가는 ‘숲속 어린이 생태학교’를 개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수봉공원 자연학습장에서 운영된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숲해설가와 함께 곤충, 조류, 야생화를 관찰하는 탐방교실과 나뭇잎·꽃잎 손수건, 솔방울·나뭇가지 공작물을 만드는 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3월 말부터 전화(880-4502)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예약이 가능하다.

윤광석 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3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전광일보사 전남 순천시 장천동 84-7 삼익빌딩 3층 대표이사 박 양 주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2년 2월 3일자 2면 「배기운·박선원 예비후보 공동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나주시 화순군)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몇몇 예비후보자들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배기운·박선원 예비후보 공동기자회견

지역민 뜻 받들어 '사즉생의 각오'로 단일화 다짐
"지역분열 종식시키고 화합과 비전 창출하겠다"

나주·화순시·군민 여러분 그동안 나주·화순 지역은 정치적 반목과 대립으로 지역분열이 심각하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온통 얼룩지면서 지역발전마저 저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나주 지역 금품매수 사건이 방송사를 비롯해 지역 모든 지방신문에 대서특필됨은 물론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파문이 일고 있어 지역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줌과 동시에 지역정가를 혼탁한 돈 선거판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갈망이 목까지 차 올라와 있습니다.

나주·화순 시·군민 여러분들의 이런 열화와

같은 여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배기운, 박선원 예비후보가 사즉생의 각오로 단일화까지 불사하며 지역민의 뜻에 따를 것을 밝힙니다.

나뉘진 힘을 한데 모아 이번 선거의 의미를 뜻 깊게 다지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창출하겠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여 고소·고발이나 일삼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부풀린 예산타령으로 지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타락한 재력으로 민심을 현혹하는 금권정치를 이겨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진짜 서민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전횡과 독단이 아닌 개방적, 민주적 지역정치 복원을 위해 모든 민주개혁세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분열된 나주를 화합으로 이끌고, 서로 신뢰하

고, 존중하는 기풍을 다시 일으켜 세워 소박하고 인간적이면서 격의 없는 '사람 사는 나주·화순'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시민들과 화합하

고 공존하는 그리고 서민이 웃음 짓는 행복한 나주·화순을 향한 꿈에 시·군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운·박선원 예비후보 공동기자회견

지역민 뜻 받들어 '사족생의 각오'로 단일화 다짐 "지역분열 종식시키고 화합과 비전 창출 하겠다"

나주·화순 시·군민 여러분 그동안 나주·화순 지역은 정치적 반목과 대립으로 지역분열이 심각하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온통 얼룩지면서 지역발전마저 저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나주지역 금품매수 사건이 방송사를 비롯해 지역 모든 지방신문에 대서특필됨은 물론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파문이 일고 있어 지역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줌과 동시에 지역정가를 혼탁한 돈 선거판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갈망이 목까지 차 올라와 있습니다.

나주·화순 시·군민 여러분의 이런 열화와 같은 여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배기운, 박선원 예비후보가 사족생의 각오로 단일화까지 불사하며 지역민의 뜻에 따를 것을 밝힙니다.

나뉜 힘을 한데 모아 이번 선거의 의미를 뜻 깊게 다지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회

망과 비전을 창출하겠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여 고소·고발이나 일삼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부풀린 예산타령으로 지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타락한 재력으로 민심을 현혹하는 금권정치를 이겨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진짜 서민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전횡과 독단이 아닌 개방적, 민주적 지역정치 복원을 위해 모든 민주개혁세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분열된 나주를 화합으로 이끌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기풍을 다시 일으켜 세워 소박하고 인간적이면서 격의 없는 '사람사는 나주·화순'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시민들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그리고 서민이 웃음 짓는 행복한 나주·화순을 향한 꿈에 시·군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신금섭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35(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이원컴(폴리피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39 우림라이언스밸리 1차 A동 4층 대표이사 김 능 구
심의대상기사	폴리피플 2012년 2월호 49~53면 「종로출마 정세균 “대권보다 의회권력 교체가 더 중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종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의정 활동, 근황, 출마 포부 등을 출마 예정 선거구와 후보 기호가 드러난 사진과 함께 여러 지면에 걸쳐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종로출마 정세균 “대권보다 의회권력 교체가 더중요”

“박근혜, 종로에서 빅 매치 한 번 했으면”

종로는 상징적인 곳이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유권자들도 서민층부터 부유층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종로서 승리하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내가 어려운 지역으로 가 수도권 승리에 기여, 의회권력 교체를 해보자는 결심을 했다.

지난 2009년 3월 ‘호남 불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전 민주당대표가 자신의 약속대로 19대 총선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통해 제2의 정치인

생에 도전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약 5개월 동안 낮선 종로에 등지를 틀고 이곳 유권자에게 ‘문화국가’, ‘복지국가’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들고 얼굴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폴리피플>은 지난 1월17일 서울 광화문 앞에 자리잡은 정 전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종로 도전에 대한 포부와 정치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정세균 전 대표는 자신의 종로 출마에 대해 “약 3년 전인 지난 2009년 3월에 호남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그때 19대 때 낙선을 각오하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그런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호남 불출마할 당시는 당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내홍을 앓을 때였다. 2009년 4·29재보선에서 정동영 의원의 전주 덕진구 출마를 강행하면서 공천문제로 다툼 때였다. 결국 정동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당선되면서 정세균 전 대표는 정치적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전대표는 “당이 어려웠고 중진들

이 살신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이 (당시 선택을) 잘한 선택으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수도권 출마선언을 지금 한다면 별로 빛이 안 났을 것”이란 생각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 빅3로서 대권주자로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해 그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권력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 대권보다는 의회권력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권보다는 19대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의원들로부터의 오타로 보임-편집자) 수도권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과 빅 매치 한번 하면 좋다. 나는 전국적인 국민의 관심도 받고 괜찮을 것 같다. 정치인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괜찮지 않겠나?”라며 박 위원장과의 종로 대결을 희망했다. (후략)



정세균 민주당통합당 의원(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_ 민주당통합당 의원(민주당 전 대표)

종로출마 정세균 “대권보다 의회권력 교체가 더 중요”

“박근혜, 종로에서 빅 매치 한 번 했으면”

대담/정리 정찬 기자

종로는 상징적인 곳이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유권자들도 서민층부터 부유층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종로서 승리하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내가 어려운 지역으로 가 수도권 승리에 기여, 의회권력 교체를 해보자는 결심을 했다.

지난 2009년 3월 ‘호남 불출마선언’을 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약속대로 19대 총선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통해 제2의 정치인생에 도전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약 5개월 동안 낮 선 종로에 등지를 틀고 이곳 유권자에게 ‘문화국가’, ‘복지국가’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들고 얼굴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폴리퍼플〉은 지난 1월 17일 서울 광화문 앞에 자리잡은 정 전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종로 도전에 대한 포부와 정치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정세균 전 대표는 자신의 종로 출마에 대해 “약 3년 전인 지난 2009년 3월에 호남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그때 19대 때 낙선을 각오하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그런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호남 불출마할 당시는 당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내홍을 앓을 때였다. 2009년 4.29 재보선에서 정동영 의원의 전주 덕진구 출마를 강행하면서 공천문제로 다들 때였다. 결국 정동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당선되면서 정세균 전 대표는 정치적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당이 어려웠고 중진들이 살신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이 (당시 선택을) 잘한 선택으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수도권 출마선언을 지금 한다면 별로 빛이 안 났을 것”이란 생각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 빅3로서 대권주자로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해 그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권력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 대권보다는 의회권력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권보다는 19대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과 빅 매치 한번 하면 좋다. 나는 전국적인 국민의 관심도 받고 관심을 것 같다. 정치인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괜찮지 않겠나?”라며 박 위원장과 종로 대결을 희망했다.

**종로, 1988년 13대 이후 6번 총선서
아당이 한 번도 못 이긴 곳**

지난해 정 대표께서는 “총선과 대선 승리의 밑알이 되겠다”면서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지역구를 떠나 정치1번지인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셨다.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나섰는데 이러한 결심의 배경은?

February 2012_049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했다. (2009년 4.27 재보선 정동영 의원 전주 출마 관련) 그러기 위해서 나도 앞장서겠다는 마음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 판단한 것 같다. 오히려 수도권 출마선언을 지금 한다면 별로 빛이 안 났을 텐데...

최근 야권에게 유리한 정치상황이 펼쳐지면서 당의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긴 것에 대해 꼼수로 평가하는 지적도 나오는데?

상황이 변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지금도 종로는 어려운 지역이다. 지난 13대부터 18대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한번도 승리 못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제가 있어보니, 한나당 당내 세력 공고하다.

대권보다는 의회권력 교체가 더 중요... 수도권 승리에 기여하겠다

지난 4년 동안 민주당과 야권은 의회 소수파로 처절하게 패배를 맞았다. 그러면서 19대 의회권력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핵심은 수도권이다. 내가 호남의 안정적인 지역구를 당에 반납하고 올라오면서 쉬운 데로 갈 수는 없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저는 1988년 13대 총선부터 6번의 선거, 24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에서 1년10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곳 종로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87년 체제 성립 이후 치르진 총선거 다 패배한 곳이다.

종로는 상징적인 곳이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유권자들도 서민층부터 부유층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종로서 승리하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내가 어려운 지역으로 가 수도권 승리에 기여, 의회권력 교체를 해보자는 결심을 했다.

최근 김효석, 정동영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이 수도권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의원님께서는 일찌감치 수도권 도전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7월 무렵 종로 출마를 결심하시고 9월에 이곳에 사무실을 준비하셨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 데?

약 3년 전인 지난 2009년 3월에 호남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때 우리 민주당 지지도가 10%가 안 될 때였다. 19대 때 낙선을 각오하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그런 결심을 한 것인데, 지금 상황이 참한 선택으로 만들었다.

당시 당이 어려웠고 중진들이 살신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계속 패배하다 정 대표 체제로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비로소 거대한 반전을 이뤄냈다. 그 당시 소회를 밝혀 달라.

우리가 전국선거에서 세 번 연달아 졌지 않다. 2008년 총선거까지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18대 총선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이 일본의 민자당 식으로 장기집권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치부심하고 이명박 정권과 과감하게 싸우고, 저는 미디어법 단식투쟁까지 했다. 그러한 노력들이 6.2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6.2지방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패했으면 지금 정권교체 이야기도 못 한다.

당시 친노 전면배치문제로 당내 상황에서도 논란이 됐고 또 야권연대 등으로도 당시 대표로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평가인데 이를 알아주지 않는 데 대한 섭섭함은 없었는지?

좀 있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 받으려고 혹은 박수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명감으로, 어떻게든지 이 연대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도 7월 6일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이후 정말 밤낮없이, 365일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6.2선거서 승리해 다시 정권교체의 전기를 마련하느냐 였고, 모

든 의사결정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없었는데, 여하튼 민심이 천심이 돼서 국민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결국은 국민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지만 그때 당을 대표하고 있던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오는 4.11 총선서 야권이 수도권 승부에서 의욕을 갖게 한 장본인이시기도 하다. 종로는 대권으로 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승부처라는 시각도 있는데, 대권 출마 생각은?

저는 사실 대권보다는 의회권력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권 들어와 예산안, 4대강 사업, 언론악법, MB악법 등을 일방적인 날치기를 계속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권력 교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설령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후퇴한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19대 총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대선이 12월이어서 시기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그보다 총선에 모두가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 종로구 승리뿐 아니라 민주당이 수도권 승리를 하는 데, 총선의 전국적 승리에 정세균의 역할이 꼭 있도록 만들고 싶다.

박근혜, 종로서 빅 매치 한번 하자

종로구에는 기반이 별로 없을 텐데, 터를 잡은 지 5개월 동안 지역여론의 변화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느낌도 들었다. 활동을 좀 해보니까 반갑게 대해주는 분들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종로는 도심 속의 시골이랄까, 좋은 의미로 촌스러운 측면도 있다. (-전통적이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이 서로 인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 아닌가? 종로가 그러한 맛이 있다. 서울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과 정서가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 종로 같다. 제가 서울 강남에도 살아보고 광진, 마포 등 다른 곳에서도 살아 봤지만 그런 데 없는 게 종로에는 있더라.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종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5개월을 지내오며 일군 성과는?

종로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조금 알게 됐고, 열심히 활동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난 분들도 계시고 행사장 가면 얼굴 아는 분들이 제법 생겼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출마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 박 위원장이 수도권 출마를 결심할 경우 종로 출마가능성이 있는데?

박 위원장과 빅 매치 한번 하면 좋다. 나는 전국적인 국민의 관심도 받고 팬층을 것 같다. 정치인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팬층이 많겠나?

민주당에서 아직 예비경선이 남아 있고 그 이후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절차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내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잘 될 것이다. 제가 호남지역구를 당에 바치고 온 사람 아닌가? 그러한 것도 다 감안될 것이다. (-너무 느긋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제가, 명색이 중진이라는 사람이 너무 조급해질 수도 없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서도 호남물갈이론과 인적쇄신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내용이 예상되는데?

제가 호남의 인적쇄신에 기여한 것 아니겠나? 원래 항상 호남뿐만 아니라 인물교체도 있어야 하고, 정치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기풍도 진작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호남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호남의 경우 공천 받으면 당선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당선'이라고 하는 등식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그런 점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미리 적절한 수준의 인물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선의 중진의원들을 '구시대 인물'로 모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진 않은데?

최소한의 신진을 등용해 영입하고, 그들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면서 '새로운 인물, 신진도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감을 주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도 너그러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편히 가겠다고만 한다면 그와 같은 비판이 일 수 있다. (그렇다고) 경험 있는 사람들



정국 진단

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잡아치울 수 있겠나? 그것은 또 능사가 아니다.

'남부민주벨트', '분수경제론' ... 필요해서 주장했는데 현 상황 선다

일찌감치 '남부민주벨트론'을 주창하셨는데, 그 성과인지 최근 문재인 이사장, 문성근 최고위원 등이 나서면서 실제 PK 분위기 새로운 기운이 형성되고 있는게?

제가 뭔가 정치 좀 아는 사람 같지 않나?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선도한 의미도 있다. 그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상황까지 가리라고 생각은 못하고,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결국 이 상황을 선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야말로 남부민주벨트가 완성이 되면서 정권교체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는 전개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도 하고 있다.

'남부민주벨트론'을 내세울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낙수효과'에 반대하는 '분수경제론'도 같이 주창하셨는데, 지금은 다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분수경제론'에 대해서 저에게 저작권료도 안 주고 전부 다 써먹고 있다. 분수경제론은 1%의 특권경제가 아니라 99%를 위한 경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다들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분수경제론을 가지고) 저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데 대해서는 아쉽기도 하지만, 제가 주창한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정권교체 하는 데 기여한다면 꼭 제가 그 과실을 향유하지 않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도부가 親盧?... 민주 약진에 달가워하지 않는 그룹의 해석일 뿐



052 People

1월 15일 드디어 시민들의 참여로 지도부가 탄생했다. 전임대표로서 이번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원이나 국민들의 결정은 참 지혜롭다. 아주 잘 짜여진 것 같다. 이번에 한 80만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정권교체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방향으로 대세는 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3일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경선에서 2040세대에 버림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들 세대가 이번 민주통합당 전대에 대거 참여하면서 당이 거듭났는데?

우선 우리 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민주통합당의 문호를 개방해 열린 정당으로 가기 위해 노력한 측면도 있고, 사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준 측면도 있다. 한명숙 대표를 타박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봉주 전 의원을 못살게 굴어서 젊은 사람들의 정의감을 살아가게 한 현실적인 측면도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께서 '참여'를 계속 강조해왔지 않나? 그러한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신세대들도 이제는 참여를 통한 세상 바꾸기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이라고 본다.

이번 지도부 구성이 친노(親盧)의 부각으로 언론들이 부각하는데에 대한선?

(민주통합당을)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거나 우리 민주당이 약진하는 데 대해서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룹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순수하고 냉철하게만 보아지지는 않는다.

당 대표 재임시절 당 내부적으로는 친노라며 많이 공격받고 시달린 면도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때 저에게 별로 공격할 것이라곤 없었고, 뭔가 공격을 하긴 좀 해야겠기에 그렇게 만든 것이다. 민주세력 내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적통이다. 한 번도 한 눈 팔거나 열길로 간 적이 없고,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고, 정책노선도 잘 받아들였으니 그야말로 잘 계승한 당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한명숙 대표와 참여정부 내각에서 함께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에도 앞장섰는데 이번에는 대표로 선출됐다.

금년 4.11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간판 역할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명숙 대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 해온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저는 한 대표 체제가 이번에 만들어진 데 대해 적극 환영 한다. 한명숙 대표 체제가 성공하고, 우리가 꼭 4.11 총선 승리를 통해 의회권력을 교체하는 데 제가 역할을 하고자 한다.



관리형 대표?... 좋은 리더는 관리능력 있어야

그간 보이지 않는 많은 공헌들이 있어왔음에도 언론으로부터 관리형 대표로 평가받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글쎄, 관리 잘하는 것도 말이라... 좋은 리더는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기본이다.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잘 채워야겠다. 앞으로 가끔 사고도 치고 해야겠다.

한 대표의 향후 과제로 도로 열린우리당이 아닌 좀 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대들이 있다.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은 수권능력 있는 정책정당, 젊은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젊은 정당, 열린 정당으로 가야 하며 특히 지역적으로 남부민주벨트의 성공을 통해 전국정당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시민사회와 노동세력까지 다 참여했지 않았나? 99%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 가졌던 전통은 잘 유지하되,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용하고 모처럼 만들어진 민주당 외연확대를 잘 고착화하고 성공시키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한편, 이번 전대에 출마한 이강래 후보 등 당 일각에서는 여러 세력이 연합하는 형태의 당은 향후 분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부작용이 노정되지 않고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혁신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는 그것이 불가피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 베이스가 충분히 있는 반면, 우리와 통합한 다른 세력들은 당원 베이스도 없다. 이번과 같이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이 아니면 지분을 줄 수밖에 없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민주당 전 대표)

이번에 우리가 이룬 통합 중 내가 가장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지분 논의가 일체 없었다는 것이다. 전대도 지분 주지 않고 그야말로 열어놓고 경쟁한 것 아닌가? 지금 총선지분도 없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다른 정당도 지분 나누기 하지 않았나? 지분 나누기 없는 통합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합에 대한 국민 지지도 굉장히 높은 것이다.

거기에 국민이 '격정했는데 전당대회까지 멋있게 잘 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기대들이 우리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여하튼 이러한 통합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의 방식 말고 다른 마땅한 방식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또다시 노정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합집산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향할 국가는 문화와 복지국가 모델... 종로에서부터 힘 모아가겠다

종로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로는 자연과 역사, 전통, 문화 등 훌륭한 자산을 가진 곳이다. 과거 600년 동안 한국의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오는 600년도 종로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도 종로가 정치 일번지로서 역할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복지국가와 문화국가라고 생각한다. 종로로부터 복지국가의 모델을 서울 25개구로,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특히 문화국가 측면에서 종로가 당연히 그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문화국가로 가야 한다. 여기서 종로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종로가 당연히 선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종로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자부심, 오늘날 우리의 역할, 미래의 주인이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잘 소통하고 나누면서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다. ■

profile 정세균 민주당 의원(민주당 전 대표)

- 전북 진안(1950년)
- 전주 신흥고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쌍용그룹
- 15~18대 국회의원(전북 무주, 진안, 정수, 임실)
- 2005년 산업자원부 장관
- 2007년 열린우리당 의장
- 2008~2010년 민주당 대표
- 현 민주당합당 상임고문

의결번호	2012국선3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인천일보(인천일보, 경기인천일보)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정 홍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2년 2월 2일자 3면 「이윤성, 인천 중진의원 퇴진론 '찬물」 및 경기인천일보 2월 2일자 3면 「이윤성, 인천 중진의원 퇴진론 '찬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인천 남동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조사방법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윤성, 인천 중진의원 퇴진론 '찬물'

시민 1천명 여론조사 결과 발표...47% “다선의원 배출돼야”

인천지역 중진 국회의원 퇴진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윤성 (남동 갑)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한국 인텔리 서치에 의뢰, 인천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 결과를 내놨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답자의 47%가 ‘인천시가 중앙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다선의원이 배출돼야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 55%, 50대 49%등 고령자 층이 다선의원을 선호했으며, 40대 46%, 30대 41% 등도 다선 의원을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선 의원에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30대 41%, 40대 37%, 50대 34%를 보였지만, 60대 이상은 1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인천 출신 국회의장 배출론’을 내세우고 있는 이 의원은 특히 “응답자의 60%가 인천정치가인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이 배출한 국회의장은 지난 1961년 고 광상훈 씨가 유일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4·11총선에서 공약(21%)이나 경륜(11%)보다, 후보능력(50%)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성, 인천 중진의원 퇴진론 ‘찬물’

시민 1천명 여론조사 결과 발표 ... 47% “다선의원 배출돼야”

인천지역 중진 국회의원 퇴진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윤성(남동갑)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한국인텔리서치에 의뢰, 인천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 3.1%) 결과를 내놨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답자의 47%가 ‘인천시가 중앙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다선의원이 배출돼야한다’

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 55%, 50대 49% 등 고령자 층이 다선의원을 선호했으며, 40대 46%, 30대 41% 등도 다선 의원을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선 의원에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30대 41%, 40대 37%, 50대 34%를 보였지만, 60대 이상은 1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인천 출신 국회의장 배출론’을 내세우고 있는 이 의원은 특히 “응답자의 60%

가 인천정치인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이 배출한 국회의장은 지난 1961년 고 광삼훈 씨가 유일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4.11 총선에서 공약(21%)이나 경륜(11%)보다, 후보능력(50%)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신섭기자

hss@times.co.kr

의결번호	2012국선38(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시민사회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13-7 미래오피스텔 404호 대표이사 강 중 구
심의대상기사	시민사회신문 2012년 1월 30일자 1면 「노세극 정치경제평론집 “공생의 길”」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안산시 단원 을)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목이 드러나는 저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광고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공생의 길”

‘진보한길 33년’ 노세극 정치경제평론집

“지난 MB집권 4년의 경험은 MB와 한나라당

체제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역사의 정방향임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렇다고 DJ와 노무현 식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진보정치가 꽃 피워야 비정규직 문제도 사회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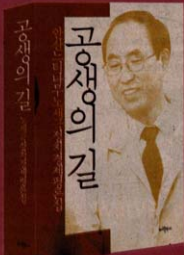
‘진보한길 33년’ 노세극 정치경제평론집

“공생의 길”

“지난 MB집권 4년의 경험은 MB와 한나라당 체제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역사의 정방향임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렇다고 DJ와 노무현 식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진보정치가 꽃 피워야 비정규직 문제도, 사회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전화: 031-413-0815 | 메일: winrok@naver.com

노세극 지음 | 자우출판사 | 416쪽 | 값 20,000원



의결번호	2012국선39(자심)
연론사	주식회사 아시아투데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34 인영빌딩 대표이사 백 석 기
심의대상기사	아시아투데이 2012년 1월 30일자 23면 「김성호의 행복한 반란」, 2월 6일자 23면 「김성호의 행복한 반란」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산 연제)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목이 드러나는 저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광고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성호의 행복한 반란

낯은 틀을 깨는 '작은 거인'의 삶과 행복이야기

“국민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반란에 필적하는 큰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반란을 꿈꿀 때, 난 행복하다.”

행복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의 실현, 경제적 반영, 국민의 안전 보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다 잘사는 나라를 의미한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누구나 안전한 삶을 누리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의결번호	2012국선40(자심)
언론사	유한회사 함평신문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9 대표이사 김재현
심의대상기사	함평신문 2012년 2월 7일자 5면 「이낙연의원, 19대 국회의원 출마에 즈음하여」 제하의 기고문
주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전남 영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계속 후보자가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익이 드러나지 않는 저술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기고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역을 위해, 어르신과 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19대 국회의원 출마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함평 장성 영광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 이낙연이 여러분 앞에 었드렸습니다.

감히 여러분의 신임을 다시 여쭙습니다.

저는 함평 영광 국회의원으로 12년, 장성 국회의원으로 4년을 일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과분하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지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의 발전, 지역민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진력했습니다. 지역과

국회에서 늘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3개 군에서 117곳의 저수지를 정비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선을 도왔습니다. 24곳의 종합개발 또는 정비사업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과 보건진료소를 돕고 어르신 복지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평에는 1,549억원 (광주 광산구 포함)이 투입되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도록 도왔습니다. 함평이 개발 촉진지구, 한우 산업특구로 지정받도록 협력했습니다. 국군병원이 함평에 유치되게 힘을 보탰습니다. 함평양민학살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저수지를 정비했고 많은 축산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이낙연의원, 19대 국회의원 출마에 즈음하여

지역을 위해, 어르신과 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회의원

존경하는 함평 장성 영광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 이낙연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감히 여러분의 신임을 다시 여쭙습니다.

저는 함평 영광 국회의원으로 12년, 장성 국회의원으로 4년을 일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과분하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지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의 발전, 지역민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진력했습니다. 지역과 국회에서 늘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3개 군에서 117곳의 저수지를 정비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선을 도왔습니다. 24곳의 종합개발 또는 정비사업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과 보건진료소를 돕고 어르신 복지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평에는 1,549억원(광주 광산구 포함)이 투입되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도록 도왔습니다. 함평이 개발촉진지구,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받도록 협력했습니다. 국군병원이 함평에 유치되게 힘을 보탰습니다. 함평양민화살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저수지를 정비했고 많은 축산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장성을 위해 일한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도 농협중앙회의 902억원짜리 호남권 저점 물류센터가 장성에 들어서도록 노력했습니다. 나노 산업단지 조성비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했습니다. 축령산의 휴양시

설을 늘리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잔디 산업에 국가지원이 본격화되도록 했습니다.

영광은 대마 산업단지가 지정돼 기반시설이 준비되고, 전기자동차 선도시로 선정되도록 도왔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개정해 영광에 해마다 370억원이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영광이 보리산업특구, 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되도록 협력했습니다. 영광대교가 곧 착공되며 칠산대교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반듯한 정치를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한번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 안팎에서 추태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오락가락하지 않고 한길만 걸어 왔습니다.

저는 분에 남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의원상'을 여덟 번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9년에는 전례없는 '최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장 품위있고 정확하며 공익에 맞게 발언한다고 해서 '국회를 빛낸 으뜸언어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노인회의 '노인복지대상',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의 '최우수의원상' 등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과 사무총장,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포함한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지역이 뚜렷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유치는 진전이 없습니다.

지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더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함평 장

성 영광의 3개 군을 연계하는 산업과 관광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어르신과 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하지 못한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에는 빛그린 산단이 활성화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동함평 산단과 농공단지가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평만을 전남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해 발전시키겠습니다. 육가공 공장 등의 유치를 위해 함평군과 협력하겠습니다. 한우산업단지가 내용을 갖추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화작물 등 함평의 친환경 농업과 연이어임이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겠습니다.

장성에는 농업 거점물류센터가 차질없이 완성되고 가동되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나노산단이 완공돼 실속있는 기업으로 채워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축령산을 중심으로 하는 휴양관광 종합개발을 위해 장성군과 협력하겠습니다. 근교농업과 잔디산업, 내수면 어업의 발전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영광은 전기자동차클러스터가 조성되고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로 발전하도록 영광군과 협력하겠습니다. 원자력의 학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해안도로를 연장하고 섬을 적절히 개발해 전남 서해안 관광벨트의 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특산 농축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영광대교와 칠산대교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격에도 흠이 많습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자주 뵈고, 여러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지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기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4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청타임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85 광정빌딩 6층 대표이사 박재규
심의대상기사	충청타임즈 2012년 2월 1일자 2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국립청주미술관 확대 추진」 및 2012년 2월 1일자 3면 「다이아 게이트 몸통 캐내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청주시 흥덕구 을)와 관련하여,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주장을 같은 날짜, 두 개면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부각시키고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국립청주미술관 확대 추진”

노영민, 정형민 관장 면담서 의견일치… 예산확보 노력키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수장고가 전시기능의 ‘국립청주미술관’으로 확대 될것으로 보여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31일 국회에서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청주수장고가 단순 수장고 기능을 넘어 전시 기능을 위한 국립청주미술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청주수장고가 단순 수장고 기능만을 위한 것이면 곤란하다”며 “전시 기능 및 이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나아가 국립

청주미술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 관장이 동의하면서 향후 추가 예산확보 등에 국립현대미술관측과 노 의원이 적극 나서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 자리는 지난해 말 통과된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수장고 신설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정형민 국민현대미술관장은 전시, 교육기능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노 의원에게 현재 계획된 청주 수장고의 사용 면적이 1만9,830㎡(6000평)인데 그 중 9,900여㎡(3,000평)은 수장고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평은 전시와 교육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확정했다.

더불어 정 관장은 이달 중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화해서 청주시와 MOU를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노영민 의원은 “청주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면 지역 작가들은 물론이고 청주시민들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

이라면서 “향후 국회차원의 예산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노영민 의원은 지식경제부 정만기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 논의를 했다. (후략)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국립청주미술관 확대 추진”

노영민, 정형민 관장 면담서 의견일치... 예산확보 노력키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수장고가 전시기능의 ‘국립청주미술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31일 국회에서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청주수장고가 단순 수장고 기능을 넘어 전시 기능을 위한 국립청주미술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청주수장고가 단순 수장고 기능만을 위한 것이면 곤란하다”며 “전시 기능 및 이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나아가 국립 청주미술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 관장이 동의하면서 향후 추가 예산확보 등에 국립현대미술관측과 노 의원이 적극 나서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 자리는 지난해 말 통과된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수장고 신설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전시, 교육기능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노 의원에게 현재 계획된 청주수장고의 사용 면적이 1만9830㎡(6000평)인데 그 중 9900여㎡(3000평)은 수장고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평은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 할 것

이라는 계획도 확정했다.

더불어 정 관장은 이날 중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화해서 청주시와 MOU를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노영민 의원은 “청주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면 지역 작가들은 물론이고 청주시민들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향후 국회차원의 예산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노영민 의원은 지식경제부 정만기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 논의를 했다.

/남경훈기자

다이아 게이트 몸통 캐내야

권력 핵심실세 기획·사정라인 은폐 의혹 증폭

노영민 의원, 검찰 배후 등 엄정한 수사 촉구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사진)은 3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을 쌍끌이로 끌고 가는 것은 한쪽은 부패고 다른 한쪽은 무능이다”며, “최근 문제되는 CNK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능에 대해 서민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은 서민경제의 파탄과 골목상권까지 무자비하게 침탈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정책”이라며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파국, 균형발전 후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가 무능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CNK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서는 “CNK사건을 주도한 오덕균씨와 이번엔 문제가 된 경찰 총경이 청주사람이라 지역에서 관심이 높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충북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가 부패와 무능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CNK사건 배후를 둘러싸고 국민적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CNK사건 핵심자들의 고향인 청주의 민심”이라며, “지역에서는 정·재계와 권력 핵심이 한통속이 돼서 이 사건을 일으켰으며, 1만 여명의



개미투자자들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CNK사건의 경우 감사원이 최근 5개월이나 조사하면서도 핵심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면서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권력 핵심실세가 기획했고, 청와대가 비호했고, 감사원은 방관하고, 금융당국은 발뺌하고, 사정라인은 은폐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남경호기자

namkh@cctimes.kr

의결번호	2012국선45(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 LD그린토피아 대표이사 임재울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2년 2월 7일자 5면 「당 정체성 안 맞더라도 당선될 사람에게 공천 줘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남양주시 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 후보자의 공천심사위원으로서의 근황, 선거 이슈에 관한 의견, 의정 활동, 선거 운동 등을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당 정체성 안맞더라도 당선될 사람에게 공천 줘야”

한동훈이 만난 박기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X맨’, ‘토건파’, ‘토건마피아’ ….. 진보성향의 일부 트위터러안이 요즘 그에게 붙이려는 딱지다. 온건·협상파라며 일반적으로 던지는 야유다.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을 텐데 ‘쿨’ 했다. “남양주시의 시대정신은 토건”이라는 한마디로 끝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기춘. 그는 구질 구질한 변명을 싫어한다.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선이 굵은 의리파다. 17년 전 경기도의원 때도 그랬다. 나를 ‘깡패’라고 불렀다. ‘골프 배우

라’며 중고 골프채를 분양해 주기도 했다. (작심삼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하고 골동품으로 보관중이다)

6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통화중’이었다. 1시간 내내 휴대전화 가 쉴 새 없이 몸살을 했다.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천심사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는 전화와의 싸움이었다. 그는 주성영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화만 받았다. 하지만 끊임 없는 진동 소리는 흐름을 방해했다. 한 호흡에 가야하는 ‘숏타임’이라서 더 그랬다. 맥이 뚝뚝 끊겼지만 덕분에 오랜만에 직설화법이 통했다. (후략)

한동훈이 만난 **박기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 정체성 안맞더라도 당선될 사람에게 공천 줘야”

[illegible]

—당 내부 공심위원 중 7명 중에 3명이 경기도 출신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한명숙 대표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시흥시는 선거구 2곳인데,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모두 공심위원이다.

“한 동네에 둘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남양주에 다 말고 최후석 의원이 들어갔더니 그는 고사했을 거다. 시흥을 위해서도 안 좋다. 한 지역에서 둘이 되면 가치가 없다. 조정식 의원이 양보했어야 했다. 조 의원이 백원우 의원보다 (지역기반에) 강하니 그 둘 다 공심위원을 받는 바람에 지역이 비게 됐다. 보니까 조정식도 양보해 줄 수 없다.”

—공정위원은 공헌 부담이 적을 것 같다.
“공정위원들은 대부분 단순공헌이 될 것 같다. 다
수 후보가 출마한 곳은 힘들겠지만 나 같은 경우나
조경식 의원 같은 경우 단순후보가 될 것이다. 내 쪽
에는 한 명 출마했는데 장호진국대 출신이다. 지난번
선 거 때 15% 득표했다. 나는 50% 가까이 득표했다.
이런데 이성과합당을 통해 들어온 것인데 나와 상대
가 안 된다.”

박기춘, 조성식, 백원우 '경기도 3인방' 중 박 의원은 인위파로 대성자로 선택한 이유다. 조 의원과 백 의원은 권력에 관계없는 불분한 존재였다. 공심위원은 자충수쯤 두거나 곧바로 경정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단순 공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해(自戕)만 하지 않으면 '백'은 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도 그렇다. 또 당시의 세도(世道)에서 득주(得主)다. 아작까지 경정자가 없다. 박 의원의 시를 곱(誦)과 박 의원의 남양수 읍(邑)은 경정자가 단 1명뿐이다. 시책으로 '박 티자'는 경쟁중인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한참 앞질러 점도다.

—경기도 대표가 3명이어서 의견이 엇갈리면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서로 잘 맞는다. 성향이 비슷하다. 조정식 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돼 도움을 주기로 했다.”

“어떤 기준으로 육역을 기릴 것인가.”
“확실히로 정채성 등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민심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사명이라면 큰 결함이 없는 이상(公愼)을 죽인다. 꼭 정당의 정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로부터 표를 많이 받아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정치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이 많다. 서류심사로 한 번 걸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후보 경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경쟁력이 비슷한 사람 3명이 있는데 1명을 탈락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굳이 결선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결

후보들이 합의를 하면
모바일 투표를 허용해 줄 생각이다.
5명이 출마한 곳이라면
우선 서류심사 등에서 2-3명 정도
압축한 후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를 하면 된다.
전략공천은
야권연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5곳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는 단순후보, 단순공천이 될 수 있다. 전락공천과는 다르다. 단순후보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여야 모두 전국을 실시했다. 여론 들어온 것이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 4인을 해박사 기본적으로 '어느 동네 어느 후보' 하면 안다. 하지만 새로운 공심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면접을 하는 것이다.

—예비후보들의 최대 관심사는 모비일 투표다.

“전국 245개 지역구 중 30% 이내에서 전락공천 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 대부분 경선을 하게 될 것이다. 모바일 선거를 해야 한다. 그 지역 사법관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편다. 시정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새누리당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가능하. 농촌이나 지방은 힘들다. 노인이 모바일로 가서 있겠나? 힘들다. 후보들이 합의를 하면 모바일 투표를 허용해 줄 생각이다. 예컨대, 5명이 출마한 곳이라면 우선 시류 심사 등에서 2~3명 정도로 압축한 후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를 하면 된다.

—경선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의산청 등의 절차를 통해 거를 수 있다. 예전에는 콜린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마지막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야권연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5곳 내외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당 차원에서 2, 3곳 야권 연대를 의

을까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 2-3곳, 아군 연대를 위
해 2-3곳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5곳 내외는 전략공
천지역이 될 것 같다. 당내에서 필요한 지역도 전략
공천이다. 예를 들어 병책 을(乙) 같은 곳은 저쪽(동

합진보당)에서도 완하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그 곳에 도토리 키재기 하듯 비슷비슷한 후보만 있다면 장

공은 보내라고 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없다. 그렇다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 수도 없다. 줄이는 만큼 늘리는 것이 어찌에 맞다. 공교롭게도 영남이 3 개 된 것은 통계를 대상 1, 2, 3위가 영남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초남이었다면 줄이자고 했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은 무리하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기득권을 버린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새신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경기도내 5곳을 분구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건 맞지가 않다. 내 지역구만 해도 천안보다 인구가 많다. 그런데도 천안을 늘리라고 하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 해줄 수는 없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원 출신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의원과 더불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에스컬레이터

이더형 정치안이다. 지역 예기로 화제를 돌렸다.

*공정적으로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새로운 것
도 필요하지만 국민과 지출할 수에서 같이 활동한 사

조용호 의원은 국민과 민생정 부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도 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역할을 같이 느낄 수 있고, 민생법안을 만들 수 있다. 도의원 한 사람들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활동했고 국민들의 역할을 잘 알

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한다면 이게 전문성을 살리는 일이다. 나는 지방의원 출신이나 자치



의결번호	2012국선4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송파신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 송암빌딩 4층 400호 대표이사 이 동 휘
심의대상기사	송파신문 2012년 2월 9일자 2면 「김영순, '최초는...' 일본어판 출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시 송파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목이 드러나는 저술이 발간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영순, '최초는...' 일본어판 출간

19대 국회의원선거 송파 갑 선거구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 구청장 재직 당시 펴낸 여성들을 위한 자기계발서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의 일본어판을 최근 발간했다.

김영순 예비후보는 “일본 여성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쓴 책인데, 일본 출판계에서 관심을 가져 놀랐다”며 “한국 여성을 위한 책이 일본 여성까지 감동시킨다면 더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의 일본어판은 ‘알파 걸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출판사 요시모토북스에서 발행했다. ‘알파 걸’(Alpha Girl)이란 공부나 스포츠·리더십 등 다

방면에서 남성보다 우수하고 사회에서 큰 활약을 펼치는 적극적인 여성을 말하는 용어로, ‘알파 걸’ 1세대인 김영순 예비후보가 자신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생존 노하우와 성공 마인드를 40개 테마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구청장으로 4년간 송파구청을 이끌어 온 김 예비후보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고, 창의적인 혁신정책으로 지자체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배 여성 지도자에게 정치·행정의 길을 열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 예비후보는 이후 (사)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과 대통령 여성특별보좌관을 맡아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문제 등 여성정책 개발에 앞장서 왔다.



19대 국회의원선거 송파갑선거구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

김영순, '최초는...' 일본어판 출간

구청장 재직 당시 퍼낸 여성들을 위한 자기계발서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의 일본어판(사진)을 최근 발간했다.

김영순 예비후보는 "일본 여성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쓴 책인데, 일본 출판계에서 관심을 가져 놀랐다"며 "한국 여성을 위한 책이 일본 여성까지 감동시킨다면 더 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의 일본어판은 '알파 걸'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출

판사 요시모토북스에서 발행했다. '알파 걸' (Alpha Girl)이란 공부나 스포츠·리더십 등 다방면에서 남성보다 우수하고 사회에서 큰 활약을 펼치는 적극적인 여성을 말하는 용어로, '알파 걸' 1세대인 김영순 예비후보가 자신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생존 노하우와 성공 마인드를 40개 테마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구청장으로 4년간 송파구청장을 이

끌어 온 김 예비후보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고, 창의적인 혁신정책으로 지자체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배 여성 지도자에게 정치·행정의 길을 열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 예비후보는 이후 (사)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과 대통령 여성특별보좌관을 맡아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문제 등 여성정책 개발에 앞장서 왔다.

의결번호	2012국선47(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일요시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대표이사 이 용 범
심의대상기사	일요시사 2012년 2월 12일자 14~15면 「'노무현 가치' vs '이명박 가치'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시 중랑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 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정견(政見), 출마 계기 및 포부, 명의를 드러난 저술 등을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노무현적 가치’ vs ‘이명박적 가치’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일요초대석〉양정철 예비후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공격들을 온 몸으로 막아온 사람, 퇴임 후 “자네. 봉하로 내려와 나를 좀 도울 수 있겠는가. 자네가 나를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라는 한마디에 두말없이 내려가 마지막까지 신의를 다한 ‘의리의 남자’ 양정철이 정치판에 뛰어 들었다. 그것도 “정치하지 마라!”는 노 전 대통령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기자는 ‘마지막 말씀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인터뷰 내내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똘친 그의 모습에 그 의문은 기우에 불과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양정철 민주통합당 중랑을 예비후보를 만나 그간의 소회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힌 양정철 예비후보는 인터뷰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언급 될 때마다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와 반대로 이명박 정권을 평가하고 자신의 포부와 각오를 밝힐 때에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결연한 눈빛을 보인 양 예비후보였다. 최근까지도 꿈속에서 입관 전 마지막 모습이 꿈속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그에게서 그리움과 사죄의 마음, 지켜드리지 못한 죄송함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자청했다”는 양 예비후보는 서울 중랑구에 출사표를 던지고 정권교체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략)

2012년 2월 12일(일요일) 제840호

인터뷰

일요시사 15

가치' 제대로 한번 붙여보자!

▲ 정말로 문 고문은 정치를 하기 싫어했다. 세상 밖으로 나와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달라! 간곡하게 부탁드려 여기까지 오셨다. 저에 대한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많지 않은 분이 많았다. 이번 총선이 중요하니 열심히 해서 함께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공기를 주겠다.

- 참여정비 시절 홍보기획비서관을 3년 반 넘게 지내며 보수언론의 집중 타격을 받았는데.

▲ (웃으며) 또 하고 싶지는 않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또 그 상황이 온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와 언론의 비판이 너무 과도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다. 대통령께서 그런 참사를 저에게 기대하신 것도 있고 직책상 할 수밖에 없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주권을 지키는 일인데... 가급적으로 그런 일들은 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주권이 계시지 않고... (눈물 글썽). 개인적으로 당시 힘들고 불편했던 기자들과는 다 화해하고 관계를 풀었다.

- 이명박 정권을 평가한다면.

▲ 혹독한 평가이지만 하지만 '한국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 생각한다. 어느 정권보다 공과는 다 있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내세울 업적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너무 많은 공천에서 국민들은 실망시켰다. 역사에 남을 공과가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다. 지난 10년 동안 큰 성과였던 민주주의와 복지·평화를 무너트렸다. 그런 차원에서 '최악의 정권'이라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 최근 당에서 '여성 15% 의무공천안'을 내놓았는데 입장은 어떠한가.

▲ 정책적 있고 훌륭한 여성 정치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치인이 조금 더 배려 받고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 남성들이 무조건 기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무조건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 남성들이 배타적인 차별을 받는 결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 당내 경선시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료제 받아들이는지.

▲ 받아들이겠다. 다만 국민참여경선은 많은 좋은데 허점이 있다. 국민참여

경선이라 해서 완전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은 아니다. 당원들과 당원들을 중심으로 출마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조직선거, 동원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인 여론조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시민여론을 완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조건 수용은 하지만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11 총선을 예상해 본다면.

▲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통합을 이뤄냈다. 이번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시민들이 여론을 모아 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당에서도 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대통령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야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차이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정당의 가치는 집권을 통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야당으로서의 견제역할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고 본다. 반드시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을 예상해본다면.

▲ 지금의 추세로서는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얻을 것 같다. 박 위원장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에 실패하면 대선뿐이 아니게 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엄청난 변곡점을 겪으며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야권은 강력한 두 주자 안철수와 문재인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대선까지 갈 것으로 여겨진다. 두 사람이 서로간의 탈목과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대립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아름답게 화합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힘을 합치는 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힘을 합치느냐에 따라 야권 집권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문 고문의 재역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훨씬 공고해질 것이다. 문 고문의 대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또 또한 그런 역할에 일조하기 위해 정계에 뛰어든다.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평가한다면.

▲ 개인적으로 박 위원장이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생각으로 국민에게 앞으로 할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대중정치 시대다. 박 위원장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공약을 국민에게 말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하는 것도 문제다. 박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집권당에 있으면서 당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대주주였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다 지고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집권당은 대통령과 책임을 함께 지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비판에 대해 박 위원장은 빠져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인기 떨어지고 욕 들으니 당명씩 바꾸고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한다. 정치적 신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 가장 책임자이자 인물이지만 모든 반사이익을 혼자 다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년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이 이뤄진다면 박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지려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책임을 뉘지, 자신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말이다.

- 총선을 맞이하는 각오.

▲ 일부러 어려운 싸움에 어려운 지역을 택했다. 몇지기를 이기고 싶고 압승하고 싶다. 그 승리의 영광을 제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고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만들고 싶다.(눈물을 글썽이며 잠시 침묵 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웃음)

이우현 기자

jph1313@ynews.co.kr



"MB정권 심판하고 대통령 바꾸기 위해 어려운 싸움 자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 될 때마다 붙여지는 눈시울 "이름다운 명예회복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명감"

고 정치신인과 역관들이 출마를 선언해 열심하고 있으나 결함은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고문을 필두로 한 부산·울산·경남이 적정지역에 이곳이 진원지가 되어 호남과 충청,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바람이 파파력 있게 본다면 과반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한다.

- 민주당협당이 결핵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결핵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고 새 세인을 잃어 티트라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지적에 동의한다. 혁신과 통합의 정신을 대선까지 끝까지 밀고 가야한다. 혁신이 먼저다. 당에 몰드하고 진부한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변화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이 살아있고 참신하고 신의 있게 정치하고자 하는 좋은 후보를 많이 발굴해 공천성과 전략적 판단이 잘 결부 되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공천이 이어져야 한다. 통합도 서로 배려하고 관용으로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공존의 자세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섣불리, 자리문제로 다툼이 이뤄지고 그런 것들로 국민들이 실망할만한 예전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면 한방에 졌다고 본다.

-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이 중요하다. 통합에 대한 입장은.

▲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차이를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합쳐서 제안하는 정책이 100을 갖는다면 합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것이 훨씬 소중하고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된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통합만 외친다는 것은 무례하고 결례다. 통합의 의지를 대선까지 계속하려는 안 된다. 단순한 후보단일화의 힘은 미약할 수도 있다.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처음부터 전략적인 스킴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 언론인 출신으로서 총선에 대한 입장은.

▲ 국회에 입성한다면 문방위에서 활동해 해직기자 복직과 조중동 총면 특혜에 대한 청문회 두 가지는 꼭 이뤄내고 싶다. 청와대와 방통위가 공정하게 심사해서 사업권을 정당하게 줬는지 꼭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사과정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특혜가 있었거나 불합리한 비리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리과정을 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전과는 공공재이고 국민자산이다. 그것을 정권이 특정 매체에 담금처럼 활용하기 위해 사업권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다면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

의결번호	2012국선5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인매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3 대성빌딩 4층 대표이사 남 정 옥
심의대상기사	경인매일 2012년 2월 20일자 9면 「새누리, 김태원 독주체제... 경쟁자 없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을 소개하면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의정 활동 등을 단정적인 표현의 제목과 함께 지나치게 상세하고 우호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누리, 김태원 독주체제...경쟁자 없어

국회 참석율 1위 · 지역성과 무시못해... 야권 '고심'

덕양을 지역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최성 현 고양시장과 5.8% 득표율이 앞서며 승리한 곳으로 고양 덕양을의 새누리 김태원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역구와 밖에서 모두 고르게 “경쟁자 없는 강력한 19대 의원”으로 손꼽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3명의 후보 중에 뚜렷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정치인 김태원 의원’ 4년간의 초선의원 의정활동

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태원 의원의 ‘의안표결 참여율 국회의원 1위, 국회 출석률 100% 의원 1위’의 경이로운 성적은 여야 타 후보를 긴장하게 만든다. 김태원 의원이 인터뷰에서 “다행히 여의도가 가까워 자주 갔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변함없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가 친박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의 국민의 머슴 같은 정치인 본연의 초심을 잃지 않은 자세로 인해 야당의 4명의 후보가 어려운 19대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김태원 의원은 보좌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받고 만났을 때, 지역의 현안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후략)

고양 덕양을

새누리, 김태원 독주체제... 경쟁자 없어

국회 참석율 1위 · 지역성과 무시못해...야권 '고심'

덕양을 지역은 2008년 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최성 현 고양시장과 5.8% 득표율이 앞서며 승리한 곳으로 고양 덕양을의 새누리 김태원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역구와 밖에서 모두 고르게 '경쟁자 없는 강력한 19대 의원'으로 손꼽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3명의 후보 중에 뚜렷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지역주인'을 섬기는 정치인 김태원의원' 4년간의 초선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태원의원의 '의안표결 참여율 국회의원1위, 국회 출석률 100% 의원1위'의 경이로운 성적은 여야 타후보를 긴장하게 만든다. 김태원의원이 인터뷰에서 "다행히 여의도가 가까이 자주 갔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변함없이 맡아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가 친박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의 국민의 마음 같은 정치인 본연의 초심을 잃지 않은 자세로 인해 야당의 4명의 후보가 어려운 19대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김태원의원은 보좌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받고 만났을 때, 지역의 현안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30년 당료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는 답변은 정석대로 정치를 하는 그의 당연한 답변 같았다. 그는 GTX가 지나가는 대곡역의 환승센터에 대해 "대곡환승센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히며 "경의선과 3호선에 9호선과 GTX가 지나게 되어 역세권 개발은 따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없어진 경의선 '강매역'을 "올해 3월경에 공약대로 착공하게 됐다"며 "서정마을과 소망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로 인해 도시가스가 혜택을 못받는 화전동, 삼송동, 행주동 주민을 위해 노력한 점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은 관계로 여의도와 강남행 버스 신설에 대해 노력한 점은 부지런한 그의 성격과 닮아 있었다.

아직도 초중학교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문제점을 위해 도시까지 만나며 해결한 그에게 지역 교장은 졸업식에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역행사장으로 변해버리다시피 한 행주산성의 발전방향에 대해 "국가유적지로 승격해야 한다"며

"자랑스런 우리 역사의 유적지로 주변의 자연부락의 생활권이 개선되도록 국가적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경에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인 진종설(57) 전 의장이 공천경쟁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장이 최근 일산서구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쳐 김태원 현역 국회의원에 맞서 공천을 신청하기란 버거워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단 한 명이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음이 최근 밝혀졌다. 김태원 국회의원의 공천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초선의원의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세는 이미 정평이 나왔다. "남들은 수상하면 자랑하느라 난리인데 한사코 자랑하길 거부한 의원님 때문에 겨우 힘겹게 살뜰해 현수막에 수상 사실을 적을 수 있었다"는 비서관의 노고(?)가 있었기에 김태원의원의 수상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다.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진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부차이와 개발이 차이가 나는 고양 덕양을 지역의 현안을 적절하게 맞추는 김태원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지역적 특색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의 견제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정감사 때 해킹사범이나 다른 현안 때 새누리당 대표로 자주 출현한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고양시민이 많을 정도로 뛰어난 의정보다는 그림자처럼 자전거를 애용하며 겸손한 의정활동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지역 평가와 주민들 사이에서 줄이져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강력한 현역의원인 김태원의원에 맞서는 야권의 후보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3명의 민주통합당 후보 중 누가 나서도 서민적이면서 머슴처럼 우직하게 지역민을 위해 뛰어나는 김태원의원에 눌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된다. 인가영합주의의 의원이라면 지역 현안에 무심한 채 국회에서의 일에 치중한다고 공격할 수 있지만 국회에도 출석하다 못해 최고로 잘 출석하고, 지역의 현안에도 부지런하게 뛰어나는 모습에 흠집을 잡아 공격하기도 버겁다.

김태원의원의 의안표결 참여율 국회의원1위, 국회 출석률 100% 의원1위 성적에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제 2자유로 개통 등 지역성과를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두영(47) 현 민주당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 현 민주당 민생경제 특별위원장 이치범(57) 전 노무현 정부 환경부장관,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 문용식(52) 현 민주당인터넷소통위원회위원장, 전 나무람 대표이사가 공천장을 받기 위해 뛰고 있다. 3명 모두 치열한 내부 접전이 예상돼 경선을 통해 최종 민주통합당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진보통합당〉

강명룡(43) 현 고양 비정규직센터 대표, 현 민주노총 고양파주 지도위원회 집행부합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서 치열하게 야권표와 대결양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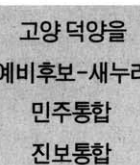
새누리당 김태원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송두영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이치범 예비후보

고양 덕양을
예비후보-새누리
민주통합
진보통합

민주통합당 문용식 예비후보



진보통합당 강명룡 예비후보

의결번호	2012국선57(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2년 2월 18일자 A27면 「김기삼 씨의 미국 망명을 보고」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시 동작구을)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기삼 씨 (前 안기부 직원)의 미국 망명을 보며

〈기고〉 정몽준 국회의원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기삼 씨가 작년 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으로부터 망명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13일 동아일보에 보도됐다. 김 씨는 2003년 초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알려진 것보다 많이 주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 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망명을 신청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가 덮고 가려고 했던 대북정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주미 대사관 직원 등이 정

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후 귀국하면 신변이 위태롭다며 미국에 망명한 경우는 있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은 마치 한국이 아직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인 듯 묘사하고 있다. ‘김 씨에게 신변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한국 정부는 체포령을 내리고 통신을 감청하고 여행을 제한해 신변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볼 때 한국 정부는 그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미국 지방에 있는 이민법원 판사가 한국 정치 상황을 알 리가 없다. 그는 자신에게 제공된 증거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처럼 수치스러운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처럼 긴밀한 동맹국 간에 정치적 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후략)

| 기 고 |



정 동 준

국회의원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기삼 씨가 작년 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으로부터 망명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13일 동아일보에 보도됐다. 김 씨는 2003년 초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알려진 것보다 많이 주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 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망명을 신청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가 덮고 가려고 했던 대북정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주미 대사관 직원 등이 정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후 귀국하면 신변이 위태롭다며 미국에 망명한 경우는 있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은 마치 한국이 아직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인 듯 묘사하고 있다. ‘김 씨에게 신변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한국 정부는 체포령을 내리고 통신을 감청하고 여행을 제한해 신변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볼 때 한국 정부는 그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김기삼 씨의 미국 망명을 보며

〈前 안기부 직원〉

미국 지방에 있는 이민법원 판사가 한국 정치상황을 알 리가 없다. 그는 자신에게 제공된 증거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처럼 수치스러운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처럼 긴밀한 동맹국 간에 정치적 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다. 김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김정일에게 천문학적 뇌물을 건넸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근으로 다 쓰러져 가던 김정일 정권 연장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무장에 쓰였다”는 것이다. 김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진위를 가리려면 많은 검증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외국으로 망명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김 씨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언젠지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그의 대한민국 여권 갱신 신청을 두 차례나 거부했고, 그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자유롭게 증언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리 없다.

북한은 또 한 번의 권력세습 과정을 거치면

서 내부 단속에 혈안이 돼 있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고 어떤 도발을 해 올지 모른다. 부상하는 중국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쇠퇴하는 미국이 얼마나 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야당은 정당 강령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당시 총리를 지낸 제1 야당 지도자는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실정이다.

대북 포용론은 과거만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들어 여권과 야권 모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도 5·24 제재 조치 이후 금지됐던 개성공단 설비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북 제재가 풀리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햇볕정책의 효과나 영향에 대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나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다. 김 씨 사건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북한동포들은 품어야 하지만 무슨 희생이 따르더라도 북한 정권에는 대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김 씨의 말이 귓가에 울린다.

의결번호	2012국선58(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43번지 대표이사 김 인 영
심의대상기사	서울경제 2012년 2월 20일자 A38면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진화」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북 영주시)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주의 꽃’ 선거의 진화

〈로터리〉 장윤석 새누리당 위원

올해는 지난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4·11 총선과 12·19 대선이 연이어 실시되는 ‘선거의 해’다. ‘산업화’와 더불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현이 ‘민주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장은 선거문화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여성 참정권 문제였다. 유럽과 미국 등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오랜 나라들도 20세기에 들어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여성 참정권을 부여

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돼온 선거문화가 선거의 해를 맞이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터넷 게시판, 개인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저력이 선거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사실상의 본선’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선거문화의 급속한 변화에도 이면(裏面)은 있는 법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투표 거부 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후략)

‘민주주의 꽃’ 선거의 진화

로터리



장 윤 석
새누리당 의원

올해는 지난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4·11 총선과 12·19 대선이 연이어 실시되는 ‘선거의 해’다. ‘산업화’와 더불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현이 ‘민주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장은 선거문화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여성 참정권 문제였다. 유럽과 미국 등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오랜 나라들도 20세기에 들어서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여성 참정권을 부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돼온 선거문화가 선거의 해를 맞이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터넷 게시판, 개인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저력이 선거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사실상의 본선’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선거문화의 급속한 변화에도 이면(裏面)은 있는 법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투표 거부 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규상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찬반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투표율이 유효 투표율인 33%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쁜 선거, 착한 거부’라는 기상천외한 구호를 내세우며 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다. 결국 투표율이 25.7%에 그치면서 주민투표는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여’는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말았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투표 거부’를 외쳤다는 점에서 이 일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선거 역사에도 남을 ‘사건’이었다.

야당이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도 같은 관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모바일 투표는 야당 전당대회에서 도입돼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대리투표와 공개투표가 가능하고 노년층과 장애인층이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모바일 투표를 선거 선진화의 상징인 양 주장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선거문화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진화해야 옳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결번호	2012국선59(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22일자 A33면 「주택정책 목표는 삶의 질 개선」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시 동작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주택 정책 목표는 삶의 질 개선

〈기고〉 정몽준 국회의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도심권의 재개발·재건축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천명하면서 주택 경기 침체가 오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분가·기존주택 멸실 등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매년 수도권에서만 25만호, 전국적으로는 약 43만호 발생한다. 택지 공급에 한계가 있는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기존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이다. 신규 수요의 절반 정도를 재개발·재건축

으로 해결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피할 길이 없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주거 면적은 33㎡로, 1990년 9㎡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이 5000달러 수준, 우리나라는 2만달러 수준인데도 1인당 주거 면적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미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007년에 약 63㎡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연간 5%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2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 수준에 이르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20년 후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이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증가해야 한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 (후략)

기고

주택 정책 목표는 삶의 질 개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도심권의 재개발·재건축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천명하면서 주택 경기 침체가 오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분가·기존주택 멸실 등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매년 수도권에서만 25만호, 전국적으로는 약 43만호 발생한다. 택지 공급에 한계가 있는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기존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이다. 신규 수요의 절반 정도를 재개발·재건축으로 해결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피할 길이 없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주거 면적은 33㎡로, 1990년 9㎡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이 5000달러 수준, 우리나라는 2만달러 수준인데도 1인당 주거 면적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미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007년에 약 63㎡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연간



정 몽 준
국회의원

5%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2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 수준에 이르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20년 후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이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증가해야 한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는 신규 주택 단지 건설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감기로 열이 있는 것을 증세라고 해야지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열을 내리는 처방으로 해열제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근본 처방은 감기의 원인인 바이

러스를 몰아내는 치료약이다. 주택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재개발·재건축을 제한하기보다 주택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에도 연평균 2만1300호가 공급 가능해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공급 물량인 2만2000가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근거 자료 시기로 삼은 지난 5년에는 사상 초유의 전·월세 대란이 있었다. 이래서는 ‘손가락만 차다보고 달은 보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의 터전인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質) 개선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며,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다루면서 생각해야 할 질문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이야말로 정책 수립자의 소신이나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한 주택 정책을 검토할 때이다.

의결번호	2012국선6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김포일보(김포신문) 경기 김포시 사우동 288 한강빌딩 4층 대표이사 박 태 운
심의대상기사	김포신문 2012년 2월 9일자 8면 「제2회 김포청년포럼」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김포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명목이 드러나는 행사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제2회 김포청년포럼

주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 강 사



유 정 복 국회의원

● 강 사



민경배 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사 수료

〈경력〉
육군중위 전역(영사직고 17기)
1979년 제 23회 행정고시 합격
1994년 제 33대 김포군수(재임시 최연소 군수)
1995년 제 5대 인천시구청장(재임시 최연소 구청장)
1995년 초대 인천 김포군수
1999년 제2대 김포시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5년 한나라당 제창제조정위원장
2008년 대통령당선인(중국특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재임)
2008년 국회의원선거연구포럼 대표의원회장(재임)
2008년 대통령 유망특사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0년 FAO 이태자(여총회) 의장

〈학력〉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신학사)
영국 에버턴 대학교 수학
연세대학교 수학
일본 교토의 동지(同志)대학교 졸업(신학박사) 1984

〈경력〉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연세대학교 교회사 교수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
한국교회사학회 회장 역임(1986-1990)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명예교수

〈저술〉
한국의 기독교회사
새로운 88년사
한국의 기독교회사
대한예수교장로회 100년사
예루살렘스 디메데이
존노스의 생애와 사상의 다수

● 일 시 // 2012. 2. 19(주일) 오후 2시 10분

● 장 소 // 김포제일교회 본당

● 주 최 // 김포성서화 운동본부 (본부장 김동철 목사)

● 후 원 // 김포기독교 연합회 (회장 송재원 목사)

의결번호	2012국선64(자심)
언론사	한길전 (동작신문 발행인) 서울 동작구 사당3동 708-406 2층
심의대상기사	동작신문 2012년 2월 16일자 3면 「전병헌 의원, 18대 국회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동작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가 한 언론사에 의해 최우수 국회의원로 선정된 사실을 인용 보도하면서 상세한 의정 활동과 함께 선거용 현수막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병헌 의원, 18대 국회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경향신문사 평가 최우수 7인 중 1인

“국회의원의 힘은 유권자의 힘.
구민의 응원이 의정활동으로 이어진 것”

전병헌 국회의원(동작 갑)이 18대 국회 4년 연속 270여 개 NGO시민사회단체 선정 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경향>에서 선정한 18대 국회의 299명 가운데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주간경향>이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횟수 및 통과, 정책 활동, 국정감사 성적 등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선정·평가했으며, 전 의원은 총 94점으로 재선 이상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전 의원은 그동안 ‘뉴타운 용적률 상향을 위한 입법’, ‘알박기 방지를 위한 입법’, ‘3+1보편적 복지 정책입안’, ‘휴대폰 요금과다 청구 방지법’ 등 지역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입법 활동으로 큰 실효를 거뒀으며, 야당의 대표적 주포로 ‘형님예산과다’, ‘대통령 측근 국정농단’ 등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쳤다. (후략)

전병헌 의원, 18대 국회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경향신문사 평가 최우수 7인 중 1인

“국회의원의 힘은 유권자의 힘. 구민의 응원이 의정활동으로 이어진 것”



전병헌 국회의원(동작갑)이 18대 국회 4년 연속 270여개 NGO시민사회단체 선정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된데 이어 국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경향>에서 선정한 18대 국회의 299명 가운데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주간경향>이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횟수 및 통과, 정책 활동, 국정감사 성적 등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선정·평가했으며, 전 의원은 총 94점으로 재선이상 의원으로는 유일

하게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전 의원은 그동안 ‘뉴타운 용적률 상향’을 위한 입법, ‘알박기 방지’를 위한 입법, ‘3+1보편적 복지 정책입안’, ‘휴대폰 요금과다 청구 방지법’ 등 지역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책-패러다임을 바꾸는 입법 활동으로 큰 실효를 거뒀으며, 야당의 대표적 주파로 ‘형님예산과다’, ‘대통령 측근 국정농단’ 등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쳤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 원 상향’, ‘통신사 미환급금 123억 환급’, ‘금겹살-금배추 물가 지적’ 등 실질적 경제정책으로 큰 반향으로 일으킨 결과로, 2011년 제1회 대한민국 대표 의정 대상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우수 의원상으로 8관왕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4년 동안 섬 없이 최선을 다했다.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 언제나 국회의원의 힘은 지역구민으로부터 나오고, 국회의원 힘은 곧 지역구민의 힘이라는 마음으로 뛰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기회와 힘을 주신 지역구민의 지지 덕분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근 전 의원이 장승배기에 내걸은 선거 현수막이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민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더불어 큰 화제를 끌고 있다.

의결번호	2012국선65(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5-2 순화빌딩 14층 대표이사 신상철
심의대상기사	일요신문 2012년 2월 19일자(1031호) 70~71면 「부산 민심? “왜 나왔냐” 뜨악해 하더라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 정치 활동, 출마 계기 및 포부 등을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부산 민심? “왜 나왔냐” 뜨악해 하더라 ㄴ

〈만나봅시다〉적진 뛰어든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서울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던 지난 7일,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59)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이번 4·11 총선에서 가장 큰 격전지가 될 부산에 도전장을 냈다.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사상구), 문성근 최고위원(북강

서울),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진울)이 공동출마선언을 한 이후 ‘부산벨트’는 총선의 최대 관심권으로 급부상했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지도부에 입성해 ‘공식적’으로 정치인이 된 뒤, 처음 치르는 총선에서 연고도 없는 지역구를 선택하기까지 문 최고위원은 많은 고심을 한 듯했다. 지도부 활동과 총선 준비를 병행하느라 그는 서울과 부산을 일주일에 4~5차례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와 만난 날에도 그는 아침 식사도 거르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지쳐 보이는 기색 속에서도 문성근 최고위원의 목소리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후략)

부산 민심? “왜 나왔냐” 프악해 하더라ㅋ



작전 뛰어든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서울이 영하 10도 아래로 폭 떨어졌던 지난 7일,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59)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이번 4·11 총선에서 가장 큰 격전지가 될 부산에 도전장을 냈다.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상구), 문성근 최고위원(역경서 원), 김경길 전 행정부 장관(신승일)이 공동출마선언을 한 이후 ‘부산별도’는 총선의 최대 관전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통합당 전경 대표에서 한명숙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지도부에 입성해 공식적으로 경선작이 된 뒤, 처음 치르는 총선에서 결코 없는 지역구를 선택하기까지 문 최고위원은 많은 고심을 한 듯했다. 지도부 활동과 총선 준비를 병행하느라 그는 서울과 부산을 일주일에 4~5차례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기차와 민난 날에도 그는 아침 식사도 거르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지쳐 보이는 기색 속에서도 문성근 최고위원의 목소리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오전 내내 여러 개의 일정을 소화하고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사무실로 들어서는 문성근 최고위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허심탄화하게 이야기 하자”며 담배부터 꺼내 물었다. “담배 냄새가 날까봐 유권자들 만나기 전에는 구강 청결제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며 너털웃음을 보이는 그의 마릿속은 담배연기처럼 복잡해 보였다. 문 최고위원에게 최근 공천심사위원의 구성을 두고 한명숙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일에 대한 질문부터 던져보았다.

—민주통합당의 공심위원 인선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불참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명숙)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른 최고위원 분들께서 우리가 통합한 정당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각기 득표수는 달랐지만 최고위원들이 모여 어떤 모두 1년의 노 부론을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통합의 대의가 뒤로 밀린 측면이 있었다. 이번 일을 겪은 뒤 대의를 삼기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일을 왜 했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 되는 일이다. 정치 혁신을 이루어서 앞으로 만들어 가는 민주정부가 과거 민주정부 10년보다 훨씬 더 시민 속에 뿌리박아서 힘 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다.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작은 파도도 크게 타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문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사들이 공심위원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당에서는 “본인이 고사한 분도 있고 당내 인사인지 당외 인사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종석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같은데 실제로는 당 안팎을 혼돈한 측면은 있었지만 고사했다는 것은 그분의 착각입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시민통합당 인사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짜는 과정이 급박했어도 그 점이 아쉽다. —인선 과정에서 한 대표와 최고위원간의 의견 교류가 부족했던 것 아니었나.

▲내가 추천한 사람이 쉽지 않았다면 다른 분들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였다. 전체 조율을 대표께서 하시는 거였는데 그걸 놓쳤다. —그 이후에 한 대표가 문 최고위원에게 이 일에 관해 직접 언급한 건 없나.

▲그런 대변인께서 공식적으로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되었다. 그리고 총선 기해단에 시민통합당 인사들을 포함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하는 때 아닌가. 부산지역에서의 총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다. 문재인 문성근 김경길 세 후보의 공동 출마로 부산권은 이번 총선 최대의 관심지역으로 부상했다. 특히 문성근 최고위원이 선택한 지역구(역경서 원)는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확실한 승리를 포기하고 출마했다가 패했던 곳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문 최고위원은 “지역구 선택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어쩌면 한번 사는 인생인데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지역구를 택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한 바가 있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동생으로 여겨주셨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큰 행운이 못 다한 일을



부산에서 만난 문성근 최고위원은 큰 행운이 못 다한 일 아유가 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종현 기자 jhlee@nyc.co.kr



노무현 전 대통령 별세에서 문성근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영파워

‘무대장’ 호칭 선물 받아

의결 번호	2012국선69(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북뉴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1번길 103번지 2층 대표이사 안영록
심의대상기사	충북뉴스 2012년 2월 27일자 3면 「홍덕보건지소 강서동 건립 확정」 및 2월 27일자 6면 「노영민 의원, 법안발의 가결률 우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청주시 흥덕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의정 활동, 치적 등을 같은 날짜 2개 면에 인물 사진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홍덕보건지소 강서동 건립 확정

노영민 의원 밝혀... 양질 공공의료 서비스 기대

청주 흥덕보건지소가 강서동 지역에 건립된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사진·청주 흥덕 을)에 따르면 흥덕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국비 8억9천 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강서동 지역에 건립할 수 있게 돼 향후 청주 서부권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흥덕보건지소는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등을 설치해 건강보건센터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는 45억원이 투입된다.

보건지소가 건립될 강서동 지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약 1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노 의원은 “도시보건지소 건립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후략)

흥덕보건지소 강서동 건립 확정

노영민 의원 밝혀… 양질 공공의료서비스 기대

청주 흥덕보건지소가 강서동 지역에 건립된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사진·청주흥덕을)에 따르면 흥덕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국비 8억9천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강서동 지역에 건립할 수 있게 돼 향후 청주서부권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흥덕보건지소는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등을 설치해 건강보건센터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는 45억원이 투입된다.

보건지소가 건립될 강서동 지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약 1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노 의원은 “도시보건지소 건립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요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영록

노영민 의원, 법안발의 가결률 우수

경실련,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경실련은 지난 16일 18대 국회의원별 법안발의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 평가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사진·청주흥덕을)은 18대 국회 중 총 43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중 7건을 가결시켰다. 이는 18대 국회 발의법안 평균 가결률

(5.4%)을 3배 가까이 뛰어넘는 16.3%로 전체 국회의원 중 4위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높은 가결률이다.

경실련의 평가결과 18대 국회는 총 601건의 법안을 가결했으며, 발의 대비 가결율은 5.4%로 나타났다. 그 중 법안 발의 건수나 가결률의 상위성적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의원들이었으며, 재선 의원으로서 상위 5위안에 들어간 의원은 노 의원이 유일했다.

의결번호	2012국선70(자심)
언론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양 상 우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2년 2월 27일자 31면 「아! 김부겸」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칼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김부겸)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부 필진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아! 김부겸

사람들은 쉽게 단정지었다
“한나라당에 있다와서 그래”라고
나도 그런 평가에 동조했었나 보다

김부겸 의원과 알고 지낸 지 꽤 됐는데도 가끔씩 이해가 안 됐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일 때다. 이선실 간첩사건으로 호되게 당해놓고도 그는 엉뚱하게 한나라당과 합의처리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갈라져서 먹살잡이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한가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정치란 결국 세 싸움인데, 쫓쫓...” 난 혀를 차고 말았다. 그 뒤로 그는 싸움만 나면 말리려 들었고, 타협안이랍시고 내놓았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론을 내놓았을 때 중뿔나게 혼자만 환영하고 나섰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전설 속의 김부겸’은 전혀 달랐다. 1980년 서

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사자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서울의 봄을 열어젖힌 야전사령관이 김부겸이었다. 특히 심재철이 이끌던 학생회가 서울역 앞 10만 군중을 해산하러 들자 “여기서 흠어지면 신군부가 나선다”며 끝까지 싸우자던 게 그였다. 실제 그의 말대로 서울역에서 흘리지 못한 피는 사흘 뒤 광주에서 흘리게 된다.

이런 차이를 놓고 사람들은 쉽게 단정지었다. “한나라당에 있다 와서 그래”라고. 그런 혐의는 그의 마당발 친화력 때문에 더 짙어졌다. 모난 돌맹이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보니 반들반들한 조약돌이 된 듯한 느낌 말이다. (중략)

그렇기에 그의 도전은 지역감정, 이념의 대립, 소득의 격차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단을 잇기 위한 몸짓으로 읽힌다. 그가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전쟁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공감과 치유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얼굴 넓적하고, 넉살 좋고, 목소리 우렁우렁한 친구가 나타나 손을 내밀거든, 대구시민들이 따뜻하게 잡아주면 좋겠다.



편집국에서

김의겸 사회부장

김부겸 의원과 알고 지낸 지 꽤 됐는데도 가끔씩 이해가 안 됐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일 때다. 이산실 간첩사건으로 호되게 당해놓고도 그는 엉뚱하게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갈라져서 먹살잡이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험악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정치란 결국 세 싸움인데, 쫓쫓...” 난 혀를 차고 말았다. 그 뒤로 그는 싸움만 나면 말리려 들었고, 타협안이랍시고 내놓았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론을 내놓았을 때 중뿔나게 혼자만 환영하고 나섰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전설 속의 김부겸’은 전혀 달랐다. 1980년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사자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서울의 봄을 열어젖힌 야전사령관이 김부겸이었다. 특히 심재철이 이끌던 학생회가 서울역 앞 10만 군중을 해산하러 들자 “여기서 흠어지면 신군부가 나신다”며 끝까지 싸우자던 게 그였다. 실제 그의 말대로 서울역에서 흠어지지 못한 피는 사흘 뒤 광주에서 흘러게 된다.

이런 차이를 놓고 사람들은 쉽게 단정지었다. “한나라당에 있다 와서 그래”라고. 그런 혐의는 그의 마당발 친화력 때문에 더 짙어졌다. 모난 돌맹이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보니 반들반들한 조악물

아! 김부겸

사람들은 쉽게 단정지었다
“한나라당에 있다 와서 그래”라고
나도 그런 평가에 동조했었나 보다

이 된 듯한 느낌 말이다. 사실 여의도 바닥에서 가장 흔한 말이 상생과 통합이다. 회생이나 고뇌는 실리지 않은 채 반깁데기로만 돌아다니니 가장 진부한 단어가 돼버렸다. 김부겸의 상생·통합도 으레 그러려니 한 거다. 나도 그런 평가에 동조했었나 보다. 그의 대구 출마 소식을 접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걸 보니, 그냥 군포에 눌러앉아 있으면 4·5선은 무난할 것이고, 국회의장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옛날 다재이가 자주 하던 말대로,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지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대구로 내려간다니, “아! 순정이었구나”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김부겸은 형식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경계인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경북고를 나온 타케이 성골이면서도 호남이 뿌린 민주당 통합당에 몸담고 있다. “그 넓은 민주당사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자가 나 말고 딱 두명 더 있더라”는 게 그의 푸념이었다. 이념적으로는 정통 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속 터질 정도로 점진적 개혁을 지향

한다. 또 그는 항상 비주류였으면서도 주류 사회에 대한 생리적 거부감이 약한 성정을 지니고 있다. 이쪽저쪽 친구가 많은 이유다.

그는 이렇게 늘 이쪽에 완전히 발 담그지도 못하고 저쪽에 몸을 싣지도 못하는 어정쩡 속애 살아왔다. 좋게 보면, 양극단의 정서와 논리를 이해하니, 이를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힘 있을 때 얘기다. 힘없으면 양쪽으로부터 몰매 맞기 십상이다.

그는 끼어서 눈치보며 국회의원 선수나 늘려가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군포에서 4선을 하면 그건 월급생이다. 영화 〈친구〉를 보니 주인공이 쪽팔리게 살고 싶지 않아서 사실대로 털어놓고 중형을 받는다. 나도 더 이상 쪽팔리고 싶지 않다”며 대구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의 도전은 지역감정, 이념의 대립, 소득의 격차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단을 잇기 위한 몸짓으로 읽힌다. 그가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전쟁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공감과 치유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얼굴 넓적하고, 녀석 좋고, 목소리 우렁우렁한 친구가 나타나 손을 내밀거든, 대구시민들이 따뜻하게 잡아주면 좋겠다.

kyummy@hani.co.kr

의결번호	2012국선72(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일요시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대표이사 이 용 범
심의대상기사	일요시사 2012년 2월 26일자(제842호) 13면 「'얼짱' 4년간 버리고 별러 외나무다리서 또 '맞짱'」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중구)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판도를 분석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얼짱' 4년간 버리고 별러 외나무다리서 또 '맞짱'

4·11 격전지 '서울 중구' 이색관전 포인트

미모의 '얼짱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나경원·신은경 예비후보가 4년 만에 서울 중구에서 리턴매치를 벌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나 후보가 당시 현역이던 박성범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아 박 의원의 아내인 신 후보가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나와 한판 승부를 벌였기에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1억원 피부관리실' 오명을 안고 있는 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 후보도 '명품 8종 세트' 수수 혐의가 또 다시 부각돼 격전지 중구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했다.

새누리당의 서울 중구에 공천신청을 한 나경원 후보와 신은경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지역 공천

신청자 면접장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두 후보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으나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사를 나눌 자리가 마련됐다.

팽팽한 기싸움

두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나란히 앉았지만 어색한 웃음만을 지었고, 먼저 신 후보가 “우리는 날마다 뵈요. 지역에서 행사가 많아서 자주 뵈요”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거리를 두고 각자 자리를 잡았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묘한 어색함과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감이 두 후보를 감쌌다.

두 후보는 출중한 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지역 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 후보와 신 후보가 각각 38.7%, 39.1%를 얻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략)

2012년 2월26일(일요일) 제842호

정치

일요시사 13



미모의 '영광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나경원·신은경 예비후보가 4년 만에 서울 중구에서 리턴매치를 벌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나 후보가 당시

현역이던 박성범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아 박 의원의 아내인 신 후보가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나와 한판 승부를 벌였기에 관심은 더욱 켜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10·26 서울시 장 재보선에서 '1억원 피부관리실' 오명을 안고 있는 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 후보도 '명품 8종 세트' 수수 혐의가 또 다시 부각돼 격전지 중구의 새로운 관련 포인트로 자리매김했다.



© 나경원 기자 naeha1973@yossa.co.kr

'여객' 4년간 버르고 별러 외나무다리서 또 '맞장'

새누리당의 서울 중구에 공천신청을 한 나경원 후보와 신은경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지역 공천 신청자 면접장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두 후보자는 말쑥한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사를 나눌 자리가 마련됐다.

팽팽한 기싸움

두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나란히 앉았지만 어색한 웃음만을 지었고, 먼저 신 후보가 "우리는 날마다 뵈요. 지역에 서 행사가 많아서 자주 뵈요"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자리를 두고 각자 자리를 잡았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묘한 어색함과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감이 두 후보를 감쌌다.

두 후보는 출중한 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지역 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 후보와 신 후보가 각각 38.7%, 39.1%를 얻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

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약점을 안고 있다. 나 후보는 면접 전 기자들과 만나 "10년간 담을 위해 희생·헌신을 해왔다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10·26 서울시장 보선 참패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1억원 피부관리실'이 오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나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피부과 리스'이 오점으로 대해 "사실이라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배수진을 쳤다. 이어 "내가 1억원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했거나 1억원 상당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재차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대변인·후

보 전력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8종 명품세트'를 전달받은 사실이 부각되고 있어 약자로 작용하고 있다.

'맞춤형 8종 명품세트'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의 중구청장 공천을 희망하는

(100만원), 발렌티노 숄(30만원), 발렌티노 스카프(50만원), 구찌 머플러(40만원), 페라가모 넥타이(24만원)를 받은 열의다. 이는 당시 시가로 총 142만원에 달했고 이외에 체리 1상자도 함께 전달됐다고 당시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어 명품 전달 이후 장씨가 신씨에게 미화 21만달러(2억원)를 주는 자리에 남편 박 전 의원도 함께 있었고 이 돈은 그 다음 날 돌려줬다고 전했다. '맞춤형 8종 명품세트' 사건으로 인해 박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신 후보는 기소유에 판결을 받았다. 미모의 여성 정치인인 나 후보를 가꾸기 위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의혹을 양 후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면접을 마친 뒤 두 후보 사이에는 은근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나 후보는 면접 뒤 이번 공천에 대해 "공천 자체가 기계적으로 되면 안 된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후보가 얼마나 많이 답에 기여했는지, 또 그 후보가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심사를 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배제하는 공천이 아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저는 어느 특정 계파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은 친이계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반면 신 후보는 "내가 군대 사령관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병을 내보낼 것"이라며 "공천은 당연히 공정하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고, 이렇게 새누리당이 어려울 때 서울 중구 지역

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골라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우회적으로 나 후보에게 쏘아붙인 '책임론'을 거론했다.

나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신 후보는 "지난 18대 공천 당시 전락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현역이었던 박 의원이 공천 받지 못하고(나 후보로) 됐다"면서 "그래서 충격이 많이 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공천권을 따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현희 치출설

하지만 지역 여론과 트위터 민심은 두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1억원 피부관리실'에 다닌 이나, 맞춤형 8종 명품세트를 받은 이나 똑같다"며 "새누리당이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고 힐난하는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통합당의 전현희 의원은 이곳에서 여론이 좋아 흥미를 더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 공천신청을 한 전 의원은 정동영 삼일고문과 치열한 경선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중구 출마를 권유하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미모의 여성 정치인들의 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전 의원은 강남을 출마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미안들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 자신의 지지를 한층 더 넓히게 미소를 지을지는 누구일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경 기자
loverhk@yossa.co.kr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과
10·26 재보선 '책임론'

신은경

자유선진당 '전력'과
'명품 8종 세트' 논란

성낙합 전 중구청장으로부터 그의 인척 장모씨를 통해 밀크코트(650만원 상당), 샤넬 핸드백(230만원), 양주 루이13세(300만원), 테두리가 밀크로 된 세일을 캐시미어 울

《폴리코》는 이어 "문재인이 주요 경쟁자는 보수적인 박근혜"라며 "한국의 장기군사 집권자(country's longtime military ruler)"인 박정희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이 때에는 이어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시진핑과 리커창으로 교체되며,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다시 대통령으로 재임으로 전방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당수가 뒤처져 있다면서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미국으로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



미국 정치매체지가 본 한국의 대선주자

“한국 대선 선두는 문재인”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코》는 '논거를 9대 해외선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대선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통합당 삼일고문"이 현재 선두주자라고 밝혔다. 《폴리코》는 지난 8월 《로이터》가 서울발로 작성한 '문재인이 떠오르고 있다(Moon is rising)'는 기사를 인용해 "현재 한국 대선의 선두주자는 문재인"이라고 밝힌 뒤 "북한과 관계가 선을 추구하는 59세의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ary ruler)"인 박정희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이 때에는 이어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시진핑과 리커창으로 교체되며,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다시 대통령으로 재임으로 전방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당수가 뒤처져 있다면서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미국으로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

의결번호	2012국선7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파주저널신문사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503호 대표이사 원 희 경
심의대상기사	파주저널 2012년 2월 13일자 4면 「GTX 파주출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 최대의 목표」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기고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파주시 갑)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GTX 파주출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 최대의 목표'

삶의 질 확 바꾸는 GTX 그리고 지하철 <특별기고> 윤후덕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후 한 달 넘게 추운 새벽 출근길에서 파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경의선으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께서는 내게 이런 글을 직접 메일로 보냈다.

“2기 주요 신도시 중 하나인 운정신도시가 GTX의 출발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영원한 2, 3류 불품없는 신도시가 되겠지요. GTX 파주 출발 확정 유무가 운정 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메시지다. 지하철이 아예 없는 신도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 버스와 경의선만으로 미래 70만 명 인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하철과 GTX가 파주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다.

출퇴근은 노동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은 생계수단과 직결된다. 직장인들은 출퇴근이 용이해야 살 수 있다. 학생들도 통학이 가능해야 한다. 서민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자취나 하숙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무척 버겁기 때문이다. 결국 파주에 살며 직장 다니고 학교를 다니려면 교통이 좋아져야 한다.

더불어 파주는 현재 ‘하우스 푸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스스로 ‘집 가진 거지’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운정, 교하지역에 아파트를 장만한 시민들은 걱정 때문에 주름마저 깊게 패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지하철과 GTX 파주출발이다. 삶의 질을 확연히 바꿀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보되면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됨은 물론, 도시 경쟁력 또한 회복할 수 있다.(후략)

지역 종합

파주시별

특검기고 / 윤후덕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GTX 파주출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 최대의 목표

삶의 질 확 바꾸는 GTX 그리고 지하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후 한 달 넘게 추운 새벽 출근 길에서 파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경의선으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께서는 내게 이런 글을 직접 메일로 보냈다.

"2기 주요 신도시중 하나인 운정 신도시가 GTX의 출발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영원한 2, 3류 불모지는 신도시가 되겠지. GTX 파주출발 확정 유무가 운정 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메시지다. 지하철이 아예 없는 신도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 버스와 경의선만으로 미래 70만 명 인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하철과 GTX가 파주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다.

출퇴근은 노동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은 생계수단과 직결된다. 직장인들은 출퇴근이 용이해야 할 수 있다. 학생들도 통학이 가능해야 한다. 서민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자취나 학숙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무척 버겁기 때문이다. 결국 파주에 살며 직장 다니고 학교를 다니려면 교통이 좋아져야 한다.

더불어 파주는 현재 '하우스 푸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스스로 집 가진 거지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운정, 교하지역에 아파트를 장만한 시민들은 걱정 때문에 주름마저 깊게 패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지하철과 GTX 파주 출발이다. 삶의 질을 확연히 바꿀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보되면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되는 물론, 도시 경쟁력 또한 회복할 수 있다.

KD, 작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그러나...

GTX사업은 지난해 4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되었다. 소위 상위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12월14일 마침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

아울러 GTX 운영비 50억 원이 올해 중앙정부 예산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즉 GTX 사업은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사전 조사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파주 노선 제외,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그런데 문제는 파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선이 계획에 잡혀 있다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계획에는 일산~수서 구간, 송도~청량리 구간, 의정부~금정 구간 등 3개 노선만 들어가 있다. 파주가 구간에서 배제된 이유, 즉 수서-일산~파주 구간이 되지 못한 것은 우선 시행령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제2항은 구간 설정과 관련해 '전체 구간이 50km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GTX 노선 수서-킨텍스 간 거리는 46.2km이다. 따라서 파주를 출발지로 하려면 이 법 시행령의 50km 규정을 60km로 개정하거나 '다만 신도시 조성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즉 국무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개정안을 내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령과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면 끝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파주 시민,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시의회 등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사업성 입증·재원확보 "파주는 할 일 다 했다"

더불어 이제는 GTX 파주 출발을 위한 파주만의 차별화된 논리가 필요하다. 원래부터 GTX는 신도

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파주에는 분당보다도 큰 577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신도시도 없는 여타 경기도 기초단체들이 GTX 노선을 요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당연히 가장 큰 신도시가 들어서는 파주시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 명분이다. 게다가 파주에는 260만평의 산업단지가 있고, 바로 개발 가능한 미군공여지가 무려 46만평이나 확보돼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업성 문제다. 아무리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사업성이 결여돼 있으면 선뜻 사업을 착수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성 입증에 위해 미리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 B/C(편익/비용)가 1.06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놓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기획재정부는 KDI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일찌감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 놓은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 준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더해 파주시의 결과까지도 함께 연구 조사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제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주시가 이미 3,000억 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는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신교통수단 확보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 운정3지구 신도시 사람이 살아가면서 확정된 재원이다.

이렇듯 사업성 입증 및 재원 확보 등 파주시가 미리 챙겨둔 준비물들은 철도 교통수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파주를 가까이 보면 가장 큰 신도시 조성지역이자 최첨단의 차질기지 건설 가능지역이고, 좀 더 멀리 보면 통일 한국의 중심이자 대륙경제권의 전초기지이다.

결론적으로 파주시는 GTX 파주출발 및 지하철 연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있다.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런 논리로 토폴 문쳐 조직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파주 시민과 함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011년 12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금년 6월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주출발은 본 용역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파주 시민으로서의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에 파주출발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보고서는 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분석한다. 대안1, 대안2 등등이 그것이다. 대안1, 대안2-1, 대안2-2 등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파주가 급히 신경 써야 할 것은 GTX 파주출발에 이 같은 대안의 어느 한 경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이 근거를 확보하면 일이 풀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우선 당장 대안2-2에라도 넣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모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쉼기대회도 열어 관련부서에 민의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GTX 파주출발 2013년 일괄 착공'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파주시 모든 총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야

끝으로 GTX 파주출발 문제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걸고 함께 주장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공약으로 이를 채택,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다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금년 6월까지 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전까지 파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7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필호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12년 2월 18일자 사람신문 6면 「복지와 디자인, 오히려 '동의어'입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중랑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 의정활동, 저술활동 등을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복지와 디자인, 오히려 '동의어'입니다

김정(60)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는 ‘국내 최초의 디자인·미술 전공 국회의원’이라는 별칭이 있다. 그는 1974년에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또 파리4대학(소르본)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2009년 11월 당선 무효로 꺾인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승계자로 국회에 들어온 그는 “의원 중에 미술전공자가 이렇게 없는지 뒤늦게야 알았다”고 말한다. 국방위, 정무위에 속해 활동한 그는 지난해에 유난히 바빴다. 3월부터 10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미술정책 연구 세미나를 열었다. 12월에는 [신(新)디자인 정책 고(考)]라는 제목의 책도 냈다.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술과 디자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한 책이다. ‘복지’라는 화두에 가려져 ‘디자인’이라는 말이 부

담스러울 만한 데도 그의 생각은 달랐다. “디자인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복지정책도 ‘서비스 디자인’

• 디자인 정책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전공자로서 책임감을 느낀 건가요.

“분명한 것은 제가 미술계를 대표해 국회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009년에 비례대표를 승계해 들어왔는데, 처음에 배정받은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였고, 나중에는 정무위였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작업은 계획도 없었고, 미술·디자인을 챙길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2010년말, 2011년 초께 미대 출신의 의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제가 미술·디자인 분야 정책 분야에 기여할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전문가들을 꾸준히 만나기 시작했어요.”(후략)

복지와 디자인, 오히려 '동의어'입니다

김경(60)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는 '국내 최초의 디자인·미술 전공 국회의원'이라는 별칭이 있다. 그는 1974년에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또 파리4대학(스ORBONNE)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2009년 11월 당선 무효로 관원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승계자로 국회에 들어온 그는 "의원 중에 미술 전공자가 이렇게 많은지 뒤늦게야 알았다"고 말한다. 국방위, 정부위에 속해 활동한 그는 지난해에 유난히 바빴다. 3월부터 10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미술정책 연구 세미나를 열었다. 12월에는 「신(新)디자인 정책」이라는 제목의 책도 냈다.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술과 디자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한 책이다. '복지'라는 화두에 가려져 '디자인'이라는 말이 부당스러울 만한 데도 그의 생각은 달랐다. "디자인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글·이은주 기자 julee@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jakepark@joongang.co.kr



복지정책도 '새누리 디자인'

■디자인 정책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까. 전공자로서 감명을 느낀 건가요.

“반면한 것은 제가 미술계를 대표해 국회에 온 것은 아니라기에 가예요. 2009년에 비례대표를 승계해 들어왔는데, 처음에 배정받은 상임위원장이 국방위원이었고, 나중에는 정부위원이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직임은 계획도 없었고, 미술·디자인을 행정 개편도 없었죠. 그런데 2010년 말, 2011년 초에 미대 출신의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제가 미술·디자인 분야 정책 분야에 기여할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전문가들을 꾸준히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년간 '디자인'이라는 말만큼 인기를 누리고, 또 관심을 사온 것도 드물고, 그렇지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의회로, 문제로, 그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만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적인 바뀌면 예산만 나옵니다. 전처럼 정당이 하는 비전이 쏟아지고, 재원 만져 디자인 예산을 주는 부작용도 생겼어요. 모든 분야 복지의 디자인을 자주 대입구도로 보는데, 그런 오해입니다. 전 복지나 디자인이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예술은 실제 먹고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또 디자인과 복지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모든 행정이 곧 디자인이기도 하죠.”

■디자인에 대한 오해를 구체적으로 꼽으세요.

“흔히 디자인을 친조적으로 무언가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것으로만 여는 것이지요. 무조건 무언가를 지으려고, 크게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집착하고... 그런데 낙후시설을 정리하며 바꾸는 것도 디자인입니다. 도시 미관 사업도 자주 무언가를 만들거나 불필요한 군더더기와 장식물이라는 이름의 소품들을 만들지만 알지도 몰라 개선했을 거예요.”

■책에서 문화관광부의 세종대양 동생, 전국 곳곳의 공공 조형물, 개성도 상징성도 있는 각 부처의 GI(Government Identity) 등 공공 디자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셨거든요.

“30년 전과 비교하면 디자인은 민간 분야의 영향력 발전이 이뤄졌죠. 그런데 이 분야 사람들이 만나면 정권이 분야를 지원해야 하는 관(官)의 인식이 너무 부족해졌다고 일을

보아 지적합니다. 행정부 차원의 통일된 디자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짚어서 얘기하고 싶은 걸 꼽는다면요.

“1%법(총 건축비용의 1%를 미술 장식 혹은 공공 미술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한 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공적적으로 1%법은 폐지해야 한다고요. 사실 1%법은 선진국 특히 프랑스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공공 미술 정책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건축주와 브로커 사이에 리베이트가 오가고, 심의절차에 대한 집요함이 없어, 가장 큰 문제는 수준 이하의 공해물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철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건물 하나에 미술을 하나”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주변환경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따지고, 시민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공공미술(디자인)이 받기까지 하고 고민하는 게 낫죠.”

■세종대양 문화가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디자인 총괄 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디자인 관련 일을 관장하는 부처가 많이 6개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있지만 권한도 별로 없고 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변화도 절실히 필요하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과 디자인이 ‘갑’과 ‘을’의 관계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일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양쪽의 가운데서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소품의 문제를 풀 기구가 필요합니다.”

남한의 적극 권유로 의원실 시작

김 의원 취임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화제가 되어 전국 각처에서 찾아온 20대인 두 아들(장남은 부자자문사 근무, 차남은 영자알간지 기자). 그리고 김 의원이 함께 찍은 것. 아무런 사진은 없을 때 찍을 수 있었다지만 사진 속의 네 가족은 유난히 다정하게 보였다. 좀 짓궂게 웃고 싶었다.

■사진을 보니 정말 화목해 보이네요, 실제로도 그렇지요.

“(하하) 아니라고요 할 수 없고... 화목하게 지내고 노력할 일이 하호(호호). 언젠가 자네들 결혼해 지금 뉴욕에 살고 있어요. 열

디자인 중요성 말하든 외쳤지만 눈에 보이기 위한 도구로 인식 - 단체장 바뀌면 예산 안 잡히겠

되려 일자리 만들고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는데 말이예요

공무원 디자인이나 소품 생활해야조 통합적으로 조정할 기구 필요함입니다



「리테일」 '설계자 불명' 국회의사당

1969년에 준공된 서울역에도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해운대 물에 도수수 묻어 있었다는 예가(예)부터 국가가 원가에 치러 만든 동이 알고 로부터 출몰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그러나 김경 의원은 의사의장 정한 '비하'는 건축 과정이라고 말한다. 자네들 앞에 낸 책 '신 디자인 정책'에서 '설계자 불명 국회의사당'이란 제목으로 쓴 글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의 등 자갈과 24개의 돌기둥이 예전 설계에는 없었다는 것. 그 많은 기술이 사실은 당장 때아래도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는 예가. 문제는 고도 때부터 예견했다. 주위 속에서 내세울 요강만 보든 그들. 공간이 60억 이상, 자작적 불인정, 낮은 설계비 등을 내세웠다. 일반 건물을 내고 한편으로는 편의의 건축가를 자랑해 설계비를 의뢰했다. 그들의 작은 이익 '최종 설계에 참고한 하했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회의사당은 우수무적 준수수. 그리고 각각 등을 바탕으로 자랑 건축가 몇 명이 함께 만든 '별들 설계'로 자랑했다. 아예 주위 혹은 '주위(주위)를 들을 주가하'로 명명했었는데, 당시에 '단 한 사람의 건축가도 의사의 건물에 돌을 올리지는 의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예가 전해진다.

그렇게 지어진 국회의사당에는 설계자의 이름이 남아 있지 않다. 건물에 담긴 철학이 뭘지 아는 사람도 드물다. 유래, 비의 의지의 산실인 국회의사당은 자작적 개념으로 권위로 건축가들을 '부른' 역사의 흔적을 간파하고 있는 셈이다.

마 전 부부가 한국에 다녀와 왔는데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주고 나왔어요.”

■마느와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시야대나 아침상을 차려주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오, 아니요요. 저는 멀리서 온 마느에게 말하고 하고 아침을 차려가 할 생각이 없어요(웃음).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으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아이들 키울 때도 다른 것은 몰라도 도시락은 직접 싸주려고 노력했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열매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밥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다 보니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유학생활을 할 때 제 꿈은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80-85년 대학(덕성여고) 강단에 섰죠. 결혼해서는 총합학이나 어렵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박영은-65사)과 관련된 회장의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몰라 다 알하는 것보다는 제가 집안에서 ‘인턴’을 타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에도 남편은 자신의 일에 항상

나를 끌어들이었어요. 회사 안살림을 맡게 하고, 외국 프로젝트가 많아 해외 출장이 많은 데 조바(조바) 동행하게 하고... 솔직히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끌고 다니나, 부러웠다고요. 그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웃음). 결국 오랜 시간 앞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지켜보고 일에 참여했어요. 지내고 보니 남편 앞에서 보고 배운 게 지금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네요.”

“처음에는 좀 겁이 났어요(웃음). 제마이는 게, 국방위 위원이 됐을 때가 벌써 아들이 현역으로 군대에 가 있었고, 큰아들은 공군 병역정보를 마친 때였어요.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 국방 문제에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하니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부위 일도 그렇게 했어요. 그곳에선 금융을 다뤄야 했는데 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내 역할을 충분히 했을 수 있었어요. 국회의원 중에는 법조인 출신이 많지만, 법을 만드는 데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김경

1970.2 경희대 졸업

1972.2 서울대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취득(미술사)

1977.2 서울대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취득(미술사)

1977.4 서울대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취득(미술사)

1980.3-82.2 학생자치위원으로 산업디자인학과 의학과를 겸사

1990.10-2009.10 행정안전부(국무) 근무

2009.11-2009.12 행정안전부(국무) 근무

2009.12- 현재 행정안전부(국무) 근무

의결번호	2012국선77(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씨엔엠(동양일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103 대표이사 우영선
심의대상기사	동양일보 2012년 3월 2일 16면 「“병든 정치 타파 위한 건강한 3세력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정치 경력, 의정 활동, 정견(政見), 출마 포부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상당한 크기의 지면을 빌려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병든정치 타파 위한 건강한 3세력 필요하다”

이인제 의원 6선 도전

이인제(사진·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27일 “영남과 호남 두 세력의 싸움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진저리 치고 있다”면서 “병든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선 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며 건강한 3세력이 필요하다”면서 “4.11 총선에 당선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 출마하며 이번이 6선 도전이다. 지난 25일 자유선진당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임기 중 성과로 영외면회제 부활과 국방대 이전을 꼽았다.

그는 “영외면회제는 13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이를 위해 나는 국방장관과 모처에서 1시간가량 면담을 하면서 결단을 이끌어 냈다”고 회고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국방대 이전문제도 그동안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증액 요구한 2,000억중 1,000억(골프장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1,000억원이 최종 확보됐다. 올 봄부터 이전사업이 추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질문에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60년 넘게 지역에서 일해 온 지역사회 유지다. 돈 출처도 중친회와 개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나와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우선 출마의 변을 밝혀달라.

“이번에 자유선진당에 합류해 출마하게 됐다. 지금 정치는 중병에 걸려 있다. 국민들이 영남과 호남, 두 세력간 싸움에 진저리가 났다. 영호남이 지역패권정치를 해서 그렇다. 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야 병든 정치를 해소할 수 있다. 정치구조가 충청에서 3세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한 3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6선 중진(국회의원)이 되면, 일꾼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후략)



“병든정치 타파 위한 건강한 3세력 필요하다”

이인제 의원 6선도전

인력부

이인제(사진·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27일 “영남과 호남 두 세력의 싸움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진저리 치고 있다”면서 “병든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선 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야하며 건강한 3세력이 필요하다”면서 “4.11 총선에 당선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 출마하며 이번이 6선도전이다. 지난 25일 자유선진당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임기중 성과로 영외면외제 부활과 국방대 이전을 꼽았다. 그는 “영외면외제는 13년만에 이뤄진 쾌거다. 이를 위해 나는 국방장관과 모처에서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결단을 이끌어 냈다”고 회고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국방대 이전문제도 그동안 골치아픈 문제였는데, 증액요구한 2000억중 1000억(골프장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1000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올 봄부터 이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질문에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60년 넘게 지역에서 일해온 지역사회 유지다. 돈 출처도 종친회와 개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나와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우선 출마의 변을 밝혀달라.

“이번에 자유선진당에 합류해 출마하게 됐다. 지금 정치는 중병에 걸려있다. 국민들이 영남과 호남, 두 세력간 싸움에 진저리가 났다. 영호남이 지역 패권정치를 해서 그렇다. 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야 병든정치를 해소할 수 있다. 정치구조가 총선에서 3세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한 3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6선 중진(국회의원)이 되면, 일꾼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역정가에선 대표적 ‘친노’인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와의 양자구도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다른 당 후보도 많다. 3, 4자구도는 될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도 결국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인제 국회의원은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구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다를 양보하고, 후보연대를 맘대로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현재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보좌관은 월급쟁이가 아니다. 60세가 넘었고 전씨 종친회 회장으로서 지역사회 신망이 있는 유지다. 자신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신세진 사람에게 선물을 한 것으로 안다. 양촌 꽃감을 100여명에게 선물했다. 다만 선거가 가까이 있어서 안하는 게 좋았는데, 잘못이었다. 100여명 명단을 살펴보니 경기도와 경상도에 9명, 경찰관도 5명 포함되어 있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람도 끼어 있다. 이번 일은 해프닝이다. 선거와 상관없이 (선물)보냈는데, 보는 관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 돈은 종친회와 개인 돈으로 밝혀졌다. 나와는 전혀 관련 없다. 하지만 보좌관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논산경찰서 이전문제가 지역에 뜨거운 이슈다. 이전문제에 대한 이 의원의 생각은.

“지난번 경찰서장이 불필요한 발언으로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 문제는 중앙 경찰청 소관이다. 앞으로는 법원(논산지원)과 지청도 이전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에서, 지청은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 대법원, 경찰청, 논산시 등이 협의해 질서 있게 결정할 사안이다.”

-임기동안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영외면외 부활은 13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를 위해 국방장관과 1시간 동안 담판을 지어 결단을 이끌어 냈다. 육군참모총장까지 오찬 회동을 했다. 장관과의 면담에서 훈련병들이 대부분

와아들인 점 등 상황이 13년전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국방대학교 이전문제도 성과중 하나인데, 이 문제는 예산문제가 속을 썩였다. 증액 요구한 2000억원중 골프장 1000억원을 뺀 1000억원을 증액시켰다. 모두 3500여억원이 확정되었고 올 봄부터 이전사업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가 며칠전 실태조사를 끝낸 줄로 안다.”

-한미FTA협정 찬성할 이유는.

“한미FTA는 쉽게 말해 한미간 비관세장벽을 낮춰 서로에게 이익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취약한 농축산업에 대해선 적극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게 본질이다. 자유선진당과 나는 10년간 32초원에 달하는 예산을 농축산업에 투자해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축산업 부문에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선봉장이 될 것임을 다짐드린다.”

-최근 황명선 논산시장의 연두순방식상에서 “KTX 역사 정치 문제”를 꺼냈다. 현실가능성은 있는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공주역 이전은 힘들것이다. 다만 역사명칭은 ‘백제역’으로 관할될 것이다. 역사명칭은 개통 6개월전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안다. 국토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역사에 버스, 택시 등에 대해 각각 부스를 따로 설치함으로써 자유롭게 논산지역으로 승객을 모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영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약속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국회의원은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면 몇 번째 안가는 다선의원일 것이다. 그러면 지역을 위해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일꾼이 된다. 자유선진당과 이인제에게 힘을 모아 달라. (자유선진당을)건강한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 그래야만 영호남 지역 패권구도를 견제하고 허물 수 있다. 이인제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논산/류석만>

의결번호	2012국선78(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충북 청주시 상당로 70번길 6 2층 대표이사 권혁상
심의대상기사	충청리뷰 2012년 3월 2일자 A19면 「이재충, 민주당 후보 유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충주시)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 특정 정당의 경선 현황을 분석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이름과 함께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제목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재충, 민주당 후보 유력

최영일·강성우 신청자 선정 보류 전략공천 현실화 되면 내분 예상

4·11 총선에 출마할 민주통합당 충주지역 후보자로 이재충(59·사진)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4·11총선에 출마할 충북지역 1차 공천자를 발표했다. 홍재형(73·청주 상

당), 노영민(54·청주 흥덕 읍), 변재일(63·청원), 정범구(57·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충북지역 현역의원 4명이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제천·단양의 서재관 전 국회의원과 보은·옥천·영동의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청주 흥덕 갑과 충주는 이번 공천자 발표에서 제외됐다. 흥덕 갑은 오세세 국회의원과 손현준 예비후보가 경합하고 있어 경선으로 총선 출마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후략)

이재충, 민주당 후보 유력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일·강성우 신청자 선정 보류 전략공천 현실화 되면 내분 예상

4.11 총선에 출마할 민주당통합당 충주·국회의원의 대항마로 두 명의 후보 모두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외부영입을 통한 전략공천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4·11총선에 출마할 충북 지역 1차 공천자를 발표했다. 홍재일(73·청주 상당), 노영민(54·청주 흥덕읍), 변재일(63·청원), 정범규(57·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충북지역 현역의원 4명이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제천·단양의 서재관 전 국회의원과 보은·옥천·영동의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청주 흥덕갑과 충주는 이번 공천자 발표에서 제외됐다. 흥덕갑은 오세재 국회의원과 손현준 예비후보가 결합하고 있어 경선으로 총선 출마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충주지역으로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는 최영일, 강성우다. 그러나 충주는 잠정적으로 후보 선정이 보류됐다. 실질적으로 두 명의 예비후보는 배제됐다는 의

두 후보자의 배제는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국회의원의 대항마로 두 명의 후보 모두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외부영입을 통한 전략공천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 후보자로 급부상한 인물은 이재충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26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시 한나라당으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종배 현 충주시장으로 전략공천되면서 탈당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윤진식 국회의원이 입당을 강력하게 권유했는데 입당 권유는 인재를 들러리 세우려는 복선이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외부영입을 통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영일, 강성우 예비후보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 둔 상태지만 이재충 씨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충 전 부지사는 공천과 관련한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는 본보와의 전화통



했다.

새누리당은 윤진식 결정

최 예비후보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엄정 중립의 의무가 있는 이시종 지사가 과거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한 전력이 있는 수구보수인사에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는 등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당 공심위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충주시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감아 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관련법에 위배되고 공당의 절차를 무시하는 이시종 지사와 민주당 충북도당이 충주시 총선후보 공천개입을 계속해서 시도할 경우 가능한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재충 전 부지사의 전략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내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충주지역 후보자는 예상대로 윤

진식 국회의원이 됐다. 윤 의원은 단수후보자로 분류돼 가법계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공식후보자추천위가 27일 오전 천이(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의결권을 가진 비대위가 재의를 요구, 사실상 반대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공천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1차 공천자 명단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1차 공천자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1일 치러질 총선은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과 민주당통합당 후보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정가는 현재 윤 의원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 다른 후보군들의 고전을 전망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윤 의원의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총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총선까지 검찰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소환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환이 이뤄져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란 예기다.

민주당과 법아권은 지속해서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있지만 총선까지 검찰소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검찰소환이 이뤄져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면 충주지역은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법아권은 새로운 전략 및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노 기자 hono77@hannam.net

의결번호	2012국선8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재구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2년 3월 5일자 12면 「문재인, 압도적 1위 내달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산광역시 사상구)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선거 판도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일부만 인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를 우호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문재인, 압도적 1위 내달려

새누리 전략공천으로 ‘문재인 바람’ 차단 나서

PK(부산·경남)지역 야도(野都) 탈환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부산 사상구가 4·11 총선 최대의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문 이사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과 큰 격차를 보이며 멀찌감치 앞서 나가고 있어 여의도 입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부산 사상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도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 같다”고 발언했듯이 문 이사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문 이사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인데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문재인 바람’ 차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국 이곳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부위원장과 김수임 전 경실련 정농생협 이사장, 박현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손수조 전 주례여고 총학생회장, 신상해 전 부산광역시의원 등 5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공천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3선 의원(15~17대)을 역임한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설동근 전 교육부 차관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이 가운데 설동근 전 차관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설 전 차관은 연제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문재인 대항마’로 나서달라는 당의 요구에 사상으로 지역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누리당의 27세 최연소 공천신청자인 손수조 예비후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설 전 차관과 손 예비후보를 놓고 경쟁력 비교에 돌입, 둘 간 여론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한 뒤 공천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11총선 화제의 지역구 탐방

부산
사상

문재인, 압도적 1위 내달려

PK(부산·경남)지역 야도(野都) 탈환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부산 사상구가 4·11 총선 최대의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문 이사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과 큰 격차를 보이며 말쑥 감치 앞서나가고 있어 여의도 입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부산 사상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도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 같다"고 발언했듯이 문 이사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문 이사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인데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문재인 바람' 차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

새누리 전략공천으로 '문재인 바람' 차단 나서

누리당은 결국 이곳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김수입 전 경실련 정농생협 이사장, 박현숙 한국여성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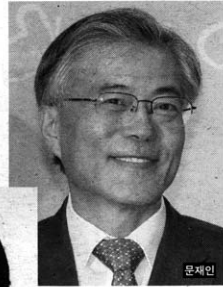
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손수조 전 주례여고 총학생회장, 신상해 전 부산광역시의원 등 5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공천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3선 의원(15~17대)을 역임한 권철현



김대식



김수조



문재인

달라는 당의 요구에 사상으로 지역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누리당의 27세 최연소 공천신청자인 손수조 예비후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설 전 차관과 손 예비후보를 놓고 경쟁력 비교에 돌입, 둘 간 여론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한 뒤 공천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성 기자〉 kschon@lyjoseoul.co.kr

의결번호	2012국선8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새전북신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청1길 6 대표이사 박명규
심의대상기사	새전북신문 2012년 3월 2일자 8면, 3월 5일자 10면 및 3월 9일자 10면 「신경민의 개념 사회」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목이 드러나는 저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 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광고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신경민의 개념 사회

바른말 앵커 신경민의
맥없이 던지는 희망과 격려가 아닌
정확한 지도와 행동 요령을 담은
2030을 위한 정치사회학 교과서

전 MBC 앵커 신경민, 청춘과 함께 대한민국을 고민하다.

맥없이 던지는 희망과 격려가 아닌 정확한 지도와 행동 요령을 담은 2030을 위한 정치사회학 교과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꼬집다.

이 책은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빨갱이’로 대표되는 색깔론과 지연이다. 빨갱이와 지연의 논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지연으로 시작된 학연·혈연·근무연·종교연 등의 인연이 인사와 평가를 통해 전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폭로한다. 저자는 빨갱이로 몰리면서 ‘빨갱이’라는 요술 방망이가 휘둘러지는 동력과 현실을 목격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에 권력에 비판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노조에 비판적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등등이었다. (후략)



신경민의 개념 사회

YK 새전북신문 연중캠페인 - 책 읽는 전북인이 됩시다.

바른 언론인의 눈으로 본 불편한 대한민국

책소개

**바른말 옹커 신경민의 맥없이 던지는 희망과 격려가 아닌
정확한 지도와 행동 요령을 담은 2030을 위한 정치사회학 교과서**

- 전 MBC '영커' 신경민, 청춘과 함께 대한민국을 고민하다.
- 맥없이 던지는 희망과 격려가 아닌 정확한 지도와 행동 요령을 담은 2030을 위한 정치사회학 교과서
-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포획다.

이 책은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빨갱이'로 대표되는 색깔론과 지연이다. 빨갱이와 지연의 논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지연으로 시작된 학연·혈연·군무원·종교연 등의 인연이 인사와 평가를 통해 전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폭로한다. 저자는 빨갱이로 물리면서 '빨갱이'라는 요술 방망이가 휘둘러지는 동력과 현실을 목격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에 권력에 비판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노조에 비판적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등등이었다.

젊은 시절 고향이 전라도라는 이유로 하숙집에서 쫓겨나고, 미팅에서 딱지를 맞았다. 취직 후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사를 한 죄와 증거를 거부한 죄까지 덧붙여져 '호남 빨갱이'로 찍혀 한직으로 돌며 30년 동안 4번이나 물을 먹어야 했다. 부당하고 불편한 현실을 대놓고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감으면 애국자가 되는 현실. 저자는 이렇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연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과 젊은이들에게서 발견한 희망의 단초를 제시한다.

메디치미디어

의결번호	2012국선9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대표이사 김 여 송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12년 3월 19일자 1면 「“새누리는 질리고 민주당은 미답장고”」, 19일자 3면 「‘盧風’ 대 ‘朴風’ 누가 셀까 ‘벳사공’도 몰라」, 19일자 3면 「민주 ‘문·성·길’ 트리 오 인터뷰」 및 3월 19일자 3면 「부산에 이는 바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들만의 인터뷰와 인물이 드러나는 선거 현수막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누리는 질리고 민주당은 미답장고”

野風 ‘문성길’ 연합전선 민심 요동
“MB정부 실정 심판” “그래도 1번”
대선 전초전 與野 민심 잡기 사활

“분위기는 좋은데,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유권자들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4·11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낙동강을 낀 부산 선거구)’의 현재 민심이다.

민주통합당이 ‘문성길’ (문재인·문성근·김정길) 트리오가 연합전선을 편 채 새누리당 텃밭을 공략하면서 낙동강 벨트의 민심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 친박(박근혜) 성향이 강한 부산 낙동강 벨트에서의 여야 싸움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시계 제로(0)’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부산의 민심은 아직 가늠키 어렵다. 현 정부의 실정 탓에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크지만, 민주통합당에 대한 믿음도 그리 탄탄치 않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장림2동 민주통합당 조경태(사하 을) 국회의원 사무실,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현역인 조경태 의원(재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길(부산진 을) 후보와 문성근(부산 북·강서 을)·최인호(사하 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4층에 마련된 10평 남짓한 사무실과 건물 복도·계단, 건물 앞에는 500여 명의 지지자로 가득 찼다. 지지자들은 “4·11 총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합성을 내지르며 후보들을 격려했다. (후략)

르포 - 총선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를 가다

“새누리는 질리고 민주당은 미덥잖고”

野風 ‘문성길’ 연합전선 민심 요동
“MB정부 실정 심판” “그래도 1번”
대선 전초전 與野 민심잡기 사활

“분위기는 좋은데,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4·11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낙동강을 건너 부산 선거구)의 현재 민심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성길’(문재인·문성근·김정길) 트리오가 연합전선을 편 채 새누리당 텃밭을 공략하면서 낙동강 벨트의 민심은 삼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 친박(박근혜) 성향이 강한 부산 낙동강 벨트에서의 여야 싸움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시계 제로(0)’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부산의 민심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현 정부의 실정 탓에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크지만, 민주통합당에 대한 믿음도 그리 탄탄치 않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장림2동 민주통합당 조경태(사하 을) 국회의원 사무실.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현역인 조경태 의원(재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길(부산 진을) 후보와 문성근(부산 북·강서을)·최인호(사하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4층에 마련된 10평 남짓한 사무실과 건물 복도·계단, 건물 앞에는 500여 명의 지지자로 가득 찼다. 지지자들은 “4·11 총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함성을 내지르며 후보들을 격려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지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막상 거리의 시민들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듯했다.

시민 고영삼(54·회사원)씨는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상승하고, 이러한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도 새누리당을 또 찍겠느냐”며 “하지만, 민주통합당도 영 미덥지 않아서 아직은 고민중”이라고 고심 of 흔적을 드러냈다.

택시기사 김모(51)씨는 부산 민심에 대해 “아직은 모르죠. 대부분의 시민이 새누리당을 욕하고 있긴 하지만, 투표 당일 ‘그래도 새누리당에게’라며 다시 찍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였다.

진모(여·37)씨는 “20대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그동안 서민을 외면해왔던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크다”며 “그동안 선거를 외면했던 주변 친구들도 이번 총선에는 투표에 참여해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지지자인 김영미(여·61·자영업)씨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크지만, 그래도 부산 사람들은 여전히 한나라당(새누리당)”이라며 “그래도 노홍(노무현 비타) 탓에 문성근, 문재인씨는 당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문성길 트리오’가 전진 배치된 ‘낙동강 벨트’의 경우 공단을 끼고 있고, 서민층과 젊은층이 상당수여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과거 어느 때와 달리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2% 부족한 느낌”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부산시민들이 서서히 마음을 정해가고 있는 게 보인다”며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영도구’를 버리고 보수층 색깔이 강한 부산 진을 선거구로 택하면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영도에서 편하게 출마했으면 좋겠지만, 부산의 중심인 부산 진을 선거구에서 바람을 일으켜야만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감각에 어려운 선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부산 진을 선거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아관연대에 합의한 곳”이라며 “아관연대를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17일 패밀리를 동반하여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부산 북·강서을 문성근 후보가 18일 북구 금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진구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17일 부산 사하구의 조경태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2국선93(자심)
언 론 사	하 정 태 (경북자치신문 발행인) 경북 김천시 충효8길 8
심의대상기사	경북자치신문 2012년 3월 5일자 8면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천 확정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고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북 김천시)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 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천 확정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19대 총선 김천시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된 국회의원 이철우 후보입니다.

먼저 공천을 앞두고 수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아울러 저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저의 의정활동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보내주신 성원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굵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아직도 저물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가 소홀히 했던 몫까지 더 열심히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공천을 앞두고 당명과 정강·정책은 물론 대폭적인 인적쇄신 등 뼈를 깎는 아픔의 공천혁명을 단행했습니다.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총선 승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의 정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정치’를 통해 시민 곁으로 한걸음씩 다가서겠습니다. (후략)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천 확정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19대 총선
김천시 선거
구에 새누리
당 후보로 공
천된 국회의
원 이철우 후

보입니다.

먼저 공천을 앞두고 수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아울러 저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저의 의정활동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보내주시는 성원이었

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굵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아직도 저물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소홀히 했던 몫까지 더 열심히 행여야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공천을 앞두고 당명과 정강?정책은 물론 대폭적인 인적쇄신 등 뼈를 깎는 아픔의 공천혁명을 단행했습니다.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신뢰

를 회복하고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총선 승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의 정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정치'를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겠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여야내 김천과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인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인 시민여론을 중시한 시민공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과연 김천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놓고 평가를 내린 결과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에 보답하는 길은 19대 국회에서 '국민만 보고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지난 4년은 '일에 살고 일에 죽는' 일생일사(事生事死)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이철우가 아니라

'일철우'라는 별명도 지어 주셨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모든 일에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불광불극(不狂不極)'의 정신으로 김천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외침처럼 저도 가슴에 '내 일생 김천과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천이 있기까지 일부 후보측의 비방?음해와 고소?고발이 있었던 점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공천에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연말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정권재창출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5일

새누리당 김천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 이철우 올림

의결번호	2012국선9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김천신문사 경상북도 김천시 가메실1길 21 대표이사 김 중 기
심의대상기사	김천신문 2012년 3월 8일자 5면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고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북 김천시)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 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부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19대 총선 김천시 선거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이철우입니다.

먼저 공천을 앞두고 수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아울러 저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저의 의정활동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보내주신 성원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아직도 저를 지지해주시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소홀히 했던 루까지 더 열심히 정겨야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겨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공천을 앞두고 당명과 정당·정책은 물론 대폭적인 인적쇄신 등 뼈를 깎는 아픔의 공천혁명을 단행했습니다.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총선 승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의 정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정치'를 통해 시민 곁으로 한걸음씩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위하여 김천과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인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인 시민여론을 중시한 시민공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과연 김천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놓고 평가를 내린 결과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에 보답하는 길은 19대 국회에서 '국민만 보고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지난 4년은 '일에 살고 일에 죽는' 일생일사(事生事死)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제게 이철우가 아니라 '일철우'라는 별명도 지어 주셨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모든 일에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불광불극(不狂不極)'의 정신으로 김천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외침처럼 저도 가슴에 '내 일생 김천과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천이 있기까지 일부 후보 측의 비방·음해와 고소·고발이 있었던 점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공천에 성원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연말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정권재창출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5일

새누리당 김천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이철우 올림

의결번호	2012국선95(자심)
언론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신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변호사회관 5층 발행인 신영무
심의대상기사	대한변협신문 2012년 3월 19일자 4면 「정치에 뛰어들다」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고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광명시 을)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에 뛰어들다!

〈변호사가 사는 법〉 이연주 변호사

12년 넘게 법조인으로, 기업인으로 종사해오다 정치라는 전혀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비례도 아닌 지역구의원에 도전하기로 하고, 경기도 광명 을 선거구에 전략공천되었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꺾기에 제가 적격이라는 당명을 받고 약간은 생소한 지역에 와서 각오도 다지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략공천의 특성상 낙천한 다른 예비후보들과 그들 조직의 반발을 달래고 수습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드리는 일, 상가에 불쑥 들어가 약속하며 인사하는 일 등이 아직은 어색하

고 쑥스럽기만 합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유형의 유권자들을 만나 그들과 정서적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반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니 어떤 언행이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이런 현실정치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준법경영을 총괄하는 법무총괄직에 있으면서 우리 경제구조의 현실을 생생히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일변도의 구조 속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커나가기 힘든 현실, 이 때문에 결국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IMF 당시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몰락해, 어머니가 보험외판원을 하시고 저는 학습지교사

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없는 서민의 어려움을 절절히 겪었습니다. 법조인으로, 기업인으로 승승장구한다는 세간의 평이 있었지만, 저는 이때 겪은 어려움을 잊지 않고 있고 우리 사회를 위해 경제구조를 바꿔 서민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몸담고서는 바꿀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꿔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에 나서는 도전,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선거활동이 벅차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솔직히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쏟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하기에 다시금 힘을 내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동료 법조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사는 법



이언주 변호사

12년 넘게 법조인으로, 기업인으로 종사해 오다 정치라는 전혀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비례도 아닌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기로 하고, 경기도 광명을 선거구에 전략공천되었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꺾기에 제가 적격이라는

준법경영을 총괄하는 법무총괄직에 있으면서 우리 경제구조의 현실을 생생히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일변도의 구조 속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커나가기 힘든 현실, 이 때문에 결국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IMF 당시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몰락해, 어머니가 보현외판원을 하시고 저는 학습지교사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없는 서민의 어려움을 절절히 겪었습니다. 법조인으로, 기업인으로 승승장구한다는 세간의 평이 있었지만, 저는 이때 겪은 어려움을 잊지 않고 있고 우리 사회를 위해 경제구조를 바꿔 서민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뛰어든다!

당명을 받고 약간은 생소한 지역에 와서 각오도 다지고 지역발전엔 대한 비전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라공천의 특성상 낙천한 다른 예비후보들과 그들 조직의 반발을 달래고 수습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드리는 일, 상가에 불쑥 들어가 악수하며 인사하는 일 등이 아직은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합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유형의 유권자들을 만나 그들과 정서적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반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니 어떤 언행이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이런 게 현실정치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기업에 몸담고서는 바꿀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꿔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에 나서는 도전,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선거활동이 벅차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솔직히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쏟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하기에 다시금 힘을 내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동료 법조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041036@naver.com

의결번호	2012국선10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영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2년 3월 28일자 12면 「정치검찰에 분노하라」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민주통합당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명이가 드러나는 저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광고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검찰에 분노하라!

검찰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온 변호사 이재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날날이 고발한다.

표적 수사, 보복 수사, 편파 수사, 꿰맞추기 수사, 사건 조작 등 온갖 치졸한 꼼수와 부정이 난무하는 재판 이야기.

‘꼼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7가지 ‘불법 백화점’ 사건을 직접 맡았던 변호사 이재화가 각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노출된 ‘정치검찰’의 불법과 탈법을 고발한다.

- 정봉주 BBK 사건
- 곽노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김현미 뇌물 수수 사건
-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 사건
- 이강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염동연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 이부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후략)

검찰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온 변호사 이재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낱알이 고발한다

정치검찰에 분노하라!

표적 수사, 보복 수사, 편파 수사, 꿰맞추기 수사, 사건 조작 등 온갖 치졸한 관수와 부정이 난무하는 재판 이야기.
'정치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7가지 '불법 백화점' 사건을 직접 맡았던 변호사 이재화가 각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노출된 '정치검찰'의 불법과 탈법을 고발한다.

변호사 이재화
280쪽 | 값14,000원

5년 동안 나의 BBK 재판을 벌인 이 변호사는 그 이전부터 정치검찰과 정면승부를 해온 '아전 변호사'다. 10년 이상을 정치검찰과 맞짱 뜬 정치검찰의 '지력'이다. 이 책은 정치검찰과 맞서 싸워온 이 변호사의 생생한 체험이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정치검찰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 저절로 분노하게 될 것이다. 왜 정치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홍성교도소에서 정봉주

정봉주 BBK 사건
곽노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현미 뇌물 수수 사건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 사건
이강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염동연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이부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의결번호	2012국선102(자심)
언론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양 상 우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2년 3월 9일자 1면, 13일자 14면, 17일자 11면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2012년 3월 20일자 8면 「도종환의 나의 사람, 나의 시, 우직하게 리얼리스트의 길을 걸어온 영혼의 고백», 2012년 3월 21일자 1면, 28일자 13면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이후 10년, 박노자가 말하는 ‘국가란 무엇인가’», 2012년 3월 21일자 25면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진보신당 비례대표 등)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명목이 드러나는 저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광고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우리 시대의 대표 멘토 7인과 함께하는 청춘 상담 버라이어티 토크

강풀 · 홍세화 · 김여진 · 김여준 · 정재승 ·
장항준 · 심상정

먼저 살아본 일곱 멘토들이 자신의 청춘과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며 건네는 따스한 위로와 따뜻한 조언!

“공부만 하게 하는 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이제 고민해야 할 것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법이에요”-정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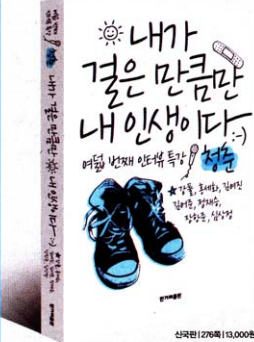
“그냥 하세요. 이유 달지 말고, 의미 부여하지 말고, 뭐 대단한 일이 있다고, 그냥 하면 돼요”-김여준

“사람이 왜 나이를 먹을수록 보수화되냐고요? 청춘이 가니까 그런 거지요”-심상정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원하는 걸 바로 지금 하면서 사는 겁니다.”

-김여진 (이후 광고 본문 생략)

강풀 · 홍세화 · 김여진 · 김어준 · 정재승 · 정항준 · 심상정



신국판 | 276쪽 | 13,000원

우리 시대의 대표 멘토 7인과 함께하는 청춘 상담 버라이어티 토크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먼저 살아본 일곱 멘토들이 자신의 청춘과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며 건네는 따스한 위로와 따끔한 조언!

★ "공부만 하게 하는 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이제 고민해야 할 것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법이에요." **정재승**

★ "사람이 왜 나이를 먹을수록 보수화되나고요? 청춘이 가니까 그런 거지요." **심상정**

★ "그냥 하세요. 이유 따지 말고, 의미 부여하지 말고, 뭐 대단할 일이 있다고, 그냥 하면 돼요." **김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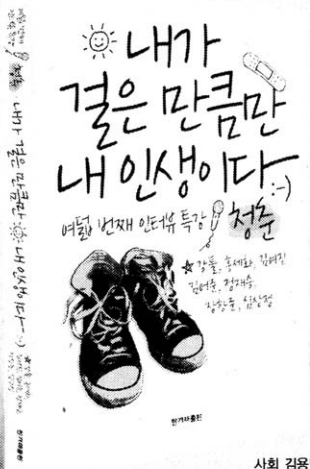
★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원하는 걸 바로 지금 하면서 사는 겁니다." **김여진**

전국 주요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hanibook.co.kr **한겨레출판**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강풀, 김어준, 김여진, 심상정, 정항준, 정재승, 홍세화

**우리 시대의 대표 멘토 7인과 함께하는
청춘 상담 버라이어티 토크**



사회 김용민
신국판 | 276쪽 | 13,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hanibook.co.kr **한겨레출판**

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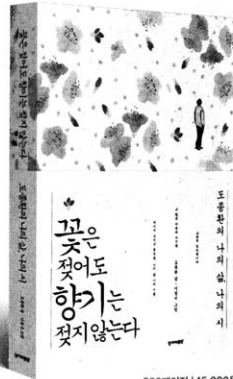
우직하게 리얼리스트의 길을 걸어온 영혼의 고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아픔의 시간을.
거기서 우러난 문학을. 나의 삶, 나의 시를.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도종환 글 · 이철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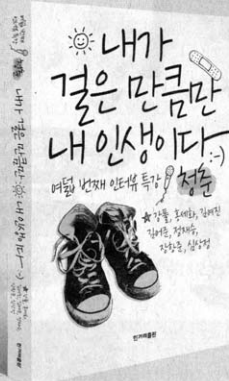


356페이지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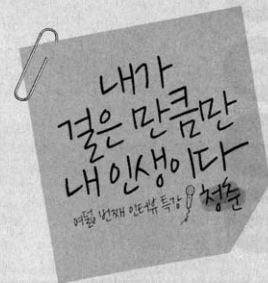
한국 주요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hanibook.co.kr **한겨레출판**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강풀, 김어준, 김여진, 심상정, 장항준, 정재승, 홍세화
우리 시대의 대표 멘토 7인과 함께하는 청춘 상담 버라이어티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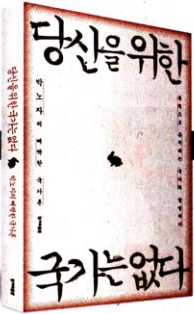


사회 김용민
신국판 | 276쪽 | 13,000원



한국 주요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hanibook.co.kr **한겨레출판**

www.hanbook.co.kr 한겨레출판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이후 10년, 박노자가 말하는 '국가란 무엇인가'

출판집회 시위대에 한마디도 굴하지 않고 불대포를 쓰는 국가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살인 진압을 하는 국가
재벌총수의 편이는 최대한 배려하면서 노동자의 해고와 죽음은 외면하는 국가

국가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가?

정작 우리를 몰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사무총국'이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부의 비국민, 즉 가난한 사람들을 조지프와 대량으로 살해하는 기계라는 주장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의 글은 국가에 대한 일련의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중적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교과서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막상 국가라는 말에 놀려 '비워도 다시 한번'을 부르는 진보정치세력에 날카롭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 (김동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박노자 지음
2008 / 12 / 25, 2009년



의결번호	2012국선10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반월신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33-5번지 한도빌딩 2층 대표이사 홍 일 호
심의대상기사	반월신문 2012년 3월 8일자 2면 및 3월 15일자 2면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일부 후보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아버지 연합〉

대한민국 아버지 연합 안산지부가 국가관이 투철하고 반공 이념이 확실하며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실 참신한 시민회원님을 모십니다.

한·미 FTA는 전 국민이 원하는 만큼 꼭 성사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대표라는 한명숙, 또 정동영, 김진표 등은 세 살 난 어린아이도 알 듯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입버릇처럼 찬양한 사람들이다.

마치 구국의 결단처럼 한·미 FTA를 치켜세우고, 대단한 업적처럼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반드시 한·미 FTA를 폐지하겠다고 외교상 결례를 무릅쓰고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에 편지를 전달하는가?

이는 국민들이 절대 용서 안 할 것임을 민주통합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경기 안산지부 회장단

〈회원모집〉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안산지부가 국가권이 투철하고 반공 이념이 확실하며 사회봉사
사에 적극 참여하실 참신한 시민회원님을 모십니다.

한·미 FTA는 전 국민이 원하는 만큼 꼭 성사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대표라는 한명숙, 또 정동영, 김진표 등은 세 살 난 어린아이도 알듯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임버릇처럼 찬양한 사람들이다.
마치 구국의 결단처럼 한·미 FTA를 치켜세우고, 대단한 업적처럼 입에 침이 마르
게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반드시 한·미 FTA를 폐지하겠
다고 외교상 결례를 무릅쓰고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에 편지를 전달하는가?

이는 국민들이 절대 용서 안 할 것임을 민주통합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의결번호	2012국선109(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남여성신문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8 케이프타운 4F 4033호 대표이사 김 영 수
심의대상기사	경남여성신문 2012년 3월 18일자 4면 「사상 손수조-문재인 대결은 사실상 박근혜-노무현의 대리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산광역시 사상구)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만 비판적인 내용을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사상 손수조-문재인 대결은 사실상 박근혜-노무현의 대리전

빨난 부산민심 “새누리당 맛 좀 보라” 성토

4.11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공천경쟁으로 전국이 벌집 쑤셔놓은 듯 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성토하던 전여옥은 국민생각당으로 몸을 옮겼다. 한 누리꾼은 전여옥에 대해 “지들 생각당”이란 비아냥을 퍼붓기도 했다.

여기에 부산 사상구에 공천장을 쥐어준 손수조에 대한 부산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과연 당선을 위한 공천이였는지는 것이다. 사상구의 한 시민은 박근혜 위원장의 공천이 과연 부산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어디서나 ‘성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과 마트, 버스와 택시, 노인정과 주민센터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부산 경제를 성토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4·11총선의 부산 민심의 향방은 빨난 부

산 시민들을 ‘누가’ ‘어떻게’ 어루만져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부산 시민들의 여야 후보들의 평가가 갈렸고 여야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나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총선에서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산 사상구의 시민들은 지난 5일 공천을 확정 받은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와 연일 지지율 ‘상한가’를 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 대한 이야기만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마치 손수조와 문재인의 대결이 박근혜와 노무현의 대리전이라고 느껴질 정도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에서 손수조를 공천한 게 이해가 안 돼. 27살의 어린 아가씨가 지역경제에 대해 뭘 알겠어. 박근혜가 정말 문재인 대항마 찾기가 어려워 ‘버리는 카드’로 공천한 게 맞아?” 사상구 서부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김명지(59)씨는 ‘지역민심이 어떠하나’는 질문에 오히려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후략)

사상 손수조-문재인 대결은 사실상 박근혜-노무현의 대리전 뿔난 부산민심 "새누리당 맛좀보라" 성토

4.11총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공천 경쟁으로 전국이 벌집수서놓은듯 하다. 새누리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을 성토 하든 전여육은 국민생각대로 몸을 올렸다. 한 누리꾼은 전여육에 대해 "지들 생각당"이란 비아냥을 퍼붓기도 했다.

여기에 부산 사상구에 공천장을 쥐어준 손수조에 대한 부산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과연 당선을 위한 공천이였느냐는 것이다. 사상구의 한 시민은 박근혜위원장의 공천이 과연 부산을 버린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어디서나 '성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과 마트, 버스과 택시, 노인정과 주민센터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부산 경제를 성토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4·11 총선의 부산 민심의 향방은 뿔난 부산 시민들을 '누가' '어떻게' '어우만저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부산 시민들의 여야 후보들의 평가가 갈렸고 여야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나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총선에서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산 사상구의 시민들은 지난 5월 공천을 확정 받은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와 연일 지지를 '상한가'를 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합당 상임고문에 대한 이야기만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했

다. 마치 손수조와 문재인이 대결이 박근혜와 노무현의 대리전이라고 느껴질 정도라는 예기다.

"새누리당에서 손수조를 공천한 게 이해가 안 돼. 27살의 어린 아가씨가 지역경제에 대해 뭘 알겠어. 박근혜가 정말 문재인 대항마 찾기가 어려워 버리는 카드'로 공천한 게 맞아?" 사상구 서부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김명자(59)씨는 '지역민심이 어떡하나'는 질문에 오히려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8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경로당을 방문해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두 후보의 사무실이 있는 제법동의 한 식당에서 만난 박정식(57)씨도 같은 질문에 "원래 여당 찍으려고 했는데 어린 아가씨가 나와 좀 그렇다"며 "박근혜가 요새 부산 민심을 똑바로 못 읽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만난 많은 친여 성향의 시민들은 지역민심을 묻는 질문에 손수조 후보에 대한 공천을 문제 삼으며 새누리당의 수장인 박근혜 위원장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이 원칙과 소신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주례동에서 만난 한 약국 사장 정 모 씨(47)는 "얼마 전 박 위원장의 방문이 오히려 부산 민심에 기를 지웠다"며 "저축은행 사태에 정수장학회까지 나와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신공

항 재추진에 대해 또 애매모호하게 대답해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시민들은 박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부산을 방문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줄 알았는데 포장지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어 오히려 성난 민심을 더 끌어놓는 셈이 됐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13일에 부산에 또 온다는데 사실상 이번이 민심을 돌릴 마지막 기회

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적지(敵地)에서 낮은 정당 지지도를 극복하며 점차 호감도를 높여 당선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덕포동의 한 상점에서 만난 정장환(56)씨는 "문재인 후보는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은 사람 아니냐"며 "부산은 원래 한 번 정한 마음 잘 안 바꾸는데 '노통'이 편해서 이번엔 (새누리당) 못 찍겠다"고 말했다.

상점 주인도 "문재인이 대통령 나가면 또 선거해야 한다는데 대통령 되면 지역이 힘 좀 안 쓰겠어"라며 "노통이 못 다 이룬 거 마저 해야지"라고 거들었다. '노풍' '盧風'이 '문풍' (文風)을 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와 손수조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44.5%의 지지율로 25.1%에 그친 손 후보를 더블 스코어 가깝게 따돌리고 있다.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34.5%)과 민주당합당(34.1%)이 박빙인 점도 주목된다. 박 위원장이 부산 민심을 읽어 점수를 까먹고 있는 사이에 문 후보의 인기엔 '노풍'이 더해지면서 민주당합당의 지지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반증이다.

부산/정규영통신원

의결번호	2012국선11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일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2-1 대표이사 임창열
심의대상기사	경기일보 2012년 3월 20일자 20면 「“120만 관중 시대 활짝...더 높은 도약 고민”」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용인시 병)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의 치적이 드러나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20만 관중 시대 활짝... 더 높은 도약 고민”

인터뷰-한선교 KBL 총재

바야흐로 한국프로농구의 ‘전성시대’다. 높게만 보였던 한 시즌 역대 최대 관중 동원 기록(122만 1636명)을 돌파하고야 만 것이다.

이번 시즌들어 유독 많은 사람들이 농구장을 찾고 있는 이유는 생각 외로 간단하다. 매 게임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프로농구가 팬들로부터 한층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된 데는 지난해 9월 취임한 한선교 KBL총재의 역할이 컸다.

한 총재는 파울로 시합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속공 중 고의 반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박진감 넘치는 골밑 싸움을 유도

하기 위해 슛 블로킹 시의 신체 접촉을 완화하는 등의 ‘룰 개정’을 통해 한층 더 재미있는 농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프로농구의 숙원이었던 ‘120만 관중 시대’를 다시 열어젖힌 KBL의 수장, 한선교 KBL총재를 만났다.

Q 제7대 총재로 취임한 지 어느덧 7개월을 맞았다. 성과는.

A 뭐니뭐니해도 역대 최대 관중 동원 기록을 달성한 것 아니겠는가.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임기(3년) 내에 120만 관중 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 몰랐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많아야 발전할 수 있는 게 프로 스포츠다. 앞으로도 팬들이 다시 찾고 싶은 프로농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또 KBL 사상 최초로 외부 스폰서를 도입, 리그의 안정화를 꾀한 것 또한 중요 성과로 꼽고 싶다. (후략)

인터뷰_한선교 KBL총재

“120만 관중 시대 활짝...더 높은 도약 고민”

바야흐로 한국프로농구의 ‘전성시대’다. 농계를 보여준 한 시즌 역대 최대 관중 동원 기록(122만 1636명)을 돌파하고야 만 것이었다.

이번 시즌들어 유독 많은 사람들이 농구장을 찾고 있는 이유는 생각 외로 간단하다. 매 게임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프로농구가 팬들로부터 한층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된 데는 지난해 9월 취임한 한선교 KBL총재의 역할이 컸다.

한 총재는 바움로 시합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속공중 고의 반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박진감 넘치는 공명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 속 볼로인 시의 신체 접촉을 완화하는 등의 ‘룰 개정’을 통해 한층 더 재미있는 농구들이 만들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프로농구의 숙원이었던 ‘120만 관중 시대’를 다시 열어젖힌 KBL의 수장, 한선교 KBL 총재를 만났다.

○ 제7대 총재로 취임한 지 어느덧 7개월을 맞았다. 성과는?

▲ 뽀니니니네도 역대 최대 관중 동원 기록을 달성한 것 아니겠는가.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임기(3년) 내에 120만 관중 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져서 좋았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많아 발전할 수 있는 게 프로 스포츠다. 앞으로도 팬들이 다시 찾고 싶은 프로농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다. 또 KBL 사상 최초로 외부 스폰서를 도입, 리그의 안정화를 꾀한 것 또한 중요 성과로 꼽고 싶다.

○ 관중 동원 이외에도 농구전용체육관 마련, 컵대회 신설, 농구 지면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아는데.

▲ 농구 전용 체육관은 지자체 예산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

외부스폰서 도입·리그안정화 큰 성과
농구장 장기임대 등 현안 풀어 나갈 것
관리장성 넘어 ‘아시아 제패’에 사활

구장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통해 전용체육관 문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컵 대회는 사전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와 아마, 대학 등이 망라된 18개 팀이 참여하는 컵 대회 운영을 통해 농구 팬들이 ‘농구대잔치’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리그 왕중왕전 개최 등을 통한 ‘유소년 클럽 활성화’와 대학 내 농구 동아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농구를 보고 즐기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 농구가 국제대회에서 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있는가.

▲ 한국이구가 WBC 우승을 통해 농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듯,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만 한국 농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장성’을 넘어 아시아를 제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주력할 계획이다.

○ 다문화 가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아는데.

▲ 농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필리핀 농구협회와 교류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6-8월 중에 필리핀 국가대표팀과 한국 국가대표팀의 교류전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산 등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도에서 대회를 개최, 다문화 가정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이런 시절부터 농구를 즐겨했다. 지금이야 체력이 떨어지서 그렇지 한때는 대학 동아리 내에서 쾅쾅 수위로 통했다.(웃음) 지금도 중요 경기는 꼭 찾아볼 정도로 열성적인 ‘팬’이기도 하다. 또 김민진, 이인표씨 등과의 친분으로 KBL 출범 때부터 관심있게 지켜봐 온 만큼 농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팬들의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

박민수기자 kyang@kyonggi.com



의결번호	2012국선11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울진신문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5-1 대표이사 전 병 식
심의대상기사	울진신문 2012년 3월 15일자 8면 「99% 서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99% 서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통합민주당 정일순 후보 출마포부

많은 사람들이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을 말할 때, 항상 앞에 수식하는 말은 ‘낙후지역’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꼬리표를 떼어 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던지 하겠다는 다짐을 하여 오다,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때라는 판단으로 우리 지역을 희망의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는 지금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다음에도 정권을 창출할 것이라는 데에는 70% 이상이 부정하고 있으며, 이미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온 국민들이 나라를 망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MB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그토록 지지하고 애정을 보내주었던 새누리당과 국회의원이 놓여 촛 기반이 무너지는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는 등 지역의 기반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7번 국도 4차선이 무려 20년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3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해 온 상주~안동~영덕간 고속도로에는 연 2천억이 못되는 쥐꼬리 예산을 편성하고, 36번 국도마저 2차선으로 추진해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술한 애정을 보내 주었던 새누리당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의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온 국민과 함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역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홀대를 보상해 주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민주 통합당 후보뿐입니다. (후략)

99% 서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통합민주당 정일순 후보 출마포부



많은 사람들이 영양, 영덕, 봉화 읍진을 말할 때, 항상 앞에 수식하는 말은 '낙후지역'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꼬리표를 떼어 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 '다는 다짐을 하여 오다.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때라는 판단으로 우리 지역을 희망의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는 지금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다음에도 정권을 창출할 것이라는 데에는 70% 이상이 부정하고 있으며, 이미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은 국민들이 나라를 망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MB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그토록 지지하고 애정을 보내주었던 새누리당과 국회의원인 농어촌 기반이 무너지는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는 등 지역의 기반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7번국도 4차선이 무려 20년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3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해 온 상주~안동~영덕간 고속도로에는 연 2천억이 못되는 쥐꼬리 예산을 편성하고, 36번국도마저 2차선으로 추진해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술한 애정을 보내 주었던 새누리당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의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온 국민과 함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역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혜택을 보상해 주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민주 통합당 후보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라를 망친 MB정권을 심판하고, 지역을 맡아 먹은 새누리당을 심판하여 99% 서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곳

은 대부분 농어민이 사는 지역입니다. 농어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굴욕적인 한미 FTA에 날치기 하는데 앞장선 새누리당은 이미 농어민의 정당이 아닙니다. 한미 FTA는 반드시 국익이 되도록 재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위해 국회의원의 풀마니 노릇이나 하는 지방자치제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생각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단체장, 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전권을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지역민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자 선출해 봐야 지역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안됩니다. 불과 8개월 남은 대선에서 모든 국민이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꾸려 나가겠습니까?

정일순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정신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라, 차기 정권과 연계한 지역의 미래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115(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월요문화사(월요신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삼보빌딩 9층 대표이사 윤철호
심의대상기사	월요신문 2012년 3월 18일자 5면 「민주당, 탈북난민의 강제 북송 외면하면 안 된다」 제하의 기고문
주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대구광역시 수성구 갑)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 탈북난민의 강제 북송 외면하면 안 된다

김부겸 민주당통합당 최고위원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외교, 국제적 사안으로 탈북자 문제를 전환했다. 그렇다면 탈북자 관련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사국들에게 쓸데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탈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을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그래야만 국내의 모든 영향들이 결집되어 절박한 이 분들의 생명권을 지킬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탈북자 관련 정책의 원칙은 ‘조용한 외교’였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우리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국제적 사안으로 가져갔다. 탈북자 관련 정책 원칙과 목표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탈북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기만 한다. (후략)

월요칼럼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외교, 국제적 사안으로 탈북자 문제를 전환했다. 그렇다면 탈북자 관련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사국들에게 쓸데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탈북자 문

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그래야만 국내의 모든 영향들이 결집되어 절박한 이분들의 생명권을 지킬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탈북자 관련 정책의 원칙은 '조용한 외교'였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우리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국제적 사안으로 가져갔다. 탈북자 관련 정책 원칙과 목표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탈북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목소

리만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기만 한다.

중국 정부는 난민 신청을 막지 말라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이들과 생계형 불법체류자들이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나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는 중국에 '모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탈북자들이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

드리겠다.

중국이 난민 신청을 인정한다 해도 중국의 국익에 반할 것은 없다.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탈북자 대부분은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을 경유지로 생각할 뿐 피난처로 선택하지 않는다.

난민신청 기회를 부여해도 중국 내 외국공관이나 '유엔고등관무관실'은 난민자격 부여에 신중해질 것이다. 한국처럼 탈북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유엔고등관무관실'의 활동만이라도 우선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난민의 적용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민주당은 탈북자 강제 복송과 관련해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적어도 사안에 관한 여러 가지 실태 조사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이들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긴장과 갈등을 민주당이 막아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12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대표이사 이창영
심의대상기사	매일신문 2012년 3월 24일자 4면 「광주 친박 與 당선권…대구 野 김부겸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광주광역시 서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 수치 등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광주 친박 與(여) 당선권… 대구 野(야) 김부겸은?

광주 서구을 야권 표 분산 효과 여론조사 단독 1위 화제물이 동-서 불모지 격변 신호탄 관심

새누리당에게는 불모지인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박근혜의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 의원(사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이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근인사로 대구 경북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의원의 광주에서의 선전 여부는 정치권은 물론 4·11 총선의 주목 거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선전은, 민주당 통합당 불모지로 불리는 대구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와 대비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

중시키고 있다.

김부겸 의원의 대구 성적과 이정현 의원의 광주 성적이 비교 대상이다. 대구와 광주를 바라보는 전국의 눈도 많다.

이 의원은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3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누비면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만나는 유권자마다 “박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방문하는데 반해 민주당 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호남에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호남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호남 출신을 3명이나 포함시킨 것은 새누리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호남 민심에 다가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달 9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정치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후보등록 직전 시점에 다른 후보가 취합한 자료에서도 이 의원의 상승 기류는 여전했다고 한다. (후략)

광주 친박 與 당선권...대구 野 김부겸은?

〈박근혜 '입' 이정현 의원〉

광주 서구를 아권 표 분산 효과
여론조사 단독 1위 화제물이
동-서 불모지 격변 신호탄 관심

새누리당에게는 불모지인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박근혜의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 의원(사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에 출마한 이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근인사로 대구경북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의원의 광주에서의 선전 여부는 정치권은 물론 4·11 총선의 주목거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선전은, 민주통합당 불모지로 불리는 대구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부겸 의원의 대구 성적과 이정현 의원의 광주 성적이 비교 대상이다. 대구와 광주를 바라보는 전국의 눈도 많다.



이 의원은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3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누비면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만나는 유권자마다 "박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방문하는데 반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호남에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호남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호남 출신을 3명이나 포함시킨 것은 새누리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것라고 주장하면서 호남 민심에 다가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달 9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정치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후보등록 직전 시점에 다른 후보가 취합한 자료에서도 이 의원의 상승 기류는 여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 정치권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지역의 김영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아권연대 후

보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각각 20~30%대의 표를 비슷하게 분산시키고 있어 새누리당 후보인 이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 선전의 배경은 지난 4년간 새누리당 예결위원으로서 광주와 전남 예산 확보에 총력을 펼친 것에 대해 이 지역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호남예산지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새누리당은 믿지만 이정현은 뽑아줘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야 박근혜 위원장을 뽑아야겠지만 총선에서는 야당 후보 한두 명이라도 국회의원을 시켜야 무조건 지지 경향에 안주하는 새누리당을 정신 차리게 한다"는 대구에서 일고 있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이 의원의 선전이 대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에 대한 대구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의결번호	2012국선12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대경신문(대경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5-11번지 대표이사 이 춘 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2년 3월 29일자 3면 「“경북지역 15명 후보 압승하도록 최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대구 경북 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 현황을 담은 사진만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정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북지역 15명 후보 압승하도록 최선”

새누리당 경북도당, 선거대책회의 갖고
지원체제 강화 민주당경북도당,
‘경북발전 7대 공약’ 표 발같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28일 제이스 호텔에서 선거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총선지원체제 강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역시 경북 15개 지역구에서 모두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경환 위원장은 “이번 19대 총선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로써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초석인 만큼 좌파 정권에 나라를 맡기게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경북지역 15명의 후보가 압승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경북도당도 28일 경북발전 7대 공약을 내고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후략)



합동 공약 새누리당 대구지역 12개 선거구 후보자들이 28일 대구시당 강당에서 합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 선거대책회의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28일 대구 제이스 호텔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지역 15명 후보 압승하도록 최선”

새누리당 경북도당, 선거대책회의 갖고 지원체제 강화

민주통합당 경북도당, ‘경북발전 7대 공약’ 표 받같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28일 제이스 호텔에서 선거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총선지원체제 강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역시 경북 15개 지역구에서 모든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경환 위원장은 “이번 19대 총선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로써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초석인 만큼 좌파 정권에 나라를 맡기게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경북지역 15명의 후보가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 경북도당도 28일 경북발전 7대 공약을 내고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허대만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경북이 미래로 전진하느냐 과거로 후퇴하느냐 귀로선 선거다”며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반드시 야권 후보 당선자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이날 오후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국투자신탁빌딩 4층에서 포항 남·울릉 김형태 후보의 필승을 지원할 정당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경환 경북도당 위원장, 이병석 국회의원, 이상호 경주시의장, 시·도의원, 도당 당직자, 당협운영위원, 중앙위원, 당원 등 1000명이 참석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총선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한미FTA 협상을 뒤집고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부르는 정당에겐 절대 표를 쥐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병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당엔 친이, 친박이 따로 없다”면서 “이상득 의원과 함께 포항시와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발여놓은 12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노재현·김기태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122(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영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2년 3월 28일자 11면 「가진 자들에게 정치 맡기지 말고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돼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이력, 정견(政見) 등이 드러나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여타 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가진 자들에게 정치 맡기지 말고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돼야”

김규항의 좌판 <13>
청소노동자 김순자

“돈 많고 배운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해주진 않는다. 노동자·서민이 사람 대접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로 가는 것이 진보다”

20대 때 혁명에 빠지지 않으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도 혁명을 생각하면 뇌가 없는 사람이라 했던가. 지난 30여 년 우리 사회에서 386세대처럼 그 말에 잘 들어맞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80년대를 불태우던 20대의 혁명가들은 이제 수구기득권 세력과 경쟁하는 신흥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민주세력이자 진보세력이라 말한다. 올해 예순인 한 울산아지매가 그들에게 탄축을 걸고 나섰다.

김규항 = 한나라당 당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순자 = 한나라당 당원만 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 지역 여성회장도 하고 관련단체인 바르게 살기위원회, 경찰서에서 하는 반공멸공회 총무도 했습니다.

김규항 =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눈을 떴다는 말은 대개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하다가 민주당 같은 자유주의 정치를 지지하게 되는 변화를 일컫는데, 훌쩍 건너뛰셨습니다.

김순자 = 나이 50이 되어 노동조합을 하면서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몽준을 존경하는 한나라당 당원이었을 겁니다.

김규항 = 울산과학대 이사장이 정몽준씨입니다. 울산엔 현대가 울산을 발전시키고 잘 살게 해준 고마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김 선생님의 변화를 불편하게 보는 분들도 있었겠습니다.

김순자 = 부정절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 역시도 전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안하고 비뚤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데 알고 보니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들도 없더군요.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남에 대한 배려심이 이렇게 많은가” 말하곤 했습니다.

김규향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보통의 회사가 아니라 대학이니 다를 거라 생각하셨지요.

김순자 = 처음 출근해보니 엘리베이터에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은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성인들이 있는 곳이 역시 다르구나 감탄했죠. 학장이나 교수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 얼마나 훌륭할까 기대했고 내 자식 같은 학생들을 위해 청소하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무도 달랐어요.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주의적이고 악랄했어요.

김규향 = 김 선생님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노동문제나 사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세상의 모든 체험을 다 할 수는 없지요. 지식을 갖는다가나 배운다는 건 그런 체험을 일일이 다하지 않고도 사회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에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략)

의결번호	2012국선12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미디어워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402호 대표이사 변희재
심의대상기사	미디어워치 2012년 3월 28일자 8~9면 「박영선, 아들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및 거짓해명, 4.11 총선에서 이슈 될 듯」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구로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자녀의 외국인 학교 입학과 관련한 의혹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과 본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영선, 아들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및 거짓해명, 4.11 총선에서 이슈 될 듯

부모 모두 한국에 거주
한국서 태어난 아이를 왜 미국으로 보냈나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참여한 박영선 의원은 아들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서민시장을 외치면서 등록금만 연간 3000만원대의 초호화 서울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의혹까지 일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의혹제기는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중단되고 말았지만 4.11총선을 맞아 박영선 후보가 구로 을에서 강요식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게 되면서 지난해 중단됐던 의혹이 다시 떠오르게 됐다.

‘박영선 의원의 남편과 아들이 미국 국적자’라는 문제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천정배 의원이 처음 제기한 사안이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미국 국적자인 이원조 변호사와 결혼하는 바람에 아들이 이중국적을 갖게 된 것뿐이라 해명했다. 경선 당시 아들의 외국인학교 입학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해명요구 묵살하다 빅뉴스·미디어워치 단독 보도 이후 실토했던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 아들의 외국인학교 입학건은 본지와 빅뉴스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2010년 11월 경 서울 외국인학교에서 인스트럭터로 일한 한 교사는 본지 측에 박 의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행사에 학부모로서 참여했다고 제보를 해왔다. 해당교사는 “광우병 파동 때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듯 말하던 분이 대부분 미국 국적자 아이들이 다니는 외국인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킨 것은 이중적으로 보여 제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박영선 의원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박영선 의원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닌다. 외국인학교 입학여부는 확인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본지와 빅 뉴스는 2011년 9월27일 ‘박영선 후보 아들, 최고급 외국인학교 졸업?’이란 기사로 상황을 단

독보도 했다. (후략)

08 미디어

정치 / 사회

2012년 3월 28일

박영선, 아들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및 거짓해명, 4.11 총선에서 이슈 될 듯



부모 모두 한국에 거주
한국서 태어난 아이를 왜 미국으로 보냈나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민주당 경선후보로 참여한 박영선 의원은 당시 아들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서민시장을 의치면서 등록금만 연 3000만 원대에 이르는 초호화 서울외국인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켰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의혹까지 일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의혹 제기는 당시 박원순 무소속 후보로 야권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중단되고 말았지만, 4.11 총선을 맞아 박영선 후보가 구로읍에서 강요식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게 되면서 지난해 중단됐던 의혹이 다시 떠오르게 됐다.

‘박영선 의원 남편과 아들이 미국국적자’라는 문제는 지난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허당자였던 천정배 의원이 처음 제기한 사안이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미국국적자인 이원호 변호사와 결혼하는 바람에 아들이 이중국적을 갖게 된 것뿐이라 해명했다. 경선 당시 아들의 외국인학교 입학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해명요구 목숨하다 빅뉴스·미디어워치 단독도 이후 실효한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의 아들의 외국인학교 입학 건은 본지와 빅뉴스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2010년 11월 경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인스트럭터로 일한 한 교사는 본지 속에 박 의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행사에 학부모로서 참여했다고 제보를 했었다. 해당교사는 “장우병 파동 때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듯 말하던 분이 대부분 미국국적자 아이들이 다니는 외국인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킨 것은 이중적으로 보여 제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박영선 의원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박영선 의원 아들들은 현재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닌다. 외국인학교 입학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본지와 빅뉴스는 2011년 9월27일 ‘박영선 후보 아들, 최고급 외국인학교 졸업?’이란 기사로 상황을 단독보도 했다.

서울 연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은 같은 외국인학교 내에서 가장 엄격하다. 관련법에 따라 30% 정도의 외국거주 한국인 자녀에게 입학할 허용하는 것과 달리 서울외국인학교는 철저히 외국인만 입학 가능하다.

서울외국인학교는 학생 자신이 외국인인 것은 물론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적

본지와 빅뉴스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건
총선과정에서 거짓해명까지 논란 벌어질 듯

으로 외국국적을 갖도록 입학규정을 정해놓았다. 소위 원정출신으로 얻은 외국국적자는 입학이 불허되는 것이다. 예외 규정으로 5년 간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외국인학교 등록금은 여타 외국인학교에 비해서도 한참 비싸다. 외국인학교 평균등록금이 고등학교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대인데 반해, 서울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 과정이 입학 기준으로 약 3200만 원(2440만 원+76255)이다. 더구나 버스이용료만 연간 240만 원, 시험료·교재비·급식비 등을 합산하면 약 4000만 원대에 이른다. 입학금 약 8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3000만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특히 서울외국인학교는 3살과 4살 어린이가 수료하는 프리스쿨과 주니어인턴십 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영어가 부족한 학생에게 따로 ESL 특별과정도 마련해준다.

박영선 의원은 보도가 나가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시어머니가 데려다 키웠다. 한국 학교에 넣었지만 적응을 잘하지 못해 외국인학교로 보냈다. 당시 나는 정치하기 전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12살짜리 애를 두고 ‘갑 나라, 대추 나라’ 하고, 국적이 어떻고... 나중에 아들에게 한참 설명해줘야 하는데, (눈물을 펴구려)답답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곧 거짓 의혹을 받게 됐다. 박영선 의원은 1995년과 1997년 사이 미국 특파원 시절, 미국시민권자인 한국인과 결혼한 뒤 아이는

한국에서 낳은 것으로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후 박 의원은 MBC보도국에서 근무했고, 남편은 한국 로펌에서 일했다. 즉 박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도 바깥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왜 미국의 시어머니가 데려다 키웠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MBC기자로 일이 바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MBC기자 일이 바빠 갖난아이를 미국 시부모 맡겼다는 이상한 해명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처럼 돌볼 시간이 없다고 갖난아이를 미국으로 보낸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직장생활을 위해 아이 양육을 떠넘긴 비정한 엄마가 돼버린다. 서울시장에 출마 당시 박영선 의원의 모토는 ‘엄마 시장’이었다.

더구나 박영선 의원의 해명은 시간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서울에서 1988년에 태어나 현재 만 23세이며, 일본을 거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04년 1월, 정동영 의원 권유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건 아들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던 최소한 2003년 3월 이전이야 한다. 그런데 박 의원은 아이 나이를 서식으로 계산했다면 또 모를까, 정상적인 한국식으로 2012년 현재 만 12세

라면 2003년엔 만 4세가 된다.

박영선 의원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박 의원은 1998년 태어나자마자 만 3세까지 미국에서 거주한 뒤, 2003년 만 4세에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다니다 적응이 안 돼 서울외국인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셈이다.

한국에 적응 못한다는 아이를 왜 만 4세에 한국 초등학교 입학시켰나

일반 만 4세까지 미국에서 자랐다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봐줬는데 한국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왜 적응도 제대로 못하는 미국인 아이를 남보다 최소 3년이나 일찍 한국 학교에 입학시켰는지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당시 한국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7세로, 만 5세까지 신창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조기입학이 가능했다. 만 4세는 원칙적으로 한국학교에 입학이 불가능했다. 만약 입학했다면 불법성이 강한 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외국인학교는 여타 한국 초등학교와 달리 3세 과정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더더욱 이해가 안 가게 된다. 한 마디로, 그냥 3세부터 서울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으면 될 일을, 갖난아이를 미국으로 보냈다가 만 4세 때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뒤 다시 외국인학교에 전학시킨 이상한 교육행태를 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일련의 측은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박영선 의원 해명이 앞뒤가 안 맞게 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를 초호와 외국인학교에 보내려 하지 못분을 만들어내다 보니 벌어진 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저급부터

2012년 3월 28일

정치 / 사회

미디어
워치 09

는 거짓해명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요식 새누리당 후보 "박영선 의원의 이상한 형태 숙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이번 총선무대에 오른

다면, 그 이들의 출입국기록과 서울외국인학교 입학증명서, 5세 때 입학시켰다는 한국인 초등학교 입학증명서 등의 공개는 필수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과 맞상대할 강요식 후보 측에서도 "박영선 의원의 이상한 행태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다"며 경쟁화 할 것

을 암시했다.

만약 이번 총선과정에서 거짓해명이 드러나게 된다면, 박영선 의원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해야 할 정도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러 차례 박 의원 측에 이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박 의원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변희재 기자

무상급식 지지했던 박영선 의원 서울외국인학교는 최고급 유상급식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서 서울 상암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무상급식은 복지문제가기도 하지만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7개월 만에 아이들의 생활습관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안 남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6학년 학생은 무상급식을 통해 학교에 감사하는 마음과 친밀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또한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영선 의원은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분이고 또 성전이라고까지 주장했던

분"이라고 나 후보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박영선 의원 아들이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외국인학교의 급식상황은 어떨까? 서울외국인학교는 제이제이케터링이란 외국인 학교 전문급식업체에 급식 위탁을 맡기고 있다. 제이제이케터링은 "한국화된 양식이 아닌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접했던 양식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한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특화된 장점으로 꼽고 있다.

제이제이케터링의 전채식 대표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울외국인학교를 처음 위탁운영하면서 개선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메뉴의 다양성과 맛의 향상이었다. 그날의 세트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기법게 줄일 수 있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김밥, 샐러드 등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는 델리코너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 줌으로써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한국화된 양식이 아닌 제대로 된 본토 음식 맛을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미 대사관과 미8군 구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양식에 관한 레시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리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이제이케터링 측은 서울외국인학교에 공급하는 한 끼 식사금액이 얼마나 되는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

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이제이케터링 측이 공개한 급식현장 사진으로 볼 때 초등학교 무상급식 식비 1800원은 한참 뛰어넘어 최소한 2만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자신의 아들은 외국인학교에서 최고급 급식을 먹인 뒤, 남의 아이들에게는 1800원짜리 무상급식을 먹으라고 선동한 격이다.

M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 재산, 역시 박영선이 1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영선 의원의 재산이 조사 당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은 본인 소유 건물(억 6900여만 원)과 배우자 소유 건물(억 4122여만 원)을 합해 총 21억1023여만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 소유 2004년식 렉서스(3500cc) 1000만 원 ▲예금 본인(3억7470여만 원)과 배우자(8억6791여만 원)를 포함해 총 12억7227여만 원 ▲유가증권 배우자 소유 3053여만 원 ▲론도미니엄 동회 회원권 9300여만 원 등의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채무는 총 8억1282여만 원에 달했다. 전체 재산은 27억3229만 원이다. 지난해보단 7220만 원 줄어든 수치지만,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대단한 재산이다.

한편 박지원 최고위원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5119여만 원 하락한 14

억4443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유 건물이 9억3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 최고위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현금으로 보유한 재산이 5000만 원이었다. 이외에는 자동차, 예금, 채권, 보석류,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었다.

그의 재산등록 내역은 ▲건물 9억4100만 원 ▲배우자 소유 2003년식 SM525V 2499cc 639만 원 ▲본인

2000만 원 배우자 3000만 원 총 현금 5000만 원 ▲예금 1억586여만 원 ▲채권 3억118만 원 ▲배우자 소유 3캐릿 다이아몬드 3000만 원 ▲본인 소유 헬스클럽 회원권 1000만 원 등이다.

김부겸 최고위원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956여만 원 떨어진 4억4802여만 원으로 건물(총 3억28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인 소유

였던 2002년식 SM525V 2500cc는 매매했다. 김 최고위원의 재산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사무실 전세(임차)권 2000만 원과 배우자 소유 건물 3억800만 원 총 3억2800만 원 ▲배우자 소유 SM5 LE 2000cc 1887만 원 ▲예금 1억1361여만 원 ▲채무 2000만 원 등이었다.

M



의결번호	2012국선125(자심)
언론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양 상 우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2년 3월 30일자 8면 「“복지, 부자증세만으로 안돼 ‘공정한 노동’ 만들어야 가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이력, 정견(政見) 등이 드러나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여타 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복지, 부자증세만으로 안돼 ‘공정한 노동’ 만들어야 가능”

사노맹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 은수미

그는 무거운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답지 않게 시종 차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을 말할 때는 강한 열정이 느껴졌다. 1990년대 초 비합법 운동단체였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출신의 노동문제 전문가로, 민주당 통합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은 은수미(48·사진) 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28일 국회 후생관에서 만났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뭐라고 보는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차별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아우성이다. 1980년대의 시대정신이 독재를 넘어선 민주주의 확립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비정규직을 넘어선 복지국가의 확립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먼저 대기업이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기업이 인정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 문제를 해결하면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30~40%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주유소나 커피전문점 등의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없애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법 개선 이전에 정부의 의지만 있어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 외형상 자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레미콘 노동자나 학습지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헌법상의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 왜 노동이 중요한가?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동은 필수적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등은 공정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가능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등 아예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면세점 이하)이 40.3%나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복지를 할 수 없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복지는 불가능하다. 복지는 부자 증세만으로는 안

되며, 공정한 노동,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후략)

사노맹 출신 민주당 비례후보 은수미

“복지, 부자증세만으론 안돼 ‘공정한 노동’ 만들어야 가능”

그는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답지 않게 시종 차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을 말할 때는 강한 열정이 느껴졌다. 1990년대 초 비합법 운동단체였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신의 노동문제 전문가로,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은 은수미(48·사천) 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28일 국회 후생관에서 만났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뭐라고 보느냐?”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차별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아우성이다. 1980년대 시대상태가 독재를 넘어선 민주주의 확립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비정규직을 넘어서 복지국가의 확립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먼저 대가입이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기업이 인정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면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30~40%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유류소나 커피전문점 등의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없애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법 개선 이전에 정부의 의지만 있어도 가능하다. 세번째로 외형상 자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레미콘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헌법상의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 왜 노동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동은 필수적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등은 공정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가능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등 아예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면세점 이하)이 40.3%나 되는 데 이런 상태에서 복지를 할 수 없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복지는 불가능하다. 복지는 부자 증세만으로는 안되며, 공정한 노동,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는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



출마, 왜?

노동문제 해결위해 나서
기업 준법경영 법 만들어
비정규직 차별 풀어낼 것

사노맹 활동 사회

준법서약서 거부한 것은
인간 존엄성 지키기위해

을 꿈꿨던 사노맹에서 정책실장 및 중앙위원으로서,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과 함께 당시 활동했다. 1992년 검거된 뒤 안기부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소장대 대장 50cm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결핵이 후두로 번져 한동안 말을 못했다. 1997년 출옥 뒤 모교인 서울대 사회학과에 복학해,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거 사노맹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1980년대와 90년대 초는 20대 젊은이들이 타는 그리움으로 민주주의를 소망하고 목숨을 걸을 정도로 열광했던 시기다. 때문에 지금 보면 과도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날개를 펼쳐본 것이다. 억누를수록 반발이 커지고 간절할수록

꿈이 커진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이를 이 뭐가 됐든 나는 현재 유토피아의 꿈을 꾸지 않는다. 내 그릇이 그만큼 크지가 않은 탓이지만, 월 80만원 받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월 1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마치 정박을 뛰어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금 내게는 이 일이 중요하다.”

“감옥에서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화유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들었다.”

“내가 많이 아프다 보니 성공회 신부들께서 당국에 탄원을 여러 차례 했다. 내가 모태 신앙인인 때문이지만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당국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내게 반성문이나 준법서약서를 쓰면 일찍 풀어주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거부했다. 이념 때문이 아니다. 사법적 판결을 거쳐 이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준법서약서를 들고나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부정하는 것 같아서였다.”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등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 후보 등에 대해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나온다.”

“색깔이 다양한 것을 존중하고 사회발전의 힘으로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발전은 없다. 그런 점에서 색깔론은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시대착오다.”

글·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philkim@hani.co.kr

의결번호	2012국선12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매거진(여성조선)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2-4 7층 대표이사 이창의
심의대상기사	여성조선 2012년 4월호(통권 제144호) 218~222면 「손수조, 박선희, 전순옥, 박노자 4·11 총선 이색 출마자 & 화제의 승부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와 관련하여 '이색 출마자'와 '화제의 승부처'라는 제목 하에 지역구 및 비례대표 등 여러 후보자들을 소개하였으나 특정 정당 후보자 2인만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사진 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손수조 / 박선희 / 전순옥 / 박노자 / 4·11총선 이색출마자 & 화제의 승부처

야당 대권주자에 도전장 내민 새누리당의 젊은 피 손수조 후보

부산 사상구, 야당의 대권주자인 문재인 후보의 출마선언으로 다소 싱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해졌다. 손수조라는 '세상에 없던' 젊은 여성 후보가 등장하고 부터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는 순간부터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더니, 이제는 상대 후보를 긴장시킬 정도로 세가 커졌다. 이번 총선의 뜨거운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화제의 주인공 손수조 후보를 만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대권주자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의 공천 지역. 누가 나와도 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새누리당의 선택은 손수조라는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공개된 경력이라고는 대학교 졸업 이후 1년6개월의 직장생활이 전부인, 그야말로 평범한 여성, “버리는 카드를 썼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꿈수다”, “사상구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 “박근혜의 꼭두각시다” 등 각종 비난여론을 안고 나타난 깜짝 공천자 손수조에 대한 관심은 사상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달아올라 있는 상태다.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부산을 찾아 카페레이드까지 펼치며 손 후보를 지지해, 이 ‘똥도 보도 못한’ 새로운 여성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더욱 화제다. 덕분에 문재인 후보에게 쏠려있던 지지율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분산되는 추세. 점점 흥미 진진한 지역이 되고 있다. (후략)

218 궁금한 이 사람들

손수조 박선희 전순옥 박노자

4·11 총선



야당 대권주자에 도전장 내민 새누리당의 젊은 피 손수조 후보

부산 사상구. 야당의 대권주자인 문재인 후보의 출마선언으로 다소 싱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해졌다. 손수조라는 '세상에 없던' 젊은 여성 후보가 등장하고부터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는 순간부터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더니, 이제는 상대 후보를 긴장시킬 정도로 세가 커졌다. 이번 총선의 뜨거운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화제의 주인공 손수조 후보를 만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대권주자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과의 공천 지역, 누가 나와도 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새누리당의 선택은 손수조라는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공개된 경력이라고는 대학교 졸업 이후 1년 6개월의 직장생활 이 전부인, 그야말로 평범한 여성. "버리는 카드를 썼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꿈수다", "사상구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 "박근혜의 꼭두각시다" 등 각종 비난여론을 안고 나타난 깜짝 공천자 손수조에 대한 관심은 사상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달아올라 있는 상태다.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부산을 찾아 카피레이드까지 펼쳐며 손 후보를 지지해, 이 '들도 보도 못한' 새로운 여성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더욱 화제다. 덕분에 문재인 후보에게 쏠려 있던 지지율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분산되는 추세. 점점 흥미진진한 지역이 되고 있다.

총선 최고의 인기 검색어 '손수조-박근혜', '손수조-문재인'

"분위기가?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는데, 공천받고 분위기가 확 바뀌고, 또 그거에 위원장님이 오셔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매일매일 인사드리고 열심히 이야기 듣고 움직이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박근혜 위원장의 방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3월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손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새누리당의 막내이자 최연소 출마자인 손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명목,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이지만, 카피레이드 장면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올랐다.

"현장 상황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덕포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반대편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리다시피 해서 탄 차가 박인식 의원 차였어요. 마침 두경이 열려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다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지지해주시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잖아요. 저는 옆에서 쭈뼛쭈뼛하고 있었는데 같이 인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고개를 숙 내밀었어요. 선루프 사이드를 생각해보면 성인 두 명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과 제가 몸집이 작아서 그런 장면이 나온 게 더 신기하죠. 진짜 계획된 거 아니에요. 시간도 짧았고요, 구식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그게 최선이었어요."

의도적인 카피레이드는 아니었지만, 박 위원장이 손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얼음공주'로 알려진 박 위원장에게 카피레이드 같은 퍼포먼스가 흔한 장면은 아니니 말이다.

"제가 어른들한테 많이 영기는 거 잘해요.(웃음) 위원장님께도 영겼어요. 얼음공주라고 말씀들 하시던데, 제가 느끼기엔 따뜻하었어요. 그날도 저한테 이길 수 있다고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주민들께 '손 후보가 말하는 것은 다 믿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제가 담의 막내고 최연소다 보니 좋은 기운을 주시는 것 같아요. 든든하고 감사하죠."

이색 출마자 & 화제의 승부처

이번 4·11 총선은 대선의 전조전 성격이 짙다. 때문에 각 당은 사활을 걸고 표심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무엇보다 '침착한 새 인물을 찾자'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4·11 총선에 나서는 화제의 인물들을 살펴본다. **취재** 여성조선 취재팀 사진 박종혁 이준경 조선일보DB

사상구 딸내미, 1년 연봉 3천만 원으로 정치 도전하다

선거에서 '패기 넘치는 20대 청년 후보'라는 타이틀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최연소라는 수식어의 주인공은 그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런데 사람들이 손 후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새누리당이라는 보수정당에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랑 새누리당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비대위에도 외부 사람이 더 많아요. '한나라당' 하면 수구꼴통 이미지잖아요. 반면 새누리당은 보수의 이미지보다는 정치를 개혁하고 쇄신하려는 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천에 도전했어요. 저처럼 평범하고 스펙 없고 경력 없는 아이가 공천된 것만 봐도 새누리당이 기존 보수 세력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야당 공천 결과 보면 쇄신 아니잖아요."

한나라당이었던 아예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젊은 피 수혈하겠다", "청년비례당 뽐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는 새누리당의 쇄신 당론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항상 변화와 개혁을 말하지만 결과는 늘 독같았던, 그동안의 보수정당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취업전선에서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서류, 면접 통과했다가 최종에서 떨어진 적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버려지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백(back)이 없어서 안 되나?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트럭 운전하시는 아버지의 직업은 운수업, 보험설계하시는 어머니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적기도 했어요."

롤모델은 없다, 정치의 판을 바꾼 사람 될 것

"가만 있어봐라. 니가 손수조가? 약속 한번 해보자."

"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손수조입니다."

패럴림픽에 위치한 손 후보의 사무실에서는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이 열린다. 누구든지 후보 사무실에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다. 매일 사무실에 마련된 자리가 꼭 찬다.

사람들은 20대의 젊은 예비 정치인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일정을 끝내고 후보가 들어오자, 흡사 친구의 딸을 만난 것처럼 스스럼없이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힘들죠. 처음 해보니까요. 아침마다 전쟁이예요. 잠은 하루에 두세 시간도 못 자요.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에너지도 얻고, 여기서 한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무사나 끝까지 너무 많지만, 지금은 또 응원도 많이 해주니까요."

선거자금으로는 빠듯한 액수.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선거다. 결혼자금으로 마련한 1년 연봉, 일종의 도전이다. 본 선거가 시작되는 3월 29일까지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5백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한다. 하루에 3만 원 내외만 쓰니까 가능할 것 같다. 선거자금 지출 내역은 블로그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온 가족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매달렸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과정에 있던 동생을 급히 소환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돈을 쓰지 않는 선거를 치르려니 뭐든지 획기적이고 새로운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선거는 당선되려고 도전하는 것이다. 당선됐을 때, 초선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물었다.

"개혁, 혁신을 들고 나왔지만 혼자서 다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니예요. 말씀하신 대로 쇄신을 요청한 많은 선배님들이 좌절하고 탈당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런 선배님들이 한 이들이 전혀 반경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씩 굼은 것다고 생각해요. 굼이라도 낼 수 있다면 끝까지 등지지 말고 노력해야죠."

그녀의 꿈은 '정치 판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인데, 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 지금까지 보통의 삶을 살아왔듯, 정치 역시 보통의 시각을 가지고 해나가고 싶다. 기존 정치인들을 따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제가 문재인 후보라는 아연의 대선주자를 뛰어넘고 국회에 들어간다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사상구는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아요.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가로수 사업이라든지, 주례구치소 이전 문제, 서부권 법원 유치 등 할 일이 많아요. 전부 예산 따와야 되는

건데, 진짜 열심히 일할 사람 뽑아주세요. 정치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마지막 질문. 손수조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거죠.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 그런 면에서 깊어준 총수가 한 말, 일리 있다고 봐요. 정치가 내 스트레스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분노할 때,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끓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중간 중간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뽐 번도 넘겨 나눈 것 같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꿀꿀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언어먹으면 안 돼요. 선거법에 걸려요. 안 돼, 안 돼(웃음)"

사상구 딸내미, 손수조의 24시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프로필
1985년 부산 출생(만 26세).
사상구 주례여자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 전공, 방송영상학 부전공.
전) PRGATER(연륜홍보회사) 재직.
현) 새누리당 정당인.



새누리당 박선희 후보 프로필
1980년 1월 10일생인 32세.
선문대학교 국제학 전공,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새누리당 경기도당 2030위원회 위원장.
안산시의회 의원.
현) 안산 상록 갑 새누리당 후보.

6년 차 주부의 당찬 국회의원 도전기 새누리당 박선희 후보

새누리당이 231곳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그중 여성 공천자의 비율은 7%, 16명이다. 이 중에는 화제의 인물이 많다. 그중 한 사람인 박선희 안산 상록 갑 후보는 '32세 현역 주부'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녀는 푸른색 점퍼에 운동화 차림으로 밥 먹듯 없이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박 후보는 스물여덟에 5대 안산시의회를 지냈다. 선문대학교 국제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후보 공천 전에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2030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학생일 때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든 생각이 조직이나 틀을 바꾸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면서 쌓은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고 싶기도 했어요."

시의원 준비를 처음 시작한 게 스물여섯이었다고 하니, 정치 입문이 빠른 편이다. 거기다 그가 속한 새누리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새누리당을 선호한다기보다는,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동의한 면이 많아요. 안보를 중요시해야 한다든가, 시장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등은 저도 다르지 않거든요. 이번에 제가 공천받을 수 있었던 데는 2030 세대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게 주효했던 거 같아요. 아무리 많은 정책이 나와도 당사자가 아니면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2030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연한 보수 되고파

그는 6년 차 주부다. 회사원인 남편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진 않았지만 부인의 정치활동을 지지해준다. 현재 캠프 식구들은 단촐하게 지인, 친인척으로 꾸려져 있다. 소통은 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다. 하루에 5~10개 정도의 트윗을 올린다. 주로 오래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인데, 그날의 일정, 행사 등을 알리고 최근 영화, 명언 등도 종종 올린다.

현재 박선희 후보와 맞붙는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전혜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전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정부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현재 지지율은 박선희 후보가 25%, 전혜철 후보가 47%(중부일보, 리얼미터 제공)다.

"육아맘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맡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에 아이를 돌봐주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추진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집에서 가깝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다 공간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까지 있거든요. 안산시에도 흥대에 있는 KT&G 상상마당 같은 문화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마침들이 공원을 하고 누구든 편하게 이용할도록 하면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을 막는 스쿨폴리스 제도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일정을 따라 이동하던 차 안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이렇게 끝났다. 안산시 내 노인정에 도착했다는 보좌관의 말에 박선희 후보가 문을 열고 내렸다. 시간은 낮 12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며 웃었는데 아무래도 점심 먹기도 틀린 모양이다.

"요즘은 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에) 나오고..."

명함을 주며 악수를 청하는 안산 상록 갑 박선희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한 유권자의 반응이다. 딸 또는 조카딸인 앳된 주부가 아침부터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대견한지 "화이팅!" 하고 외쳐주는 사람도 있다. 박선희 후보는 현역이던 이화수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아 화제가 됐다. '서른두 살의 지방대 출신 6년 차 주부'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이유는 된 셈인데, 여기에는 그의 호감형 외모도 한 몫 했다. 부산의 손수조 후보가 '사상구의 딸'이라면 그의 닉네임은 '얼짱 주부'다.

열은 갈색 빛이 도는 머리칼을 짙은 묶고, 등산용 푸른색 바람막이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그는 30대 초반의 여성 또래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정,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전략회의로 요즘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세 시간 남짓이다. 취재 전날에는 서울에서 방송일정을 소화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지역구에 있는 교회, 노인정 등을 방문했다.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는 게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구에 소홀하게 되는데, 이제 방송일정은 줄이고 여기에 집중하려고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는 부분도 생기고,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 공격을 위한 질문들도 있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방대 출신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설움만 당한 건 아니네, 그렇게 부각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웃음)"

스물여덟에 정치 입문

박선희 후보는 안산에서 나고 자란 안산 토박이다. 안산동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지내기도 하고, 안산 충청향우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릴 적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안산시의회 초대위원을 지낸 박일도 씨다.

이색
후보열전
03

개그맨 고 김형곤의 형 새누리당 고양시 일산동구 김형진

김형진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뒤 UCLA에서 MBA를, 일리노이공과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다. 서울대 미대 강사, 연세대 경영대 강사,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관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는 달변가이기도 하다. 연세대에서 4년째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법적 환경' 강좌는 수강신청 경쟁률이 3대1을 넘는다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해박하다. P&G 미국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일할 때 이 회사의 첨단 경영기법 속에 불고 사상이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교 교리와 경영을 접목한 책을 펴내기도 했다. 그는 일산~서울역~강남~수서~동탄을 연결하는 GTX 완결, 2만 명 규모의 한류 K-POP 대공연장 건립 등 일산동구를 문화와 교육의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색
후보열전
04

국내 최초 결혼이민 여성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 이자스민

이자스민(36)은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이다. 필리핀 국립대 의대를 다닌 재원으로 지난 1995년 한국인 항해사와 결혼한 뒤 1998년에 귀화했다. 이후 남편과 사별하고 1남 1녀를 키우며 '싱글맘'으로 살아오고 있다.

이자스민은 서울시 외국인 공무원 1호로, 외국인 지원 사설인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이주 여성을 위한 봉사단체이자 문화네트워크인 물방울나눔회를 조직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송인으로서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혼혈 청소년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완득이〉에 원목이 엄마로 출연했고, 현재는 종합편성채널의 진행자로 활동 중이다.

이색
후보열전
05

오빠 뜻 이어가는 전태일 여동생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번 전순옥

전순옥(58)은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다. 오빠의 분신을 계기로 미성사 보조로 일하며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89년 3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영국 유학길에 올라 영국 워릭대학에서 노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 귀국 후 지금까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They are not machines)"라는 박사 논문에서 1970년대 한국의 여성 노동운동상을 다뤘다. 이 논문은 그해 워릭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글자지 않은 시대의 노래〉라는 책으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2003년부터는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지와 사회적기업 '참신나는웃'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참신나는웃'은 민주당의 공식 지지 19대 총선 유니콘 제작업체이기도 하다.

이색
후보열전
06

탈북자 출신 첫 고위 공무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 조명철

탈북자 출신 첫 고위 공무원인 조명철 통일교육원장(53)은 비례대표 4번을 받아 사실상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원장은 1994년 귀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21대 통일교육원장에 올랐다.

그는 정부원 건설부장(건교부 장관)을 지낸 아버지와 러시아어 번역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북한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다. 명문인 평양 남산학교에서 고(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평일과 학창시절을 보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자동차공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은 뒤, 곧바로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그의 인생은 중국 남개대학 교환교수 시절부터 달라졌다. 자유가 없는 북한사회와 김정일 정권에 희의를 느껴 1994년 7월 월남했다.

이색
후보열전
07

나영이 주치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 신의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에 배치된 연세대 의대 신의진 교수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 나영이의 주치의이자, 강남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전문의다. 신 교수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1989년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2년과 1996년 같은 대학에서 정신과 전공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고, 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2년 동안 소아정신과 전임의 과정을 밟았다. 신 교수는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냈고,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들을 전담으로 치료하며 어린이 심리치료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다. 현재 아동 성폭력 피해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제7회 서울특별시 여성상을 받기도 했다.

이색
후보열전
08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새누리당 부산 사하 갑 문대성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 사하 갑에서 출마한다. 현재 동아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부산 사하 갑 공천 심사에 비공개 신청을 했으며, 2차 공천 면접심사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디르진 내 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겠다"고 정치 신인으로

로서 당찬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성공한 금메달리스트이자 IOC 선수위원이라는 장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부산 동아대에서 화려하게 국가대표로 데뷔한 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전광석화 같은 뒤쫓라치기 KO 승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민주통합당의 최인호 전 대통령국내안전비서관과 정연승 부를 가리게 됐다.

222

이색
후보양전
09

탁구선수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9번 이예리사

사라예보 기적의 주인공. 국가대표 탁구선수 출신인 용인대 이예리사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9번을 배정받았다. 1973년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금메달 주역이었으며, 1976년 서독 오프 단식과 복식 우승까지 거머쥐며 선수생활의 전성기를 누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 및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탁구대표팀 감독을 거치면서 선수들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2005년에는 최초의 여성 태릉선수촌장을 맡기도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큰 성과를 내는 데도 일조했다. 인화를 강조하지만 강단 있는 성격으로 추진력을 겸비했다. 서울여성과 명지대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공부하는 지도자로 인식돼 있다. 이 교수는 “기회가 주어 진다면 체육계를 대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색
후보양전
11

통일의 꽃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1번 임수경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1번에 배치된 임수경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은 ‘통일의 꽃’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재학 중인 1989년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해 화제를 뿌렸다. 당시 임 위원은 전대협 의장을 맡고 있었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복역했다. 3년 5개월에 걸친 수감생활 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사면, 복권됐다. 이후 미국 코넬대에서 인권학을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와 방송위원회 남북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월간지 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임 위원은 “보수층 결집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최고위원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1번을 차지해 당선 안정권에 턱걸이로 이름을 올렸다.

이색
후보양전
13

김근태의 비밀병기 민주통합당 서울 도봉 갑 이재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단일후보 공천이 확정되고 있다. 그중 도봉 갑에서는 고 김근태 고문의 부인 이재근 후보(59)가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의 통합진보당 이백만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은 생전에 부인 이재근 씨를 ‘김근태의 비밀병기’라 불렀다고 한다. 지인들에게 “나보다 훨씬 경정력이 센 사람이다. 정치를 하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곤 했다고. 남편이 운명하기 전 그의 귀에 대고 “당신이 못다 한 것 내가 하겠다. 어려울 때 도맡았지만 행복했다”고 했다는 이재근 후보는 “2012년을 점령해야 한다”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도봉 갑은 김근태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했다. 지금도 종종 “김근태 후보입니다.”라는 말이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온다고 한다. 그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와 함께 뛰고 있다.

이색
후보양전
10

‘접시꽃 당산’으로 유명한 시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 도종환

진보진영 대표 시인 도종환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을 받았다. 민주당 공천 심사위원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그는 ‘접시꽃 당산’, ‘담쟁이’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시인. 시인이 공심위원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위원은 진보진영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문화계 인사로 꼽힌다. 1989년 전교조 참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해직, 투옥된 바 있다. 해직된 지 10년 만인 1998년 교사로 복직해 2004년까지 덕산중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야권 통합 과정에서 ‘혁신과 통합’에 참여했고, 민주당 지도부 경선 때는 한명숙 대표의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 출신인 도 위원도 당선되면 민주통합당은 충북에서 17대 강해숙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이색
후보양전
12

귀화 한국인 진보신당 비례대표 6번 박노자

박노자 교수는 토종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귀화 한국인이다. 본래 이름은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2001년 귀화할 때 스승인 미하일 박 교수의 성을 따르고, 러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 호적에 올렸다. 1996년 러시아에 유학 온 경남 마산 출신의 백명정 씨와 결혼하면서 서반 한국인이 됐다.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교 때 텔레비전에서 북한영화 <춘향전>를 보면서. 이때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그는 한국 고전소설 번역판을 구해 읽으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키워갔다. ‘한국인 박노자’는 대학에서 조선학과를 전공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국의 고려대에서 장단 공부했고, 돌아가서는 번역가, 여행가 이드 등으로 일하다가 경희대 러시아어과 전임강사로 부임했다. 이후 지금까지 노르웨이 오슬로대에서 동방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선후배 감사, 사촌지간 맞대결 이색 후보 이색 대결

경상북도 영주에서는 사촌지간인 이덕영 씨(45)와 이윤영 씨(41)가 나란히 후보로 등록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의사로, 이덕영 씨는 경선에서 개입 중인 내과의사이고, 이윤영 씨는 영주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는 고 정석모 전 의원의 아들로 청와대 정부수석을 지낸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와 8선에 도전하는 고 조병옥 전 의원의 아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맞붙는다. 한편 최연소 후보와 최고령 후보의 나이 차이가 54세에 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래연합이 지난달 안성에 공천한 정선진 후보가 25세로 최연소 후보를 기록했으며, 최고령 후보는 국민행복당이 김포 선거구에 공천한 82세 김두섭 후보다.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이번이 열네 번째 총선 출마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 경기 안산 단원 갑에서는 선후배 감사 간 대결이 예고돼 있다. 최근 인제 영인으로 들어온 백해련 전 대구지검 검사가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학재 비례대표 의원에게 ‘인산에서 한탄 불자’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의결번호	2012국선13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시대정보(시대일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1-2 천마프라자 대표이사 권기현
심의대상기사	시대일보 2012년 4월 22일자 3면 「시골 장터에 몰려든 구름 군중」, 4월 2일자 3면 「특검실시·법무장관 사퇴 요구」 및 4월 2일자 3면 「용산 찾은 박근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대표들의 선거 유세 사 진을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 대표만 같은 날 같은 지면에 3차례 보도하여 여타 정당 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사진게재) 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특검실시·법무장관 사퇴 요구

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새누리당은 3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전방위 사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에게 특검 실시를 제안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키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선대위원장 주재로 일일 현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2년전 검찰 수사가 미진해 채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꾸려 쇄신과 개혁

을 하는 것도 이런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라며 “잘못된 과거부터 뿌리 뽑는 게 정치쇄신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년전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사자인 검찰이 채수사를 실시하더라도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낼 수 없다는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즉각 특검을 실시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권 장관의 퇴진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민정 수석으로 계셨던 권 장관이 지금은 검찰을 지휘하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15면) (다른 기사 내용 생략)

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실시·법무장관 사퇴 요구



새누리당은 3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전방위 사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에게 특검 실시를 제안하고 권재

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기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선대위원장 주재로 일일 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2년전 검찰 수사가 미진해 재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꾸려 쇄신과 개혁을 하는 것도 이런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뜻"이라며 "잘못된 과거부터 뿌리 뽑는 게 정치쇄신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년전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사자인 검찰이 재수사를 실시하더라도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낼 수 없다는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즉각 특검을 실시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권 장관의 퇴직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계셨던 권 장관이 지금은 검찰을 지휘하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15면)



용산 찾은 박근혜

4.11 총선을 앞두고 31일 오전 서

을 용산구 용문시장 인근에서 용산구 새누리당 진영 후보가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과 함께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시골 장터에 몰려든 구름 군중

시골 장터에 모처럼 군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눈길을 끌었다. 30일 오후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시장 입구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 거리유세장에는 수백명이 몰려 들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을 보러 나온 당원과 주민 등이다.

5. 권 고

의 결 번 호	2012국선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송파신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10번지 송암빌딩 4층 400호 대표이사 이 동 휘
심의대상기사	송파신문 2011년 12월 15일자 1면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선거구(송파구)의 예비등록 현황을 보도하면서 특정 선거구(송파병)에서 특정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으로써 여타 정당의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7조 제2항(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송파을선거구에는 신중호 경희대 사회교육원 겸임교수(48)가 제일 먼저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송파병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에서 차성환 전 서

울시의원(50)과 노병인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57), 박병권 전 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46)가 송파구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역정가에서는 현재의 여야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송파병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4명이 현역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후략)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송파을선거구에는 신중호 경희대 사회교육원 겸임교수(48)가 제일 먼저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송파병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에서 차성환 전 서울시의원(50)과 노병인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57), 박병권 전 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46)가 송파구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역정가에서는 현재의 여야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송파병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4명이 현역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기탁금(300만원), 전과 기록 또는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을 첨부해 선관위에 내면 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경력과 사진 등을 담은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동영상·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柴安獎學財團

의결번호	2012국선7(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청일보재단(충청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번지 대표이사 조 승 남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2년 1월 9일자 5면 「명함 보면 선거전략 보인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청주 상당구, 청주 흥덕 갑)와 관련하여 일부 예비후보자의 명함 사진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같은 지역구의 다른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사진 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명함 보면 선거전략 보인다.

보통 2~3종류... 후보 이미지 극대화

명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알리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총선 예비후보들에게도 명함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홍보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명함이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후보의 얼굴사진과 이름, 경력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둔데 반해 최근에는 후보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콘셉트 사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후략)

명함 보면 선거전략 보인다

보통 2~3종류... 후보 이미지 극대화

명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알리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총선 예비후보들에게도 명함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홍보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명함이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후보의 얼굴사진과 이름, 경력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둔데 반해 최근에는 후보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콘셉트 사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 청주 상당 정우택 예비후보는 3개의 명함을 활용하고 있다. 하나는 경로당 노인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 마지막 하나는 배식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문구도 지지를 부탁하는 일반적인 선거내용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심플한 '카피' 문구만 삽입했다. 대신 약력은 명함 뒷면에 게재했다. 정 후보측은 "유권자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설정한 '아름다운 동행'에 맞게 명함을 제작했다"며 "유권자들로 부터 신선하다는 반응을 듣고 있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청주 상당 홍재형 예비후보도 양복과 안경을 활용한 이색적인 명함을 제작했다. 가지런한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우택, 홍재형, 손인석 예비후보를 명함 사진.



꽃다발을 누군가에게 선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홍 후보측은 "유권자를 섬기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명함의 콘셉트를

이렇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가올 설 명절을 감안해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모습의 명함도 만들었다.

한나라당 청주 흥덕갑 손인석 예비후보는 아예 자신의 얼굴을 실지 않는 파격적인 명함을 제작했다.

대신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맞는 이미지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심방 드렸습니다. 매맞겠습니다'는 문구를 집어 넣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민들에 보여준 심방스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달고 받고 세대간 지역간 구대전의 정치 현실을 짚었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했다. 손 후보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자기 반성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러한 명함을 제작했다"며 "40대의 젊은이답게 고정관념을 타개하는 신선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청주 흥덕갑 최원호 예비후보는 명함에 다섯번째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자신의 이력을 명함에 실어 '20년 세월 5번째 도전, 이번에는 4전5기'라는 문구로 지지자를 호소하고 있다. /김정호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8(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서울일보)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501호 대표이사 정재윤
심의대상기사	서울일보 2012년 1월 10일자 1면 「민주통합 지지율 1위 '희희낙락」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각 정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을 통해 특정 정당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여타 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통합 지지율 1위 '희희낙락'

◆신년 여론조사로 본 정당 기상도 =

민주통합당이 2주 연속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첫주 정례조사 결과, 민주통합당이 33.0%를 기록, 30.6%를 기록한 한나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주보다 1.1%p 상승한 4.5%로 소폭 회복했으며, 자유선진당은 2.2%를 기록했다.

대선주자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전주(27.5%) 대비 1.7%p 상승한 29.2%로 1위를 유지했고, 2위는 안철수 원장으로 27.5%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p로 전주

보다 소폭 벌어졌다.

대선주자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1주일 전보다 0.8%p 하락한 51.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근혜 위원장은 전주 대비 0.6%p 상승한 39.0%로 나타나, 후보 간 격차가 소폭 줄었다. 박 위원장은 지역별로는 서울과 영남권,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층에서, 연령별로는 30대 연령층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5.4% 전주(26.8%) 대비 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곡동 사저논란과 친인척 비리 관련 소식, 여당 돈봉투 소식 등으로 지지율이 전주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월~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민주통합 지지율 1위 '희희낙락'

◆신년 여론조사로 정당 기상도 = 민주통합당이 2주 연속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첫주 정례조사 결과, 민주통합당이 33.0%를 기록, 30.6%를 기록한 한나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주보다 1.1%p 상승한 4.5%로 소폭 회복했으며, 자유선진당은 2.2%를 기록했다.

대선주자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전주(27.5%) 대비 1.7%p 상승한 29.2%로 1위를 유지했고, 2위는 안철수 원장으로 27.5%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p로 전주

보다 소폭 벌어졌다. 대선주자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1주일 전보다 0.8%p 하락한 51.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근혜 위원장은 전주 대비 0.6%p 상승한 39.0%로 나타나, 후보 간 격차가 소폭 줄었다. 박 위원장은 지역별로는 서울과 영남권,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에서, 연령별로는 30대 연령층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5.4% 전주(26.8%) 대비 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곡동 사저논란과 친인척 비리 관련 소식, 여당 돈봉투 소식 등으로 지지율이 전주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월~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정독한 기자 jdh@seoulilbo.net

의결번호	2012국선9(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전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유 춘 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2년 1월 12일자 9면 「정치에너지 2.0 / 정세균 지음」, 같은 날짜 11면 「이학노 자전(自傳) 에세이 「길」」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전북 고창·부안)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 2명의 명의를 드러나는 저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다

나는 진보의 가치를 수호해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탄탄대로에서의 질주가 아니라 '진창'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현실의 제약 하에서 작은 변화를 모아 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시민은 물을 수 있고, 정치가는 답해야 한다
정치에너지 2.0 / 정세균 지음

《정치에너지 2.0》 출간기념
찾아가는 저자 사진회

“오늘의 한국 정치 현상에서 그리고 문화적 특징과 지역 환경에서 이 정도의 책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최정호/고려대 명예교수
“보가 가장 주의 깊게 본 대목은 진보진영에 대한 평가와 정세균 대표가 제시하는 비전이다.” 심상정/전 진보신당 대표

이런 강의를 듣다가, 어떤 강연을 만들까?
이런 강의를 공부하고, 저자에게 도움을 줄까? (www.people-turn.or.kr 5월 25일)



이학노 자전(自傳) 에세이 「길」 이학노 지음

여기, 꾸미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간



“집에서 ‘어른다운 세상을 위한 해설의 작은 어둠들’ 이기를 공부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합리적 이성적 지배하는 사회’를 꿈꿨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고 배려하지 않으면 사람은 태만하다. 나는 한 번은 인연은 그것이 좋은 인연이라는 나쁜 인연이라는 배려하지 않고 노력해서 살아왔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은 배려나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나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 1부 《정치는 사명이다》 중에서

“초등학교는 네 번 전학 끝에 졸업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문도 남지 못했다. -(중략)- 해이 친구였고, 세상이 학교였다.” - 2부 《내 아들 해이 회상소설》 중에서

“1980년대 중반 운동권 유년들의 1/3 이상이 내 손을 거쳤다. 5월 광주의 풍상을 겪었고 문학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이렇듯 시대의 무릎에 올랐다.” - 3부 《그날 5월 16일》 중에서

“아버님께서는 제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중략)- 서랍장은 국회의원 이학노(李學魯)의 집적으로 ‘학노사관’을 걸었다. -(중략)- 아버님의 사별감과 절절한 고향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부터 태어났다. - 4부 《아버지와의 삶을 함께 하는 시간》 중에서

“2004년 올해 학기에 고려대학교 정학대학원에 응시했다. 내 전공은 국제경제정책학이었다. -(중략)- 공부를 하더라도 고향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고 싶었다. -(중략)- 대학을 졸업한 지 25년만이었다.” - 5부 《해이는 좋은 거울을 보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반긴다》 중에서

이학노 지음 | 15,000원
도서출판 삼인

의결번호	2012국선1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16 대표이사 이 창 승
심의대상기사	전북중앙신문 2012년 1월 13일자 12면 「유능한 민주주의」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능한 민주주의

〈중앙 데이트〉 정세균 국회의원

소한의 기운이 가시지 않아서인지 아직 추위가 매섭다.

이른 아침부터 만나는 시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것은 비단 날씨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명절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들의 얹어진 지갑과 그 안에 감춰진 불안과 한숨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45.3%에 달했다.

2009년과 비교할 때 2.9%가 늘어난 수치다. 또 10명 중 6명은 일생을 노력해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후략)



중앙 데이트

정 세 균
/국회의원

소한의 기운이 가시지 않아서인지 아직 추위가 매섭다.
이른 아침부터 만나는 시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것은 비단 날씨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명절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들의 얹어진 지갑과 그 안에 감춰진 불안과 한숨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유능한 민주주의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45.3%에 달했다.

2009년과 비교할 때 2.9%가 늘어난 수치다. 또 10명 중 6명은 일생을 노력해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

경제 살리기를 표방하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 4년의 현실이다. 현 정부 기간에 후퇴한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부정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담과 시인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이야기를 꺼내면 실패 운운하며 성장만이 답이라는 말을 영무새처럼 되풀이해 왔다. 뒤늦게 공생발전과 친서민을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1%의 대기업과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을 개발시대가 아니다. 고요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더 이상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 군불을 때어 아랫목을 뜨겁게 하면 위쪽까지 온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르나 착금의 현실은 냉혹하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마저 겨울 한기를 땀까지 흘리고 있다.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의 아픔을 풀어야 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성장의 과실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솟아올라 흘러넘치게 하는 것, 나는 이를 분수경제라 말하고 싶다.

2012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이 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설 예정이다. 북한도 지난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이후 청년 김정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대격변의 시기에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온기를 불어 넣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다.

하지만 아담은 상대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민주파가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는 집권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시절 이후 우리는 이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아닌가.

실천 가능한 진보 정치 필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세력들이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있다. 모두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문제는 외양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명한 삶의 성찰이냐 이념의 강요냐 아닌 실력과 진정성의 문제다.

민주진보세력이 정권교체를 전제로 원한다면 말로만 하는 진보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국민은 유능한 민주정부를 원하고 있다.

*이 원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75

의결번호	2012국선1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대표이사 김 남 곤
심의대상기사	전북일보 2012년 1월 11일자 19면 「정동영 불가론」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칼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해당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 심의기준은 선거를 앞두고 내부 필진의 칼럼을 게재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언론사의 심의대상 칼럼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오목대

정동영 불가론

정동영 만큼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다닌 사람도 없다. 정계 입문한지 짧은 기간 동안 그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도 없었다. 앵커출신으로 DJ에 발탁돼 총선때 고향 전주시 전국최다득표를 두번이나 했고 집권당 대선후보를 거쳤기 때문이다. 그를 40·50대 주부들이 유난히 좋아한다. 그의 깔끔한 외모에 넋을 잃고 ‘개나리아저씨’ 하며 반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누구나 부침이 있듯 그는 고속 출세해 대선 후보까지 갔다가 낙선해 지금 가파른 길을 걷고 있다.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플래시 세례를 안 받으면 금단현상 같은 게 생긴다. 대선에서 530만표 차로 떨어지고 서울 동작을에서 정몽준에게 패한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정치인도 인기 연예인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끝장이어서 더 고통 받았을 수 있다.

정동영은 쉽게 정치를 해 콘텐츠와 참을성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때를 기다렸으면 오늘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사가 가정이 없지만 그 한테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점이다. 단군신화에 나



오는 환웅처럼 묵묵히 참고 견디는 모습이 부족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 보다는 정치연예인 기질만 엿보였다. 미국서 꼭꼭 참고 기다렸으면 큰 기회가 빨리 왔을 것이다. MB실정에 따라 강력한 야당의 역할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4월 어머니를 외치면서 전주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게 패착였다. 본인은 재기할 기회로 생각했을까 몰라도 세평은 그 반대였다. 그 때부터 골목대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답대할 진보를 외치면서 너무 좌클릭했다”며 불안한 사람으로 여긴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그는 여러차례 한·미 FTA를 지지했다. 2006년 3월 주한미국대사에게 “향후 50년간 한·미관계를 지탱할 두번째 기둥이라고 말한 그가 지금 FTA는 을 사늑약이며 협상대표는 이완용”이라고 외쳤다. 자기 부정과 선동으로 모습을 바꾼 그는 자신이 만든 업보 때문에 덕진출마를 접어야 한다. 국회의원 한번 더 한다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쯤해서 자신을 통크게 비워 내려 놓는게 정권교체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의결번호	2012국선1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북도민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82-4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2년 1월 13일자 2면 「이병석 의원, 독도평화재단 설립 “우리땅 독도 수호 작은 밑알 되겠다”」 및 같은 날짜 같은 면 「“다음세대 위한 포항 밑거림 그릴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포항 북)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의 독도 관련 활동 사항과 의정 활동 실적 등을 동일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연이어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우리땅 독도 수호 작은 밑알 되겠다”

의정활동비 모아 7000만원 기부 독도 정책연구, 생태·환경보호활동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독도평화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독도 수호 활동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독도평화재단’은 독도 관련 정책연구, 독도 생태 및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국가보훈처 소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인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회장직에 제공되는 활동보수를 차곡차곡 모아 7,000만원을 독도평화재단 설립에 기부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독도 등 우리 당 우리 역사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의정활동에서도 그동안 독도 수호 활동에 누구보다 앞

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평화재단’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수호, 독도의 생태계, 환경의 보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나아가 독도를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 및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장학사업과 문화, 복지사업도 해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개인과 NGO등 관련 단체를 선정해 ‘독도평화대상’도 시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3년 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 취임 시 활동보수를 모아 ‘독도평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됐는데 이제야 지게 돼 뿌듯하다”며 “미약하게 시작하는 재단이 향후 우리 땅 우리 영토 독도 수호에 작은 밑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독도평화재단’은 이 의원이 7,000만원, 뜻을 함께 하는 독지가 4인이 각 1,000만원씩을 기부, 총 1억1,000만원 규모로 설립됐고, 현재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재단법인이다. (후략)

이병석 의원, 독도평화재단 설립 “우리땅 독도 수호 작은 밑알 되겠다”

의정활동비 모아 7000만원 기부
독도 정책연구, 생태·환경보호활동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독도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독도 수호 활동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독도평화재단’은 독도 관련 정책연구, 독도 생태 및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국가보훈처 소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회장인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회장직에 재공되는 활동보수를 차곡차곡 모아 7000만원을 독도평화재단 설립에 기부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독도 등 우리 땅 우리 역사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의정활동에서도 그동안 독도 수호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평화재단’은 대한민국 영토

인 독도의 수호, 독도의 생태계, 환경의 보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나아가 독도를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 및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장학사업과 문화, 복지사업도 해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개인과 NGO 등 관련 단체를 선정해 ‘독도평화대상’도 시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3년 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 취임 시 활동보수를 모아 ‘독도평

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는데 이제야 지리게 돼 뿌듯하다”며 “미약하게 시작하는 재단이 향후 우리 땅 우리 영토 독도 수호에 작은 밑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독도평화재단’은 이 의원이 7000만원, 뜻을 함께 하는 독자가 4인이 각 1000만원씩을 기부, 총 1억1000만원 규모로 설립됐고, 현재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재단법인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domin.com

“다음세대 위한 포항 밑거림 그릴 것” 이병석 의원, 3주간 의정보고회 마쳐 “주민 열망·기대 확인…지역발전 헌신”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이 지난 달 27일 포항 용해업을 시작으로 지역구 각지를 돌며 3주간 10회에 걸쳐 개최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3선 중진의원으로서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면서 환동해안 시대 포항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포항 발전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 간 SOC

의 사각지대였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낙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이 시급했다”며 “지난 12년간 SOC건설에 매진한 결과 포항의 SOC지도가 이제 거의 완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건설 중인 SOC를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교육 등 다음 세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포항의 문화적 밑거림을 그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대욱기자 dwkim@hiddomin.com



이병석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의결번호	2012국선20(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43 대표이사 김 인 영
심의대상기사	서울경제신문 2012년 1월 18일자 38면 「사회적 자본 확충이 살 길이다」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심의대상 칼럼은 이 기준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2항을 위반한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사회적 자본 확충이 살 길이다

〈로터리〉이용섭 민주당 의원

지난해 말 정부가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제규모 10위, 무역규모 8위, 경제성장률 2위 등 화려한 경제 성적표에 반해 사회지표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살률과 저출산률은 1위, 사회복지지출은 34개국 중 33위에 머물러 있다. 경제규모는 커지는데 왜 국민의 행복지수는 추락하는 것일까.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악'이 있다고 한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가 그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악'에서 하나도 자유스러운 것이 없다. (후략)

사회적 자본 확충이 살 길이다

로터리



이용섭
민주당 의원

지난해 말 정부가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제규모 10위, 무역규모 8위, 경제성장률 2위 등 화려한 경제 성적표에 반해 사회지표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살률과 저출산률은 1위, 사회복지지출은 34개국 중 33위에 머물러 있다. 경제규모는 커지는데 왜 국민의 행복지수는 추락하는 것일까.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악'이 있다고 한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가 그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악'에서 하나도 자유스러운 것이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 자본의 황폐화'가 그 주범이다. 정부보고서만 보더라도 신뢰·법치·청렴수준은 최하위이다. 그간 성장만을 중시한 발전전략이 신뢰·정직·정의·청렴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이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 모든 것을 돈과 경제로 평가하는 '물신주의', 목표를 정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과 지상주의', 원칙과 정도를 무시하는 '반칙과 특권의식'이 사회적 자본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경제지수'와 '행복지수'는 가위의 양날과 같다. 양날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총알장 하나도 잘라 낼 수 없는 것처럼, 두 자수가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워진다. 훼손된 것들이 회복되는 데 수십, 수백년이 걸리듯 사회적 자본은 일단 황폐화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자본'을 제 자리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경제지수와 행복지수는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국가의 힘은 경제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고 했다. 공공 부문과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와 모범을 보여주고, 경제주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예상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자본은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만 실천해줘도 된 것이 아니고 확충될 수 있다. 돈·지식·관력을 가진 자들이 천민·자본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변화와 혁신·창의와 도전의 마력을 보여줘야 한다. 나라가 사는 길, 지도층이 각성하면 어려움 일도 아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2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전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유 춘 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2년 1월 18일자 15면 「축산업 붕괴 막아야」 및 1월 25일자 15면 「난파선의 선장이 해야 할 일」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심의대상 칼럼은 이 기준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2항을 위반한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축산업 붕괴 막아야

김춘진 민주당통합당 국회의원

2011년 말 한·미 FTA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았던 우리 농민들에게 2012년 연초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져 안타까움이 크다.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자식과도 같은 소를 굶겨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한우를 반납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 이후,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도 없이 발생한 한우값 파동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은 붕괴 직전 까지 와 있다. 우골탐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소 한 마리 팔아 자식

대학 교육을 시켜 왔던 상황과 비교하면 요즘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다.

지난해 6월 평균 200만원 정도하던 한우 암송아지가 가격이 2012년 1월 현재 90만원으로 하락하였고, 육우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단돈 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 숫송아지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를 키우기 위한 필수 생산 요소인 사료 가격의 경우 2007년 대비 51%나 상승하여 농가들이 땀을 흘려가며 소를 키워도 수익은커녕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육우를 20개월 키워봤자 소 한 마리당 15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송아지 요리 개발과 소도태장려금 지원 등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뿐이 없어 축산 농가의 실망감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후략)

2011년 말 한미 FTA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았던 우리 농민들에게 2012년 연초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져 안타까움이 크다.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자식과도 같은 소를 굶겨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한우를 반납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 이후,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도 없이 발생한 한우값 파동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은 붕괴 직전까지 와 있다. 우골타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소한마리 팔아 자식 대학 교육을 시켜 왔던 상황과 비교하면 요즘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다.

지난해 6월 평균 200만원 정도하던 한우 암송아지가 가격이 2012년 1월 현재 90만원으로 하락하였고, 육우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단돈 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송아지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를 키우기 위한 필수 생산요소인 사료가격의 경우 2007년 대비 51%나 상승하여 농가들이 팔을 흔들며 소를 키워도 수익은커녕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육우를 20개월 키워봤자 소한 마리당 15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송아지 요리 개발과 소도태장정금 지원등 근시안적

전 라 포럼 >>>

김 춘 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축산업 붕괴 막아야

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뿐이 없어 축산농가의 실망감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최근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수요·공급의 원리에 기반을 둔 사육두수 증가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축산업에 대한 대책 없는 개방정책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사료가격 인상, 정부의 축산업 발전정책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초종방역 실패와 무대책 속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였다. 자식과도 같은 가족을 평생에 매장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축산농가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구제역 사태당시 그 책임을 축

산농가에게 돌리기에 바빴던 당시의 정부 대응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장·단기적 축산업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렁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 하여야 한다. 특히 사료값 안정화 방안 마련을 통해 축산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매번 반복되어 왔던 단기적 대책으로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료가격과 더불어 농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인 비료가격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에서 2010년까지 16년간 농업중앙회와 농업초조조합연합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 2천 3백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특히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업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료가격에 대하여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사료 값을 지탱하지 못해 굶어죽는 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동물보호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 과태료 부과 등을 논할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자식과도 같은 송아지를 굶질 뿐이 없는지 농가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한우와 육우의 사육용 축산업은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축산업이 무너진다면, 우리 식량안보의 반쪽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네파선의 선장이 해야 할 일

신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지난 18일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메룬 다이아몬드를 개발하고 있는 씨앤케이 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외교부가 매장량을 부풀린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통해 주가를 폭등시켜 회사 대표와 고위 공직자 등이 큰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이제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필자는 이 회사

의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통해 특정인이 혈값에 주식을 매입했고, 주가를 부양시켜 대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자료를 통해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권 실세와 고위 공직자의 가족 등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발표로 필자가 제기한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정권말기 최대의 게이트로 비화할 여지도 있는 사건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가 제기했던 혈값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통해 얻어진 차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후략)

지난 18일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메론 다이아몬드를 개발하고 있는 씨애크이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을 주가조작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가 매장량을 부풀린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통해 주가를 폭등시켜 회사대표와 고위공직자 등이 큰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이제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필자는 이 회사의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통해 특정인이 할값에 주식을 매입했고, 주가를 부양시켜 대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자료를 통해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권실세와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발표로 필자가 제기한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정권말기 최대의 게이트로 비화할 여지도 있는 사건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가 제기했던 할값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통해 얻어진 차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정입가령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목불인견이다. 다른 비리로 기존 비리를 덮는 형국이다. 필자가

전 라 포 럼 ▶▶▶

신 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난파선의 선장이 해야 할 일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대통령주변온갖 비리진상조사위'에서도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는 커녕 관련의혹들을 정리만 하기에 불과할 정도다.

이미 제기된 의혹만 봐도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의혹, 이국철 회장 구명 로비 의혹, 영부인 사촌오빠의 금품수수 의혹,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 보좌관의 거액 수취사건, 저축은행 구명로비 사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위원장 정책보좌관 수취의혹등 이루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다른 정권같았으면 이중 하나의 의혹만으로도 정권을 흔들만한 파괴력을 가진 것들이지만 이른바 '몸통', 실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 보좌관들만 수사받고 있다.

이 정부의 현 상태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로 곳곳에 구멍이 뚫려 가라앉기 직전인 난파선과 다를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며칠 전 최초한 이탈리아유람선의 선장은 5천여명에 달하는 승객을 구하지 않고 먼저 배를 띄워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주변의

온갖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배를 버린 그 유람선 선장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필자의 과도한 상상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유람선 선장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필자가 대통령주변비리진상조사위원회장으로 나서서 강조했던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앞에서 나서서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검찰내에 대통령 주변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구성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일계점에 압박해있다. 물질이 일계점에 도달되지 않은 상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로 인해 일계점을 넘으면 폭발한다. 현 정부는 이 상태에 대해 오판해선 안된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오판이다. 이제 자그마한 비리가 또 터져나오면 그때는 정말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게 될

것이고, 창난 민심의 바다는 이명박 정권이라는 배를 뒤엎을 수 있다.

필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정권의 핵심실세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부패상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 금감원이 영업정지정보를 미리 알려 VIP고객들만 사전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번 카메론 다이아몬드 주가조작사건 등 필자가 제기했던 부패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절대 권력에 취한 채, 그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를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망각한 것으로 국가기관이자 국정농단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을 주문해왔다. 하지만 실무자에 대한 처벌만 있었지, 이를 지시한 핵심실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미온적 조치 때문에 결국 작금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권력은 허망하다. 못할 것이 없었고, 안 되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권력도 쇠락하고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 벌였던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가르침이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제기된 측근과 주변의 비리혹을 말끔하게 정리하는데 매진하는 것이 마지막으 국민께 봉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정권의 대통령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무책임하고 비겁한 선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의결번호	2012국선22(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에이치애프레스(호남신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33-3 정도프라자 5층 대표이사 김 형 철
심의대상기사	호남신문 2012년 1월 18일자 2면 「물가 잡겠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않겠다」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심의대상 칼럼은 이 기준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교 등)제2항을 위반한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물가 잡겠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않겠다

해남·완도·진도 김영록 위원

새해 들어 정부는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책임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쌀·배추 등 중요 농산물이라는 것이다. 피땀 흘려 농사 짓은 농산물을 제값 받도록 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될 품목이라니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비축제로 사들인 물량을 무차별 방출하여 산지 쌀값을 억지로 낮추는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반발하여 2011년산 쌀 공공비축미 수매를 거부하여, 현재 수매 목표량 36만톤의 26만톤 수매로 76%달성에 그치고 있다.

쌀값은 2008년 120,000원 (80kg)대 바닥을 치고 이제 겨우 목표가격 170,083원에 근접하는 167,2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무도입물량)을 조기에 도입·방출하여 쌀값을 또다시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 (후략)

물가 잡겠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이상 수수방관 하지 않겠다

해남·원도·진도 김영록 의원

재해 들어 정부는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책임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쌀·배추 등 중요 농산물이라는 것이다. 파랗 흘러 농사 짓은 농산물을 제값 받도록 하기는 커녕, 가장 먼저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될 품목이라니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비축미로 사들인 물량을 무차별 방출하여 산지 쌀값을 억지로 낮추는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반발하여 2011년산 쌀 공공비축미 수매를 거부하여, 현재 수매 목표량 36만톤의 26만톤 수매로 76%달성에 그치고 있다.

쌀값은 2008년 120,000원(80kg)대 바닥을 치고 이제 겨우 목표가격 170,083원에 근접하는 167,2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무도입물량)을 조기에 도입·방출하여 쌀값을 또 다시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

2012년산 마저 내년에도 도입하지 않고, 금년 1~6월에 조기에 앞당겨 도입하여 방출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정부가 수입 쌀을 무차별 방출하면, 민간의 방출량과 겹쳐 결국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하는 '역계절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쌀값 폭락의 시장의 실패를 조장하면, 우리 농민들은 또다시 크게 손해 볼 것이다. 정부는 쌀 값인하대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쌀 생산농가에 대한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농자재값 안정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쌀, 차관, 배추국장을 임명하여 서민물가안정에는 힘쓰면서, 왜 폭락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방치하는가? 왜 농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 처리하고 22조원의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눈 가림대책에 불과하다. 지금 농민은 소 값 폭락, 배추 값 폭락, 대파 값 폭락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핵심은 수급조절이다. 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무차별 수입해서 폭락시키고, 정작 농산물 가격폭락 시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가? 물가상승의 주범인 고향을·저금리정책은 그대로 두고 물가 잡는다고 농민만 희생하는 것이 공정한가?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①계약재배로 계획적인 생산조절을 하면서, ②품목별 월별 조사로 시기별 생산량을 예측하도록 농업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③공급 부족 시에만 국영무역 물량(할당관세·MMA 등)을 적정 한도 내에서 방출해야 한다. 물가 잡는다고 농민을 잡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농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의결번호	2012국선2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청신문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대표이사 이 경 주
심의대상기사	충청신문 2012년 1월 20일자 19면 「설, 대보름, 그리고 우리 놀이문화의 참된 의미」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심의대상 칼럼은 이 기준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2항을 위반한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설, 대보름, 그리고 우리 놀이문화의 참된 의미

이명수 국회의원

농경사회에서 우리의 세시는 설날부터 시작됩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가장 큰 축제와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도 이 시기만큼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넉넉한 먹거리를 준비해서 서로 나누어 먹고 남녀노소 어우러져 함께 놀이문화를 즐겼습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새봄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축제의 시기였던 것입

니다.

우리 세대는 기억합니다. 설날에 시작되던 풍성함과 크고 작은 놀이들을 기억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설날에 설빔이라 하여 때때옷을 갖추어 주시거나 새 신발, 새 옷 등을 장만해주셨습니다. 설빔을 차려입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모시고 나면 가까운 이웃 친지분들을 찾아 세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세뱃돈이나 사탕이나 과자를 주시며 덕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정월은 신나는 놀이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놀이가 윷놀이였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술과 안주를 나누며 노시기도 하셨지만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남녀노소 함께 윷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후략)

설, 대보름, 그리고 우리 놀이문화의 참된 의미

농경사회에서 우리의 세시는 설날부터 시작됩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가장 큰 축제와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도 이 시기만큼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넉넉한 먹거리를 준비해서 서로 나누어 먹고 남녀노소 어우러져 함께 놀이문화를 즐겼습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새봄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축제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억합니다. 설날에 시작되던 풍성함과 크고 작은 놀이들을 기억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설날에 설빔이라 하여 때때옷을 갖추어 주시거나 새 신발, 새 옷 등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설빔을 차려입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모시고 나면 가까운 이웃 친지분들을 찾아 세배를 드렸습니다. 어른들은 세배돈이나 사탕이나 과자를 주시며 덕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정월은 신나는 놀이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놀이가 윷놀이였습니다. 어른들끼리 술과 안주를 나누며 노시기도 하셨지만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남녀노소 함께 윷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동방의 풍속이 예로부터 세시를 중히 여겨, 흰머리 할범 할범들이 아이처럼 신이 났네. 동글고 모난 윷판에

동그란 이십팔 개의 점, 정벌과 기묘함의 변화가 무궁무진하다. 서툼이 이기고 교묘함이 지는 게 더욱 놀라워, 감함이 악함을 삼키고도 토하니 승부를 예측할 수 없구나. 노부가 머리를 써서

부러 볼 꼴을 다 부리고, 가끔씩 다시 흘러 보다 턱이 빠지게 웃노라. 이색(李穡), 한시 '장단음(長湍吟)'

우리 역사에 첫 기록으로 고려말 목은 이색 선생의 한시에 전하는 윷놀이 풍경입니다. 앞서간 자가 뒤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듬으로 함께 말을 두서넛씩 엮어 가면 더 빨리 나서 이길 수도 있는 다양한 말판 행보는 세상의 섭리를 그대로 놀이판에 옮겨 놓은 듯 여러 면에서 인생의 교훈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윷놀이는 짝만 맞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한국 최고의 문화비평가인 이어령 선생은 말판을 두서넛씩 엮어가는 윷놀이에 당파 다툼의 서글픈 역사가 배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윷놀이와 함께 제기 차기, 연날리기, 쥐불놀이와도 같은 신나는



이명수
국회의원

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소나 돼지를 잡아 제물을 마련해서 성황당이나 마을 고목에 제를 지내고 제물로 마련한 고기와 떡과 술을 나누어 먹으면서 흥겹게 풍장을 치며 온 마을을 도는 농악놀이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농경문화와 유교의 전통이 어우러졌던 대동제(大同祭)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즉 서로 같지는 않으나 화합하여 공동의 선(善)과 소망을 함께 가꾸어 가자는 전통 유교의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놀이와 축제는 쥐불놀이를 끝으로 절도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설날부터 보름까지 서로 모여 윷놀이를 하는데, 보름이 지나면 윷을 거두어 감춘다. 이날 이후로 계속하면 농사에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름을 넘겨 윷놀이를 하면 벼가 죽

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 김매순, '열양세시기' 중에서

우리 또한 보름여 동안 정들었던 연을 높이 날려 올려 연줄을 끊어 푸른 창공으로 떠나보내며 각자의 청운같은 꿈을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어른들은 윷과 말판을 거두어 감추었고 어른들은 새봄을 준비하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써서 대문에 내거시고는 한 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는 새 공책, 새 책, 새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던 축제와 놀이문화를 되새기는 이유는 바로 정월 축제문화에 대동(大同)의 큰 꿈과 전통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서 크게 하나되는 우리의 전통은 오늘날 핵가족화된 우리 현실에서 새로이 되살려야 할 정신이자 문화입니다.

설날 가족끼리 어울려 윷놀이를 즐기며 그 놀이에 깃든 전통을 되새기는 것은 어떨지요. 조금 여가가 나신다면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 아산의 민속박물관을 찾아 소중한 전통과 세시를 돌아보는 체험은 어떨지요.

설을 쇠고 나면 다가올 올 새봄에는 온 나라 온 국민이 크게 하나되는 대동(大同) 대한민국의 한 해를 함께 소망해봅시다.

의결번호	2012국선2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새전북신문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청1길 6 대표이사 박 명 규
심의대상기사	새전북신문 2012년 1월 25일자 10면 「영어책 때문에 영어가 좋았던 시절」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계속 후보자가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내지 않는 저술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칼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2항을 위반한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영어책 때문에 영어가 좋았던 시절

〈오늘과 내일〉 조운선

“막 영어 배웠던 시기 호기심 넘쳐
책-영화로 영어공부 재미느꼈던
하나의 대목-장면, 많은 지식 담겨”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다. 작은 외할아버

지 집 복도의 창문 선반에 꽂힌 20년도 더 되어 보이는, 빛이 바랜 영어로 된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때라서 무척 호기심이 났다. 책을 펴봤는데 밀줄도 그어져 있었고, 단어 뜻이 써 있는 곳도 있었다. 책 앞에 누가 읽었는지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여섯 남매들이 모두 책을 읽은 흔적이 보였다. 감격스러웠던 것은 친정어머니가 사촌동생들에게 선물로 사준 책도 있었다는 거다. 나는 갈 때마다 한두 권씩 들고 왔었다. (후략)

영어책 때문에 영어가 좋았던 시절



오늘과
내일
조윤선

“

막 영어 배웠던 시기 호기심 넘쳐
책·영화로 영어공부 재미있었던
하나의 대목·장면, 많은 지식 담겨

”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다. 작은 외할아버지 집 복도의 창문 선반에 꽂힌 20년도 더 되어 보이는, 빛이 바랜 영어로 된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때라서 무척 호기심이 났다. 책을 펴봤는데 밑줄도 그어져 있었고, 단어 뜻이 써 있는 곳도 있었다. 책 앞에 누가 읽었는지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여섯 남매들이 모두 책을 읽은 흔적이 보였다. 감격스러웠던 것은 친정어머니가 사촌동생들에게 선물로 사준 책도 있었다는 거다. 나는 갈 때마다 한두 권씩 들고 왔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영어 추리 소설책을 읽었다. 그런데 어쩌나 모르는 단어가 많던지 사진을 찾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나보다 먼저 읽은 당숙들도 내가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몇 페이지밖에 더 나아가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아하, 당숙들도 나같이 일찍 포기를 했네.’ 싶으니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 책들 중에 에릭 시걸의 ‘러브스토리 Love Story’가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겨울 즈음 TV에서 처음으로 영화 ‘러브스토리’를 봤는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데다가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니 좀 수월했었다.

고등학교 때 ‘러브스토리’를 다시 읽었다. ‘영화로 배우는 영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마침 영화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감의를 한다고 해서 보았다. 혼자 책으로 읽었을 때에는 전혀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because...(그냥)’라는 표현이었다. 남자 주인공 올리버가 제니퍼에게 사랑한다고 하니, 제니퍼가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올리버의 대답은 ‘because(그냥)’였다.

고시공부를 할 때 ‘러브스토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지금은 외교관이 된 친구 해란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갔다. 나는 올리버가 아버지에게 대해 냉소적으로 말하면서 ‘Sonovabitch’라고 하는 대목이 예전에는 러시아어로 된 별명인 줄 알았다. ‘son of a bitch’를 돌려 말한 욕이라는 걸 그때 차근차근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알게 된 건 몇 년 전 오페라를 보면서였다.

대부호의 아들인 올리버가 평범한 제과점 딸인 제니퍼와 결혼을 결심하곤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기 위해 집에 데려간다. 제니퍼가 어떤 집안의 딸인지 알고 있는 올리버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할 요량이었지만 교양 있는 집답게 최대한 예의를 다해 아들의 여자친구를 맞이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제니퍼 카발레리예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생각나는군.”

“친척은 아니예요.”

나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사람들이름으로 된 오페라 제목인 줄만 알았었다. 오페라 내용을 읽고 나서야 그것이 ‘귀향 군인’이라는 뜻의 이탈리아 단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음악을 전공하고, 이탈리아인의 후예인 제니퍼도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오페라 제목인지도 ‘귀향 군인’이라는 뜻을 가진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친척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 짧은 장면은 남녀 주인공 집안의 사회적 지위, 배경, 그간 살아온 이력까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영어가 재밌어 이 책이 좋았는지, 이 책이 좋아서 덩달아 영어도 재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영어 공부에 이렇게 추억을 담은 한 권의 책을 매개로 엮여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배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한 권의 책,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시에서 비롯되었을까. 책 속의 한 대목, 영화의 한 장면으로부터 얼마나 무궁무진한 지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이 접하는 책과 영화, 그리고 방송을 지혜롭게 가려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다. /국회의원

의결번호	2012국선3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58-3 청양빌딩 대표이사 곽영길
심의대상기사	아주경제 2012년 2월 2일자 19면 「탄탄한 조직기반 갖춘 3선 도전 민주 박기춘 의원 우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남양주 을)와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인지도가 압도적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제목으로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탄탄한 조직기반 갖춘 3선 도전 민주 박기춘 의원 우세

4·11총선 현장 남양주를

4·11총선에서 남양주를 선거구의 관전포인트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사진·55)의 3선 입성여부이다.

남양주를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도 박 의원과

이에 도전장을 내민 정치 초년병들의 대결구도가 될 전망이다.

2선을 지낸 박 의원이 탄탄한 조직을 기반으로 3선 고지를 노리고 있다. 박 의원은 중앙당과 지역 내 기반이 튼튼해 공천경쟁에 나설 후보가 거론되지 않는 등 압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진호(40) 법률사무소 다올 대표 변호사가 박 의원과의 공천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의 벽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후략)

4·11총선 현장 남양주를

탄탄한 조직기반 갖춘 3선 도전 민주 박기춘 의원 우세

4·11총선에서 남양주를 선거구의 관전포인트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사진·55)의 3선 입성 여부이다.

남양주를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도 박 의원과 이에 도전장을 내민 정치 초년병들의 대결구도가 될 전망이다.

2선을 지낸 박 의원이 탄탄한 조직을 기반으로 3선 고지를 노리고 있다. 박 의원은 중앙당과 지역 내 기반이 튼튼해 공천경쟁에 나설 후보가 거론되지 않는 등 압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진호(40) 법률사무소 다울 대표변호사가 박 의원



과의 공천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의 벽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경쟁에서 후보가 난립하는 등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현재 당내 예비 후보는 이훈근(44)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과 이인근(54) 전 도의원, 윤재수

(54) 중앙당 부대변인, 심학무(60) 전 중앙선대위 법조부위원장, 민경자(59)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위원장 등 5명이다.

현재까지는 이 위원장이 전직 기자 출신답게 젊고 참신함을 내세워 공천 경쟁에서 고지를 선점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 홍보기획팀장을 담당하면서, 이름값을 높이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 토박이로 알려진 이 전 도의원이 시·도의원의 경험을 앞세워 바다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 임봉재 기자 bansugi@

의결번호	2012국선32(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대표이사 변근원
심의대상기사	충북일보 2012년 2월 2일자 5면 「박덕흠·홍상표 전 수석 남부3군 판도 뒤흔드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보은·옥천·영동)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선거구의 여타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몇몇 예비후보자 및 후보예정자만을 부각한 기사를 해당 인물의 사진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사진 게재)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덕흠-홍상표 전 수석 남부3군 판도 뒤흔드나

박덕흠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한나라당 공천쇄신 천명
“사법절차 아니기때문에
혐의만 갖고도 배제 가능”

홍상표 전 수석 전략공천설
전 청와대 참모들이 언급
출마 여부 말한 적 없지만
본인도 깊이 생각하고있어

1일로 4·11 총선이 70일 남았다. 보은·옥천·영동(남부3군) 지역 선거판은 2가지 ‘변수’의 발생으로 판이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적잖다.

한나라당의 공천 결과와 전략공천설이 나도는 홍상표(보은) 전 청와대 홍보 수석의 거취 문제에 따라 선거구도 및 판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3군의 선량(善良)을 노리는 주자는 4명이다. 한나라당은 심규철, 박덕흠 예비후보가, 민주당에선 이재한 예비후보, 무소속으로 손만복 예비후보 등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홍 전 수석이 전략공천을 받을 경우 기존의 판이 흔들릴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후략)



박덕흠-홍상표 전 수석 남부3군 판도 뒤흔드나



4·11 **총선**

**박덕흠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한나라당 공천채신 천명
“사법절차 아니기 때문에
혐의만 갖고도 배제 가능”**

**홍상표 전 수석 전락공천설
전 청와대 참모들이 언급
출마 여부 말한 적 없지만
본인도 깊이 생각하고 있어**

1일로 4·11 총선이 70일 남았다. 보은·옥천·영동(남부3군) 지역 선거판은 2가지 ‘변수’의 발생으로 판이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적잖다.

한나라당의 공천 결과와 전략공천설이 나도는 홍상표(보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거취 문제에 따라 선거구도 및 판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3군의 신왕(選王)을 노리는 주자는 4명이다. 한나라당은 신규철, 박덕흠, 예비후보(보은) 민주당에선 이재한, 예비후보, 무소속으로 손만복, 예비후보 등이 각 출마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총 전 수석이 전략공천을 받을 경우 기존의 판이 흔들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먼저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 정선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공천채신의 기류가 거센 점을 볼 때 지난달 11일 구성된 공직자 후보추천위원회(공추위)가 제시할 기준이 강도

높을 것으로 보여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공천 방식으로 국민경선을 제안했다. 이에 심 후보는 “공천방식은 특정 후보의 제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공천이든 국민경선이든 상관 없고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나와 심 후보가) 당이 정한 공천방식에 절대적으로 따르기로 한 만큼 공천결과에 불복, 탈당해 총선에 출마하는 수준이하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방형 국민경선(책임당원20%·일반국민 80%) 등을 공천의 큰 틀로 제시했다.

최근 경주 MBC 여론조사 결과, 심 후보는 26.5%를, 박 후보는 23.0%를 각각 기록, 치열한 경쟁을 벌인 만큼 두 주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공천은 고도의 대외성이

날 것으로 보여 경선을 통해 공천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선 경선 자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의 측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박 후보에게 미칠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박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박 후보와 관련된 7명을 탐·불법 선거 행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보 2011년 12월 5일 5면 보도)

한나라당의 공천채신 진행과 박 후보 측근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맞물려 있는 가운데 공천행태를 예측해 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공추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권영세 사무총장은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무정비와 관련, 법률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본들에 대해선 당원의 공천을 주선 안 한다”고 했다.

특히 권 총장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공천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하지만 (공천채신) 사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만 갖고도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이해 제 개인의 의견으로 공추위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당 공직후보자추천 규정 제5조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 기준을 엄격히 해 도덕성 검증강화기준을 마련했다”며 “상법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혐의 확정된 자, 파행자 범죄·부정비리범죄는 범죄사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류는 향후 공추위가 선거 부정행위와 관련해, 어떤 기준을 내놓을지를 짐작케 한다.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

는 총 전 수석을 둘러싼 전략공천의 실제 실현 여부다.

총 전 수석은 1일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내 입으로 출마 여부를 예기한 적이 없다. 전 청와대 참모들이 나의 전략공천을 바라는 것 같다”며 “경중동이다.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모처에서 본보 기자와 만난 전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홍 전 수석의 출마 이유를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은 총 전 수석을 전면에 앞세운 총 박 총신 판마를 구상한다”며 “전략공천을 받을 경우 출마의사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형승관련 고위직으로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내가 청와대 홍보수석 한 것을 기억하고 방승관련 기관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 전 수석이 어떤 최종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이민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37(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뉴스포스트 서울시 중구 종로동 500 디오센터빌딩 302호 대표이사 강 중 구
심의대상기사	뉴스포스트 2012년 2월 5일자 5면 「정치1번지 자존심 건 한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종로)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1번지 자존심 건 한판

총선 접전지역을 가다 ③ / 종로구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는 현 박진 새누리당 의원(옛 한나라당)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의 격전이 예상된다. 종로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지역이다. 2일 현재 종로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무려 15명, 뜨거운 출마 열기만큼 종로구는 서울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격전지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야권의

대권잠룡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4선), 여권의 신성 조윤선 새누리당 의원(옛 한나라당·비례대표 초선)등 거물의 정치인의 출사표도 눈에 띈다. 다가오는 4월 종로구에서 웃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중략)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종로 득표율은 45.62%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53.97%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게다가 여론조사 전문기구인 ‘리얼미터’의 지난달 25일~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은 37.1%로 새누리당의 30.3%에 비해 무려 6.8%나 앞서 있다.

종로구의 최후의 웃는 자가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는 현 박진 새누리당 의원(옛 한나라당)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주공산의 각전이 예상된다. 종로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지역이다. 2일 현재 종로구에 출마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무려 15명. 뜨거운 출마 열기만큼 종로구는 서울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각전지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아권의 대권점령인 정세균 민주당당 의원(4선), 여권의 신성 조윤선 새누리당 의원(옛 한나라당·비례대표 초선) 등 거물의 정치인의 출마표도 눈에 띈다. 다가오는 4월 종로구에서 쏠리는 승자는 누가 될까.

총선 접전지역을 가다 3 종로구

정치1번지 자존심 건 한판



정세균 의원 프로필

출생: 1950년 9월 26일, 전북 진안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폐허대인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경력: 15·16·17·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대표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권의 그런 규정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그는 "종로가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며 "도처에 귀중한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라고 종로구를 설명했다.

덧붙여 "전통과 문화가 스며있는 품격 있는 도심,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고 한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젊은 문화의 에너지

거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여성 후보에 전략 공천 30%를 비취릴 때 공천 가능성에 자신이 있다"며 "종로구를 우리나라 대표적 브랜드 구로 만든다는 큰 그림 하에 권역별 맞춤 공약으로 13일 경에는 세부 공약안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거물의 새로운 도전

정세균 의원은 내리 4선을 지낸 뒷날 호남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종로에 출마한다는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을 기본으로 과거와 현재,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지역임을 감안해 공생적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현장 활동, 홍보 3가지로 나눠 총선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상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숙안은 이르지만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총선승리의 '태풍 진원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2의 전성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의원 프로필

출생: 1966년 7월 22일, 서울
학력: 서울대 외교학 학사
콜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경력: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변인
전 검찰청 법률사무소 변호사

는 입장이다.

종로구는 과거 14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줄곧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승리를 가져간 새누리당의 뒷발 중의 한 곳이다. 하지만 19대 총선을 2개월여 남겨둔 종로구의 민심은 새누리당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종로 득표율은 45.62%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53.97%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게다가 여론조사 전문기구인 '리얼미터'의 지난달 25일~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7.1%로 새누리당의 30.3%에 비해 무려 6.8%나 앞서 있다.

종로구의 최후의 쏠리는 자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허주열 기자

joneson@hanmail.net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는 16·17·18대 국회의원을 잇달아 지낸 박진 새누리당 의원(옛 한나라당)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주공산의 '빈 집'이 됐다.

빈 집을 차지하기 위해 2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인원만 14명. 여기에 조윤선 새누리당 의원(옛 한나라당·비례대표 초선) 또한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종로구 출마 선언을 했다. 따라서 종로구는 거물 정치인 정세균 의원과 당한 신성 조윤선 의원의 대결이 예상된다.

젊은 문화 에너지로 출사표

조윤선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종로에서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다"며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기성 정치

로 아권의 거물 정치인(정세균 의원)과 맞서고자 한다"며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다. 종로에서 여야가 정치적 경력의 크기로 맞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에 비취 옳은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일 현재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경쟁자가 많아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밀일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종로에 출마한다"며 "치열한 싸움의 함복판이 될 종로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권의 대권점령으로도 꼽히는 만큼 종로에서의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야의 공천 일정이 속속 발표되는 만큼 동일 당원 내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공천접수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천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당은 2월 6일 당무위 의결로 공천심사 원칙, 방식, 경선 방법 등을 확정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공모 후 공천심사를 진행한다

의결번호	2012국선48(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한국일보미디어그룹(주간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43-1 흥국빌딩 2층 대표이사 이진희
심의대상기사	주간한국 2012년 2월 13일자 7면 「리를 VS '삼세번 도전' 성공할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남 거제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광주광역시 북구을)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후보예정자 현황을 인물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일부 후보예정자의 인물 사진만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사진게재)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리를 VS '삼세번 도전' 성공할까 ⑦경남 거제, 안양 동안갑, 광주북을

〈경남 거제〉야권에선 대거 5명이 출전 준비중

김현철(53)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4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문민정부 시절 가까운 거리에서 아버님을 보좌하며 국가경영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부소장이 부친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간판은 ‘당연히’ 새누리당을 원하고 있다. 김 부소장은 17대와 18대 때도 총선을 준비했었다. 그렇지만 ‘자의 반 타의 반’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이 삼세번재 도전인 셈.

하지만 김 부소장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 지역의 현역인 윤영(57) 의원을 비롯해서 진성진(52) 변호사, 황수원(56) 박근혜 전 대표 특보, 설대우(46) 중앙대

교수, 염용하(47) 한의원장 등이 새누리당의 본 선진출티켓을 노린다.

현재까지는 여러 후보 중 김 부소장과 윤 의원이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공천률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장운(55) 전 동국대 총장비서실장, 변광용(46) 전 거제신문 편집국장, 박종식(64) 전 수협중앙회장(이상 민주 통합당), 이세중(57) 전 민주노동당 시위원장(통합진보당), 김한주(44) 변호사(진보신당) 등이 일전을 버르고 있다. 김한표(58) 전 거제경찰서장은 혈혈단신 무소속으로 출전을 준비 중이다.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 김한주 변호사, 김한표 전 경찰서장 등은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아 벌써부터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한편 15대 때는 김형일 신한국당 의원, 16, 17대 때는 검찰 총장을 지낸 김기춘 의원이 거제에서 여의도 입성의 꿈을 이뤘고, 지난 18대 때는 윤영 의원이 여러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승전가를 불렀다. (후략)

4·11 총선

경쟁자를 가다

⑦ 경남 거제, 안양 동안 갑, 광주 북 을

리틀 YS '삼세번 도전' 성공할까

야권에선 대거 5명이 출전 준비중

●경남 거제

김현철(53) 새누리당 의의도연 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4일 거제시 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문민정부 시절 가까운 거리에서 아버님을 보좌하며 국가경쟁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정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부소장이 부친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간판은 '당연히 새누리당을 원하고 있다. 김 부소장은 17대와 18대 때도 총선을 준비했었다. 그렇지만 '자의 반 타의 반'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이 삼세번 도전인 셈.

하지만 김 부소장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 이 지역의 현역인 윤영(57)

●역대 총선 경남 거제 당선자

총선	당선자	소속정당
15대	김형일	신한국당
16대	김기춘	한나라당
17대	김기춘	한나라당
18대	윤영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서 진성진(52) 변호사, 황수원(56) 박근혜 전 대표 특보, 설대우(46) 중앙대 교수, 염용하(47) 한의원장 등이 새누리당의 본선진출티켓을 노린다.

현재까지는 여러 후보 중 김 부소장과 윤 의원이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공천 물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윤영

아권에서는 장운(55) 전 동국대 총장비서실장, 변광용(46) 전 거제신문 편집국장, 박종식(64) 전 수협중앙회장(이상 민주당), 이세훈(57) 전 민주노동당 사무원장(통합진보당), 김한주(44) 변호사(진보신당) 등이 일전을 버리고



김현철

있다. 김한표(58) 전 거제경찰서장은 열혈단신 무소속으로 출전을 준비 중이다.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 김한주 변호사, 김한표 전 경찰서장 등은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아 벌써부터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박종식

한편 15대 때는 김형일 신한국당 의원, 16, 17대 때는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 의원이 거제에서 여의도 입성의 꿈을 이뤘고, 지난 18대 때는 윤영 의원이 여러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승전가를 불렀다.

거물 이석현에게 새내기 김경록 도전장

●안양 동안 갑

안양 동안 갑의 주인은 이석현(61) 민주당 통합당 의원. 이 의원은 14대 때 처음 배지를 단 뒤 16대를 재외하고 18대까지 4선에 성공했다. 4선이라는 관록이 말해주듯 이 의원의 중랑갑은 상당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의욕적으로 5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 안팎에서 이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새내기들이 적지 않아 고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역대 총선 안양 동안 갑 당선자

총선	당선자	소속정당
15대	최희준	새정치국민회의
16대	심재철	한나라당
17대	이석현	열린우리당
18대	이석현	민주당

특히 지난해 인기 가수 황혜영씨와 결혼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던 김경록(39) 민주당당 상근 부대변인은 고심 끝에 동안 갑 출격을 결정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랫동안 주위에서 총선 출마를 권유 받아 왔다.

김 부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포럼 '사회와 진전' 등에 몸담으며 정치를 시작했고,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국회정책전문위원 등으로 의원을 넘겼다. 또 김 부대변인은 지난해 7월 당 상근 부대변인에 임명되며 주목을 받았다. 김 부대변인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안양시민과 함께할 것이며 더불어 윤택한 정치를 하겠다'고 당찬 출마표를 밝혔다.

이 밖에 민병덕(41) 변호사, 백종주(43) (사)한국학술진흥원 이사장, 최영식(52) 변호사가 민주당 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최충찬(62) 전 건설



이석현

교통부 장관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윤진원(46) 전 전국공무원노



김경록

조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임대현-최경환 '삼파전'

●광주 북 을

광주 북 을이 민주당통합당의 아성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최근 4차례 총선에서 민주당통합당(열린우리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포함)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무난하게 배지를 차지했다.

때문에 민주당통합당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전쟁을 방불케 한다. 현재 판세는 김재균(60) 전 의원에게 임대현(60) 전 광주 고검장과 최경환(53)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이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민선 2, 3기 광주 북구청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역민들 사이에서 지명도가 높다는 게 강점으로 꼽

●역대 총선 광주 북 을 당선자

총선	당선자	소속정당
15대	이길재	새정치국민회의
16대	김태홍	새천년민주당
17대	김태홍	열린우리당
18대	김재균	민주당

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재선 다짐기에 나섰다. 하지만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도전자들을 상대로 '방어전'에 성공해야 한다.

임 전 고검장은 현재 당 법률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검사 시절 청렴과 강직 이미지를 쌓았던 임 고검장은 배지를 달고 '여의



김재균

도 심물정제'에 참여하겠다는 포부다.

최 전 비서관은 'DJ의 분신'으로 불린다. 지역민들의 DJ에 대한 향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임대현

비서관의 승산도 적지는 않다. 최 전 비서관은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있었던 지난해 12월 13일 일일감치 이름을 올리고 발걸음이 여느



최경환

민주당통합당의 최경주(52)씨와 통합진보당의 윤민호(42)씨, 진보신당의 안영돈(51)씨는 거물들 틈바구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squeeze@hk.co.kr

의결번호	2012국선49(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하나로문화무등일보(무등일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대표이사 전 용 준
심의대상기사	무등일보 2012년 2월 13일자 5면 「대항마 없는 이용섭 독주가도」 및 2월 14일자 5면 「'박지원' 흔들림 없는 아성 구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광주시 광산구 을, 전남 목포시)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 현황을 바탕으로 선거 판도를 분석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제목을 각각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항마 없는 이용섭 독주가도

광주 광산을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광주 8개 선거구중 열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은 조용한 곳이다.

광주 평균 경쟁률이 6.1대 1인데 비해 이곳은 단 2명만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특히 다른 지역구는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4~6명 등록한데 비해 현역인 이용섭(60) 의원에 대항할 예비후보가 지금까지 단 한명도 등록하지 않아 '독주'가 점쳐지고 있다. (후략)

'박지원' 흔들림 없는 아성 구축

목포

호남의 정치 1번지인 목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교적 선거 열기가 지펴지지 않은 지역 중 하나

나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박지원'이라는 정치 거물을 견제할 만한 대항마가 없고, 선거판을 뒤집을 만한 변수도 없어 싱거운 싸움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통합당내 공천 기준과 야권연대 추진 여부에 따라 지형도가 다소 흔들릴 수는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박 최고위원이 공천심사대상에서 제외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민주통합당의 공천기준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민주통합당은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철새' 정치인은 공천심사에서 원천배제키로 방침을 세웠다.

구시대 인물 배제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부담이다.

여기에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목포가 그 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목포 선거구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을 비롯해 같은 당 후보로 배종호 전 KBS 뉴욕

특파원과 통합진보당 윤소하 목포신안민중연대
상임대표가 뛰고 있다. (후략)

대항마 없는 이용섭 독주기도

광주 광산을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광주 8개 선거구
중 열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은 조용한 곳
이다.

광주 평균 경정률이 6.1대 1인데 비해 이
곳은 단 2명만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특히 다른 지역구는 민주통합당 예비후
보가 4~6명 등록한데 비해 현역인 이용섭
(60) 의원에 대항할 예비후보가 지금까지
단 한명도 등록하지 않아 '독주'가 점쳐지
고 있다.

광산을 선거구는 원래 하나의 선거구였
던 광산구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대량 유입되면서 18대부터 2개로 나뉘었
다.

광산을 선거구는 당시 비아동, 침단1·2
동,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등 6개동이였
고 이번 총선에서는 수완지구 개발이 마무
리돼 수완동이 추가됐다.

이 선거구는 수완지구와 침단지구 등 대
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데다
30~40대 주민들의 '아파트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정도이며 하남산단을 끼고
있어 노동자층 주거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또 '토박이'들이 거의 없어 '조직 선
거' '무조건 민주당 지지' 등 기존 선거 규
칙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관
세청장과 국세청장, 건설교통부장관, 행정
자치부 장관,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혁신관
리수석 비서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18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변인과 정
책조정위원장을 거쳐 민주통합당 정책위
원회 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
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 점들을 감안하면 '전략공천'이나
거물급과의 '당내 경선'이라는 장애물 이
외에는 당선 가능성이 다른 현역들에 비해
가장 높다.

이 의원은 광산을 지역구의 요구에 맞춰
교육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놓았다. 젊은
층이 많은 만큼 교육과 일자리 등의 정책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이용섭 60	황차은 44
(현) 민주통합당 정책 위의장 (전) 건설교통 부장관·행정자치부상 관	(현)통합진보당 중앙 위원 (현)청백관예비 례 광주생협 이사장

으로 지역민과 소통한다는 전략이다.

대표 공약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 불평
등 완화 위해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1% 부자증세' 실현, 수완지역 사립고교 유
치 및 명문여고 육성, 기업유치 위해 하남
공단, 진곡산단, 침단산단 R&D 특구 적극
육성 등이다.

이 의원은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선거운
동을 펼치면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민
들이 양대 선거에서 마음 놓고 민주통합당

다. 그동안 광주·전남은 민주통합당에서
만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을 뿐이었
다.

황 예비후보는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18대 총
선에서 이 지역구에 출마했던 장 예비후보
와 경선에서 맞붙어 장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후보로 선출됐다.

황 예비후보는 행복한예비례 광주생활협
동조합 이사장과 침단 열린음악회 집행위
원장을 맡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
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노동자층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
다.

현재 '여성이 맘 편히 일하는 사회'를 슬
로건으로 내걸고 여성, 보육,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책으로 유권자와 만나고 있다.
황 예비후보는 "여성이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
해 지속적으로 여성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
이다"고 말했다.

경쟁 상대 예비후보 무등록 열기 잠잠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밀집...당락 좌우 황차은 통합진보 후보 여성·노동 공략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권 능력 있는 정책
정당·유능한 대안정당'의 안정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DJ라는 정치거목이
떠나신 공백을 '큰 정치'를 통해 하나씩
채워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여기에 통합진보당에서는 여성 예비후보
2명이 등록해 처음으로 경선을 치러 황차
은(44) 후보가 당 후보로 결정되면서 이
의원과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

이른바 '성(性) 대결'.

통합진보당은 장연주 광주시민센터 공동
대표와 황차은 중앙위원이 치열한 경선을
펼쳤다. 통합진보당이 광주에서 경선을 치
른 것은 처음 있는 일여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더구나 이 두 후보 모두 여성이었

한편 고향인 광주에서 출마를 모색 중이
며 최근까지 출마지역을 광산읍과 서구
등에서 적극 검토중이던 장하진 전 여성가
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구갑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했다.

정가에서는 "장 전 장관이 '중량급 정치
인들이 수도권에서 몸싸움할 생각은 않고
편한 길만을 추구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지도부에 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전체 지역구의 15%
를 여성 후보에게 할당키로 하고 특히 강
제지역인 광주와 전남·북에 여성 후보를
집중적으로 전략 공천할 방침이 정해진 이
후 예비후보로 등록해 여러 비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정배기자



‘박지원’ 흔들림 없는 아성 구축

목포

호남의 정치 1번지인 목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교적 선거 열기가 지펴지지 않은 지역중 하나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박지원’이라는 정치 거불을 견제할 만한 대항마가 없고, 선거판을 뒤집을 만한 변수도 없어 심겨운 싸움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통합당내 공천 기준과 야권연대 추진 여부에 따라 지형도가 다소 흔들릴 수는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박 최고위원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민주통합당의 공천기준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민주통합당은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혈세’ 정치인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키로 방침을 세웠다.

구시대 인물 배제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로 부담이다.

여기에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목포가 그 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목포 선거구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같은 당 후보로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과 통합진보당 윤소하 목포신안민중연대 상임대표가 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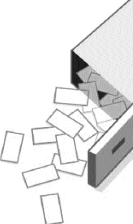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 상황으로 보면 전남에서 여수를 다음으로 후보가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치열한 접전이 없어 흥행성도 가장 낮다.

일단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서류 몇 점접심사를 거쳐 한 지역구당 2명의 후보를 올려 ‘양자구도’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목포는 박지원 후보와 배종호 후보의 경합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 최고위원은 기존 조직기반을 다지는 한편 “큰 인물, 큰 정치, 목포발전을 기치로 깨끗한 선거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년간 목포 시민과 함께했던 모든 열정, 함께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목포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되살려 호남 정치 1번지 목포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금귀월래(金歸月來)를 지키면서 따뜻한 정치인 사람 냄새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목포 발전을 위해 4년간 7천303

			
민주통합당 박지원 ·69 (전)김대중대통령 비서실장 (한)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배종호 ·50 (전)KBS 뉴욕특파원 (한)혁신과통합 전남 상임대표	통합진보당 윤소하 ·50 (한)목포신안민중연대 상임대표 (한)목포로국연대 공동대표	

배종호 ‘젊고 참신한 인재론’ 견제구

공천기준과 야권연대 여부 최대 변수

통합진보 윤소하 노동·재야 지지 탄탄

역원의 예산을 확보, 목포 미래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민주통합당내에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DJ) 정신을 이어 나가는 한편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석구석 현장을 발로 누비는 것으로 유명한 그는 요즘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자신의 일정이나 생각을 올리고 누리꾼들의 글에 답하는 등 SNS를 통해 지역의 젊은 층들과 소통도 확대해 가고 있다.

18대 총선 당시 공천심사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햇볕정책과 6·15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차원의 일을 한 것들이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운명치 못한 것”이라는 항변이다.

이에 맞선 배종호 예비후보는 ‘젊고 참신한 인재론’을 바탕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어 박 최고위원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혁신과 통합 전남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배 후보는 무안반도 통합 등을 토대로 전남 서남권의 인구 100만 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포의 꿈을 제시했다.

목포를 국제도시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남지역 예비후보들과 새시대 새정치 모임을 결성한 뒤 민주통합당에 “4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인재를 대거 발탁해야 한다”며 “뇌물수수등으로 사법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부정, 부패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야권통합을 거부하거나 방대한 자, 의정활동 무능력자나 다선의원 역시 공천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며 박 최고위원을 견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의 공천 기준이 정해지면서 박 최고위원에 대한 공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공천을 통해 새누리당을 압도해야 한다”며 박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배 후보와 고교 동창이자 통합진보당의 총선 주자인 윤소하 후보 역시 호남 정치 1번지인 목포의 낯은 정치 구조 타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8대 총선에서 민노당 후보로 출마해 얼굴을 알린 윤 후보는 오랜 시민운동가 경력 덕에 노동계와 재야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지지가 가장 큰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윤 후보는 30년 시민운동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정치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시민행동’으로 결집시키겠다는 각오로 민심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호남 정치 1번지 목포가 이제 낡은 정치, 지역주의의 상징처럼 됐고, 각종 구대정치 산물이 시민의 정치적 자존심까지 상처냈다”며 “국회의원, 단체장, 시·도의회까지 일당 독주하면서 서민의 삶은 들여다보지 않은 ‘정치꾼’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되기도 한 तर라 내심 기대감을 갖고 있다.

순선혁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5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인천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96-1 대표이사 이 광 림
심의대상기사	인천신문 2012년 2월 20일자 3면 「남갑 김성진 후보 1인 시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인천광역시 남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1인 시위 활동을 여타 예비후보자 관련 보도 없이 한 개면에 상당한 크기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갑 김성진 후보 1인 시위

통합진보당 김성진 남갑 예비후보는 19일 대형유통재벌들의 헌법 소원에 항의의 뜻으로 홈플러스 인하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사진제공=남구선거사무실

의결번호	2012국선52(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남도일보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91-20 대표이사 박 성 호
심의대상기사	남도일보 2012년 1월 20일자 4~6면 「4·11 총선 격전지를 가다[광주], [전남]」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광주광역시 동구 등)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선거 판도를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11 총선 격전지를 가다 〈광주·전남〉

(전략) 이들 후보군 중 현재로서는 박주선 의원의 우세가 대세다. 최근 광주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받고 있는 지지도는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전략) 이달 초 치러진 지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만으로 보면 김영진 의원이 앞서고 있지만 20%대 미만의 지지를 받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다. 나머지 후보들이 10%에 육박하거나 넘기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실시되고 있는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서대석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김영진 의원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후략)

(전략) 일단은 현재 광주지역 언론사의 여론조

사에 따르면 조 의원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앞서고 있다. 조 의원은 20% 초반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최대 변수가 등장했다. 정용화 이사장의 가파른 지지세 상승이다. 올해 초에 실시한 지역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최근에는 20%대 까지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후략)

(전략) 장 의원에 맞서는 김명진 예비후보는 40대 기수답게 매일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근로자 대기소, 커피숍, 경로당을 돌며 지역구 곳곳을 훑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최근의 지역 여론 조사에서 10%를 넘는 지지층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전략) 후반대와 30%대의 지지를 얻어 안정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다자간 대결에서 김명진 후보보다 뒤처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후략)

(전략) 민주통합당 현역 김동철(56) 의원과 전갑길(55) 전 국회의원 간 광주 지역 한 여론조사 결과 당내 대결 구도에서 전 전 의원이 김 의원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와 상반된 결과가 나와 누가 앞서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다. 즉 어느 후보가 확실한 지지세를 굳히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20% 중반대의 지지를 받았고, 전 전 의원은 10% 후반대의 지지를 받았다. 이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현

재로서는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후략)

(전략) 김 의원은 두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0%를 겨우 넘기는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신진 세력으로 분류되는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최경환(51)과 광주고검장 출신인 임내현(58)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들 두 후보는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을 턱 밑까지 추격하는 10% 후반대의 지지를 얻고 있다. 김 의원으로서는 ‘좌불안석’ 일 수밖에 없다. (후략)

동구

박-양 치열한 접전 속 이병훈 바짝 뒤쫓는 형국

양강 체제 무너져 다자간 대결... '물갈이' 변수

4·11 총선에서 동구는 박주선(민주통합·62) 현 국회의원과 양형일(민주통합·61) 전 의원간에 리턴매치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경선에서 한명숙 체제로 전환되면서 양강 체제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단장의 가세로 3파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현(61) 전 청와대 행정관과 여기에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광주평화재단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영재(민주통합·50)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선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다자간 대결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들 후보군 중 현재로서는 박주선 의원의 우세가 대세다. 최근 광주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받고 있는 지지도는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위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바로 양형일 전 의원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의원은 '현역 물갈이론'을 들고 바짝 뒤쫓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물갈이론'과 일맥상통해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양 전 의원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통합'이라는 시대적 열망과 이를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주하게 바깥 민심을 훑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역시 이를 경계하듯 18일 기자회견에서 "물갈이론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조금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단순히 이벤트성 감정으로 뽑는 게 아니다. 진정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관록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 할때 본인



박주선



박현



양형일

이 동구에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일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양 전 의원이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 복병이 등장했다. 이병훈 전 단장이다. 이 전 단장은 출마 선언을 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지역 여론조사에서 두자리 숫자라는 놀랄만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박 의원과 양 전 의원을 따라잡기는 시간문제도 보인다.

여기에 현 민주통합당의 경선 방식도 그에게 결코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했던 박현 예비후보는 "광주에서도 이제는 참신하고 활기찬 정치 신인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 시민사회운동을 해 온 정영재 대표도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의 바람으로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며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news.com

서구

민주통합-한라라당 후보 '대혈투' 벌일 듯

금 의원 지지 이탈총...徐 예비후보로 결집 양상

이번 4·11 광주지역 총선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구는 서구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서구 을 선거구는 후보군이 가장 많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돼 왔고, 이를 반영하듯 현재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몇몇 후보군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지지세가 비등비등해 이들 간에 연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서 몇몇 후보들로 압축돼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5선 출신의 김영진(64) 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통합당 내 경선이 가장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후보는 현재 서대석(50)전 청와대 비서관, 채일병(64) 전 광주발전연구원장, 이상갑(44) 인권변호사, 김이강(40) 블루엡셋 자산관리 본부장, 김성숙(57) 전 광주시의원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달 초 치러진 지역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들만으로 보면 김영진 의원이 앞서고 있지만 20%대 미만의 지지를 받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다. 나머지 후보들이 10%에 육박하거나 넘기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실시되고 있는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서대석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김영진 의원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속에 중진 및 다선의원 등에 대한 '물갈이' 여론 마저 확산되면서 김 의원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도 뒤처지고 변화 요구에도 부합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서대석 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에 한명숙 대표체제로 전환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친노세력으로 분류되



김영진



서대석



이상갑



이정현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옛 민주당 출신답게 참신성과 개혁성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당초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던 이정현(한나라당·54)이 현재 주춤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광주전남지역 예산확보에 가장 앞장서 '예산 잘 따오는 의원', '호남 민원 해결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이로 인해 이달 초 진행된 지역 여론조사에서 김영진 의원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치러지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채일병 예비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륜을 내세우고 있고 여기에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한 미래 발전을 제시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또 관록과 성실함을 갖춘 관료 출신인 정남준 전 행안부 차관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news.com

조영택-송갑석-정용화 ‘초 접전’ 판세

鄭 이사장 급 상승세 속 민주당 공천 누구에게

서구 갑 지역구는 현역인 조영택(민주당·60)의원, 민주당 합당 송갑석(민주당·46)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무소속 정용화(48)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연설·기록 비서관을 지낸 호남미래재단 이사장 간에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은 현재 광주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앞서고 있다. 조 의원은 20% 초반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년여 동안 지역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지역민들로부터 일정부분 탄탄한 지지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기 중 국회사업과 서구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문화, 복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확보,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금 확보 등에 큰 역할이 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4주만에 걸친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민들부터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바깥팍팍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난 18대 의정 경험 등을 통해 얻은 확실한 정권 기반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18대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는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선이 된다면 지역민을 위해 할 것이 더욱 많아 질 것이다”고 말했다.

40대 기수론을 외치며 민주당합당 송갑석 예비후보도 만만치

않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의원에는 약간 뒤처지는 지지세지만 언제든지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터 밑까지 쫓아왔다는 평가다. 변화를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조영택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결코 범실할 수 없는 위치에 송 예비후보가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대 변수가 등장했다. 정용화 이사장의 가파른 지지세 상승이다. 올해 초에 실시한 지역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최근에는 20%대가까지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 예비후보는 당초 한나라당을 탈당하게 되면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점차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인지도와 그의 진정성이 지역민들로부터 점차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서구 갑 선거는 앞으로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 광주시 의원을 지낸 송재선(민주당·54) 전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조영택 것으로 전망됐던 선거가 다자간 대결로 흠뻑진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mdnews.com



송갑석

정용화

조영택

‘예산통’ 현역 의원 강세...타 후보군 ‘잠잠’

金·李 예비후보 발품 팔며 지지호소 막판 변수

남구 선거구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13명에 달하는 예비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광주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곳이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민주당합당을 제외하고 통합진보당, 한나라당 등 정당별 호명직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전 광주시 의원 출신인 무소속 예비후보가 있을 뿐 이렇다 할 판권 포인트가 사실상 없는 곳이다.

19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옛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인 민주당합당 김명진(48), 한나라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노덕민(56) 위원장, 광주대학교 교수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통합진보당 이민원(54), 전 광주시의원을 지낸 무소속 강도석(57)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남구는 장병완 의원의 입지가 탄탄하다. 장 의원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탁월한 예산확보 능력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예산통’, ‘예산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혔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사람오락(4시간 자연 당선되고 5시간 자연 떨어진다)의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말들이 유권자들 입으로 전달되면서 큰 공감대를 형성해 단단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선거는 사당오락의 정신으로 표심을 자극했으며 지역민의 민심을 싸늘했던 경향을 가졌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는 ‘사람오락’의 마음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장 의원에 맞서는 김명진 예비후보는 40대 기수답게 매일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근로자 대기소, 커피숍, 경로당을 돌며 지

역구 곳곳을 돌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최근의 지역 여론조사에서 10%를 넘는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예비후보는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 국회 원내대표 비서관,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통해 쌓은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윤정 전남 구지역위원장의 출마라는 변수는 존재한다. 그의 지지도는 10% 전후반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출마와 동시에 연대라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장병완 의원에게는 쉽지 않은 공천 싸움이 예상된다.

이민원 예비후보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민원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인물로서 지역 민심에서도 이질감이 크지 않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권 연대 후보였던 오명윤씨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사례를 보면 이 예비후보의 역량에 따라서는 판세가 혼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 의원의 가장 큰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출신으로는 노덕민 위원장은 “생활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매일 발품을 팔며 지지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mdnews.com



김명진

이민원

장병완

김경진·임현모·이형석 등 새 얼굴 ‘호시탐탐’

강기정, 공천 경쟁 올린 지지층 결집 분주

4·11 총선 광주지역에서 서구 을 다음으로 현재 뜨겁게 선거 열기가 일고 있는 곳은 북구 갑이다. 현역인 민주통합당 강기정(48)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의 경륜과 명망에서 예사롭지 않은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투명성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 이사, 촛불인권연대 고문변호사 등 폭 넓은 법률 봉사활동으로 지역 내 입지가 탄탄한 김경진(46)변호사,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 의장을 역임한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형석(49), 전 광주교육대 총장을 역임한 임현모(55) 등 세명의 후보가 민주통합당 간판을 걸고 출마표를 던졌다.

이들 중 이달 초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일단 20% 후반대와 30%대의 지지를 얻어 안정된 모양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다자간 대결에서 김경진 후보보다 뒤쳐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또한 임현모, 이형석 예비후보 역시 당내 다자간 대결에서 10% 후반대의 지지를 얻고 있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판세다.

이로 인해 김경진, 임현모, 이형석 예비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심심찮게 감지된다는 게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연대 움직임은 일단 김경진 변호사와 이형석 전 비서관 사이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반면 임현모 전 총장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연대 움직임과는 멀어 보인다.



김기정

김경진

이형석

임현모

결국 북구 갑 선거구는 강 의원의 입지가 그리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김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의 선택에 따라 판세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김경진 예비후보는 새 사람이 세 정치라는 모토로 선거 사무실을 자유롭고 편안한 카페 분위기로 조성 지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챙기며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형석 전 비서관은 민주통합당이 한명숙 대표 체제로 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친노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고 민주통합당이 공천방식을 오픈프라이버리 형태가 유력해지면서 한국 농총과 친노세력 및 젊은 유권자의 고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주통합당 박규환(52) 광주미래연구소장이 최근 출판 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섰다. 또한 민주통합당 이관행(63) 민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특보2단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통합진보당 이채언(61)전남대 교수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현재 6명의 후보군이 난립한 상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news.com

광산구 갑

전·현직 의원 간 초반부터 ‘박빙’ 승부

후 전 시의원 경선 캐스팅 보드 역할론 전망

‘광산 갑’ 선거구는 동구 선거구와 출발점은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통합당 내 후보가 적은 것이며, 동구와 마찬가지로 전현직 의원 간에 치열한 매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다만 동구와 다른 점은 현 의원보다 전직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현역 김동철(56) 의원과 전갑길(55) 전 국회의원 간 광주지역 한 여론조사 결과 당내 대결 구도에서 전 전 의원이 김 의원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다.

다자대결구도에서는 김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와 상반된 결과가 나와 누가 앞서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다. 즉 어느 후보가 확실한 지지세를 굳히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20% 중반대의 지지를 받았고 전 전 의원은 10% 후반대의 지지를 받았다. 이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현재로서는 선분만 판단은 힘들다.

이런 위기감에서 인지 김 의원은 최근 지역구를 돌며 지역민이 민원 해소와 애로 사항 청취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허리 통증을 참아 내면서까지 지역구를 돌고 있는 것을 알려져 그 만큼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산구의 최대 현안인 군유비행장 이전 문제에서 특별법을 발의함으로써 48년 동안 소용 피해에 시달렸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에 불꽃을 틔워준 점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과정에 협상파로 나서면서 지역구가 농촌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부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은 김 의원에게는 아쉬

운 대목이다. 여기에 지역구 청기기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는 것은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동철

이정남

전갑길

전갑길 전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표를 던지고 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김대중 총재 시절 비서와 3선의 광주시의원, 국회의원, 광산구청장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지지 기반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총선에서 전 전 의원의 국회 입성 여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광산구청장을 지낸 경력으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전국 최초 구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등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민주통합당 이정남(55) 전 광주 YMCA 이사가 출마표를 던져 당내 경선이 흥미로워졌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시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밀 재배단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광산구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 등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10%에 근접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전현직 의원과의 지지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해 끝까지 경선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당내 경선에서 이 예비후보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그의 행보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news.com

신진세력 거센 도전...김재균 의원 '좌불안석'

민주통합 후보들 지지세 혼전 공천 싸움 치열

‘북구 을’ 선거구는 같은 구인 ‘북구 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내 공천 싸움이 치열하다. 현역 의원의 지역구 지지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고 추격하는 신진세력의 지지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역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58)은 경실련 선정 3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선정 2년 연속 대상, 국회 선정 입법 활동 우수의원, 민주당 선정 국감 최우수 의원 등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이 활발한 점이 장점이다. 또한 광주시 의원 8년, 북구형장 8년 동안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점도 다른 후보군에 비해 강점이다. 하지만 이달 초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지지층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두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0%를 겨우 넘기는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신진 세력을 분류되는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최경환(51)과 광주고검장 출신인 임내현(58)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들 두 후보는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을 턱 밑까지 추격하는 10%후반대의 지지를 얻고 있다. 김 의원으로서는 ‘좌불안석’ 입수밖에 없다.

이번 점을 비춰 볼 때 북구 을 선거구 역시 민주통합당 내 공천 결과에 따라 급배지의 향배가 가려질 전망이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현재 김대중 대통령에 퇴임한 이후, 그리고 서거 때까지 임종을 지켜낸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재균

윤민호

임내현

최경환

특히 지역 현안 중심으로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 자문단으로 구성해 북구와 광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주력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내현 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 중앙당 법률 위원장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에도 불구하고 소탈함과 높은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률 위원장을 맡아 민주통합당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사건을 맡아 해결하는 등 당내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처음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에서 지역 여론조사 결과 10%후반대의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당내 공천과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약하는 등 서민층을 대변하는 활동으로 지역에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있는 통합진보당 윤민호(41) 광주시장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진보 정치의 꿈과 희망을 이제 국회에서 현실로 만들겠다’는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news.com

이용섭 독주 속 통합진보당 두명 도전

장연주·황차는 경선 통해 진보정치 기반 마련

‘광산 을’ 선거구는 한 마디로 적막하다.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처럼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난립하지도 않는 곳이다. 이용섭(60)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의 입지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곳 선거구에서 유별나게 입지자가 적은 이유로는 지난 총선에서 광산이 분구되면서 역량 있는 인물들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자리 잡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딘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국제청장을 역임하는 등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 의원은 관료 시절 쌓았던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택과 복지, 세금 문제 등 민주당의 대표적 중산서민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 보편적 복지 기틀을 위한 위원장으로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의 틀과 재원대책을 마련,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논란을 잠식시켰고,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마침내 지난해 마지막 날 ‘부자증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 대변인을 지냈던 이 의원은 최근에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10·26 재보궐 선거 승리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이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하계U대회 국제 수영장 부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결국 원안을 지켜내기도 했다.

이 같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20

여 차례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됐으며, 18대 국회의원 중 4년 연속 경실련, 국감NGO 모니터단 양 기관 모두에서 우수 국감으로 선정된 ‘유일’한 의원이자, 여기에 최근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의 정책위의장까지 맡게 되면서 그에 입지는 더욱 탄탄해 보인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런 점을 오히려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눈치다. 그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조건공산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에 맞서 통합진보당 장연주(43) 예비후보가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도전장을 냈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인 전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정책위원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현재 통합진보당 중앙위원과 참여자치 21 예산위원 등을 맡고 있는 황차는(45)씨가 출마를 선언해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통합당 내 경선이 없을 것으로 자명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내에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17.8%의 득표율을 올려 낙마치 않음을 과시했다.

황차는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광산 을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 내 경선이 이뤄질 것이다”며 “진보정당의 양적, 질적인 성장에 힘 아끼지 않는 경선을 통해 진보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통합진보당 장연주 예비후보와의 경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news.com



이용섭

장연주

영광·함평·장성군

전국 유일 양강 구도... '용호상박'

이낙연-이석형 고향 세싸움서 조직전으로

한마디로 용호상박(龍虎相搏)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1:1대결 구도인 영광·함평·장성 지역구는 3선인 이낙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3선 지자재장을 지낸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맞붙었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이들간의 대결을 '미리보는 전남도지사 선거'로 보면서 도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당초 이들의 대결은 영광과 함평 등 각자의 고향을 지지기반으로 한 표싸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후보간 지역기반 조직대결보다는 각 지역별 조직전으로 흐르고 있어 중립지역으로 분류됐던 장성까지 지지세가 양분돼 어느 진영의 우세를 판단하기 힘들다.

먼저 이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3개 지역 모두 당 소속 군수를 당선시키며 조직재정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중앙당 사무총장 등을 거치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진 이 의원은 현역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김효석·유선호 등 지역에서 성장한 중진의원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고 있는데다 4선에 대한 불만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치적인 기반이 다져져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

책제안을 내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 물갈이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반성하지만 각종 의정활동과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는 이 전 군수는 3선을 지내면서 전국적인 인물로 조명받고 있는 만큼 민통당의 새 지도부의 간택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이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과 전남도지사 여론조사 대결에서 10%이상 차이를 낸 바 있어 공역 조직선거에 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군수취임 후 강연 등을 통해 보여준 혁신의 이미지와 역발상을 통한 창조 등 그만의 철학과 특유의 카리스마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 무기로 꼽힌다.

반면 이 전 군수의 최대 치적인 함평나비엑스포 공과를 둔 논란과 공세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며 "창조와 혁신, 지역발전의 성공 경험과 능력을 발판으로 영광·장성·함평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광대 철학과 강사를 지낸 김동주 북경대학 생태상 농업연구소 학술회의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간판을 달고 출마표를 던졌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news.com



이낙연

이석형

담양·곡성·구례군

지역기반 대결...담양출신 승자는 누가될까

이개호-고현석-국창근 등 사실상 3강전

전남 12개 총선 선거구 가운데 가장 먼저 현직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담양·곡성·구례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입자들이 출마표를 던졌다.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고현석 전 곡성군수, 국창근 전 국회의원, 김재두 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이 바로 그들이다.

최근 선거구 확정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출신 지역별로 우위를 점하려는 각 후보들의 세 싸움과 손익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이개호 전 부지사와 국창근 전 의원이 3개 지역 전체 인구의 47% 가량을 점하는 담양 출신이며 고현석 전 군수는 곡성, 김재두 전 부대변인의 고향은 구례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노계가 전면에서 나서 새로운 경선방식 논의이후 이들의 접전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 당내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창근 전 의원의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고시(24회) 합격 후 광양·목포·여수 부시장과 행정부 기업협력지원관,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낸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잡사는 구례·곡성·담양'을 기치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 발전을 이끌었던 공직 경험과 중앙 무대의 폭넓은 인맥이 강점이며, 3개 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인지도와 세 확산에 치중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시장과 경로당을 비롯, 민생투어를 하며 노년층을 중심으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소



고현석

국창근

이개호

김재두

값 안정 등 농촌 대책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단지 등 산단조성, 우량 기업들을 유치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고현석 전 군수는 곡성·구례의 지역기반이 강점이다. 부인인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의 지원도 큰 힘이다. 뒷발인 곡성 외에 구례 민심을 얻는데 힘을 쏟고 있다.

고 전 군수는 "곡성·구례를 기반으로 당내 경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장수문화 산업 벨트로 특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감소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정치경력을 바탕으로 담양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국창근 전 의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고삐를 죄고 있다.

그는 "전남에서 누구보다 오랜 정당생활을 해온 만큼 당연히 당 공천이 최우선이다"며 "당내 경선에 모든 걸겠다"고 밝혔다.

김재두 전 부대변인은 20년 동안 중앙정치에서 배운 것들을 지역발전을 위해 쓰겠다며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민심을 중앙정치에 제대로 대변하고 관철시키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에서는 김문일 전남도당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news.com

다자간 대결...민통당 경선 혼전 예고

현역 불출마로 새국면...본선도 예측불허

강흥·강진·영암 선거구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현직의원과 전 단체장간의 대결로 압축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대표로 한명숙 전 총리가 선출되며 이어 유선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19일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도내 최대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황주홍 전 강진군수, 국영애 전 전남도의원, 김명전 전 EBS 부사장, 유인학 전 국회의원, 김영근 전 국회의원, 김성일 재경 영암향우회 자원위원, 김태형 전 전남도청 공무원 등이 출마표를 던졌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과 함께 올 총선 유력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황주홍 전 군수는 무소속으로 3선에 오를 만큼 탄탄한 지역 기반과 높은 인지도로 타 후보들보다 한두발 앞서나가고 있다.

김명전 전 EBS 부사장은 참신한 정치신인으로 부각되며 강력한 다크호스로 꼽힌다.

고향 강흥에서 바람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경선까지 확실하게 밀어주는 정흥 지역민들의 성원이 어느때보다 크다는 후문이다.

오랜 기간 강흥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김인규 전 군수의 지지가 확실한 벼랑목이다.

국영애 전 전남도의원은 광주전남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

여성공천 15% 의무화 등 민주통합당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이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영애

김명전

김성일

김영근



김태형

유인학

황주홍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에 탁월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고, 한명숙 대표와 오랜 친분을 맺어오는 등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붙고 있는 혁신·쇄신 바람도 국 전 의원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인학 전 의원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는 평이다.

13·14대 국회의원과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2012 여수 세계종교평화회의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발품을 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암과 장흥 등 2개 지자체 단체장과 각 후보간의 정치적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통당 경선 이후 본선 역시 예측불허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news.com

박상천 의원 불출마 여부 최대 관심사

김승남-장성민-김철근 등 분위기 상승 추격

전남 고흥·보성 국회의원 선거는 박상천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설령 박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하더라도 이미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간의 전력도 비슷한데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입지자들이 몰려든 만큼 어떤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의원의 최종 결정이 출마 쪽으로 결정되면 현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여론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반해 박 의원이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비례대표 등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후보들 간 합종연횡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고흥·보성 선거구는 박 의원을 비롯 장성민 전 국회의원과 김승남 광주테크노파크 실장, 김철근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5선 관록을 자랑하는 박 의원은 18대 총선 이후 다소 의정활동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차기 유력 국회의장을 비롯 민주당 간판 스타였다는 점은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대륙이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19일 현역의원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 박 의원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경선을 비롯해 본선까지 선거전을 복잡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입지자들 가운데 최근 인지도가 높아진 인사는 김승남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장이다.

김 실장은 출마선언 이후 고흥과 보성 등을 오가며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하며 밀바다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승남

김철근

박상천

장성민

그는 특히 지역 유권자들을 꾸준히 만나며 농업을 비롯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예전 선거 출마자들과는 차별화된 스킴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지도 확산이 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지세 끌어올리기로 연결될 지와 정치 신인으로써의 각종 한계 극복여부가 경선 전까지 큰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교체론'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장 전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이력을 내세우며 '준비된 일꾼'임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박병중 고흥군수와의 불화설 등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지지세 확산은 주춤거리고 있지만 당내 경선은 해볼만하다는 평가다.

김철근 전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오랫동안 이번 선거를 준비해 인지도면에서는 어느 후보에도 밀리지 않는다.

또 중앙정치권에서 전배가 굵은 만큼 어느정도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다만 여러 선거에 얼굴을 내밀었지만 아직 첫 획을 긋지 못했다는 점이 아킬레스가 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news.com

의결번호	2012국선5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아시아미디어문화(광남일보)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00-3 대표이사 김진영
심의대상기사	광남일보 2012년 2월 13일자 3면 「주승용 대세론 굳어지나」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전남 여수시 을)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선거 판도를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주승용 대세론’ 굳어지나

4·11 총선 누가 뛰나 ⑪ 전남 여수시 을

여수시 을 선거구는 한마디로 조용하다. 여수시 갑 선거구에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데 반해 을 지역구는 고작 2명만이 등록을 한 상태다. 그것도 3선 도전에 나선 주승용(59) 현 의원을

제외하면 예비후보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주 의원에 패했던 박종옥(54) 명산개발 이사장 뿐이다.

지난 18대 총선부터 출마가 꾸준히 거론되는 등 무대에 오를 경우 주 의원과 싸움이 불만할 것으로 예측됐던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주 의원의 여의도 재입성이 무난한 판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주 의원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후략)



‘주승용 대세론’ 굳혀지나

〈기나다순〉

여수시 을 선거구는 한마디로 조용하다. 여수시 갑 선거구에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반해 을 지역구는 고작 2명만이 등록을 한 상태다. 그것도 3선 도전에 나선 주승용(59) 현 의원을 제외하면 예비후보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주 의원에 패했던 박종욱(54) 명신개발 이사장뿐이다.

지난 18대 총선부터 출마가 꾸준히 거론되는 등 무대에 오를 경우 주 의원과 싸움이 불만할 것으로 예측됐던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주 의원의 여의도 재입성이 무난한 판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주 의원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오현섭 전 시장의 비리 후폭풍은 주 의원에게는 악재다. 비리로 낙마한 지방의원이 여수시 을 선거구에서만 도의원 3명과 시의원 4명 등 7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의 공천권을 주 의원이 행사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오 전 시장 비리와 관련해 주 의원의 사무

국장이 실행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주 의원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반면 뛰어난 의정활동은 주

의원의 최대 자산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빼어난 의정활동을 했다. 또 국정감사 때마다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2004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왔다.

주 의원은 또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책위 의장 등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으면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및 반값등록금 등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4·5대 전남도의원으로서 시작해 민선 2대 여천군수, 초대 통합여수시장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에 오르는 등 입지전적 경력을 바탕으로 자기 전남지사라는 큰 꿈을 그리는 주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자산이다.

주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중산층까지 복지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표발을 분주히 누리고 있다.

주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중산층까지 복지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최자의 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을 강구해 지속가능한 여



이름	박종욱	주승용
정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이력	명신개발 이사장	국회의원

수의 미래를 활짝 열겠다"면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종욱 후보는 8년만에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여수가 고향인 그는 순천고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16·17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서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주승용 의원에 3만표 가량의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박 예비후보가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해양과 관련한 전문성이 다.

해양대학교를 나온 그는 해양을 주제로 한 문화·관광·산업·

연구기관 등 신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교육기관을 유치해 여수를 남해안 벨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당선되면 해양을 주제로 한 여수엑스포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여수를 해양문화 관광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참신함과 개혁 마인드도 그가 내세우는 무기다.

그는 "여수시는 전국적으로 비리도시 오명을 쓰고 있으며 시민에게 큰 실망을 준 당사자들은 정적 자신들이 회색양인척하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비리가 난무했던 여수지역의 정치개혁을 이끌어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박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민주당당내 공천권 경쟁에 뛰어들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주 의원의 대세론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주 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또 주 의원의 아성에 맞설 '제3의 인물'의 등장이 여부도 앞으로 지켜볼 만한 관심거리다.

홍성장 기자 hong@

내일(14일)저는 전남 순천시 입니다

의결번호	2012국선5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매일신문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대표이사 이창영
심의대상기사	매일신문 2012년 2월 13일자 1면 「부산발 '노무현 바람' 북상할까」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산경남·대구경북)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선거 판도를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부산발 '노무현 바람' 북상할까

문재인·문성근·김경수 '약진'
부산경남 새누리 熱약화 뚜렷
대구경북 총선구도 변화 관심

새누리당 텃밭으로 분류돼 오던 영남권 끝자락에서 민주통합당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낙동강벨트'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한 이른바 '문·성·수' 바람이다. 부산 사상구의 문 이사장, 북강서울의 문성근 최

고위원, 경남 김해율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노무현 향수'를 자극하면서 낙동강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경남은 이번 4·11총선에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됐다.

서울의 한 언론사가 7~10일 선거구별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이사장은 42.3% 지지로 주일대사를 지낸 새누리당 권철현 전 의원(34.7%)을 앞섰다. 문성근 최고위원(41.9%)도 친박근혜계 중진인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32.5%)을 9.4%p 앞섰고, 김경수 본부장(40.9%)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34.0%)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후략)

부산발 ‘노무현 바람’ 북상할까

문재인·문성근·김경수 ‘약진’
부산경남 새누리 勢약화 뚜렷
대구경북 총선구도 변화 관심

새누리당 텃밭으로 분류돼 오던 영남권 끝자락에서 민주통합당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낙동강벨트’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한 이른바 ‘문·성·수’ 바람이다. 부산 사상구의 문 이사장, 북강서울의 문성근 최고위원, 경남 김해울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노무현 향수’를 자극하면서 낙동강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경남은 이번 4·11총선에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됐다.

서울의 한 언론사가 7~10일 선거구별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이사장은 42.3%의 지지로 주일대사를 지낸 새누리당 권철현 전 의원(34.7%)을 앞섰다. 문성근 최고위원(41.9%)도 천박근혜계 중진인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32.5%)을 9.4%p 앞섰고, 김경수 본부장(40.9%)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34.0%)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부산·경남 지역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정길 후보가 45%를 득표했고 김두관 무소속 후보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새누리당의 세 약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문재인 이사장과 김두관 지사에 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 등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편으로 야권 통합 바람이 일면서 이 지역의 정치지형이 크게 바뀌어 버렸다.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면서 11일 마감된 민주통합당의 공천신청 후보자 수에서도 부산경남지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전국 평균인 2.91대 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부산(18석)과 경남(17석)은 각각 1.5대 1, 1.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적당한 선에서’ 후보자 간 경쟁이 이뤄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은 이번에도 여전히 야권의 불모지임을 입증했다. 민주통합당 공천신청 마감 결과 대구경북은 둘 다 ‘미달’ 사태를 빚었다. 전국 최하위 경쟁률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오직 한나라당 국회의원만 뽑은 탓에 정치적 고립 상황에 처했던 지역의 정치 지형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온통 새누리당 공천에만 쏠려 있다. 야권은 아직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렇다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대구경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돼 차별을 받았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13일 총선을 앞둔 대구경북의 정치 상황에 대해 “대구경북이 전국적으로 ‘정치적 섬’과 같은 현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김부겸 의원의 대구 수성갑 출마가 지역 총선 구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광주에서 선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부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지역에 전혀 변화 기미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대구와 경북의 9개 선거구에서 공천신청자가 나왔다. 복수가 신청한 곳도 두 곳이다. 연말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권의 분석도 민주통합당의 기를 살려주는 요소다. 새누리당의 싹쓸이가 이번에도 대구경북에서 재현될 것이냐에 지역 유권자는 물론 국민들도 주목하고 있다.

○관계기사 2·4·5면

서삼현기자 subo801@msnet.co.kr

의결번호	2012국선55(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대구연합일보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2-3 대표이사 전 경 도
심의대상기사	대구연합일보 2012년 2월 16일자 3면 「“한번만 더 기회달라” 나홀로 선거운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북 경주시)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함과 더불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번만 더 기회달라” 나홀로 선거운동

새누리 경주 정종복 예비후보

제19대 총선 경주지역 출마자에 대한 모 일간지신문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고있는 정종복(사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오는 17일 경주시 서부동 경주 법원 옆에 소재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자만하지 않고 진솔한 마음으로 경주시민과 경주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며 경주시민들에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종복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오직! 시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빠져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나홀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정종복의 시민행복캠프 개소식 및 시민과 대화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될 이번 행사는 후보자가 직접 하루 종일 시민들과 경주의 미래와 희망에 대해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오후 2시 조촐하게 개소식을 갖는다고 했다.

“한번만 더 기회달라” 나홀로 선거운동

□ 새누리 경주 정종복 예비후보

제19대총선 경주지역 출마자에 대한 모일간지신문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고있는 정종복(사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오는 17일 경주시 서부동 경주 법원 옆에 소재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자만 하지않고 진솔한 마음으로 경주시민과 경주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경주시민들에게 호소 드린다고 했다.

정종복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오직! 시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빠져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



하기 위해 ‘나 홀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정종복의 시민행복캠프 개

소식 및 시민과 대화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될 이번 행사는 후보자가 직접 하루 종일 시민들과 경주의 미래와 희망에 대해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오후 2시 조촐하게 개소식을 갖는다고 했다.

이원삼 기자 lws3300@hanmail.net

의결번호	2012국선56(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공주신문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공주신문빌딩 2층 대표이사 진충현
심의대상기사	공주신문 2012년 2월 16일자 11면 「해법을 찾아 현장속으로 - 통합진보당 한준혜 후보」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남 공주시 연기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이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언론사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계속 후보자가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내지 않는 저술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기고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준혜 후보 논평

농민인구 300만명 붕괴 농업 해체를 막아야 한다.

이명박정권의 친외세정책은 한미 FTA가 대표적이다. 한미 FTA의 비준으로 특히 농업이 파괴되고 해체 직전에 이르러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는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FTA로 시장 개방에 의한 피해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주문하며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

만 이것이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미 농촌은 2011년 농가인구 300만명선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2001년 400만명선이 붕괴된 이후 10년 만에 100만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농촌 해체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FTA를 강요하는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의 결과물이며 이명박정권의 살농정책으로 지역 농업이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준혜 후보 논평



농민인구 300만명 붕괴 농업해체를 막아야 한다.

이명박정권의 친외세 정책은 한미

FTA가 대표적이다. 한미FTA의 비준으로 특히 농업이 파괴되고 해체직전에 이르러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는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FTA로 시장개방에 의한 피해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주문하며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다.

이미 농촌은 2011년 농가인구 300만명선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2001년 400만 명선이 붕괴된 이후 10년만에 100만명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농촌해체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FTA를 강요하는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의 결과물이며 이명박정권의 살농정책으로 지역농업이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한미 FTA가 발효이후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원, 연평균 815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한미 FTA로 농업이 파괴되고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가인구의 해체는 거의 재앙 수준이다.

문제는 농업의 붕괴와 해체가 농민들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데 있다. 농업의 붕괴는 농촌과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진다. 비록 농업은 갈수록 비중이 떨어져 국내총생산의 2.6%, 취업인구의 8%에 지나지 않지만, 시군으로 구성된 지역은 여전히 농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산업이며 기반이기 때문에 농업이 붕괴하면 지역경제의 근간

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역농민과 농업의 해체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넘어 파산을 의미한다. 이명박정권의 한미 FTA로 대변되는 친외세경제정책은 지역농민과 농업의 해체를 가속화시켰고,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과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다. 서민경제회생과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탄과 서민경제물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은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깨닫고 정치적으로 단결해야 한다.

의 결 번 호	2012국선6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한국일보미디어그룹(주간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43-1 흥국빌딩 2층 대표이사 이 진 희
심의대상기사	주간한국 2012년 2월 27일자(2418호) 54~55면 「그가 못다 이룬 꿈… 내가 나서 '2012년 점령하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고문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울특별시 도봉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출마 포부 등을 여러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그가 못다 이룬 꿈…내가 나서 '2012년 점령하겠다'

민주통합당 전략공천 1호
故 김근태 부인 인재근

그동안 지역구 관리 앞장
'김근태의 바깥사람'
수배중이던 1977년 지인 소개로
서로 만나 부부보다는 '동지'

“앞으로 그의 뜻, 그의 정신을 이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족 통일 정기 이어가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출마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작고한 남편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인재근 한반도재단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인 이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출마 소식을 알렸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 김근태 의장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며 “그렇지만 그가 남긴 유언 ‘2012년을 점령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그의 뜻, 그의 정신을 이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족 통일을 앞당기는데 앞장서려고 한다”며 19대 총선 도봉갑에 출마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전략공천 1호로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에 김 고문의 부인 인재근 후보를 선정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고 김근태 의장님의 부인이자 인권운동가인 인재근 여사를 전략공천 1호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인 여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정신을 이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주인공”이라며 인 이사장의 출마를 환영했다. (후략)

그가 못다 이룬 꿈... 내가 나서

민주통합당 전략공천 1호
故 김근태 부인 **인재군**



민주통합당 전략공천 1호인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이인영 최고위원과 포옹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구 관리 앞장
'김근태의 바깥사람'

수배중이던 1977년
지인 소개로 서로 만나
부부보다는 '동지'

"앞으로 그의 뜻, 그의 정신을 이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족 통일을 정가 이어가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출마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작고한 남편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인재군 한반도재단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인 이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소식을 알렸다. 인 후보는 "이 자리에 김근태 의장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며 "그렇지만 그가 남긴 유언 '2012년을 정령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

로 그의 뜻, 그의 정신을 이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족 통일을 앞당기는데 앞장서려고 한다"며 "19대 총선 도봉갑에 출마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전략공천 1호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에 김 고문의 부인 인재군 후보를 선정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고 김근태 의장님의 부인이자 인권운동가인 인재군 여사를 전략공천 1호로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 여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정신을 이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주인공"이라며 인 이사장의 출마를 환영했다.

"부인이 영향력 크다"

도봉갑은 인 후보의 남편인 고 김근태 의장이 1996년 15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했다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패배해 남겨졌던 지역구다. 인 후보는 장관, 당 대표 등 중앙정치에 나서며 바쁜 일정을 보냈던 김근태 대신 도봉갑의 민심을 잘 관리해왔다는 평을 듣는다. 지역구 내에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김근태보다 부인(인재군 후보)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평판이 좋다.

2008년 총선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신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 분위기와 뉴타운 추진 공약 등에 얽고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도봉갑 자체가 워낙에 야당 성향이 강한 데다 작고한 남편 대신 나오는 인 후보에 대한 동경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내에서 도봉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 고문이 병상에 누워 있으며 앞날이 불투명할 때도 "김근태의 지역구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될 정도다. 지역의 민심, 민주통합당 내의 인정 등 모든 면이 '도봉갑에서 남편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인 후보의 출마의지를 북돋고 있다.

대학때부터 민주화 운동

1953년 인천 강화도에서 태어난 인재군 후보는 인일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사회학과에 들어가 민주화운동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인 후보는 이화여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졸업 후 노동운동을 위해 부평에 위치한 분재공장에 취직했다. 이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상담간사,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초대 총무, 민주정 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서민통)의장 등을 역임하며 군사독재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김근태 의장의 고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의신을 통해 진실을 폭로하고 세계인권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인 후보는 1987년 남편과 함께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인 후보는 이후에도 사단법인 사랑의친구들 운영위원장,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이사,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고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고문, 한반도재단 이사장 등 수많은 사회현장에서 왕성하게 대외활동을 해왔다.

인 후보를 부르는 별칭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김근태의 바깥사람'이다. 1990년 '윤석영 이병 암살선언 사건' 관

주간한국

발행 한국일보미디어그룹
발행장 서울
편집·인쇄인 이진희
편집장 박종진
광고국장 김의성
주소 (01000-240)
서울 중구 동대문로 43-1 동국빌딩 2층
대표전화 (02)7724-2030
팩스 (02)7724-2575
지면인터넷주소 http://weekly.hankooki.com
연세 미디어프렌즈 (03)1744-2082
광고문의 (02)7724-2792
광고구독 문의 (02)7724-2915
인터넷 신청 www.hankooki.com/매일/구독문의
1부 1500원
창간 1964. 9. 27 | 등록번호 다-76호



'2012년 점령하겠다'



민주통합당 순학규 전 대표 당 지도부와 김 김근태 상임고문 부인 인제근씨 등 유족이 지난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를 마석모란공원에 서 김 김근태를 49재를 올리고 있다.

런 집회에서 자신을 '김 근태 의장 안사람'이라고 소개한 임종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의 회장'에게 '김씨에 들어가 있는 사람(김근태 의장)이 안사람이 고 나는 바깥사람 아니냐'라고 말한 이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인 후보를 '밖에서 뛰는 김 근태' 혹은 '김근태의 바깥사람'이라 부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말을 배우고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마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일 것이라고 스스로도 말할 정도로 꾸준한 현장을 지켰던 인 후보는 김 의장이 수감 중에 있을 때 정치인의 출마제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 후보는 '내가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면 마음이 고운 남편은 분명 외조를 선택할 것'이라며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방해할 수는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전한다.

첫인상은 서로 반대

인제근 후보가 김근태 의장을 처음 만난 것은 두 사람 모두 수배 중이었던 1977년이었다. 두 사람을 소개해준 것은 장영국 내일신문 사장-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 부부였다. 김 의장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장 사장과 인 후보 과선배인 최 의원의 집이 첫 만남장소였다. 장 사장-최 의원 부부는 인 후보에게 '서울대를 나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좋은 신랑감'이라며 김 의장을 소개했다고 한다.

첫 만남 당시 두 사람이 느낀 서로의 첫인상은 정반대였다. 인 후보가 김 의장을 보며 '시대에 맞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의 인상을 받은 반면 김 의장은 인 후보에게서 '어두운 시대를 불러바릴 듯한 명랑하고 쾌활한 웃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인 후보는 '약간 우울했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적어 내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한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갖게 되는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인 후보와 한두 번 뵈었다고 하고 함께 걷기도 하며 데이트를 즐겼던 김 의장은 관내부에 있는 민물매운탕집에서 프리프즈를 한다. 술을 잘 못하는 김 의장은 매운탕 한 그릇을 시켜놓고는 망설이지도 않고 소주 몇 잔을 연거푸 마신 다음 고평을 감행했다. 김 의장은 평소답지 않은 어법으로 '나랑 결혼하자. 그렇지 않으면 어디든 도끼를 들고 쫓아간다'라고 고백했고 인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다.

인 후보에 따르면 프리프즈 전 두 사람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여의지 않은 상황과 상대에 부담스러웠던 인 후보가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거절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으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장의 코에서 코피가 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마음이 약해진 인 후보는 결국 그날 이별통보를 못 하고 결혼까지 끝내겠다는 후문이다.

도파 중이었던 두 사람은 인 후보의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로 초초한 결혼식을 올렸다. 1978년 결혼식을 시작한 이후 청소와 이부자리 정리는 김 의장이, 설거지와 음식은 인 후보가 맡는 식으로 공동의 삶을 만들어 갔다. 이때에는 첫 아이인 김병준씨를 낳는 기쁨도 누렸다.

10·26 이후 자유의 몸이 된 두 사람은 1980년 4월 2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홍사단에서 다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는 두 사람이 평생의 스승으로 여

기던 변형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짧지만 행복한 부부생활은 1985년 김근태 의장의 구속 이후 잠시 중단됐다. 1983년부터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초대 의장으로 있던 김 의장이 서울대 민주화추진위 배후 조종 혐의로 연행된 것이다. 김 의장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3일 동안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수감됐고 이 일로 인제근 후보는 또다시 긴 투쟁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문 사실 외신에 폭로

고문 뒤 송치된 김 의장은 인 후보에게 자신이 고문당했음을 알리고 전기교문을 받아 감금 탄 뒤꿈치 상처 따지도 보여줬다. 인 후보는 그날 바로 당시 민주화 인사들이 많이 모이던 목요기도회에 참석, 고문사실을 폭로했고 민청련 중앙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만들어 이틀날부터 기독교회관 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언론 통제가 심한 시절이었던 탓에 외신을 이용해 국내 언론들이 그것을 받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한다.

인 후보는 구속자 가족들을 모아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를 창립하기도 했다. 민가협은 당시 수배반면 자식들이 사라져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머니들의 결집소로 기능, 이후 민주화운동의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제근 후보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도 있다. 1988년 재만 당시 김 의장을 고문했던 경찰들 중 하나인 김희연 실장이 재판 이후 김 의장에게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당시 당황하던 김 의장 대신 인 후



지난 1988년 11월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있을 고문사건 관련 대법심문을 위해 김근태씨 부인 인제근씨와 함께 심문실로 들어가고 있다.

●부부 정치인 누가 있나

박정수-이범준 박철언-현경자 미국선 클린턴 부부 유명

인제근 한반도재단 이사장이 민주통합당 전략공천 1호로 선정되며 남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며 '부부의 경계진출'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해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배우자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꼽을 수 있다. 파스트레이디의 표본으로 불리는 힐러리 장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정치인으로서 최고

의 주가를 구가하고 있다. 국내에도 부부 정치인들이 있다. 국내 1호 부부 국회의원과 김 박정수 전 외교교통부장

관(제10, 11, 13, 14, 15대 국회의원)과 이범준 전 성신여대 교수(제9대 국회의원) 부부,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장관(제13, 14, 15대 국회의원)-현경자 전 의원(제14대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부부가 동시에 국회의원이 된 사례도 있다. 최규성 의원(제17, 18대 국회의원)-이경숙 전 의원(제17대 국회의원)이 그들이다. 당시 최 의원은 경선을 거쳐 지역구 후보로 나섰고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안정권을 배경받아 동시 당선되는 기쁨을 세웠다. 재야운동과 여성운동을 함께 해 오면서 부부 명들을 실천해온 '동지' 관계라는 점에서 김근태 의장-인제근 후보 와도 비슷하다.

김현준기자

보가 김 실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다는 후문이다. 수감 중이던 김 의장이 '남편 노릇을 못하는 형편이니 고문실을 겨우로 산아도 좋소'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때 '웃기고 있네'라고 답장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정계에서는 대한 성직의 인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신지호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민심에서 크게 앞선다는 평이다. 오랫동안 김 의장과 함께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에 대한 꿈을 꾸왔다는 인 후보가 19대 총선에서 두 사람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준기자 realpeace@hk.co.kr

의결번호	2012국선79(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일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2-1 대표이사 임창열
심의대상기사	경기일보 2012년 3월 5일자 23면 「우호태 무소속 후보가」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 칼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화성시 을)와 관련하여, 선거 판도를 분석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부 필진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우호태 무소속 후보가

(전략) 4·11 총선에 뛰어든 후보 중 눈에 띄는 무소속이 몇 있다. 우호태(전 화성시장), 박주원(전 안산시장) 후보가 그렇다. 여기에 박윤국 전 포천시장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있다. 4년 또는 8년간 지역을 대표하던 시장 출신들이다. 인지도에 선 이들을 따라올 후보가 없다. 시장 재직 시절의 지역 발전 기여도도 크다. 당연히 강력한 후보군으로 부각돼야 맞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다. 당선 가능성은커녕 ‘왜 총선에 나와서 망신 당하려고 하느냐’는 충고가

많다. ▶우호태 후보의 얘기가 귀에 들어온다. 그는 당선 가능성을 ‘뺨튀기’ 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무소속이 국회의원 된 적 있나요. 맨 땅에 헤딩이죠.” 시장 재직시절 휘말렸던 송사에 대한 얘기도 피하지 않는다. “내 잘못과 흠에 대해 다 말하고 다닙니다. 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늘 그래 왔어요.” 그 흔한 ‘명예 회복’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패자부활에 대해 인색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인거죠. 1등이 아닌 곳도 쳐다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도 싫고 야도 싫은 유권자가 선택할 중간 지대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닳은 듯 다른 무소속 우호태 후보의 출사표다.

지시대

우호태 무소속 후보가

무소속 출신만을 단체장으로 뽑는 지역이 있다. 가평군이다. 95년 6월에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 때부터 쭉 그랬다. 여섯 번의 군수 선거-재선거 포함-에서 98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무소속을 뽑았다. 2년 전 6·2 지방선거 때도 예외가 아니다. 무소속 이진용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가 얻은 표는 57%. 정당 후보였던 차점자를 무려 27.8%p나 앞섰다. 수원시도 한때 무소속 시장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 95년과 98년 선거에서 내리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98년에는 무소속 시장을 영입하려고 공들이던 제1야당(당시 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총선은 지방선거와 다르다. 가평과 수원 모두 무소속이 이긴 역사가 없다. 가평에서는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이 내리 세 번 당선됐다. 12년째 새누리당(舊 한나라당)의 깃발을 굳게 꽂아 놓고 있다. 무소속의 신화라던 심재덕 수원시장도 총선만은 당적에 의존해 뛰었다. 열린우리당의 노란색 점퍼를 입고 17대 국회의원이 됐다. 경기도에서 무소속은 총선 판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18대 총선에서도 용인 수지에 한선교 의원의 유일했다. 하지만 그를 무소속으로 인식하고 찍은 표는 거의 없다. 다들



억울하게 밀려난 '친박黨'으로 봤다. ▶ 4·11 총선에 뛰어든 후보 중 눈에 띄는 무소속이 몇 있다. 우호태(전 화성시장), 박주원(전 안산시장) 후보가 그렇다. 여기에 박윤국 전 포천시장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있다. 4년 또는 8년간 지역을 대표하던 시장 출신들이다. 인지도에 선 이들을 따라올 후보가 없다. 시장 재직시절의 지역발전 기여도도 크다. 당연히 강력한 후보군으로 부각돼야 맞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다. 당선 가능성은 커녕 '왜 총선에 나와서 망신 당하려고 하느냐'는 충고가 많다. ▶우호태 후보의 얘기가 귀에 들어온다. 그는 당선가능성을 '뽕튀기'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무소속이 국회의원 된 적 있나요. 맨땅의 헤딩이죠." 시장 재직시절 휘말렸던 송사에 대한 얘기도 피하지 않는다. "내 잘못과 흠에 대해 다 말하고 다닙니다. 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늘 그래 왔어요." 그 흔한 '명예회복'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패자부활에 대해 인식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인거죠. 1등이 아닌 곳도 쳐다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도 싫고 야도 싫은 유권자가 선택할 중간지대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닳은 듯 다른 무소속 우호태 후보의 출사표다. 김종구 논설실장

의결번호	2012국선82(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하나로문화무등일보(무등일보)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 대표이사 전 용 준
심의대상기사	무등일보 2012년 3월 6일자 4면 「광주·전남 판세 '안갯속」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전남 순천시·곡성군 등)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 특정 정당의 경선 현황을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광주·전남 판세 '안갯속'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경선구도가 확정됐다. 일부 탈락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지만,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란 등식이 어느정도 성립할 것으로 보여 경선 판세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략)

지역 언론 등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와 인지

도 면에서 노관규 전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략)

지역 언론 등의 여론조사에서 장성민 후보가 김승남 후보를 앞선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선거인단의 '포스트 박상천'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다. (중략)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 황주홍 전 군수가 국령애 전 도의원을 앞선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여성후보 가산점 20%의 변수가 주목된다. (후략)

광주·전남 판세 ‘안갯속’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경선구도가 확정됐다. 일부 탈락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지만,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란 등식이 어느 정도 성립할 것으로 보여 경선 판세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경을 열어보기 전에는 결과를 숙단하기 어렵다. 선거인단을 투표장으로 누가 많이 참여(동원)시키느냐와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와 탈락한 후보 간의 연대 여부, 파괴력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광주·전남 최종 후보는 다음주 중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거쳐 확정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과 신진 정치인이 경합하는 등 일부 지역구의 대결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탈락 후보들 무소속 출마·경선 후보 연대 변수 선거인단 투표 과열 양상 불법·혼탁 변질 우려

광주

서구율은 김영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해 서대석(50)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상갑(44) 변호사가 대결한다. 서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오래전부터 밀바닥을 닦아 왔다. 민변 출신인 이상갑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협상단 대표 등을 하면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영진 의원의 조직과 선거인단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구는 장병완(59) 의원에 맞서 김영진(48)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도전하는 양상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 의원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역예산 확보 등의 공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영진 전 청와대 행정관은 폭넓은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북구갑도 강기정(47) 의원에 맞서 이형석(50) 전 청와대 비서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에서 오랜 친분을 쌓아온 강기정 의원과 이형석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 경선을 계기

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김정진 변호사의 선택도 주목된다.

북구을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3인 경선지역이어서 쉽게 승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김재균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가운데 임내현(59) 전 광주고검장, 최경주(51) 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최경환(52) 전 청와대 비서관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균 의원이 모집한 선거인단 표심의 향배도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공산갑은 재선인 김동철(66) 의원과 전갑갑(65) 전 의원이 리턴매치를 벌인다. 김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이, 전 의원은 막강한 조직력이 평가를 받고 있어 광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다.

전남

여수갑은 김성곤(59) 의원과 김정유(49) 여수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 간 양자 대결이다. 3선의 김 의원은 중랑갑 있는 정치인으로 지역발전 등에 이바지해온 점을 강조하고 있고 김정유 후보는 신진정치인으로써 쇄신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순천은 김영득(62)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와 노관규(51) 전 순천시장, 이광수(51) 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이 경선 무대에 오른다. 지역 언론 등의 여론조사 결과, 지도와 안순은 현역에서 노관규 전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선 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한만 대결이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나주 화순은 최인기 의원이 탈락해 박선영(49) 전 청와대 전리비서관과 배기운(61) 전 의원이 공천티켓을 놓고 경합한다.

최인기 의원 지지자들의 행보도 경선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고흥 보성은 5선인 박상천 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가운데 박 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김승남(45) 전 전남대총학생회장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48) 전 의원 간 양자대결이다. 지역 언론 등의 여론조사에서 장성민 후보가 김승남 후보를 앞서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선거인단의 ‘포스트 박상천’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다. 장흥·강진·영암은 성 대결로 관심을 끈다. 국령애(51) 전 전남도위원과 황주홍(60) 전 강진군수가 대결한다.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 황주홍 전 군수가 국령애 전 도위원을 앞서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여성후보가산선 20%의 변수가 주목된다. 해남·완도·진도는 원도 출신 김영록(67) 의원과 해남 출신 박광운(64) 전 MBC보도국장 간 양자대결이다. 완도와 비교하면 해남 유권자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김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 파괴력이 관심사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윤재갑 후보가 박광운 후보 지지를 표명해 박 후보가 일단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무안·신안은 서상갑(52) 전 무안군수와 이운석(51) 의원 간 대결로, 전남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3선을 역임한 서 군수와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이 의원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개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숙단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이낙연(59) 의원과 이석형(53) 전 함평군수, 이계호(52)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3명이 경선에 나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석형 전 군수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계호 전 부지사는 담양·곡성·구례 선거구가 공동투해되면서 두 사람의 대결구도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류성훈·선정태기자

의결번호	2012국선8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전남일보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0-5 대표이사 박경업
심의대상기사	전남일보 2012년 3월 6일자 3면 「13곳 모두 만만찮은 승부... 현역들 살얼음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광주광역시 서구 을)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 특정 정당의 경선 현황을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3곳 모두 만만찮은 승부... 현역들 살얼음판

컷오프 통과 후보·탈락한 후보 연대 등 합종연횡 이뤄져 선거판도 크게 요동칠 듯

5일 민주통합당의 4·11총선 후보자 컷오프(압축 배수) 대상자 발표로 광주·전남 선거구 경선 구도가 확정됐다. 19개 선거구 가운데 단수후보 4곳(광주 광산을·목포·여수을·광양·구례)과 무공천(광주 동구), 보류 선거구(광주 서갑)를 제외한 13곳의 경선에 참여할 후보가 2~3명으로 압축돼 경선전 대진표가 작성됐다.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후보와 탈락한 예비후보들 간의 학연·지연 등 인맥과 정치적 노선 등을 이유로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선거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살얼음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 **광주 서구을** 김영진 현역 의원이 컷오프에서 탈락하고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상갑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가 경선을 통과했다. 정치 신인인 서 전 비서관과 이 변호사가 한 장의 공천장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예비후보 5명이 모집한 경선 선거인단은 대략 1만5000명선으로 7000표 이상을 얻으면 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진 의원과 김이강·김성숙 예비후보의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선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강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해 3명이 경선을 벌이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

• **광주 남구** 박시중·이운정·이철원 예비후보 3명이 컷오프에서 탈락되면서 현역인 장병완 의원과 '정치신인' 김명진 예비후보의 양자구도로 경선이 진행된다. 공천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3명의 지지율이 극히 미미해 두 후보의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네거티브 전략에 맞선 '방어 전략'을 구사하

• **광주 복구를** 김재균 현역의원이 컷오프에서
어졌다.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최경주 전 노
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호남권역본부장, 최경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3명이 경선을 치르

게 됐다. 컷오프 통과자가 3명이 된 것은 공심위 평가에서 2, 3위의 점수차가 크지 않은데다 현역이 탈락해 1:2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들 3명의 지지도가 1~2% 차이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김재균 의원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밝혀 지지를 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후략)

13곳 모두 만만찮은 승부... 현역들 살얼음판

광주지역 경선 박빙 선거구 ▶4면

의결번호	2012국선84(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43 대표이사 김 인 영
심의대상기사	서울경제 2012년 3월 9일자 8면 「경제부총리 VS 충북지사 출신 ‘충북 정치1번지’ 거물급 대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선거 판도를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제부총리 VS 충북지사 출신 ‘충북 정치1번지’ 거물급 대결

洪 “큰 인물” 호소에 鄭 “새 인물”로 승부
선진당 후보도 변수

“박빙이유” “다 흘렀하잖아유”

이번 총선의 최고 격전지 중 한 곳으로 충북의 ‘정치 1번지’라는 청주 상당의 민심을 읽는 일은 이렇게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충청권 특유의 유권자 성향에 부딪히기 일쑤다. 청주를 동쪽의 구도심 상당구와 서쪽의 신시가지 흥덕구로 나누며 도도히 흐르는 무심천(無心川)이 떠오를 만큼 현지 표심은 외지인의 열띤 관심에 무덤덤했다.

하지만 정치 생명을 좌우할 대전을 앞두고 여야의 거물급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꽃샘추위를 뚫고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주인공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청주 상당에서만 내리 3선을 하며 국회 부의장까지 오른 홍재형(74) 민주통합당 의원과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정우택(59) 전 충북지사. 정 전 지사도 재선 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해 충북에서는 새누리당의 대표 정치인이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정 전 지사가 홍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부동층이 많아 선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 전 지사도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앞서나가다 막판 야당 바람에 패배의 쓴잔을 마셨기 때문인지 일부 언론이 10%포인트 이상 홍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신발끈을 계속 조이고 있다. (후략)



4·11총선 격전지를 가다

〈8〉 청주 상당



홍재형 민주당의원 의원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열린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해 지지자들과 웃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전 충북지사가 청주 수동 수암골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각 후보

경제부총리 vs 충북지사 출신

(홍재형)

(정우택)

‘충북 정치1번지’ 거물급 대결

“박빙이유” “다 훌륭하잖아유”

이번 총선의 최고 격전지 중 한 곳으로 충북의 ‘정치 1번지’라는 청주 상당의 민심을 읽는 일은 이렇게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충청권 특유의 유권자 성향에 부딪히기 일쑤다. 청주를 동쪽의 구도심 상당구와 서쪽의 신시가지 흥덕구로 나누며 도도히 흐르는 무심천(無心川)이 떠오를 만큼 현지 표심은 외지인의 열띤 관심에 무뎠었다.

하지만 정치 생명을 좌우할 대전을 앞두고 여야의 거물급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꽃샘추위를 뚫고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주인공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청주 상당에서만 내리 3선을 하며 국회 부의장까지 오른 홍재형(74) 민주당의원 의원과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정우택(59) 전 충북지사. 정 전 지사도 재선 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해 충북에서는 새누리당의 대표 정치인이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정 전 지사가 홍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부동층이 많아 선별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 전 지사도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앞서나갔다 막판 야당 바람에 패배의 쓴잔을 마셨기 때문인지 일부 언론이 10% 포인트

洪 “큰 인물” 호소에 鄭 “새 인물”로 승부 선진당 후보도 변수

이상 홍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신발끈을 계속 조이고 있다. 그는 “절로 깨끗한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면서 “홍 후보가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역발전’에 별 도움이 안됐다’는 실망감도 큰 편”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정 전 지사는 매주 수요일 효성병원이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토요일에는 지난해 7월 취득한 택시 면허로 택시 운전하면서 바둑을 살살이 खेल고 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택시 운전을 해 번 소득은 모두 기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택시기사인 최덕식(57)씨는 “도지사·시장·지방의원 모두 민주당 일색이어서 총선에서는 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여론은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신통치 않아 “답답하다”면서도 홍 의원은 “지지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체적으로 삼을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

마다 다니면서 유권자를 만나다 보면 여론조사가 민심을 다 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홍 의원은 17대와 18대 총선 모두 50% 넘는 득표율로 상대 후보를 가법게 제칠 만큼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홍 후보 측의 관계자는 “정 전 지사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예전 지역구도 증평·진천·괴산·음성인 반면 홍 의원은 청주 토박이여서 주민들이 진정성을 달리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의 중심지인 성안로에서 만난 최모(38)씨는 “그동안 꼭 홍 의원을 찍었는데 별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고령의 나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젊은 시절 대관도로 단련된 체력”이라며 “지금 당장 정 전 지사와 필씨름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기업을 토론했다.

홍 의원과 정 전 지사가 옹호상박의 대결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후보는 변수다. 선진당 소속 김종천·김현문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김현문 후보는 18대 총선에서 9.6%의 득표율을 올릴 만큼 인지도가 만만치 않다. 통합진보당도 정지성 후보가 뛰고 있지만 지지율은 크게 미약한 편이다.

/청주=손철기 기자 runiron@sed.co.kr

의결번호	2012국선85(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광주매스컴(광주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1번지 대표이사 서영진
심의대상기사	광주매일신문 2012년 3월 12일자 3면 「민주 경선 대혼전...텃밭 민심도 '요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의 선거 판도를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 경선 대혼전...텃밭 민심도 '요동'

광주·전남 선거구 판세분석

4·11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는 누가 국회의원 배지를 차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과거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다소 유리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마저도 예측이 어렵다. 워낙 쟁쟁한 후보들이 공천 심사에 탈락했고 새로운 얼굴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남 유일의 야권연대 후보가 광주 서구 을에서 결정됐고 새누리당계 후보들의 약진 세도 만만치 않다. 서구 갑은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동구는 아예 민주당 무공천 지역이다. 혼란 속의 광주·전남 지역 판세를 점검해 본다. (중략)

고흥·보성은 전남 선거구 중 가장 젊은 세대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장성민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의 정치 경력을 내세워 농어촌 지역인 지역 표심을 주도하고 있다. (후략)

■ 광주·전남 선거구 판세 점검

민주 경선 대혼전...텃밭 민심도 '요동'

4·11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는 누가 국회의원 뺨지를 차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과거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다소 유리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마저도 예측이 어렵다. 워낙 경쟁한 후보들이 공천심사에 밀려왔고 새로운 얼굴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남 유일의 야권연대 후보가 광주 서구 을에서 결정됐고 새누리당계 후보들의 약진세도 만만치 않다. 서구 갑은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동구는 아예 민주당 무공천 지역이다. 혼란 속의 광주·전남 지역 판세를 점검해 본다.



“깨끗한 정책선거해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여수 종포해양공원 등 전남지역 선거구 10곳에서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정책위주의 총선이 되도록 ‘물린 3·9 대의 행사’를 가졌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

광주의 경우 8개 선거구 가운데 북구 갑·을, 남구, 광산구 갑 등 4개 선거구만 경선을 치르며 지난 10일과 11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 12일 현장투표로 공천후보자가 결정된다. 각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현직 의원이 맞붙은 광산 갑의 경우 김동철 의원과 전갑갑 예비후보 양측 모두 평행한 기 싸움에서 절대 놓이지 않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매번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데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내 박빙의 승부를 펼쳐와 막판까지 표심의 향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다.

남구는 장병만 의원과 김영진 예비후보가 일전을 벌인다. 전체적으로는 장 의원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 예비후보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굴 일러기에 나서 어느 정도 민심을 끌어 모았다는 평이다. 박지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구 민주계의 조직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이번을 연승할 수도 있다.

북구 갑은 김기정 의원에 맞서 이형석 예비후보와 일전도, 김경진 예비후보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이들은 강 의원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새 인물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 역시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어 두강을 열기전까진 절대 알수가 없다.

김재균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북구 을은 혼탁함 그 자체다. 김 의원을 보좌했던 지역 시구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경선에 오른 임내현, 최경주, 최경환 등 3명의 예비후보 측으로 해쳐 모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구 을은 민주당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지난 10일 호남에서 유일하게 야권연대 지역으로 선정된 곳

선 흥행은 포기했으나 무소속간 전투가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남

전통적으로 전남은 대도시인 광주에 비해 황색대중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며 이번 총선도 민주당통합당(이하 민주당) 경선 결과가 본선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처음에는 우세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경선 결과에 불확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로 선외함에

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담양과 영광, 함평 등 각자 출신지역을 등에 업은 재 중립지역인 장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남·완도·진도는 재선을 노리는 김영록 의원과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의 낯설지 않은 정치신인 박광은 후보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 선거구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지역 대결이라는 점이다. 완도 출신의 김 의원이 재선을 노리기

반면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승남 후보는 20~40대의 젊은 층의 지지세를 등에 업은 가운데 오랜 기간 지역 정치권의 수장을 맡아온 박상천 의원 보좌관 경력력을 앞세워 50대 이상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경선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남녀 성대결 속에 ‘황주홍 대 반황주홍’ 구도가 만들어진 장흥·강진·영암 선거구는 최근 ‘역선택’ 논란이 한창이다.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진·유인하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선 경쟁력이 우세한 황 후보를 경선에서 밀어트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국력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이 역선택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황 후보측 반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 후보와 김·유 후보 모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는 나주·화순에서 이미 현실화 됐다. 민주당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인기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소속 현역 의원과 민주당 간판을 등에 켜 후보 간에 격렬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민 기자 moon@kjdaily.com /노병하 기자 hoopno@kjdaily.com

광주 북구갑·을 광산구갑 등 4곳 막판까지 예측불허 전남 지역·세대·남녀간 대결 구도 속 표심 향배 촉각

다. 야권연대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오병은 예비후보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본선인 총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여기에 무소속 정남후 후보가 가세하고 당초 경선을 치르기로 했던 서대식, 이상갑 예비후보의 귀가 거러지면서 서구 을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5선의원인 김영진 의원 역시 아직까지는 원전히 포기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서구 을 지역은 오병은 야권연대 후보 대 이정현 의원 대 무소속 후보의 3·4차 대결이 예상된다.

동구는 무공천 지역으로 일찌감치 민주당이 경선을 점한 곳이다. 경

따라 선거 구도가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순후보가 확정된 목포와 여수 을, 광양·구례를 제외한 민주당 경선이 치러지는 전남지역 8개 선거구 대부분이 격전지로 좁혀지고 있다.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해체로 선거구가 확정된 담양·영광·함평·장성군은 민주당의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중랑강 있는 유력 후보 3명이 결전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이계호 후보와 3선의 현역 의원인 이낙연 후보, 3선의 함평군수 출신인 이석영 후보가 치열한 세싸움을 벌이

위해 그동안 해남과 진도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인구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해남에서는 동향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해남출신인 박광은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무섭게 압박하고 있다.

고흥·보성군은 전남 선거구 중 가장 젊은 세대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장성민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의 정치경력을 내세워 농어촌지역인 지역 표심을 주도하고 있다.

의결번호	2012국선87(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영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2년 3월 9일자 1면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심상정 엮음·양철북」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심상정 엮음·양철북

책 읽는 경향

“부자 되세요.” 2002년 초 광고에서 배우 김정은씨가 외친 뒤 한참 유행하던 인사말이다. 서민들은 그 광고대로 부자를 꿈꿨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는커녕 먹고살기도 힘들다. 자본주의는 서민들을 더욱 더 옥죄는다. 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만들어 쥐어짜고, 거대한 마트를 동네까지 침투시켜 재래시장, 구멍가게까지 망하게 만든다. 다른 건 둘째치고, 재래시장, 구멍가게까지 질식당하는 건 우리 서민 탓이 크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책에서 ‘시골의사’ 박경철씨가 한 말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십니다. 이마트에서 피자를

만들어 파는 바람에 우리 피자집 손님이 반으로 줄어서 살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대기업이 왜 피자를 파느냐고 흥분해서 댓글 달고 그러죠. 그런데 저녁에 아들이 통닭 한 마리 시켜달라고 하면 롯데마트에서 통큰치킨 사와라, 이겁니다.”

먹는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도 대기업 제품이 많다. 고백하자면, 내 휴대전화도 대기업 제품이다. “절대 사면 안된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지키지 못했다. 물건을 안사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게 자식 교육이다. 사회적 딜레마, 남들이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자식도 사교육을 안 시킬 수 없다는 생각, 그 때문에 아이들은 피해해지고 불행해진다. 그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책은 경기 고양에 있는 심상정마을학교에서 박경철, 정태인, 조국, 윤구병씨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 아홉명이 강의한 내용을 묶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책에 나와 있다. 아주 기본적인 답이지만 책을 보면 또다시 ‘아하!’ 하고 무릎을 칠 내용이다.

책 읽는 경향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 심상정 위음·양철복

“부자 되세요.” 2002년 초 광고에서 배우 김정은씨가 외친 뒤 한참 유행하던 인사말이다. 서민들은 그 광고대로 부자를 꿈꿨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는커녕 먹고살기도 힘들다. 자본주의는 서민들을 더욱 더 옥죄다. 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만들어 쥐어짜고, 거대한 마트를 동네까지 침투시켜 재래시장, 구멍가게까지 망하게 만든다. 다른 건 둘째치고, 재래시



장, 구멍가게까지 질식당하는 건 우리 서민 탓이 크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책에서 ‘사골의사’ 박경철씨가 한 말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십니다. 이마트에서 피자를 만들어 파는 바람에 우리 피자집 손님이 반으로 줄어서 살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대기업이 왜 피자를 파느냐고 흥분해서 댓글

달고 그러죠. 그런데 저녁에 아들이 통닭 한 마리 시켜달라고 하면 롯데마트에서 통큰치킨 시와라, 이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도 대기업 제품이 많다. 고백하자면, 내 휴대전화도 대기업 제품이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지키지 못했다. 물건을 안 사는 것보다 더 안되는 게 자식 교육이다. 사회적 딜레마.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자식도 사 교육을 안 시킬 수 없다는 생각. 그 때

문에 아이들은 피폐해지고 불행해진다. 그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책은 경기 고양에 있는 심상정마을학교에서 박경철, 정태인, 조국, 윤구병씨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 아홉명이 강의를 한 내용을 묶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책에 나와 있다. 아주 기본적인 답이지만 책을 보면 또다시 ‘아하!’ 하고 무릎을 칠 내용이다.

안건우 | 월간 작은책 발행인

의결번호	2012국선92(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울산신문사 울산광역시 남주 돌길로 86 삼호빌딩 11층 대표이사 변 양 섭
심의대상기사	울산신문 2012년 3월 16일자 1면 「지역 정치권 총선전략 명암 엇갈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울산광역시 남구 갑 등)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의 선거 판세를 분석·보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역 정치권 총선전략 명암 엇갈려

여-남갑 공천잡음 탈북자·비정규직 정책 등
이슈화로 조기 극복

야-공천·후보 단일화 늦어져 초반 쟁점화
못시키고 주도권 상실

(전략) #후보단일화후 심판론 재점화

이 같은 전략 부재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서 지역 야권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결과를 얻고 말았다.

하지만 지역 야권은 내주 초 지역의 야권단일 후보가 확정되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선후보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깨끗한 경선, 감동이 있는 야권연대를 통해 본 선거전에서 새누리당의 아성을 허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실패한 MB정권의 실정을 부각시켜 정권과 함께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심판론을 재점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비정규직, 청년 문제, 영세상인 보호 등 새누리당과의 차별적인 정책 공약을 통해 선거전을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정치권 총선전략 명암 엿갈려

여·남갑 공천잡음 탈북자·비정규직 정책 등 이슈화로 조기 극복
야·공천·후보 단일화 늦어져 초반 쟁점화 못시키고 주도권 상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4·11 총선 D-26

4·11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여야 정치권의 총선 전략 행보에 명암이 엿갈리고 있다. 남구 갑 선거구 공천불복 파문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복송과 관련한 이슈를 선점해 분위기 전환을 한 여권과는 달리 야권에서는 후보단일화 논의에 빠져 이렇다 할 총선 이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등 각 선거구별 주요 거점지역에서 탈북자 복송지지를 위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는 정갑윤(중구),

이재익(남구 갑), 김기현(남구 을), 안효대(동구), 박대동(북구), 강길부(울주군) 후보 등 새누리당 총선후보들이 모두 참가했다. 이 릴레이 시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롯한 당원·당직자들이 차례로 참여한다.

여론조사서 여권 후보 우위

일부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복풍'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제적으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제기한 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진보 정치권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존 친북, 좌파 정치세력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북한의 비인권실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

하지 않고 있는 진보정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천서민,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과거 선거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진보진영의 공세를 사전에 막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서민정당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 야권은 그동안 후보단일화 논의에 집중하면서 새누리당에 맞설 초반 이슈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권이 박근혜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당정 총선전략의 수정이 필요했지만 정작 당내 공천과 야권단일화 논의가 늦어지면서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또 정갑윤의원의 불출마선언 번

복, 최병국국원의 탈당 등 지역내의 새누리당 '공천잡음'을 선거 쟁점화시키지 못했다.

후보단일화후 심판론 재점화

이같은 전략부재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서 지역 야권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결과를 얻고 말았다.

하지만 지역 야권은 내주초 지역의 야권단일화후보가 확정되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선후보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깨끗한 경선, 감동이 있는 야권연대를 통해 본 선거전에서 새누리당의 아성을 허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실패한 MB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켜 정권과 함께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심판론을 재점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비정규직, 청년문제, 영세상인 보호 등 새누리당과의 차별적인 정책 공약을 통해 선거전을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강정원기자 mikang@

의결번호	2012국선103(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주간홍성(홍성신문)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26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홍성신문 2012년 3월 12일자 9면 「1%만을 위한 한미FTA, 99%의 힘으로 폐기합시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 광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정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만을 위한 한미FTA, 99%의 힘으로 폐기합시다

한미FTA 폐기 홍성군민 1만명 서명운동

1. 1% 부자만을 위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농축산업 몰락, 식량위기, 약값 의료비 폭등, 의료민영화,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증대, 실업을 상승,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불가, 동네 가게 몰락 등 노동자, 농민, 서민 경제를 파탄내는 한미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홍성은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

는 지역이어서 한미FTA에 의한 경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미국에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팔아넘긴 한미FTA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한국 국내법보다 한미FTA 협정이 우선하게 돼 있는 반면, 미국은 미국 법령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ISD(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조항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공공정책을 포기한 주권포기 선언입니다.

3.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는 무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위법적 의회 쿠데타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후략)

한미FTA 폐기 홍성군민 1만명 서명운동

1%만을 위한 한미FTA, 99%의 힘으로 폐기합시다!

1. 1% 부자만을 위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농축산물 물락, 식량위기, 약값 의료비 폭등, 의료민영화,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증대, 실업률 상승,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물가, 동네 가게 물락 등 노동자, 농민, 서민 경제를 파탄내는 한미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홍성은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지역이어서 한미FTA에 의한 경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미국에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팔아넘긴 한미FTA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한국 국내법보다 한미FTA 협정이 우선하게 돼있는 반면, 미국은 미국 법령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ISD(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조항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공공정책을 포기한 주권포기선언입니다.

3.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는 무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위법적 의회 쿠데타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1차 서명 명단)

강대운	강덕구	강성희	강승식	강신원	강용길	강현주	고상구	고희정	곽제귀	구광서	구길회	구본준	구용회	구운회	구자봉	구자선
구재서	구형서	권오득	권혁구	김경수	김경수2	김경숙	김관중	김광식	김광현	김광호	김기창	김기현	김동구	김동원	김동호	김동화
김동희	김민수	김상호	김석현	김선정	김선호	김선호2	김성진	김성진2	김순환	김연동	김영규	김영균	김영남	김영미	김영재	김영호
김오경	김오열	김오환	김용만	김용남	김은애	김은정	김응수	김정미	김정수	김정식	김장희	김종근	김종석	김종섭	김종우	김종진
김주자	김지봉	김진성	김찬배	김창환	김태호	김학비	김해진	김현기	김형전	김해경	김해옥	김환진	김희찬	김만성	김한우	남원근
노순영	문경희	문금진	문기환	문영진	민기숙	민명숙	민성기	민철기	박건수	박금옥	박병규	박병환	박석화	박선미	박영순	박영애
박영오	박용규	박인수	박찬규	박창진	박태순	박현숙	박현화	반재윤	백순미	백의정	백성구	백옥희	백종관	송대석	송영대	송재식
송정옥	서경화	서현철	신관호	심성구	신인섭	안민성	안창우	양동규	양승범	양윤정	양재식	연원순	오원섭	오윤진	오지연	원용성
우현주	유경순	유성환	유요열	유용동	유재중	유정연	유지영	유현미	유희경	윤병덕	윤성호	윤영목	윤해경	윤화영	이경주	이규재
이 기	이기왕	이두원	이명화	이미희	이범영	이벽도	이병국	이보화	이성학	이선원	이선재	이승승	이영준	이용현	이용엽	이은숙
이일희	이재철	이정림	이정환	이정훈	이정훈2	이종우	이종은	이준영	이준범	이준표	이준희	이철호	이춘자	이한분	이현준	이환철
이후영	임재동	임재선	임화영	장경석	장두희	장명국	장영수	장유리	장재홍	장중환	장한나	장현일	장홍순	전기룡	전미석	전병근
전병희	전양순	전용성	전지혜	정규옥	정두모	정민철	정연기	정응현	정인호	정재진	정해안	정효식	조대성	조병욱	조성남	조성미
조성준	조정희	조주호	주경근	주동희	주은애	주정철	주정표	주하늬	지 해	최문영	최삼호	최영세	최은미	최준미	최진홍	한경희
한미지	한민진	한상림	한인숙	한지연	한창진	한재근	한준순	허정숙	홍선영	황선철	정성건 (총 250명)					

1. 본부에 서명연락을 주시면 신문광고에 여러분의 이름이 게재됩니다. 2. 서명을 하시면 신문 광고를 위해 신문광고 기금 1,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미FTA무효화 홍성운동본부

전화) 041-632-3371

홈페이지) <http://www.outfta.org>

의결번호	2012국선111(자심)
언론사	주식회사 광주매스컴(광주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1번지 대표이사 서영진
심의대상기사	광주매일신문 2012년 3월 22일자 4면 「간신히 선대위는 발족했지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 기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여야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 위원회 발족 사실을 전하면서 어느 한 정당의 사진만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상대 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6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간신히 선대위는 발족했지만...

공천 후유증 ‘살얼음판 여야’

여야가 2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4·11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폭풍과 ‘야권연대’ 여론조작 사건 등에 휩싸여 ‘살얼음판’ 분위기가 연출됐다. (후략)



민주통합당 한명숙 선대위원장 등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두손을 함께 잡고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신히 선대위는 발족했지만...

여야가 2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4·11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폭풍과 ‘야권연대’ 여론조작 사건 등에 휩싸여 ‘살얼음판’ 분위기가 연출됐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 논란
새누리당 비대위는 이날 새벽 이봉화 전 차관과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 전 차관은 벌 직불금 논란으로 차관에서 물러난 전력과 현재 재직 중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감요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점이 문제가 돼 결국 후보 선정이 취소됐다.

특히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당 공천위가 이 후보의 벌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청와대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개입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비례대표 공천이 개과 안배라는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박영선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최고위원직과 MB비리특별위원회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박 최고위원은 재벌정책을 주도한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과 검찰 개혁에 나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유재만 변호사가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

경기 고양덕양 갑에서 심상정 공동대표와 경선을 펼쳤던 박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심 공동대표가 일당을 주고 선거원을 고려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진보의 생명은 도덕성”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대권을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백연련 전 검사가 안산 단원 갑 여론조사 경선에서 패배한 것도 조작한 란이 있는 만큼 야권연대 전방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불복을 할리와 하는 것은 야권연대 파괴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공동대표 측도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한 박은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통합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를 야기한 측이 대신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권민수 기자 jskim@kjdaily.com

공천 경선 각종 논란 후폭풍 시골 새누리, 이봉화 차관 비례 취소 민주당, 박영선 최고 전격 사퇴

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의를 펴고 화합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연대’ 여론조작 조작 파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둘러싼 여론조작 조작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 야권후보단일화 경선 관리위원회가 재경선을 권고했지만 김희철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다.

1. 사과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2국선75(시심)
시정요구인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3045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상주고향신문 경북 상주시 신봉동 경상대로 2809 성창빌딩 5층 대표이사 성 백 진
심의대상기사	상주고향신문 2012년 3월 13일자 1면 「성윤환후보 도덕성 논란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사과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상주고향신문〉 1면 우측 최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주제목은 심의대상기사 부제목 중 「검사 퇴직후 탈세 수사했던 카지노 업체 5년간 취업」 제목 크기,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부제목은 주제목 활자와 동일하게 하되 크기는 1단계 작게 하며 기사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으로 할 것).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상주고향신문에 〈별지 2〉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경북 상주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 조회한 결과 및 피시정요구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재산 금액 및 병역 기피에 대한 의혹을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부각보도하고 이에 대한 해당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심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1. 주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2. 부제목 : 성윤환 후보 “의혹 내용 사실과 달라”
3.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의 지난 3월 13일자 1면 「성윤환후보 도덕성 논란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불공정 선거기사에 해당한다며 사과문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상주시)와 관련해 본지가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면서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재산 금액 및 병역 기피에 대한 의혹을 크게 보도하고 이에 대한 해당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신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지 기사에 대해 성윤환 후보는 “현재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이 49억 원 정도이지만 건물 매입시 대출받은 금액이 약 18억 원이어서 실제 (공시지가 기준)는 31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0억 원을 호가한다고 보도된 여산빌딩의 실거래 금액은 40억 원 정도”라면서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지난 선거 때 다 밝혀졌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병역과 관련해 성 후보는 선천적으로 안구진탕과 양안의 시력이 극도로 차이가 나는 부동시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적법한 징집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성윤환후보 도덕성 논란 도마위에

검사 퇴직후 탈세 수사했던 카지노업체 5년간 취업

성 후보 ‘100억 알부자’… 재산형성 의혹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기준으로 도덕성을 최우선순위로 내세워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이 뜨거운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정가는 시끌시끌하다.

상주지역 새누리당 내부경선을 앞두고 성윤환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성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 검사 퇴직 후 탈세

수사했던 카지노업체 취업 △ 재산증식 의혹 △ 병역면제 △의정보고회 음식제공 등이다.

세계일보 보도(3월8일자)에 따르면 성윤환 후보는 1996년 검사 재직때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카지노 대부’로 알려진 파라다이스 전남원 회장의 ‘탈세 및 외화불법 유출사건’을 수사했다.

그런 그가 퇴직후 2003년부터 5년간 파라다이스(카지노 업체) 사외이사로 취업해 ‘현직 검사때 사건을 봐주고 한몫 챙겼다’는 ‘사후수뢰’의 의혹이 일고 있다.

성후보는 18대 국회때 문방위원을 맡아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등 취업제한 의무)를 위반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윤환 후보의 재산은 100억대로 알려져 있다. 서울·남양주·양평·전주등 12곳에 부동산(빌딩, 임야, 목장용지, 아파트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소

제한 여산빌딩(6층)의 경우 짓가 70억원을 헛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성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재산증식 의혹뿐만 아니다. 성윤환 후보는 '부동산 안구진탕'이라는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신성한 국방의무

를 기피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의정보고회때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시의원, 주민등 110여명이 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아직까지 일부주민은 과태료를 미납해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고향신문

1. 올곧은 언론
1. 시원한 신문
1. 지역 전문지

제73호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주한)

E-mail: 2238903@hanmail.net

구독·광고 (054)533-1234, 536-1234

성윤환후보 도덕성 논란 도마위에

검사 퇴직후 탈세 수사했던 카지노업체 5년간 취업

성 후보 '100억 알부자'... 재산형성 의혹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기준으로 도덕성을 최우선순위로 내세워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이 뜨거운 선거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정치는 시급시급하다.

상주시 새누리당 내부경선을 앞두고 성윤환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돼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성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검사 퇴직후 탈세 수사했던 카지노업체 취업 △재산증식 의혹 △병역면제 △의정보고회 음식제공등이다.

세계일보 보도(3월8일자)에 따르면 성윤환 후보는 1996년 검사 재직때 세상을 떠돌던 카지노업체 '카지노대부'로 알려진 파라다이스 전나원 회장의 '탈세및 외화불법 유출사건'을 수사했다.

그런 그가 퇴직후 2003년부터 5년간 파라다이스(카지노 업체) 사외이사로 취업해 '현직 검사때 사건을 봐주고 한몫 챙겼다'는 '사후수회'의 의혹이 일고 있다.



△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성윤환 후보 소유 여산빌딩(6층)이 70억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후보는 18대국회때 문방위원을 맡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등 취업제한 의무)를 위반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윤환 후보의 재산은 100여대로 알려져 있다. 서울·남양주·양평·전주등 12곳에 부동산(빌딩, 임대, 목장용지, 아파트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소재한 여산빌딩(6층)의 경우 짓가 70억원을 헛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성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재산증식 의혹뿐만 아니다. 성윤환 후보는 '부동산 안구진탕'이라는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신성한 국방의무를 기피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의정보고회때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시의원, 주민등 110여명이 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아직까지 일부주민은 과태료를 미납해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취재팀>

새누리당 투표소 경선 18일 실시

김종태 vs 성윤환 결전

새누리당 상주시 지역 경선은 18일 오후 상주시민체육관에서 투표소 경선으로 치러진다.

투표소 경선은 당에서 부차위로 선정한 당원 300명(핵심당원 150명+일반당원 150명)과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일반유권자 1천200명등 1천5백명이 참가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압축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과 성윤환 현 국회의원(가나다 순)을 놓고 한표를 행사한다.

선거인단은 12일까지 구성되며, 명부는 14일 두 후보자에게 교부된다. 후보자들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소 경선은 사실상 본선으로 평



△김종태 후보



△성윤환 후보

가되는데 한정된 주민을 상대로 한 압축된 선거운동이 불가피해 과열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성윤환 후보측은 "국민참여 경선은 조직 동원보다 금품살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보도(3월12일)에 따르면 성후보측은 '유권자의 절반정도가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높은 특성상 이를 유권자 가운데는 경선에서나 행사에 식사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예를 먹고 있다며 경선에서도 매표를 위한 금품살포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방식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현역의원인 국민참여 경선을 개리는데 배경에는 1,500여명의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3.4일간 집중 홍보할 시간을 주면 정치인만이 급부할 변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상주시 지역 경선은 예정대로 국민참여 경선으로 실시된다.

<성백전 대기자>

성윤환 의원에게 유리하게 발표되었던 S신문의 여론조사는 영터러 입이 입중돼 지역 여론을 오도한 것으로 판명됐다.

선거기사의뢰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S신문 2월29일자 1면·3면·4·11 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심한 결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하고 또한 해당기사 제목에 대해 주의조치 한다고 결정했다.

S신문 여론조사 영터러

선거기사의뢰 위원회 결정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

선거기사의뢰위는 "S신문은 정당명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는 실측결과와 다른 보도하고 나머지 기사를 게재 보도해 독자의 혼선을 빚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했다.

또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S신문의 '4·11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3월5일자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직정보도 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발표 금지)를 제5항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성윤환 후보 도덕성논란〉 관련 사과문 및 반론보도문 성윤환 후보 “의혹내용 사실과 달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의 지난 3월 13일자 1면 「성윤환후보 도덕성 논란 도마 위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불공정 선거기사에 해당한다며 사과문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상주시)와 관련해 본지가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면서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재산금액 및 병역 기피에 대한 의혹을 크게 보도하고 이에 대한 해당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신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

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지 기사에 대해 성윤환 후보는 “현재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이 49억원 정도이지만 건물 매입시 대출받은 금액이 약 18억원이어서 실제(공시지가 기준)는 31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0억원을 호가한다고 보도된 여산빌딩의 실거래 금액은 40억원 정도” 라면서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지난선거때 다 밝혀졌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병역과 관련해 성 후보는 선천적으로 안구진탕과 양안의 시력이 극도로 차이가 나는 부동시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적법한 징집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2국선116(시심)
시정요구인	차 영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62 트라팰리스 웨스턴에비뉴
피시정요구인	임 경 신(양천신문 발행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943-20 덕성빌딩 3층
심의대상기사	양천신문 2012년 3월 26일자 1면 「“네거티브 선거전, 영원히 추방할 수 없나”」 및 4월 2일자 1면 「신정네거리 ‘정치1번지’ 방불 … 박근혜·손학규, 후보 지원」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양천신문> 1면 우측 최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네거티브 선거전, 영원히 추방할 수 없나”」 제목 크기,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의 각 글자 사이를 1칸 이상 두며, 기사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하고 제목과 본문 사이 최소 1줄 이상 간격을 둔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으로 할 것).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양천신문 1면에 <별지 2> 사과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시정대상기사 중 4월 2일자 주제목 활자인 [신정네거리 ‘정치1번지’ 방불 … 박근혜·손학규, 후보 지원]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3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시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이 유	서울시 양천갑 민주당합당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이 양천갑 지역구의 경쟁 후보자에 비해 시정요구인의 네거티브 의혹사실을 부각하고 경쟁 후보자의 유세현장을 제목 및 사진을 넣어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의 유세 내용을 제외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 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1. 제목 : 사과문
2. 내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 신문의 지난 3월 26일자 1면 <“네거티브 선거전, 영원히 추방할 수 없나”> 및 4월 2일자 1면 <신정네거리 ‘정치1번지’ 방불 … 박근혜·손학규, 후보 지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본지가 양천갑 지역구의 경쟁 후보자에 비해 민주당합당 차영 후보의 네거티브 의혹사실을 부각하고 또한 경쟁 후보자의 유세현장을 제목 및 사진을 넣어 보도하면서 차영 후보의 유세 내용을 제외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사과문의 게재를 명하였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 결 번 호	2012국선131(재심) (원심결정 ; 2012국선116(시심))
재심청구인	임 경 신(양천신문 발행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943-20 덕성빌딩
재심대상기사	양천신문 2012년 3월 26일자 1면 「“네거티브 선거전, 영원히 추방할 수 없나”」 및 4월 2일자 1면 「신정네거리 ‘정치1번지’ 방불 ... 박근혜·손학규, 후보 지 원」 제하의 기사
주 문	1.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청구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양천신문> 1면 우측 최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재심대상기사 중 「“네거티브 선거전, 영원히 추방할 수 없나”」 제목 크기,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의 각 글자 사이를 1칸 이상 두며, 기사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하고 제목과 본문 사이 최소 1줄 이상 간격을 둔다(문단 구분할 것 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으로 할 것).
재심청구취지	2012국선116(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본 위원회 2012국선116(시심) 결정에 대해 시정요구인인 차영 후보가 재심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차영 후보의 유세장면 및 기사가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차영 후보측이 취재거부의사를 밝혀서 어쩔 수 없이 차영 후보 관련 사진과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정요구인이 낸 자료 에 따르면 시정요구인이 재심청구인의 공용 이메일로 보도자료 및 유세사진을 송부 하였고, 이를 재심청구인이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가사 차영 후보가 보도자 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 기 위하여 선거관련 보도의 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보도내용

양천구 갑·을 국회의원 후보등록

“네거티브 선거전, 영원히 추방할 수 없나”

양천지역 총선후보자들...
공천·경선·본선서 계속 시달려

“네거티브 선거전은 영원히 추방 할 수 없나”,
이번 총선에서도 사라질 수 없을 것 같다.

양천구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지난 22~23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완료하고 공식적인 선거
전에 돌입한 가운데,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불
거졌던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본선에서도
여전히 노정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예 무시하고 무대응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예비후보로 공천경쟁에 나섰던 권후보는 15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쟁도 거치지 않고 후보로 공천된 것은 다른 남성 후보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것이며 심지어 차 후보는 최소한의 공식적인 여론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그는 이어 “과거 2002년 월드컵 당시,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이었던 차후보의 말을 듣고 200여개 업체가 회장사업을 했다가 186억원의 부도를 안고 도산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보는 마치 자신의 마케팅으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유치된 것이며 자신이 유능한 기획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보근씨는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왜 이미 끝난 일인데 계속 공천불복주장을 하느냐”는 질문에 “같은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쓸쓸한 일이지만 양천갑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공천 결과는 공정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와 정의실현차원에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후략)

신정네거리 ‘정치1번지’ 방불...

박근혜 · 손학규, 후보 지원

새누리 김정우(갑) · 김용태(을) 합동유세, 민주 이용선후보(을) 집중유세

‘양천구 정치 1번지’를 방불케하는 신정네거리가 지난 29일 하루종일 각 후보 진영의 후보 연설과 유세, 가두 선거운동으로 떠들썩 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과 손학규 상임고문이 세몰이를 위한 지원에 나서 양천구가 이날 만큼은 충선정국의 최대관심지역으로 부상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29일 오전 9시30분경 양천구 신정네거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양천갑 김정우 후보 유세지원에 나섰다.

이날 박근혜 위원장은 김정우 후보와 함께 신정네거리역과 주변 제일시장 일대를 돌면서 주민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신정네거리에는 수많은 구민들과 취재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박 위원장은 “김정우 후보는 유능한 외교 인재로서 양천구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할 것”이라며 “열심인 김정우 후보를 앞으로도 잘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고문도 이날 1시에 신영시장에서 이용선후보(양천을) 지원 유세연설을 통해 “이후보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통합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소개하고 이후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손고문은 시장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가며 이번 만큼은 정권교체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선에서부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4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신정네거리 역에서의 각 후보 진영 간 유세는 사선거구 구의원 보궐선거 유세까지 어우러져 이곳이 양천구 정치1번지유세장이 되어버렸다.

이용선후보가 이곳에서 공식 첫 집중유세를 가졌고 이어 같은장소에서 새누리당의 김정우(갑) · 김용태(을)후보의 합동유세가 벌어져 한껏 선거분위기를 자아냈다.

각 후보 진영 유세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이 열렬한 박수와 함께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연설에 힘을 보태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 신정네거리에는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기호1번 김용태후보(새누리당), “깨끗하고 큰인물” 기호2번 이용선후보(민주통합당), “만나면 좋은 사람” 기호6번 이현호 후보(국민생각), “주민이

의 결 번 호	2012국선128(시심)
시정 요구인	최 인 기 전남 나주시 남내동 108-1 일성빌딩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주간나주신문사(나주신문) 전남 나주시 성북동 169-16 대표이사 박 선 재
심의대상기사	나주신문 2012년 3월 5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공천탈락 확정된 듯」, 3월 12일자 1면 「박선원·배기운 “최인기 탈당 쇼 즉각 중단하라”」, 3월 19일자 1면 「민주통합당 경선, 배기운 후보 확정」, 3월 26일자 1면 「'정권재창출' . . . “민주당 배기운 선택해달라”」, 4월 2일자 1면 「광주지검에 최인기 의원 고발」 제하의 기사 및 3월 5일자 3면 「민주당 개혁공천 호남에서 피본다」, 3월 19일자 3면 「공천탈락 현역의원의 백의종군 선언과 무소속출마」, 3월 26일자 3면 「대의명친(大義滅親)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했나」, 4월 2일자 3면 「이정희 대표의 눈물과 지역의 야권후보단일화」 제하의 데스크칼럼(총 9건)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나주신문> 1면 좌측 최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박선원·배기운 “최인기 탈당 쇼 즉각 중단하라”」(3월 12일자 1면) 기사의 주제목 크기,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의 각 글자 사이를 1칸 이상 두며, 기사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하고 제목과 본문 사이 최소 1줄 이상 간격을 둔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나주신문에 <별지 2>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 무소속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 기사 및 데스크칼럼 등 총 9건의 보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피시정요구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이 경쟁 후보의 비판 발언 및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을 1면에 계속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인에 대해서 소탐대실하는 소인배로 묘사하는 등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칼럼을 계속적으로 게재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해당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9조(특별기획기사)를 중대하게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1. 제목 : 사과문

2. 내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 신문의 3월 5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공천탈락 확정된 듯」 외 12일, 19일, 26일, 4월 2일의 각 1면 기사(5건) 및 3월 5일자 3면 「민주당 개혁공천 호남에서 피본다」 외 19일, 26일, 4월 2일의 각 데스크칼럼(4건)의 선거기사(총 9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 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전남 나주·화순)와 관련하여 본지가 최인기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 후보의 발언 및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을 1면에 계속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인기 후보에 대해서 소탐대실하는 소인배로 묘사하는 등 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칼럼을 계속적으로 게재하였고 또 한 본지 보도에 대한 최인기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신지 않은 것은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최인기 의원 공천탈락 확정된 듯

탈락설 나돌던 현역의원들 대거 포함된 듯 민주 경선 배기운·박선원 후보 압축 전망

민주통합당은 지난 4일 호남지역 후보들의 면접평가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남과 수도권 충청권 등 3차 공천까지 현역 의원의 공천 탈락이 전무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호남지역에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정가에 한바탕 피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탈락후보에 포함된 우리 지역 최인기 의원은 그 동안 주식투자로 불린 재산증식문제, 과거행적과 정체성, 시민사회단체와 농민환경단체로부터 FTA협상과, 4대강사업 찬동과 등으로 분류되어 낙천후보로 선정된 복합적인 문제가 공천에서 탈락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후문이다. 지역이 분열과 갈등, 반목으로 점철된 점과 교체 여론이 높은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도 감안했다는 정가의 분석이다.

최인기 의원은 서로 점수를 매긴 ‘다면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심위 관계자는 우리지역구에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해 경선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나주화순지역구의 공천경선후보는 배기운, 박선원 예비후보로 압축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선언이 줄줄이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현재 공천에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공심위를 압박하는 현역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또한 무소속연대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지난 3일 민주당 공천심사 면접에 우리 지역에서는 최인기, 배기운, 박병윤, 박선원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통질문으로 자기 소개와 출마의 변, 나주화순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에 관해 물었으며, 개인질문으로 최인기 의원에게 대해서는 재산증식에 관한 질문과 통장이 20여개가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 했으며 박선원 예비후보에게는 선거인단 모집과정의 불법문제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운, 박병윤 예비후보에게는 개인적인 질문 없이 면접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생략)

결정후 보도문

사과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 신문의 3월 5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공천탈락 확정된 듯」 외 12일, 19일, 26일, 4월 2일의 각 1면 기사(5건) 및 3월 5일자 3면 「민주당 개혁공천 호남에서 피본다」 외 19일, 26일, 4월 2일의 각 데스크칼럼(4건)의 선거기사(총 9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전남 나주·화순)와 관련하여 본 지가 최인기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 후보의 발언 및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을 1면에 계속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인기 후보에 대해서 소탐대실하는 소인배로 묘사하는 등 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칼럼을 계속적으로 게재하였고 또한 본지 보도에 대한 최인기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신지 않은 것은 해당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신문

najunews.kr
905호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음력3월 26일)

사시(社址)

●대불어 사는 삶 ●정의적 민주시민 ●공정한 여론연론

명동연경
콘택트
주 1000
만명
중앙로 43리 함바다 옆 ●061-332-9367

사과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 신문의 3월 5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공천탈락 확정된 듯」 외 12일, 19일, 26일, 4월 2일의 각 1면 기사(5건) 및 3월 5일자 3면 「민주당 개혁공천 호남에서 피본다」 외 19일, 26일, 4월 2일의 각 데스크칼럼(4건)의 선거기사(총 9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결정을 명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전남 나주·화순)와 관련하여 본 지가 최인기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 후보의 발언 및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을 1면에 계속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인기 후보에 대해서 소탐대실하는 소인배로 묘사하는 등 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칼럼을 계속적으로 게재하였고 또한 본지 보도에 대한 최인기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신지 않은 것은 해당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배 유인작업 현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시험장에서 배 가지 유인작업이 한창이다. 유인작업은

가지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배 낙과를 최소화하고, 배 수확때는 높은 곳에 달린 배를 쉽게 딸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사진제공 나주시

민주당 '배기운' 당선

배기운 39,887표, 최인기 33,188표, 문종안 2,558표
배기운 "후보단일화 큰 힘, 나주화순지역민의 승리"

민주통합당의 배기운 아랑단일후보가 나주화순지역구의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배기운 후보는 총 39,887표(52.73%)를 득표해 33,188표(43.88%)를 얻은 무소속 최인기 후보를 6,699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새누리당 문종안 후보는 1,558표(2.38%)를 얻는데 그쳤다.

배기운 후보는 나주에서 21,865표(48.97%)를 득표하면서 21,567표(48.49%)를 득표한 최인기 후보에게 2,988표(0.53%) 차이로 근소한 승리를 거뒀다. 문종안 후보는 1,558표(2.38%)를 득표했다.

화순에서는 18,022표(58.12%)를 득표해 11,621표(37.35%)를 득표한 최인기 후보를 6,401표(20.77%) 차이로 제치면서 당선됐다. 문 후보는 화순에서도 1,408표(4.52%)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총선은 나주화순에서 총 128,755명이 선거인 중 79,488명이 투표에 참여해 61.7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배기운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아랑단일화의 승리와 함께 정의의 승리가요 나주화순군민의 승리"라며 "전 종덕 후보와 통합진보당 당원들, 화순지역 시민사회단체에 고맙다"고 밝혔다.

특히 "전종덕 후보의 아랑후보단일화라는 과감하고 통 큰 결단이 큰 힘이 됐다"며 "승리의 공을 전 후보에게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배기운 당선자는 투표마감직후인 6시 방송3사가 공동조사한 출구조사에서 예측 득표율이 최 후보를 10%가량 앞섰 것으로 발표돼 당선을 확실한 분위기였다.

배기운 당선자는 통합진보당과의 아랑단일화 효과를 내심 기대했지만 최인기 후보의 조직력이 워낙 탄탄해 상당수는 1-2%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표심이 아랑단일후보인 배기운에게 수평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측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나주와 화순에서 대대적인 새마을을 통해 마지막 거리유세를 펼치면서 최 후보의 조직력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배기운 당선자는 대우로 새마을보다는 조직을 분산해 지역별로 지지를 호소하는 자민당 작전에 아랑단일화 상승효과까지 더해져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윤용기 기자

yyk2870@hanmail.net

2. 정정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2국선42(시심)
시정요구인	소 기 숙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75-10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 LD그린토피아 대표이사 임 재 울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월 17일자 3면 『이색후보-민주당 소기숙 평택 갑 예비후보』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부일보> 2면 또는 3면 중앙 이상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부제목 「민주당...평택 갑 예비후보」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 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 처리할 것).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중부일보에 <별지 2>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 민주당통합당 평택갑 예비후보 소기숙은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시숙부인 우제항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부각시키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우리 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피시정요구인의 서면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이 우제항 전 의원과 관련해 게재한 정정보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인터뷰 내용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2. 내용 : 본지는 3월 8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지 2월 17일자 3면 『이색후보-민주당 소기숙 평택 갑 예비후보』 제하의 기사에서 “우제항 전 의원이 수천만 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우제항 의원은 항소심에서 뇌물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위 보도 중 “소 예비후보가 시속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계파정치, 수렴청정, 아바타라는 등의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소기속 예비후보는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나 소문에 불과하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보도내용

시속부 우제항 전 의원 지역구 받아 총선 출사표

〈이색후보〉민주당 소기속 평택 갑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소기속 평택 갑 예비후보는 시속부인 우제항 전 국회의원을 대신해 출마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우 전 의원이 사면 복권되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우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출사표를 던졌다.

우 전 의원이 처음 정계에 입문했던 지난 2000년부터 함께 하며 17대 총선 당선을 도왔

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여성국장, 사무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사실상 지역위원회 조직을 관리해왔다.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조직력이 탄탄하다.

그러나 우 전 의원과 시속부와 질부란 인척 관계가 부각되며 계파정치, 수렴청정, 우 전 의원의 아바타 등 날선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또 수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불미스럽게 중도하차한 우 전 의원의 뒤를 이었다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약점이다.

소 예비후보는 “금권정치, 선거브로커를 뿌리 뽑는 클린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우 전 의원도 이런 브로커에 시달린 피해자 중 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색 후보

민주당 소 기 속 평택 갑 예비후보

시속부 우제항 전 의원 지역구 받아 총선 출사표

민주통합당 소기속 평택 갑 예비후보는 시속부인 우제항 전 국회의원을 대신해 출마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우 전 의원이 사면 복권되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우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출사표를 던졌다.

우 전 의원이 처음 정계에 입문했던 지난 2000년부터 함께 하며 17대 총선 당선을 도왔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여성국장, 사무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사실상 지역위원회 조직을 관리해왔다.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조직력이 탄탄하다.

그러나 우 전 의원과 시속부와 질부란 인척 관계가 부각되며 계파정치, 수렴청정, 우 전 의원의



아바타 등 날선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또 수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불미스럽게 중도하차한 우 전 의원의 뒤를 이었다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약점이다.

소 예비후보는 “금권정치, 선거브로커를 뿌리 뽑는 클린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우 전 의원도 이런 브로커에 시달린 피해자 중 한 분”이라고 말했다.

김평석기자

결정 후 보도문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본지는 3월 8일 선거기사심의 위원회(위원장 박기동)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지 2월 17일자 3면 ‘이색 후보-민주당 소기숙 평택 갑 예비후보’ 제하의 기사에서 “우제항 전 의원이 수천만 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우제항 의원은 항소심에서 뇌물혐의

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위 보도 중 “소 예비후보가 시숙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계파정치, 주류청정, 아바타라는 등의 낱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소기숙 예비후보는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나 소문에 불과하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2국선43(시심)
시정요구인	김 종 태 경북 상주시 서성동 56-6 동영빌딩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상산신문 경북 상주시 남성동 107-6 대표이사 김 윤 조
심의대상기사	상산신문 2012년 2월 20일자 1면 및 3면 「4.11 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성윤환 40.1%, 김종태 21.7%, 박완철 12.5%, 통합민주당 14.3%, 김영태 8.8% 현역의원 에 대한 지지도 높게 드러나」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하고, 또한 해당 기사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2. 상산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 하는 <상산신문> 1면 우측 중앙 이상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 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1면 기사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상산신문 지면에 <별지 2>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경북 상주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기사 와 관련, 각 후보별 지지율이 실제와 다르며, 같은 날짜에 두 번 같은 제목을 게재함 으로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했다면서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 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상주시 선관위 및 모노리서치에 대한 구두 조사 및 피시정요구 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전화설문 여론조사는 인구분포 등을 반영한 가중치 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실제 전화응답한 실측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것임에도, 피시 정요구인은 정당별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는 실측 결과만을 보도하고, 나머지는 가중치 결과를 보도했으므로 본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을 명하고, 또한 같은 제목의 여론조사결과를 한 날짜에 두 번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1. 제목 : <총선 여론조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지는 지난 2월 20일자 1면, 3면 『4.11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 . .』 제하의 기사와 관 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에서 상주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와 정당별 지지도에 대한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 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화설문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연령별, 성별 등 인구분포와 구성비율을 반영한 가중치 결과를 받

표하든지 실제 전화응답한 데이터인 실측 결과를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지에서 정당별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는 실측 결과만을 보도하고 나머지는 가중치 결과를 보도해 독자의 혼선을 빚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가중치 조사결과는 성윤환 37.2%, 김종태 20.4%, 박완철 14.3%로 나왔으므로 위 기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4·11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성윤환 40.1% 김종태 21.7% 박완철 12.5% 통합민주당 송병길 14.3% 김영태 8.8%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도 높게 드러나

상산신문이 오는 4월 11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등 8개 조항이며 시내 읍·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성윤환후보가 40.1%로 1위를 이어서 김종태후보가 21.7%, 박완철후보가 12.5%를, 잘모른다 25.7%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후보지지도에서는 송병길 후보가 14.3%, 김영태 후보가 8.8%, 잘 모르겠다는 답

변이 무려 76.9%에 달했다.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70.7%, 민주통합당 후보 9%, 국민행복당 후보 2.2%, 무소속 후보 4.7%, 지지정당 없다 13.4%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도 새누리당 69.7%, 민주통합당 9.2%, 국민행복당 2.4%, 무소속 5.1%, 지지정당 없음 13.6%로 새누리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호정 모노리서치 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후보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의 성윤환 후보가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왔으며 유권자들은 상주지역의 시급현안에 대해 경제문제를 꼽았고, 이번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88.6%의 응답자가 나와 어느 지역보다 참여 열기가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4·11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성윤환 40.1% 김종태 21.7% 박완철 12.5% 통합민주당 송병길 14.3% 김영태 8.8%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도 높게 드러나

상산신문이 오는 4월 11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등 8개 조항이며 시내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성윤환후보가 40.1%로 1위를 이어서 김종태후보가 21.7%, 박완철후보가 12.5%를, 잘모른다 25.7%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후보지지도에서는 송병길 후보가 14.3%, 김영태 후보가

8.8%,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무려 76.9%에 달했다.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70.7%, 민주통합당 후보 9%, 국민행복당 후보 2.2%, 무소속 후보 4.7%, 지지정당 없다 13.4%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도 새누리당 69.7%, 민주통합당 9.2%, 국민행복당 2.4%, 무소속 5.1%, 지지정당 없음 13.6%로 새누리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호정 모노리서치 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후보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의 성윤환 후보가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왔으며 유권자들은 상주지역의 시급현안에 대해 경제문제를 꼽았고, 이번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88.6%의 응답자가 나와 어느 지역보다 참여 열기가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3면에 계속

4·11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성윤환 40.1% 김종태 21.7%
박완철 12.5% 통합민주당 송병길 14.3%
김영태 8.8%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도 높게 드러나

이번 상주지역의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연령대별 지지도를 분석해본 결과 20대에서 성윤환 후보 44.4%, 김종태 후보 15.7%, 박완철 후보 7.9%, 잘 모른다 32%로 나타났으며 40대 성 후보 28.5%, 김 후보 20.6%, 박 후보 17.6%, 잘 모른다 33.4%, 60대 이상이 성 후보 41.1%, 김 후보 18.7%, 박 후보 11.7%, 잘 모른다 28.4%이다.

또 민주통합당후보의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20대에 송병길 후보 10.2%, 김영태 후보 25.9%, 잘 모른다 64%이며 40대 송 후보 14.6%, 김 후보 12.2%, 잘 모른다 73.2%, 60대 이상은 송 후보 10.3%, 김 후보 7.7%, 잘 모른다 81.9%로 드러나 아직까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정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의사의 질문에서는 88.6%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높은 참여도 가운데 남성이

89.5%, 여성이 84%로 남성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3.8%, 30대 74.1%, 40대 90.4%, 50대 87.6%, 60대 이상이 89%로 고른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문제가 54.2%로 단연 높았고 지역갈등 17.2%, 기타 16.8%, 교육문제 11.8%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총선 여론조사는 한국지역신문 경북협회의회소속사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상주지역의 만 19세이상 남녀유권자 1,2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것으로 총화 무작위 할당표본추출에 의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82%P이다.

한편 새누리당 예비후보 조사에서 차점을 받은 김종태 후보는 고향을 떠나 오로지 국가에 충성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다보니 고향 상주에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울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이 쌓아온 인맥과 모든 지식을 고향 상주발전에만 전력투구할 각오로 50여일 남은 기간 큰 변화가 올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4·11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성윤환 40.1% 김종태 21.7% 박완철 12.5%
통합민주당 송병길 14.3% 김영태 8.8%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도 높게 드러나

이번 상주지역의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연령대별 지지도를 분석해본 결과 20대에서 성윤환 후보 44.4%, 김종태 후보 15.7%, 박완철 후보 7.9%, 잘 모른다 32%로 나타났으며 40대 성 후보 28.5%, 김 후보 20.6%, 박 후보 17.6%, 잘 모른다 33.4%, 60대 이상이 성 후보 41.1%, 김 후보 18.7%, 박 후보 11.7%, 잘 모른다 28.4%이다.

또 민주통합당후보의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20대에 송병길 후보 10.2%, 김영태 후보 25.9%, 잘 모른다 64%이며 40대 송 후보 14.6%, 김 후보 12.2%, 잘 모른다 73.2%, 60대 이상은 송 후보 10.3%, 김 후보 7.7%, 잘 모른다 81.9%로 드러나 아직까

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정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의사의 질문에서는 88.6%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높은 참여도 가운데 남성이 89.5%, 여성이 84%로 남성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3.8%, 30대 74.1%, 40대 90.4%, 50대 87.6%, 60대 이상이 89%로 고른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문제가 54.2%로 단연 높았고 지역갈등 17.2%, 기타 16.8%, 교육문제 11.8%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총선 여론조사는 한국지역신문 경북협회의회소속사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상

주지역의 만 19세이상 남녀유권자 120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 것으로 총화 무작위 할당표본추출에 의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82%이다.

한편 새누리당 예비후보 조사에서 차점을 받은 김종태 후보는 고향을 떠나 오로지 국가에 충성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다보니 고향 상주에 이렇다할 업적을 세울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이 쌓아온 인맥과 모든 지식을 고향 상주발전에만 전력 투구할 각오로 50여일 남은 기간 큰 변화가 올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총선 여론조사>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21일자 1면, 3면 「4.11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에서 상주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와 정당별 지지도에 대한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화설문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연령별, 성별 등 인구분포와 구성비율을 반영한 가중치 결과를 발표하든지, 실제 전화응답한 데이터인 실측 결과를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지에서 정당별 예비후보자에 대

한 지지도는 실측 결과만을 보도하고 나머지는 가중치 결과를 보도해 독자의 혼선을 빚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가중치 조사 결과는 성윤환 37.2%, 김종태 20.4%, 박완철 14.3%로 나왔으므로 위 기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로 잡습니다.

정정 보도에 대한 본지의 해명과 입장

상산신문은 지난 2월 21일(제22호) 1면 우측에 4.11총선 상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제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를 실게 된 동기는 본지가 한국지역신문 경복협회의 소속회사로서 경북도내 회원사 협의회가 여론조사에 따른 사전 회의를 소집하였고 희망하는 회원사에 한해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회의결과 본지를 비롯한 경북지역 회원사 5개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따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와는 경복협회의 차원에서 여론조사비용을 절충하였습니다.

이후 본지는 2.15일 모노리서치와 여론조사비용 가격을 결정후 대금을 송금하면서 질문사항 8개 조항을 조사의뢰 하였고, 2.17일 모노리서치에서 여론조사보고서를 받아 내용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알아차린 모 후보측은 자신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통해 접해왔던 지지를 수치와 본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 기관과 본지와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본지와 성윤환 의원의 밀약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사의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지의 편집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며 본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는 후보자별 지지도 실측결과를 근거로 보도한정(실측결과보다 성윤환 40.1%, 김종태 21.7%, 박완철 12.5%)과 응답률 누락 보도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8조, 제108조 제5항 규정위반으로 엄중경고를 받았고,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는 본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하라는 결정을 받아 본보 1면 상단에 <총선여론조사> 관련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같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에서 따른 결정내용을 수용하면서 지시사항을 이행하게 된 만큼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둔 후보들에게 송구함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지의 보도에 대해 상주포커스 기사 작성자 권영인과 상주향신문 성백진 대표(자칭 대기자)와 악성 댓글을 실은 누리꾼들의 왜곡되고 저질스런 표현이 시민과 독자들을 호도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들에 대해 본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1. 상주포커스의 기사내용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인 2월 23일부터 본지의 입장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범죄행위와도 같은 폄수" "언터라 보도" 등의 제목으로 본사의 기사내용을 비판하여 파렴치한 언론으로 몰아부친 것은 언론기본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법적대응할 것임과 아울러 3.13일자 상주향신문 1면하단 "S신문 여론조사 언터라" 기사 또한 법적대응할 것임.

2. 상주포커스의 기사에 따른 2백

여건의 댓글들 대다수는 실명이 아니다보니 대응할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무가치한 글귀들이지만, 대다수가 특정후보를 돕기 위한 악성 댓글로 판단하면서 이 또한 파렴치한 언론인 상주포커스의 원인제공에 따른 글귀들로 묵과할 수 없음.

3. 본지에 대한 조사결과 위 게재된 정정보도문 일부에서는 경고 조항 외의 어떠한 위법, 위반사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부에서는 마치 본지가 특정후보를 돕기위해 특정후보측과 사전 결탁하였고,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측과의 조작된 여론조사가 아니냐는 추궁과 함께 조사결과 내용을 사전 유출했다며 주장해 왔지만, 본지에서는 조사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렸고 그로인해 심한 기사중단 요구를 뿌리쳐야 하는 곤욕만 치르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4. 상산신문을 지켜보시는 시민, 애독자님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지는 보다 빠르게 시민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을 타 언론사보다 앞서 보도하겠다는 의욕으로 민감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사를 실다보니 진실보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와 비방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막중한 사명수행을 위해 다시 한번 얻은 교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산신문이 건전한 신문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반론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2국선26(시심)
시정요구인	조 용 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주공아파트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2년 2월 17일자 3면 「FTA혈전·낙동강혈투·동문결투 여야격전 시작됐다」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서울신문 3면 우측 하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공천 대진표로 본 4·11 총선 승부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서울신문 지면에 <별지 2>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 인천 부평구를 새누리당 조용균 예비후보는 피시정요구인이 위 기사에서 다른 언론에서는 총선 격전지로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공천 대진표에 총선 격전지로 분류하고, 해당 지역구의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없이 김연광 전 청와대정무비서관을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하면서 부평구를 지역구가 김 전 비서관과 홍영표 민주당당원 의원간의 대결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천대진표를 작성·보도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해당 선거구에 여러 예비후보자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거론하여 선거기사의 형평성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요구인의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1. 제목 : <총선 승부처> 관련 반론보도문
2. 내용 : 본지 2월 17일자 3면 「FTA혈전·낙동강혈투·동문결투 여야격전 시작됐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인천 부평구를 새누리당 조용균 예비후보는 본지가 김연광 전 청와대정무비서관을 새누리당 부평구를 단독 예상후보로 보도한 것은 해당 지역구의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없이 보도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기사라고 밝혀왔습니다. 본 보도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내용

FTA 혈투·낙동강 전투·동문 결투... 여야 격전 시작됐다.

공천 대진표로 본 4·11총선 승부처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하면서 주요 격전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 당의 공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가 가려져야 전선(戰線)이 확실해지지만 일단 공천 신청 현황만 놓고 보면 18대 공천 때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당시 호남에 집중했던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이번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야 간 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러나기 시작했다. 각 당의 공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가 가려져야 전선(戰線)이 확실해지겠지만 일단 공천 신청 현황만 놓고 보면 18대 공천 때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당시 호남에 집중했던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이번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야 간 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후략)

<전도사 김중훈 vs 반대자 정동영>

<원 텃밭사수 vs 野 바깥들이>

<원 이성현 vs 野 우성호>

FTA 혈투·낙동강 전투·동문 결투... 여야 격전 시작됐다

공천 대진표로 본 4·11총선 승부처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하면서 주요 격전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 당의 공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가 가려져야 전선(戰線)이 확실해지지만 일단 공천 신청 현황만 놓고 보면 18대 공천 때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당시 호남에 집중했던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이번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야 간 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은 종로·중구·성동을-광진구·사대문-강·양천을-동작을-강남을 통해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MJB(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라 불리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과 조운선 의원이 새누리당 내 '예선'을 치러야 한다. 이곳엔 이미 민주당에서 정세균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단념 상태다. 중구에는 10·26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과 신은경 전 KBS 앵커와의 예선전 이후 호남 지역구를 버리고 상경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의 비매치가 예상된다.

강남을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여야 대립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과 한·미 FTA를 강력 반대해온 정동영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여운형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여기에 한·미 FTA 전도사인 김중훈 전 동성교섭본부장의 전파 공천설도 거론되고 있다.

성동을에선 새누리당 진수희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사무총장이 동지들에서 6선의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와 4선의 민주당 청정호 의원의 대결이 예상된다. 사대문에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새누리당 이성현 의원, 민주당 우성호 전 의원이 4년 만에 '산후회' 간 리턴매치를 펼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벨트'에서의 격전도 주목된다. 아란 대권 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비법률가를 하고 있는 사상규에는 권철원 전 주일 대사와 'MJB'인 김대식 전 국민회의 부위원장 등이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곳

서울 종로

이동관·조운선 vs 정세균

정치 1번지서 비매치

부산 사상

낙동강 문제인 돌풍에

맞상대 전락공천 검토

대구 수성갑

군포 떠난 김부겸 최고

친박 3선 이한규에 도전

■ 4·11총선 격전지 여야 예상 후보

지역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야권
서울 종로구	조운선 의원 이동관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서울 중구	나경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은경 전 KBS 앵커	유선호 의원
서울 성동구	진수희 의원	임종석 사무총장
서울 광진구	권태기 의원	전해숙 의원
서울 서대문구	이성현 의원	우성호 전 대변인
서울 양천구	김배한 전 새정치당 박선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영진 전 대변인
서울 동작구	정몽준 전 대표	천영배 전 최고위원 이계안 전 의원
서울 강남구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허준형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정동영 상임고문 전현희 의원
인천 부평구	김민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홍종표 의원
광주 서구	이명박 의원	김영환 의원
부산 사상구	권철원 전 국회의원 김대식 전 국민회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대항의 고실 중	문태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부산 북·중구	허태열 의원	문성근 최고위원
대구 수성구	이한규 의원	김부겸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일대	손학규 의원	성상철 통일민주당 공동대표
전북 전주완산구	정문호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창호 전 전북도지사
강남 사천사	이명박 전 사무총장	강기갑 통합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원내총무 박근태(왼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현안들을 갖고 새 당명을 내건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e@seoul.co.kr

■ 4·11총선 격전지 여야 예상 후보

지역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야권
서울 종로구	조윤선 의원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서울 중구	나경원 전 의원 신은경 전 KBS 앵커	유선호 의원
서울 성동구	진수희 의원	임종석 사무총장
서울 광진구갑	권택기 의원	전혜숙 의원
서울 서대문구갑	이성현 의원	우상호 전 대변인
서울 양천구갑	김해진 전 특임차관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영 전 대변인
서울 동작구	정몽준 전 대표	천정배 전 최고위원 이계안 전 의원
서울 강남구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허준영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정동영 상임고문 전현희 의원
인천 부평구	김연광 전 청와대 정부1비서관	홍영표 의원
광주 서구	이정현 의원	김영진 의원
부산 사상구	권철현 전 주일대사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항마 고심 중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부산 북·강서구	허태열 의원	문성근 최고위원
대구 수성구갑	이한구 의원	김부겸 최고위원
경기 고양덕양구갑	손범규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전북 전주완산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
경남 사천시	이방호 전 사무총장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

결정 후 보도문

- **반론보도문** 서울신문 2월 17일 자 3면 'FTA 혈전 ...' 제하의 기사와 관련, 새누리당 조용균 예비후보는 서울신문이 인천 부평을(乙)을 단독 후보지로 예상 보도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보도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4. 경고

의 결 번 호	2012국선96(시심)
시정 요구인	이 학 영 경기도 군포시 광정동 1125-2 보람타워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경기헤럴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5-2 태을빌딩 6층 대표이사 임 종 호
심의대상기사	경기헤럴드 2012년 3월 26일자 1면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의 숨겨진 도덕성」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경기헤럴드에 <별지 1>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경기 군포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피시정요구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의 과거 범죄 사실을 부각하며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당 후보의 반박 또는 해명 내용을 신지 않아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의 숨겨진 도덕성

일부 군포시민, 후보자로서의 자격 의구심 증폭
 흥기로 경비를 찢었다면사퇴해야
 이학영 후보가 당선되면
 과거행적에 면죄부 받는 것

지난 13일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수도권에서 군포시를 가장 먼저 방문할 정도로 군포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점에 최경신 후보의 무소속 불출마로 하수진 후보와 일부 시민들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문제점이 심각해

지고 있다.

군포시에서의 민주당 경선과 공천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공천문제로 김부겸 의원이 먹살을 잡히는 치욕을 당하는 수모와 탈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단일화에 성공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군포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암흑했던 옛 과거행적으로 인해 시민들이 국회의원 자질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이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후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학영 후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상임 공동대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 이사, 한국

YMCA 전 총장 등을 역임하여 시민사회의 대부로 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자가 과거에 강도짓을 하여 구속수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본지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시민이 있어 이학영 후보의 과거에 대한 진실공방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1979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27일 오전 10시반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최원석씨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이 집 경비원 김영철씨의 왼쪽 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금품을 털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관악경찰서 방배파출소 홍의중 순경과 격투 끝에 주범 이학영(27)은 붙잡히고 오승호 등 2명은 그대로 달아났다. 범인들은 최씨 집의 대문벨을 누른 뒤 경비원 김씨가 어디서 왔느냐고 문자 심부름 왔다고 대답, 김씨가 문을 열자 갑자기 김씨의 왼쪽 옆구리를 과도로 찌르고 반항하는 김씨와 10여분간 싸움을 벌였다.”는 기사와 같은 날짜 경향신문에서는 “범인들은 이 날 최씨집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선물을 가져왔다고 마당으로 들어와 경비원 김씨를 20cm의 등산칼로 위협, 김씨가 ‘강도야’하고 소리치자 김씨의 왼쪽 옆구리 등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고 신고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학영 후보의 과거 행적이 법적으로 형량을 채웠다 해도 도덕적인 책임은 면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를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경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에 몸을 담았던 이학영 후보에 대해 군포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에서는 어떠한 성명서 발표 하나 없어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군포시 일부 시민들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면 군포시민을 조롱하고 군포시를 졸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 가관인 것은 학창시절부터 존경해 온 선배로 민주통합당이 군포시민을 위해 능력있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큰 인물을 공천했다는 김부겸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학영 후보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김부겸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부겸 의원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군포시 궁내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학영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과거 강도짓이 사실이라면 군포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것에 이해하지만, 칼로 사람을 찌른 것에 질타를 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리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과거의 잘못을 법적으로 다 채웠고, 과거의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것을 옳지 않다. 또한 1979년 반독재 유신 반대 단체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의 집을 털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학영 후보를 두둔하였다.

하수진 예비후보는 최경신 후보의 무소속 불출마에 대해 “강도가 마음 약한 사람을 잡아 주지 않았네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전개하는 활동의 목적은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과거 강도짓을 한 사람도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명분을 쥐고 되는지에 대한 답은 이번 4.11선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진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의 숨겨진 도덕성

일부 군포시민, 후보자로서의 자격 의구심 증폭

흥기로 경비를 찢었다면 사퇴해야

이학영 후보가 당선되면 과거행적에 면제부 받는 것

지난 13일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수도권에서 군포시를 가장 먼저 방문할 정도로 군포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점에 최경신 후보의 무소속 불출마로 하수진 후보와 일부 시민들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군포시에서의 민주당 경선과 공천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공천문제로 김부겸 의원이 먹살을 잡히는 차이를 당하는 수모와 탈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단일화에 성공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군포시 민주당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압축했던 옛 과거행적으로 인해 시민들이 국회의원 자질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이 의구심을 바릴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후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

이학영 후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상임공동대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 전 이사, 한국YMCA 전 총장 등을 역임하여 시민사회의 대부로 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

야 할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자가 과거에 강도짓을 하여 구속수감되었는 소식이 알려지자 본지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시민이 있어 이학영 후보의 과거에 대한 진실공방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1979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27일 오전 10시반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최원석씨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이 집 경비원 김영철씨의 왼쪽옆구리를 과도로 찢어 중태에 빠뜨리고 금품을 탈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관악경찰서 방배파출소 홍의중 순경과 격투 끝에 주범 이학영(27)은 붙잡히고 오승호 등 2명은 그대로 달아났다. 범인들은 최씨집의 대문벨을 누른 뒤 경비원 김씨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심부름 왔다고 대답. 김씨가 문을 열자 갑자기 김씨의 왼쪽옆구리를 과도로 찢고 반항하는 김씨와 10여분간 싸움을 벌였다"는 기사와 같은 날짜 경향신문에서는 "범인들은 이날 최씨집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선물을 가져왔으며 마당으로 들어와 경비원 김씨를 20cm의 등산칼로 위협, 김씨가 '강도야' 하고 소리치자 김씨의 왼쪽

쪽옆구리 등을 마구 찢어 중태에 빠뜨렸다"고 실고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학영 후보의 과거 행적이 법적으로 형량을 채웠다 해도 도덕적인 책임은 면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를 위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경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에 몸을 담았던 이학영 후보에 대해 군포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에서는 어떠한 성명서 발표 하나 없어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나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군포시 일부 시민들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면 군포시민을 조롱하고 군포시를 홀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 가관인 것은 "학창시절부터 존경해 온 선배로 민주당통합당이 군포시민을 위해 능력있고 중앙정계에 영향력이 있는 큰 인물을 공천했다는 김부겸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학영 후보자 문자메

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김부겸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부겸 의원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군포시 공내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학영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과거 강도짓이 사실이라면 군포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것에 이해하지만 칼로 사람을 찢은 것에 질타를 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리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과거의 잘못을 법적으로 다 채웠고, 과거의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것을 옳지 않다. 또한 '1979년 반독재 유신반대 단체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의 집을 털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학영 후보를 두둔하였다.

하수진 예비후보는 최경신 후보의 무소속 불출마에 대해 "강도가 마음 약한 사람을 잡아 주지않았네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전개하는 활동의 목적은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만들기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과거 강도짓을 한 사람도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명분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이번 4.11선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편집부 기자 rch2927@korea.com

의 결 번 호	2012국선117(시심)
시정요구인	강 석 진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100 4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거창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7-4 대표이사 민 호 현
심의대상기사	거창신문 2012년 4월 2일자 1면 「이번 없는 총선, 1강(強) 독주체제 굳어졌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거창신문에 <별지 1>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경남 산청·함양·거창 선거구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피시정요구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사 본문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11총선 D-9

이번 없는 총선, 1강(強) 독주체제 굳어졌다.

무소속·야권연대 실패 영향, 추격권 벗어난 듯

7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지난 29일 거창읍 유세를 시작으로 열전 13일간의 선거운동을 시작한 산청, 함양, 거창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번 없는 1강(強) 독주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무소속 태풍과 연대, 야권 단일화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했던 바닥 민심은 후보등록과 본선이 시작되면서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현역 신성범의원의 공천이 어렵다는 기류가 초반에 형성되기도 했으나 현역을 뛰어넘는 확실한 대안론 부재와 새누리당내 박근혜 대망론과 독주체제를 지탱하는 친박사단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쇄신 그룹인 민본21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신 의원의 낙점이 결정되면서부터 선거의 무게추는 기울기 시작했다는 여론이다.

무소속 강석진 후보쪽의 공천 불공정 시비에 따른 재심 요구 등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으나 찬잔속의 미풍으로 묻히고 무소속과 야권을 아우르는 범야권후보 연대 시도가 무산되면서 양강(強) 구도를 형성하려던 도전자들의 선거전략도 각자 도생의 길 모색으로 힘이 분산되는 양상이다.

선거 초반인 2월초에는 새누리당 신성범 후보

와 무소속 강석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엇치락뒤치락 할 만큼 접전이었으나 강후보의 새누리당 입당 보류와 재입당 승인, 공천탈락 재심요구 등으로 이어진 악재들이 표의 이탈 요인으로 꼽힌다.

원칙없는 오만과 민심에 역행한 새누리당 공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군민후보로 직접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전직 군·도의원과 현역 군의원, 각계의 지지선언을 등에 업고 반전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상승기류를 탈만한 정치적 이슈와 명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새누리당 텃밭으로 인식되는 산청·함양·거창의 바닥 민심의 높은 벽과, 공천에서 탈락한 양동인후보를 비롯한 반 신성범 정서와 세력들을 끌어안는데 실패한 게 고전의 주된 원인이라 여론이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때의 선전이 낙천발표를 기점으로 주춤했고 무소속 연대 실패로 반등 기회를 놓친 후 현역 공천자의 재선에 따른 힘있는 역할론과 기대심리, 고착화된 지역정서까지 더해져 신 의원 독주 체제를 굳혀가는 판세라는 게 정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지난 3월5일 새누리당 공천 발표 직후 신성범후보의 공천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무소속 연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타이밍을 놓쳤고,

출마를 접은 후보들의 표가 분산되면서 기회선점의 호기를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통합진보당의 권문상후보의 경우, 단일화 이후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후보 개인의 상품성과 선명성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지역정서의 한계와 표의 확장성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결행한 김창호후보 또한 명분과 결단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두꺼운 벽이 쉽지 않은 한계다.

일각에서는 이슈와 재미가 없는 총선이라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적극 투표의사를 나타내는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권자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중·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층 또한 한자리 숫자로 줄어들고 지지 후보를 이미 정한 유권자들이 늘면서 선거 판세는 정해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번주부터는 총반전으로 접어드는 시기인만큼 1위 후보와 벌어진 격차는 추격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현직도·군의원들과 유권자연대의 활동이 판세에 어느정도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거창신문

정수기와 우호
일동정수기 판매
미니멀리즘정수기, 배온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세습기, 연수기
정호나이스 거창점
945-2580, 010-3043-2300

명품 홍삼 "충성명작 거창점"
중부대학교 최우수 고급브랜드
기술력 특이 · 차별화된 유효성분
전국무도매점 · 전화주문 066 944-2662
거창읍 김천리 거창교(1교) 남단
(구, 일산한의원 자리)

제 986호 2012년 4월 2일 월요일(창간 1989년 8월 15일)

E-mail : gcnnews@hanmail.net

대표전화 055-943-5850 Fax 055-943-5855

4.11 총선 D-9

이번 없는 총선. 1강(強) 독주체제 굳어졌다

무소속 · 야권연대 실패 영향, 추격권 벗어난 듯

7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지난 29일 거창읍 유세를 시작으로 열린 13일간의 선거운동을 시작한 신형, 함양, 거창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번없는 1강(強) 독주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무소속 태풍과 연대, 야권 단일화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됐던 바둑 민심은 후보등록과 본선이 시작되면서 출렁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현역 신성범의원의 공천이 어렵다는 기류가 초반에 형성되기도 했으나 현역을 뛰어넘는 확실한 대안론 부재와 새누리당내 박근혜 대망론과 독주체제를 지향하는 진박사단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채신그룹인 민본21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신 의원의 낙점이 결정되면서부터 선거의 무게추는 기울기 시작했다는 여론이다.

무소속 강석진 후보쪽의 공천 불공정 시비에 따른 재심 요구 등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으나 찻잔속의 미풍으로 묻히고 무소속과 야권을 아우르는 범야권후보 연대 시도가 무산되면서 양강(兩) 구도를 형성하려던 도전자들의 선거전략도 각자도생의 길로 모색으로 힘이 분산되는 양상이다.

선거 초반인 2월초에는 새누리당 신성범후보와 무소속 강석진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내에서 엇갈리 뒤차라 활만큼 접전이었으나 강후보의 새누리당 입당 보류와 재입당 승인, 공천탈락, 재심요구 등으로 이어진 악재들이 표의 이탈 요인으로 꼽힌다.

원칙없는 오만과 민심에 역행한 새누리당 공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군민후보로 직접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전직 군 · 도의원과 현역 군의원,

각계의 지지선언을 등에 업고 반전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상승기류를 탈만한 정치적 이슈와 명분이 부족하게 현실이다. 특히 새누리당 텃밭으로 인식되는 산청 · 함양 · 거창의 바둑 민심과 높은 벽과, 공천에서 탈락한 양동인후보를 비롯한 반 신성범 정서와 세력들을 끌어안는데 실패한 고전의 주된 원인이라 여론이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때의 선전이 낙천발표를 기점으로 주춤했고 무소속 연대 실패로 반동 기회를 놓친 후 현역 공천자의 재산에 따른 힘있는 역합론과 기대심리, 고착화된 지역정서까지 더해져 신 의원 독주 체제를 굳혀가는 판세라는 게 정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지난 3월5일 새누리당 공천 발표 직후 신성범후보의 공천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무소속 연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타이밍을 놓쳤고, 출마를 잡은 후보들의 표가 분산되면서 기회선점의 호기를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통합진보당의 권문상후보의 경우, 단일화 이후 지지율이 소

폭 상승하고 후보 개인의 상품성과 선행성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지역정서의 한계와 표의 확장성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결행한 김창호후보 또한 명분과 결단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두거름 백이 잡지않은 한계다.

일각에서는 이슈와 재미가 없는 총선이라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직구 투표의사를 나타내는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권자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중 ·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층 또한 한자리 숫자로 줄어들고 지지 후보를 이미 정한 유권자들이 늘면서 선거 판세는 정해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번주부터는 총선전으로 접어드는 시기인만큼 1위 후보와 벌어진 격차는 추격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 · 현직 도 · 군의원들과 유권자연대의 활동이 판세에 어느정도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신형군향양군거창군 후원회 안내광고
www.sbunshin.co.kr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새누리당

소신과 용기로 바른정치를 하겠습니다.

경력

- 거창 위원중학교 졸업
- 거창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인문학과 졸업
- KBS 사회부, 정치부 기자
- KBS 모스크바 지국장
- 18대 국회의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한나라당 채신특별위원회 위원

· 후원회사무실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06-8번지(2F)
T. 055) 944-4240

무소속 강석진

거합산 군민후보 추대

전 · 현직 군 · 도의원 등
군민연합(가칭)구성 - 힘 실어주기

4.11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강석진후보를 신형, 함양, 거창 군민후보로 추대하기위한 군민연합(가칭)이 결성돼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지난 26일(월) 오전11시 강석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추대위원회에서는 전 · 현직 군 · 도의원과 지지자 100여명이 모여 거합산의 미래를 강석진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군민들에게 직접 심판받고 강후보를 군민후보로 추대했다.

군민연합측에 따르면 이날 추대위에 참여한 인사로는 거창의 신현보, 정종가, 김길수, 함양의 이종우 전 도의원, 류영수, 김재권, 강철우 거창군의원, 정영명, 김무효, 강신봉, 이종봉, 이문형, 이창도, 정순우, 박점용, 김정화, 조성재, 강광자, 오임수, 임종기 전 거창군의원, 박순근, 강대수, 강신원, 한윤용, 정진위, 박종호, 박성서 전 함양군의원, 강정호, 이상근, 김상권, 공용식, 문영진, 김호기 전 산청군의원 등이다.

1신성범

신성범과 함께하는 희망후원 안내

- ▶ 농 업 : 036-01-138493
- ▶ 예금주 : 국회의원 신성범 후원회

· 홈페이지 (www.sbunshin.com)의
· 후원하기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결제

의 결 번 호	2012국선119(시심)
시정요구인	박 요 찬 경기 과천시 중앙동 40-12 대상빌딩 5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과천저널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5 그레이스호텔 3F 대표이사 양 해 순
심의대상기사	과천저널 2012년 4월 4일자 1면 우측 상단 「민주통합당 송호창후보 지지 선언」, 같은 날짜 1면 좌측 하단 「송호창 민주통합당후보 '시민과 만나다」 및 같은 날짜 3면 「'총선후보, 시민과 만나다」 민주통합당 송호창 후보,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과천저널 1면에 <별지 1>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경기도 과천·의왕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 대상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피시정요구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지선언, 후보 초청 토론회 내용 중 출마의 변과 공약 사항 등을 부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인이 토론회를 불참했다는 표현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토론회와 관계없는 후원회장과의 사진 등을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며 경쟁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사과문의 게재를 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9조(특별기획기사)를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통합당 송호창후보 지지 선언

과천의 참된 변화를 위한 시민모임

(구, 과천시장주민소환본부)

과천의 참된 변화를 위한 시민모임(대표 강구원, 이하 참변화모임)이 3일 민주통합당 송호창 후보를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선언했다.

지난해 과천시장주민소환본부에서 활동했던 시민들로 대부분 구성된 참변화모임은 ‘새로운 과천의 변화’를 화두로 하는 시민단체이다. 참변화 모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당이 독식하는 풍토 하에 시는 변화와 발전은 요원함을 깨닫고 진정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쉽과 실정을 심판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 송호창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강구원 대표는 “과천의 16년은 무조건적인 정당지지결과, 위정자의 오만과 독선이

팬배하여 국책사업(정부청사이전, 보금자리유치)으로 과천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무능함을 보여 줌으로써 과천시민을 존중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요찬후보는 시민과의 토론회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한 ‘과천의 참된 변화를 위한 시민모임(구, 과천시장주민소환본부)’은 송호창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민주당합당후보, ‘시민과 만나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저널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발

전과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하는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박요찬 후보가 뒤늦게 불참 통보를 하는 바람에, 당초 여·야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정견과 소신을 밝히고 소통하는 만남의 자리를 계획했으나 무산되었고, 송호창 민주당합당 후보만 단독으로 참석한 가운데 최성범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과천저널 주최로 ‘과천의 참변화를 위한 시민모임’, ‘원칙과 신뢰 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여 마련한 이날 대담·토론회는 3월 29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민회관 세미나실에서 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호창 후보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부동층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된 자리가 되었다. (3면 기사 내용 생략)

6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확정지분제, 수주의 관건 되나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이 3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에 마감되었다. 과천시에서는 6단지를 재건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시민과 만나다’를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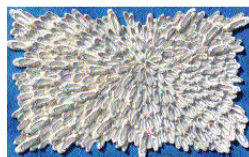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지지 선언

과천의 참된 변화를 위한 시민모임(구, 과천시장주민소환본부)

과천의 참된 변화를 위한 시민모임(구, 과천시장주민소환본부)은 3월 29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민회관 세미나실에서 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호창 후보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부동층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된 자리가 되었다. (3면 기사 내용 생략)

갤러리 ‘다선’ 개관

김재선展 **꿈꾸는 방랑자**



과천시 갤러리에서 4월 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과천시에서는 4월11일 실시되는 과천·의왕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합당 송호창후보 대담·토론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여·야 후보의 대담 토론을 실시했다. 과천의 변화와 도약 어떻게 가능한가

5. 기각

의 결 번 호	2012국선25(시심)
시정요구인	허 동 준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65-12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12년 2월 13일자 5면 「정몽준·이계안 접전 ... 인재근은 신지호 크게 앞서」 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일간지 지면에 별지 공식사과문을 발표하라
이 유	민주통합당 동작을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총선 가상 대결에서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의원, 진보신당 김종철 부대표만의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동작을 선거구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선이 끝나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된 것처럼 비취지고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와 같은 날짜 중앙일보 4면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히고 있는데, 전직 지역구 의원을 현직 위원장보다 우선하고, 또한 당내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당내 지지도 조사 1위 후보에 한정해 가상대결을 한다고 표기하였다. 또한 피시정요구인이 낸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피시정요구인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조사한 총선지지도 조사결과, 동작구의 민주통합당 당내 지지율은 천정배 22.2%, 이계안 20.6%, 김상진 6.9%, 허동준 5.4% 순으로 나왔으며, 민주통합당 내 각 예비후보를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로 다른 당 후보와 가상대결을 한 결과 시정요구인의 경우 가장 적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정몽준(36.2%) 대 이계안(36.4%), 정몽준(38.3%) 대 천정배(35.0%), 정몽준(41.5%) 대 시정요구인(24.4%)]. 여론조사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는 해당 자료 및 근거의 신뢰성, 객관성, 합리성에 달린 바, 피시정요구인이 조사한 여론조사의 방법 및 결과가 본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위반했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다른 이유가 없으며, 피시정요구인이 내세운 가상대결 후보 선정기준 또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몽준·이계안 접전... 인재근은 신지호 크게 앞서

서울 지역 살펴보니
은평을 이재오 34% 김성호 21%
서대문을 정두언 34% 김영호 28%

19대 총선의 대세를 좌우할 서울에서도 야당의 강세 조짐이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지역 5곳 중 3곳은 새누리당 중진(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과 새신파의 리더 격인 정두언 의원이 나선 지역이다. 그러나 이들도 야권이 선거 연대를 성사시키거나 전략공천에 나설 경우 안

심할 수 없는 처지다.

우선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동작을 정몽준 의원의 총선 형세가 만만찮다. 정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이계안 전 의원에게 36.2% 대 36.4%로 근소하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오차범위 내의 차이이므로 우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작을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 45.7%, 새누리당 27.4%로 후보 간 지지율 격차보다 훨씬 컸다. 당의 인기는 없지만 정몽준 의원이 '개인이'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진보신당의 김종철 부대표가 7.1%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략)

중앙일보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4·11 총선 여론조사 5

정몽준·이계안 접전 ... 인재근은 신지호 크게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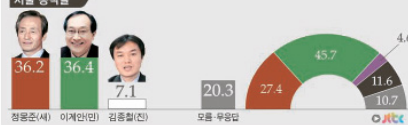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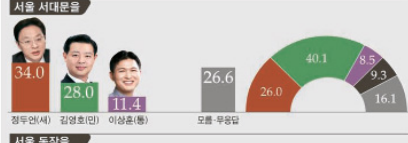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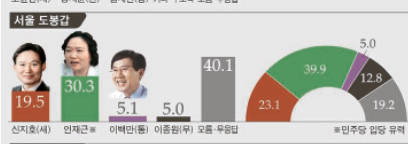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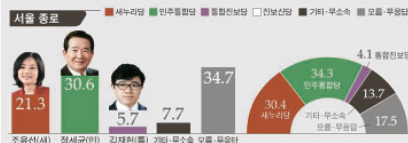
(동작을 36.2%)

(36.4%)

(김근태 부인·도봉갑 30.3%)

(19.6%)

19대 총선 여론조사 단위 %



서울 지역 살펴보니

은평을 이재오 34% 김성호 21%

서대문을 정두언 34% 김영호 28%

19대 총선의 대세를 좌우할 서울에서도 야당의 강세 조짐이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지역 5곳 중 3곳은 새누리당 중진(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과 새신파의 리더 격인 정두언 의원이 나선 지역이다. 그러나 이들도 야권이 선거 연대를 성사시키거나 전략공천에 나설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우선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동작을 정몽준 의원의 총선 형세가 만만찮다. 정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이계안 전 의원에게 36.2% 대 36.4%로 근소하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오차범위 내의 차이이므로 우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작을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 45.7%, 새누리당 27.4%로 후보 간 지지율 격차보다 훨씬 컸다. 당의 인기는 없지만 정몽준 의원이 '개인이'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진보신당의 김종철 부대표가 7.1%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은평을과 서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입각에서 '용병 대상'으로 지목당한 은평을을 이재오 의원은 민주통합당 김성호 지역위원장을 34.0% 대 20.5%로 밀리감치 않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전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10.5%)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아직은 이 의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이 33.6%로 새누리당(29.7%)을 앞선다.

서대문을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민주통합당 김영호 지역위원장에게 34.0% 대 28.0%로 앞섰다. 이 지역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 40.1%이 새누리당(26.0%)을 앞선다. 두 지역은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 지지율만 충분히 끌어들이거나 야권연대가 성사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반면 새누리당 여성 초선(조윤선)과 민주통합당 4선 중진(정세균)의 대결구도로 판세를 끌고 있는 종로·영등포 정 의원이 30.6%로 조 의원(21.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당 지지율에선 새누리당(30.4%)과 민주통합당(34.3%)의 차이가 크진 않았다. 정 의원이 아직 당 지지율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도봉갑에선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과 부인인 민주통합당 입각이 유력시되는 인재근(사)과 현재인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이 맞붙을 경우 30.3% 대 19.5%로 인세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선 이복남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꺾었다는 응답은 5.1%였다.

김영호 28%
wormhole@joongang.co.kr

의 결 번 호	2012국선98(시심)
시정요구인	서 미 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6일자 A10면 「4·11총선 D-16」 20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 188명 확정... 23%가 병역 미필 稅체납 경력 26명」 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동아일보(종이신문)의 정치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 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의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 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재산신고 액을 부채 5억여 원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에 <별지 1>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 였다. 살피건대 시정요구가 신청된 후 피시정요구인은 지면을 통해 <별지 2>의 정정보도 문을 게재하여 시정요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므로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3%가 병역 미필 稅체납 경력 26명

20개정당 비례대표 후보 188명 확정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군대를 다녀 오지 않은 후보가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구 후보의 군 미필 비율(17.5%)보다 높은 것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의

미필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30%, 민주통합당은 25%였다. (중략)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5억3124만 원이었다. 이는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를 제외 한 나머지 지역구 후보 926명의 평균 재산 18억여 원보다 적은 것이다. 정당별로는 선진당 404억 349만 원, 새누리당 22억2,483만 원, 민주당 6억 4,134만 원, 진보당 2억9,145만 원의 순이었다.

재산 신고액 1위는 선진당 비례대표 8번의 안 대를 후보로 377억9,032만 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 순위에서는 가자!대국 민중심당의 구천서 후보(47억700만원)와 새누리당의 현영희 후보(40억9,200만 원)가 안 후보(38억2,900만 원)보다 많았다. 새누리당 서미경 후보는 신고 재산이 -5억4,500만 원이었다. (후략)

신청 후 보도문

바로잡습니다

◇본보 3월 26일자 A10면 기사 중 새누리당 서미경 비례대표 후보의 신고재산이 부채만 5억4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선관위의 입력 착오로 잘못 나갔습니다. 재산 1억9957만 원으로 바로잡습니다.

東亞日報

2012년 03월 26일 월요일
A10면 종합

20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 188명 확정

23%가 병역 미필 稅체납 경력 26명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후보가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구 후보의 군 미필 비율(17.5%)보다 높은 것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의 미필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30%, 민주통합당은 25%였다.

전과가 있는 비례대표 후보도 전체 188명 중 38명으로 20.2%에 달했다. 새누리당 후보는 44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가 없는 반면 진보당은 20명 중 11명이, 민주당은 38명 중 8명이 전과가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공안 사범이었다.

평균재산 선진당 40억

새누리 22억-민주 6억

5명중 1명 前科- 진보 최대

軍미필 새누리 7명-민주 5명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정몽헌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장기표 후보였다. 민중당과 국가보안법, 집회법 위반 등 4건의 전과가 있었다. 군소 정당에는 사기나 장물 취득, 특수 절도, 음행 등의 전과가 있는 후보가 8명 포함됐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는 새누리당 8명, 진보당 4명, 민주당 3명 등 모두 2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한나라당 이태희 후보는 현재도 4763만 원, '가자!대국민중심당' 이선우 후보는 22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옛 자유민주당이 이달 초 바뀐 법령으로, 새누리당과는 아주 상관이 없다. 한나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1명씩만 후보를 냈다. 선진당 합영이 후보 등 9명은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실적이 없다고 신고했다.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5억3124만 원이었다. 이는 새누리당 정경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후보 926명의 평균 재산 18억에 훨씬 적은 것이다. 정당별로는 선진당 40억4349만 원, 새누리당 22억2483만 원, 민주당 6억4134만 원, 진보당 2억9145만 원의 순서

재산 신고액 상위 10위 비례대표 후보

순위	정당	후보자	신고재산(억)
1	자유선진당	한대호	377억9322만
2	새누리당	한영희	181억5200만
3	기생당	구천서	119억8200만
4	정통민주당	유상두	103억700만
5	미래연합	김하영	101억1400만
6	국민당	김승제	85억1100만
7	새누리당	유명순	83억8300만
8	국민당	박재국	85억5324만
9	자유선진당	강창규	68억9900만
10	새누리당	류지영	67억6200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의 정당별 군 미필자 비율

정당	군 미필자	군 미필자	군 미필자	미필자 비율(%)
새누리당	7	16	23	30.4
민주통합당	5	15	20	25.0
자유선진당	3	7	10	30.0
통합진보당	3	7	10	30.0
7번 정당	7	39	46	15.2
합계	25	84	109	22.9

었다.

재산 신고액 1위는 선진당 비례대표 8번의 안대호 후보로 377억9032만 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 순위에서는 가자!대국민중심당의 구천서 후보(47억700만 원)와 새누리당의 현영희 후보(40억9200만 원)가 안 후보(38억2900만 원)보다 많았다. 새누리당 서미경 후보는 신고 재산이 -5억4500만 원이었다.

최연소 후보는 청년당 우원철 후보로 26세였고, 가자!대국민중심당의 윤영오 후보가 75세로 최고령이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6번인 권화 한국인 박노자 후보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봉제면 이름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티코노프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다.

총 20개 정당의 전체 후보 188명 중 여성은 79명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대 출수 순번에는 여성을 배치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어 군소정당은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많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69명), 대졸(68명), 대학원 수료(15명) 순이었다. 진보신당은 학벌을 벗어나겠다는 충신 공약에 따라 7명 후보의 학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기자 eaj@donga.com

의 결 번 호	2012국선99(시심)
시정요구인	서 미 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2년 3월 26일자 6면 「평균재산 자유선진당 40억 1위 새누리 22억·민주 6억·진보 2억」 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서울신문(종이신문)의 정치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서울신문 홈페이지(http://www.seoul.co.kr)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재산신고액을 부채 5억여 원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에 <별지 1>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시정요구가 신청된 후 피시정요구인은 지면을 통해 <별지 2>의 보도문을 게재하여 시정요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므로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 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평균재산 자유선진당 40억 1위 새누리 22억·민주 6억·진보 2억

9명 세금 '0'...채납경력 26명

지난 24일 최종 확정된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모두 20개 정당의 188명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44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민주통합당 38명, 통합진보당 20명, 자유

선진당 16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54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3.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평균재산 15억...안대론 377억 1위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8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15억 3124만원이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등 1,000억원대 자산가 4명을 제외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13억 3,127만원보다 2억원 많다.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자유선진당 8

번을 받은 안대륜 후보로 377억 9,032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새누리당 현영희(23번) 후보가 181억 5,236만원, 가자! 대국민중심당 구천서(1번) 후보가 119억 8,28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이 많은 순으로 상위 10명 중 새누리당이 3명, 선진당과 국민생각이 각각2명이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는 상위 25인에도 없었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홍의락(20번) 후보로 24억 1,412만원의 재산을 지녔다.

• 박근혜 21억 · 한명숙

6,000만원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새누리당 서미경(33번) 후보로 부채액이 5억 4,587만원이 나 됐다. 재산이 적은 하위 10명 가운데 9명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았다. (후략)

총 20개 정당 188명 확정... 경쟁률 3.48대1

평균재산 자유선진당 40억 1위 새누리 22억·민주 6억·진보 2억

9명 세금 '0'... 체납경력 26명



지난 24일 최종 확정된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모두 20개 정당의 188명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44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민주통합당 38명, 통합진보당 20명, 자유선진당 16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54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3.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평균재산 15억... 안대륜 377억 1위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8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15억 3124만원이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등 1000여원에 자산가 4명을 제외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13억 3127만원보다 2억원 많다.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자유선진당 8번을 받은 안대륜 후보로 377억 9032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새누리당 현영희(23번) 후보가 181억 5236만원, 가자!대국민중심당 구천서(1번) 후보가 119억 828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이 많은 순으로 상위 10명 중 새누리당이 3명, 선진당과 국민생각이 각각 2명이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는 상위 25인에도 없었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홍의락(20번) 후보로 24억 1412만원의 재산을 지녔다.

●박근혜 21억·한명숙 6000만원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새누리당 서미경(33번) 후보로 부채액이 5억 4587만원이 나 됐다. 재산이 적은 하위 10명 가운데 9명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았다.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새누리당	22억 2483만원 (44명)
민주통합당	6억 4134만원 (38명)
자유선진당	40억 4349만원 (16명)
통합진보당	2억 9145만원 (20명)
국민생각	37억 5550만원 (7명)
진보신당	2억 4729만원 (7명)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5인

1 안대륜(선·8번)	377억 9032만원
2 현영희(새·23번)	181억 5236만원
3 구천서(가·1번)	119억 8284만원
4 유상두(정·2번)	103억 9782만원
5 김하영(마·1번)	101억 1494만원

비례대표 후보 재산 하위 5인

1 서미경(새·33번)	-5억 4587만원
2 김연재(정·1번)	-1억 740만원
3 서규석(선·15번)	-4700만원
4 오태영(정·2번)	-1000만원
5 윤금순(통·1번)	-810만원

세금 체납 전력 상위 5인 체납액

1 이태희(한·1번)	5664만원 (현 체납액 4783만원 포함)
2 안종범(새·12번)	1143만원
3 이재열(보·1번)	853만원
4 신형숙(새·41번)	426만원
5 백재형(민·7번)	409만원

※ 체납사항은 최근 5년간 통계, 이태희 후보 제외 모두 완납

※ 정당명은 (4)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선)자유선진당, (통)통합진보당, (가)가자!대국민중심당, (마)미래연합, (정)정의당, (보)보통민주당, (정)정통민주당, (한)한나라당

정당별 평균 재산은 자유선진당이 40억 43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생각이 평균 37억 5550만원으로 두번째였고 새누리당은 22억 2483만원이었다. 민주당의 평균 재산은 6억 4134만원이었다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각각 2억원대였다. 새누리당 11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산이 21억 8104만원, 민주당 15번 한명숙 대표는 6064만원이었다.

188명 후보들이 최근 5년간 낸 세금은 평균 1억 4133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후보도 9명이다. 체납 금액이 있는 후보자들도 26명으로 평균 체납액은 203만원이었다. 현재 체납 상태인 경우도 2명이었고 이 가운데 한나라당 이태희(1번) 후보는 현 체납액이 4783만원에 달했다.

●평균연령 52세... 지역구보다 2년 낮아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2세로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54세)보다 2년 낮다. 최연소 후보는 27세인 청년당 우원철(4번) 후보이고 최고령 후보는 가자!대국민중심당의 윤영오(2번) 후보로 75세다.

188명 가운데 남성 후보는 109명, 여성 후보는 79명이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출수 순번에 여성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들이 많아 30명의 차이가 났다. 가자!대국민중심당은 7명 후보 모두 남성이다.

진보신당은 학벌을 벗어나겠다는 총선 공약에 따라 7명 후보들의 학력을 모두 밝히지 않았다. 비례대표 6번을 받은 박노자 후보는 귀화한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지 않았던 탓에 본명인 '티코노프 블라디미르'로 명단에 올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신청 후 보도문

●알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33번 서미경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5억 4587만원으로 발표됐다면서 이를 1억 9957만원으로 바로잡는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2국선118(시심)
시정요구인	강 석 진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100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군민신문(거창군민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06-9 3층 대표이사 하 정 웅
심의대상기사	거창군민신문 2012년 4월 3일자 1면 「총선여론조사 신바람에 맥 못 추는 강바람」 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시정요구인은 거창군민신문에 <별지 1>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경남 산청·함양·거창 선거구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의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여론조사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는 해당 자료 및 근거의 신뢰성, 객관성, 합리성에 달린 바, 본 위원회가 피시정요구인의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이 조사한 여론조사의 방법 및 결과가 본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위반했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다른 이유가 없으며, 피시정요구인이 게재한 기사 제목 또한 다소 감정적이긴 하나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총선여론조사 신바람에 맥 못 추는 강바람

이번 여론조사는 본지와 알앤에스가 지난 4월 1일 산청·함양·거창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ARS방식에 의한 일반전화로 실시하였다. 피조사자의 선정방법은 할당표본추출, 표본오차율은 95%의 신뢰수준에 $\pm 2.53\%$, 응답률은 11.42%였다.

전체응답의 크기는 1,500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711명(47.40%), 여성은 789명(52.60%)이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99

명(13.27%), 30대가 190(12.67%), 40대가 263(17.53%), 50대가 271명(18.07%), 60대 이상이 577명(38.46%)이었다.

오는 4.11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전체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 신성범 후보가 44.20%, 통합진보당 권문상 후보가 8.70%, 무소속 구상식 후보가 0.70%, 무소속 김창호 후보가 4.60%, 무소속 정막선 후보가 1.90%, 무소속 김종덕 후보가 0.30%, 무소속 강석진 후보가 24.00%,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15.60%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신성범 후보가 거창군과 함양군 산청군에서 각각 38.30%, 50.80%,

46.80%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무소속의 강석진 후보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에서 각각 33.00%, 19.80%, 14.00%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통계보정은 2012년 2월 29일 현

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구 인구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자료는 거창 군민신문 홈페이지 (<http://gunmin.keocha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선여론조사 신바람에 맥 못 추는 강바람

(새)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무)무소속							
	기 호	기 호	기 호	기 호	기 호	기 호	기 호
	후 보 명	후 보 명	후 보 명	후 보 명	후 보 명	후 보 명	후 보 명
	지 지 도	지 지 도	지 지 도	지 지 도	지 지 도	지 지 도	지 지 도
	기호 1번 신성범(새)	기호 4번 권문상(통)	기호 6번 구상식(무)	기호 7번 김창호(무)	기호 8번 정막선(무)	기호 9번 김종덕(무)	기호 10번 강석진(무)
	44.20%	8.70%	0.70%	4.60%	1.90%	0.30%	24.00%

이번 여론조사는 본지와 알앤에스가 지난 4월 1일 산청·함양·거창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ARS 방식에 의한 일반전화로 실시하였다. 피조사자의 선정방법은 합당표본추출,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pm 2.53\%$, 응답률은 11.42%였다.

전체 응답의 크기는 1500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711명(47.40%), 여성은 789명(52.60%)이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99명(13.27%), 30대가 190명(12.67%), 40대가 263명(17.53%), 50대가 271명(18.07%), 60대 이상이 577명(38.46%)이었다. 오는 411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전체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 신성범 후보가 44.20%, 통합진보당 권문상 후보가 8.70%, 무소속 구상식 후보가 0.70%, 무소속 김창호 후보가 4.60%, 무소속 정막선 후보가 1.90%, 무소속 김종덕 후보가 0.30%, 무소속 강석진 후보가 24.00%,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

르겠다는 15.60%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신성범 후보가 거창군과 함양군 산청군에서 각각 38.30%, 50.80%, 46.80%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무소속의 강석진 후보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에서 각각 33.00%, 19.80%, 14.00%의 지지도

다.

이번 조사의 통계보정은 2012년 2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구 인구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자료는 거창군민신문 홈페이지 (<http://gunmin.keocha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 결 번 호	2012국선127(시심)
시정요구인	권 선 택 대전시 중구 선화동 해강빌딩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32 (오류동)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2년 3월 30일자 21면 「대전 근대문화재 수난시대」 제하의 칼럼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중도일보에 <별지 1>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대전 중구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별지 1>의 사과문 게재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해당 칼럼의 주된 취지는 시정요구인의 도청사 철거공약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미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 건축 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피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게재했다고 보기 힘드므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2조(기고 등)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정요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전 근대문화재 수난시대

〈중도시감〉임연희
인터넷방송국 취재팀장

도청사 철거공약 논란의 중심
‘근대도시’ 대전의 역사 부정
문화재 지정한 대전시는 뒷집

4·11 총선에 나선 권선택 후보가 등록문화재 18호인 충남도청을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 아직 이사도 가지 않은 도청건물이 때 이른 철거수난을 겪고 있다. 충남도청은 올해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 권 후보는 일제잔재인 도청건물을 철거해 이곳에 국립 한국예술종합

학교 제2캠퍼스와 한류문화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권 후보는 도청사 철거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전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그 중심에 중구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도청사 철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원도심상가변영회와 광복유족회가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반대로 대전문화연대는 80년 세월을 대전과 함께한 근대문화재의 가치를 폄하하는 공약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필자는 1주일 전 본보 인터넷 판에 '권선택, 제2오세훈 되려는가'라는 칼럼을 썼다. 권 후보의 도청철거 공약은 등록문화재의 개념자체를 모르고 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의 논리대로라면 등록문화재 1호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500개에 달하는 등록문화재를 '일제잔재 등록문화재 철거법'이라도 만들어 청산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의 공약이 어떻게든 실현될지 '공약(空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 정부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냈으며 중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권 후보가 근대도시 대전의 존재와 문화재를 폄하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사실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그의 주장대로 1932년 준공된 충남도청사는 부지선정은 물론 설계도 총독부 건축과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침략기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 내외부에 일본 상징문양들도 많다. 2002년 등록문화재 지정당시에도 문양에 관한 논란이 분분했지만 그 시대 건축기법이며 잘 보존된 근대건축물이어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의 중앙청사로 사용됐던 역사적 장소성도 도청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권 의원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다. 그러나 도청철거 논의에 앞서 대전이란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대전시사에 따르면 대전은 경부선(1904)과 호남선의 개통(1914)에 따라 기존 회덕군과 진잠군, 공주에 속한 일부지역을 통합한 식민지 신도시인 대전면(1914)에서 출발했다.

이후 대전은 교통의 요지로서 중부권 경제수탈의 거점이자 일본거류민이 실권을 장악한 식민지 신도시로 급성장해 충남도청 이전지로 부각된 것이다. 이 내용은 권 의원이 도청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들고 나온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충남도청사 본관 문양 도안의 상징성 연구(2009)'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옛 산업은행 대전지점(등록문화재 19호)은 일

제강점기 일본인 자본으로 운영됐던 곳이고 옛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등록문화재 98호)도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탈기관이었다. 2010년 중구 대흥동 재개발과정에서 무단 훼손된 뽕죽집(등록문화재 377호)은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 국장 관사였다.

충남이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등 1211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충북도 810건의 문화재가 있는 것에 비하면 대전은 181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나라의 보물이라는 국보는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이 시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17건의 등록문화재 거의가 일제강점기에 제작되거나 건립된 것들이다.

도청사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건 충남도가 아니라 대전시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 증개축이 쉽지 않아 꺼리는 충남도를 대전시가 설득했다고 한다. 이런 시가 근대도시 대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도청사 철거 논란에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만 후보의 공약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는 시의 대답을 믿어보겠다.

필자는 요즘 대전·충남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영상으로 인터뷰하고 있다. 후보들에게 빼놓지 않는 질문이 공약인데 이 가운데는 웃음이 터질 만큼 황당한 것들도 많다. 선거기간이어서 공개하긴 어렵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 권 후보의 도청철거 공약이 중구 구민들에게 획기적인 원도심 활성화 공약으로 먹힐지, 황당무계한 헛공약으로 인식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도시감

대전 근대문화재 수난시대



임 언 희 / 인터넷방송국 취재팀장

도청사 철거공약 논란의 중심 ‘근대도시’ 대전의 역사 부정 문화재 지정한 대전시는 뒷집

4·11 총선에 나선 권설텍 후보가 등록문화재 18호인 충남도청을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 아직 이시도 가지 않은 도청건물이 때 이른 철거수난을 겪고 있다. 충남도청은 올해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 권 후보는 일제강점기인 도청건물을 철거해 이곳에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캠퍼스와 한류문화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권 후보는 도청사 철거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전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그 중심에 중구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도청사 철거가 필수적

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원도심상가변영획과 광복유족회가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반대로 대전문화연대는 80년 세월을 대전과 함께한 근대문화재의 가치를 폄하하는 공약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필자는 1주일 전 본보 인터넷 판에 ‘권설텍, 제2호세운 되려는가’라는 칼럼을 썼다. 권 후보의 도청철거 공약은 등록문화재의 개념자체를 모르고 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의 논리대로라면 등록문화재 1호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500개에 달하는 등록문화재를 ‘일제강점기 등록문화재 철거법’이라도 만들어 청산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의 공약이 어떻게든 실현될지 ‘공약(空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 정부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냈으며 중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권 후보가 근대도시 대전의 존재와 문화재를 폄하하는 공약을 내렸다는 사실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그의 주장대로 1932년 준공된 충남도청사는 부지선정은 물론 설계도 총독부 건축과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 내외부에 일본 상징문양들도 많다. 2002년 등록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문양에 관한 논란이 분분했지만

그 시대 건축기법이며 잘 보존된 근대건축물이어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의 중앙청사로 사용됐던 역사적 장소성도 도청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권 의원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 그러나 도청철거 논의에 앞서 대전이란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대전시사에 따르면 대전은 경부선(1904)과 호남선의 개통(1914)에 따라 기존 회덕군과 진잠군, 공주에 속한 일부지역을 통합한 식민지 신도시인 대전면(1914)에서 출발했다.

이후 대전은 교통의 요지로서 중부권 경제수탈의 거점이자 일본거류민이 실권을 장악한 식민지 신도시로 급상승해 충남도청 이전지로 부각된 것이다. 이 내용은 권 의원이 도청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들고 나온 서술대 김민수 교수의 ‘충남도청사 분관 문양 도안의 상징성 연구(2009)’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옛 산업은행 대전지점(등록문화재 19호)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자본으로 운영됐던 곳이고 옛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등록문화재 98호)도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탈기관이었다. 2010년 중구 대용동 재개발과정에서 무단 훼손된 보족집(등록문화재 377호)은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국

장 관사였다.

충남이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사·도시정문화재 등 1211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충북도 810건의 문화재가 있는 것에 비하면 대전은 181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나라의 보물이라는 국보는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이 시·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17건의 등록문화재 거의가 일제강점기에 제작되거나 건립된 것들이다.

도청사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건 충남도가 아니라 대전시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 증개축이 쉽지 않아 꺼리는 충남도를 대전시가 설득했다고 한다. 이런 시가 근대도시 대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도청사 철거 논란에 덧붙여 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만 후보의 공약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는 시의 대답을 만나보겠다.

필자는 요즘 대전·충남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영상으로 인터뷰하고 있다. 후보들에게 빼놓지 않는 질문이 공약인데 이 가운데 웃음이 터질 만큼 황당한 것들도 많다. 선거기간이어서 공개하긴 어렵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 권 후보의 도청철거 공약이 중구 구민들에게 획기적인 원도심 활성화 공약으로 먹힐지, 황당무계한 헛공약으로 인식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6. 각 하

의 결 번 호	2012국선5(시심)
시정 요구인	박 석 삼 충남 계룡시 금암동 190
피시정요구인	모든 언론사
심의대상기사	모든 신문의 차기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각 언론사는 잠재적 대선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반드시 시정요구인을 포함해야 한다.
이 유	시정요구인은 201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사가 시정요구인을 제외한 일부 인사들에만 국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선거기간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설치·운영중인 우리 위원회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보도(약속) 이유로 취하된 시정요구

의 결 번 호	2012국선4(시심)
시정요구인	이 한 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37호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경북매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19 대표이사 최 윤 채
시정요구기사	경북매일 2012년 1월 12일자 1면 『한나라 전략공천 대구·경북 10여곳』 제하의 기사
신 청 취 지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 대상 기사에 대해 아래의 정정보도문 게재 및 인터넷판 해당 기사의 삭제와 해당 언론사에 대한 경고문 게재 및 경고·주의·권고 등의 조치를 요청함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본지는 지난 2012년 1월 12일자 1면 『한나라 전략공천 대구·경북 10여곳』 제하의 기사에서 “경북에서는 문경·예천, 고령·성주·칠곡, 경주시 등 3곳 정도가 전략공천 검토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한나라 전략공천 대구·경북 10여곳

한나라당이 오는 4·11 총선에서 전략공천 비율을 20%로 확정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전략공천 지역은 10군데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중략)

또 경북에서는 문경·예천, 고령·성주·칠곡, 경주시 등 3곳 정도가 전략공천 검토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한나라 전략공천 대구·경북 10여곳

한나라당이 오는 4·11 총선에서 전략공천 비율을 20%로 확정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전략공천 지역은 10군데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략공천 비율을 20%로 확정된 만큼, 어느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수도권과 영남권 등에서 5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은 10군데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달서구와 경북 포항남·울릉 2곳 외에 대구지역에서는 대구 달서구와 서구, 중·남구, 달성군 등 4곳 정도가 전략공천 검토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북에서는 문경·예천, 고령·성주·칠곡, 경주시 등 3곳 정도가 전략공천 검토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비대위 원과의 대화에서 대구와 경북의 여성 전략공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해 비대위차원에서 대구·경북의 전략공천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영입대상 인물에 맞춰 전략공천 지역이 정해질 가능성이 많아 지역 선정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전략공천 검토지역

대구

△달서구갑
△서구
△중·남구
△달성군

경북

△문경·예천
△고령·성주·칠곡
△경주시

현역불출마

△대구 달서을
△포항 남·울릉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기사입력 2012-01-12 오후 8:43

“문경·예천 전략공천 검토 사실 아니다”

한나라 이한성 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비대위의 쇄신 작업을 놓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쇄신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쇄신을 가로막고 비대위를 흔드는 언행은 자제돼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12일 본지가 보도한 ‘한나라당 대구·경북지역 10군데 전략공천’ (11일자 1면 보도)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북 문경·예천이 전략공천 검토대상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에 문의한 결과 비대위에서 전략공천을 20% 정도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 이외에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런데도 일부 후보가 언론보도를 인용, 지역민들에게 대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도 “대구·경북지역은 한나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략공천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지만, 아직 어느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매우 유동적”이라며 “전략공천지역은 현재 당지도부를 대행하는 비대위가 고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사 kjh@kbmaeil.com

의 결 번 호	2012국선41(시심)
시정요구인	정 선 진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16번지 영광빌딩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미디어안성(자치안성신문) 경기도 안성시 대천동 55-2번지 대표이사 최 용 진
시정요구기사	자치안성신문 2012년 2월 22일자 1면 「한미FTA에 대해 물으니 여권 예비후보 “폐기 안 돼” 야권 예비후보 “폐기·재협상”」 제하의 기사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자치안성신문 1면 우측 최상단에 아래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보도(한미FTA에 대해 물으니 여권 예비후보 “폐기 안돼” 야권 예비후보 “폐기·재협상”)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1. 제목 : 한미FTA 및 한중FTA 관련 보도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지 2월 22일자 인터넷보도(한미FTA에 대해 물으니 여권 예비후보 “폐기 안돼” 야권 예비후보 “폐기·재협상”)와 관련해 아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중FTA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인 김학용·안상정·이병호, 민주통합당의 윤종군·이재용, 통합진보당의 김익영, 미래연합 정선진 예비후보 모두 농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리고 미래연합의 정선진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 부분은 정선진 예비후보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없어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사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게 나간 것은 본지 실수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정선진 예비후보 및 독자여러분께 피해와 혼란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선거보도시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

**한미FTA에 대해 물으니
여권 예비후보 “폐기 안돼”
야권 예비후보 “폐기·재협상”
한미FTA·한중FTA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묻는다 ①**

본지가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해 국회비준이후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

고 있는 한미FTA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한미FTA에 대해 새누리당인 김학용·안상정·이병호 예비후보와 미래연합인 정선진 예비후보는 “폐기 반대”, 민주통합당인 윤종군·이재용 예비후보와 통합진보당인 김익영 후보 “폐기와 재협상”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본지가 현재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한미FTA 폐기와 관련해 예비후보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한 결과 이같이 답변했다.

여권의 후보들은 한미FTA에 대해 ‘국가의 신뢰와 국익을 위해 한미FTA 폐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야권의 후보들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의 경우 ‘현재 한미FTA는 잘못 체결됐으므로 폐기 후 재협상, 재협상이 안되면 폐기’라는 입장을 밝혀 소속 정당별로 입장 차이를 드러냈으며, 당론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또 현재 추진인 한중FTA에 대해서는 새누리

당인 김학용·안상정·이병호, 민주통합당의 윤종균·이재용, 통합진보당의 김익영, 미래연합 정선진 예비후보 모두 농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미래연합의 정선진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이외에도 한미FTA 폐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 대책 등에 질의했다.(관련기사 5면)

신청 후 보도문

한미FTA 및 한중FTA 관련 보도 정정보도문

본지 2월 22일자 인터넷보도(한미FTA에 대해 물으니 여권 예비후보 “폐기 안돼” 야권 예비후보 “폐기·재협상”)와 관련해 아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중FTA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인 김학용·안상정·이병호, 민주통합당의 윤종균·이재용, 통합진보당의 김익영, 미래연합 정선진 예비후보 모두 농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리고 미래연합의 정선진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 부분은 정선진 예비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없어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사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게 나간 것은 본지 실수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정선진 예비후보 및 독자여러분께 피해와 혼란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선거보도시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및 한중FTA 관련 보도 정정보도문

본지 2월 22일자 인터넷보도(한미FTA에 대해 물으니 여권 예비후보 “폐기 안돼” 야권 예비후보 “폐기·재협상”)와 관련해 아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중FTA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인 김학용·안상정·이병호, 민주통합당의 윤종균·이재용, 통합진보당의 김익영, 미래연합 정선진 예비후보 모두 농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리고 미래연합의 정선진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 부분은 정선진 예비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없어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사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게 나간 것은 본지 실수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정선진 예비후보 및 독자여러분께 피해와 혼란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선거보도시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결 번 호	2012국선62(시심)
시정요구인	이 종 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208 삼성빌딩 4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일자 A3면 「민주, 안양서도 “불법모집” 충돌」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3면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부제목 「선거인단 파문 수도권 확산」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 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동아일보 A3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2>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내용은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라.
이 유	시정요구인 민주통합당 안양만안구 이종걸 예비후보는 피시정요구인이 비록 인용 보도의 형식을 취했지만 제목에서부터 불법모집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시정요구인의 경선인단 모집이 불법인 것으로 보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시정요구인이 불법을 행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우리 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가 양측의 서면 및 구두 진술 그리고 안양시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원회의 구두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시정요구인이 대리등록의 불법 여부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반박을 충분히 신지 못하였고, 또한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이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시정요구인의 선거인단 모집 관련 사건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1. 제목 : 이종걸 예비후보 반론보도문
2. 내용 : 본지는 3월 8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로부터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안양시만안구 이종걸 예비후보 사무소의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을 보도한 본지 기사(3월 2일자 3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안양시만안구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한 대리등록 모집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광주광역시 동구 선거법 위반사

건은 선거법상 관여가 금지된 현직 통장이 관여하고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를 하는 등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안양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종걸 예비후보는 “합법적 경선인단 모집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중앙당에서 규정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충실히 선거인단을 모집했을 뿐 어떠한 불법적 모집도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보도내용

민주, 안양서도 “불법모집” 충돌

■ 선거인단 파문 수도권 확산

이종걸의원 사무소에서
경쟁후보측 항의-몸싸움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이 광주 전라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불거졌다.

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이종걸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같은 당 이종태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들이닥쳐 “불법 대리 등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30여 분간 집단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은 선거인단 모집 마지막 날이었다. 당시 사무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지지자 등 30여 명이 있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20여 개 책상에서 여성들이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인단 관련 업무를 하

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책상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서류가 쌓여 있었다.

이 후보 측은 “며칠 전부터 선거인단 부정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람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이 이뤄졌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2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당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인단 참여 독려 전화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충돌과 과열된 선거인단 모집 상황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총선 때가 되면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쪽으로 해당 지역 시도의원들이 줄을 서게 된다는 것. 그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이 제기된 안양의 이종걸 의원 사무실에도 당시 지방의원 2,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민주, 안양서도 “불법모집”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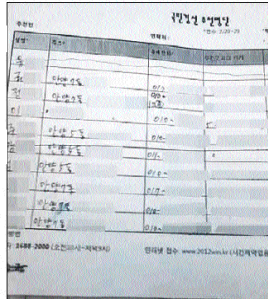
■ 선거인단 파문 수도권 확산

이종걸의원 사무소에서 경쟁후보측 항의-몸싸움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이 광주 전라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불거졌다.

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이종걸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같은 당 이종태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들이닥쳐 “불법 대리 등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30여 분간 집단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은 선거인단 모집 마지막 날이었다. 당시 사무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지지자 등 30여 명이 있었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동영상에는 20여 개 책상에서 여성들이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인단 관련 업무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책상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서류가 쌓여 있었다.

이 후보 측은 “며칠 전부터 선거인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촬영된 선거인단 명단. 익명 제보자 제공

단 부정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람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이 이뤄졌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2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당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인단 참여 독려 전화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충돌과 과열된 선거인단 모집 상황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총선 때가 되면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쪽으로 해당 지역 시도의원들이 줄을 서게 된다는 것. 그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이 제기된 안양의 이종걸 의원 사무실에도 당시 지방의원 2,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은 평소 닦아놓은 지지기반을 발판으로 각종 모임 및 단체명단을 입수해 선거인단 모집에 활용한다고 한다. 다른 운동원도 “○○○ 의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식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전 현직 공무원 등도 강한 정보력과 인맥 때문에 각 캠프의 포섭 대상이다.

경기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지방의원 1명이 선거인단 모집에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며 “지방의원 3, 4명을 데리고 일하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을 따라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안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취하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이종걸 후보 “불법 없었다” 반박

민주통합당 안양시 만안구 이종걸 예비후보 측은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본보 기사(3월 2일자 A3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관계기관에 질의한 결과 ‘본인의 동의하에 선거인

단 등록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민주통합당 중앙당선관위)’, ‘본인 동의하에 주민번호 및 핸드폰 인증번호를 알려줘서 컴퓨터에 입력해 등록을 하는 대리등록 모집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양 만안구 선관위로부터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등록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이 선심위 시정요구 외에 언론중재위 조정도 같이 신청해서 반론보도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취하함(피시정요구인도 재심청구를 낸 후 취하함)

의 결 번 호	2012국선63(시심)
시정 요구인	곽 진 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헤럴드경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대표이사 이 영 만
시정요구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3월 5일자 5면 『격전지 ‘빅 10’ 윤곽…FTA·심판론 ‘票心’ 잡기 불붙었다』 제하의 기사
신 청 취 지	피신청요구인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요구 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1. 제목 : 김해율 유력후보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지 3월 5일자 5면 『격전지 ‘빅 10’ 윤곽…』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현 민주통합당 김해율 곽진업 예비후보가 불공정한 기사라며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김해율에 공천을 신청한 곽 후보는 본지 보도가 여론조사 내용의 명시나 객관적 자료 없이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지역의 특정 후보를 “유력”으로 표기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기사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표에도 특정 후보를 단독으로 유력후보로 명시했다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지가 해당 보도에 대해 잘못 보도한 것을 인정하고 해당 보도를 바로잡으며, 공천 확정시까지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도내용

격전지 ‘빅 10’ 윤곽 …FTA·심판론 ‘票心’ 잡기 불붙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천에 속도를 더하면서 4·11총선의 격전지 윤곽이 잡히고 있다. 5일 민주당이 제4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고, 새누리당도 영남권과 수도권 등 100여곳의 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중략)

▶경남 김해율=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율은 ‘친노’ 부활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친노 정서가 가장 강한 이 지역을 겨냥,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대항마로 새누리당은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태호 의원을 공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노무현의 사람’으로 꼽히는 김 본부장의 승패여부가 영남권 내 친노 정서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격전지 '빅 10' 윤곽...FTA·심판론 '票心 잡기' 불붙었다

1

신청 후 보도문

盧風 심장 김해을...野 김경수·곽진업 치열한 경합

391

의 결 번 호	2012국선97(시심)
시정 요구인	원 혜 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22호
피시정요구인	홍 선 (부천21 발행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54번길 24
시정요구기사	부천21 2012년 1월 27일자 1면 「이사철, 차명진 40%, 임해규 29%, 원혜영 0%」 제하의 기사
신 청 취 지	시정요구대상은 부천21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시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이사철, 차명진 40%, 임해규 29%, 원혜영 0%”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3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시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시정대상 기사를 게재할 당시, 신문의 발행부수와 배포 지역을 동일 하게 하여 정정보도 기사를 배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원혜영 의원 공약완료율’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27일자 1면에 “이사철, 차명진 40%, 임해규 29%, 원혜영 0%”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 원혜영의 공약완료율이 0%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혜영 의원은 공약 8개 중 5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부천 현역 의원 공약완료율 이사철, 차명진 40%, 임해규 29%, 원혜영 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분석 결과

제18대 부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점검 결과 한나라당 이사철, 차명진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임해규 의원 29%를 나타냈으며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0%로 나타나 공약 실천을 둘러싼 ‘공약(空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51명 중 공약 이행 정보를 제출한 40명의 공약 878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완료 354건(40.31%), 정상추진 250개(28.47%), 일부추진 203개(23.12%), 보류폐기 56개(6.37%), 기타 15개(1.7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천지역의 공약은 모두 73건으로 완료가 24건(32.8%), 정상추진 32건(43.8%), 일부추진 9건(12.3%), 보류·폐기 8건(10.9%)으로 조사됐다. (중략)

그러나 민주통합당 오정구 원혜영의원은 5건 공약 중 완료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정상추진 3건(60%), 일부 추진 1건(20%), 보류·폐기 1건(20%)으로 나타났다.

현재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절반이 넘는 59.69%가 일부만

추진되거나 폐기된 셈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 현역 의원 공약완료율

이사철, 차명진 40%, 임해규 29%, 원혜영 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분석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중 공약 이행 정도를 제18대 부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결과와 한나라당 이사철, 차명진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임해규 의원은 29%를 나타냈으며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0%로 나타나 공약 실천을 둘러싼 '공약(空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51명 중 공약 이행 정도를 제출한 40명의 공약 878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완료 354건(40.31%), 정상추진 250건(28.47%), 일부추진 203건(23.12%), 보류·폐기 56건(6.37%), 기타 15건(1.7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천지역의 공약은 모두 73건으로 완료 24건(32.8%), 정상추진 32건(43.8%), 일부추진 9건(12.3%), 보류·폐기 8건(10.9%)으로 조사됐다.

개별 의원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원미갑 임해규 의원이 31건 공약 중 완료 9건(29%), 정상추진 16건(51.6%), 일부추진 5건(16.1%), 보류·폐기 1건(3.2%)이다.

한나라당 원미갑 이사철 의원은 10건의 공약 중 완료 4건(40%), 정

상추진 6건(60%)으로 일부추진이나 보류·폐기는 없었다.

한나라당 소사구 차명진 의원은 27건 공약 중 완료 11건(40.7%), 정상추진 7건(25.9%), 일부추진 3건(11.1%), 보류·폐기 6건(22.2%)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오정구 원혜영 의원은 5건 공약 중 완료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정상추진 3건(60%), 일부추진 1건(20%), 보류·폐기 1건(20%)으로 나타났다.

현재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절반이 넘는 50.69% 일부만 추진되거나 폐기된 셈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연구자 hwo099@daum.net

신청 후 보도문

‘원혜영 의원 공약완료율’ 관련 보도문

“공약 8개 중 5개 완료 또는 올해 완료예정”

강주완 기자 (bucheon21@hanmail.net)

본 신문은 지난 1월 27일자 1면에 “부천 현역 의원 공약완료율”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의 국회의원 공약 이행 분석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혜영 후보는 본지가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것이 최종 자료가 아니며,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보도자료 배포 후 각 의원실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받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가 매니페스토본부 및 본지에 소명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공약 8개 중 오정구 관내 경찰서 개청 등 5개는 완료되었거나 올해 완료예정으로 나왔으며, 다른 매체도 이를 반영해서 수정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본부는 본지 기사와 관련해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정보를 분석했을 뿐 개별 의원 순위 발표를 한 바 없으며 지금도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1월 하순의 보도자료는 최종 자료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본지에서 본의 아니게 원 후보측에 피해를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기사입력 : 2012-04-02 12:03

Copyright © 부천21 (<http://www.bucheon21.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의 결 번 호	2012국선100(시심)
시정 요구인	서 미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극동빌딩 12층 대표이사 이 종 승
시정요구기사	뉴시스 2012년 3월 24일자 「[4·11총선]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 제하의 기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뉴시스(http://newsis.com)의 홈페이지 정지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4·11총선]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24일자 기사에 “[4·11총선]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서미경 후보가 부채만 5억 4587만원을 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중앙 선관위의 전산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며 서미경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1억9957만5000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내용

[4·11총선] 비례대표 183명 3.4대 1 경쟁률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20개 정당이 비례대표(54석) 후보로 183

명을 등록,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략)
또 각 당 비례대표이 평균 재산 금액은 15억 7308만원으로 전체 후보들 중 10억 이상 재산가도 32%인 58명에 달했다.
비례대표 후보 중 가장 가난한 이는 새누리당의 서미경 후보로 마이너스(-) 5억45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후략)

[4·11총선]비례대표 183명 3.4대 1 경쟁률

NEWSis () | 기사입력 2012-03-24 15:52 | 최종수정 2012-03-24 16:07

【서울=뉴스is】 김동현 기자 =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20개 정당이 비례대표(54석) 후보로 183명을 등록,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 등록후보자 수는 ▲새누리당 44명 ▲민주통합당 38명 ▲자유선진당 16명 ▲통합진보당 20명 ▲창조한국당 4명 ▲국민생각 7명 ▲가자!대국민중심당 7명 ▲친박연합 4명 ▲국민행복당 6명 ▲기독교당 8명 ▲녹색당 3명 ▲대한국당 3명 등이었다.

여성 후보는 전체 183명 중 79명으로 42%를 차지했고, 여성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정당인'은 91명으로 49%였다.

평균 나이는 52세였다. 최고령 후보자는 '가자!대국민중심당'의 윤영오(75) 후보, 최연소 후보는 청년당 비례대표 4번을 부여받은 우인철(25) 후보였다.

특히 20~30대 비례대표 후보자는 21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49명으로 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5명 ▲30대 16명 ▲40대 53명 ▲50대 65명 ▲60대 43명 ▲70대 6명이었다. 20대 비례후보는 민주당이 2명, 창조한국당·미래연합·청년당이 각각 1명씩이었다.

학력별로는 160명(89%)이 대학교 이상이었으며 고졸 5명, 중졸 2명, 초졸 2명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신의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사람도 14명이었다.

최고 재력가는 자유선진당 안대륜 후보(에코포레그를 명예회장)로 신고한 재산이 377억9032만원이나 돼 2위인 새누리당 현영희 후보가 신고한 181억5236만원보다 2배가량 많았다.

또 각 당 비례대표의 평균 재산 금액은 15억7308만원으로 전체 후보들 중 10억 이상 재산가도 32%인 58명에 달했다.

비례대표 후보 중 가장 가난한 이는 새누리당의 서미경 후보로 마이너스(-) 5억 45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65억425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선진당(40억4349만원) ▲국민생각(37억5550만원) ▲가자!대국민중심당(25억4388만원) ▲창조한국당(13억4366만원) ▲통합진보당(2억9145만원)이 뒤를 이었

신청 후 보도문

"[4·11총선]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 관련 정정보도문

기사등록 일시 [2012-03-30 11:27:58] 최종수정 일시 [2012-03-30 11:30:38]

【서울=뉴시스】본지는 지난 3월 24일자 기사에 "[4·11총선]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이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서미경 후보가 부채만 5억 4587만원을 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중앙 선관위의 전산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며 서미경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1억9957만5000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5부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 인

[개정 2012. 3.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 3에 따라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
2.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의 형평성
3. 사실에 기초한 객관성
4. 정치적 중립

제3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선거기사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심의기준에 대한 언론사의 반복 위반 여부

제2장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 보도하여야 한다.

제5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하며, 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취재를 통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해 예측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을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용보도 및 인터뷰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할 때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할 경우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③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설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전제 여건 및 결과와 다른 해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 ①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보도할 때는 후보자나 정당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제12조(기고 등)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부필진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삭제>

제13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진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권리구제

제17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8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결 정

제19조(제재결정 등) ①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12년 3월 5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또는 주의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

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첨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호		직 업	
	한 자					
주 소				전화번호		
				e-mail		
학 력						
경 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시 정 요 구 서			
시정요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e-mail 주소)		④ 전 화 번 호	
시정요구 대상	⑤ 언론사명 (매체명)		⑥ 대표자 성명	
	⑦ 보도일자 및 지면		⑧ 소 재 지	
	⑨ 보도내 용		⑩ 전 화 번 호	
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재심청구서	
원심결정	의결번호	
	결정일자	
청구인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주 소	
	전화번호	
	E-mail	
청구의 취지 및 사유	별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반론보도청구회부서			처리시간
				48시간
청 구 인	①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② 주 소 (e-mail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⑦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⑧ 주 소	
	⑨ 대표자 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소 재 지		⑫ 전 화 번 호	
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	⑬ 언 론 사 명 (매 체 명)			
	⑭ 보도일자 및 지면			
	⑮ 보 도 내 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				수 수 료
				없 음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6호, 2011.12.2, 타법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정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

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

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와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⑧~⑨ (생략)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자명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

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

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⑦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간지 132개(중앙일간 31, 지역일간 101), 주간지 253개(종합주간 32, 지역주간 220, 특수주간 1), 월간지 25개, 뉴스통신 3개 : 총 413개(2012년 3월 15일 기준)

1) 일간지 132개

구 분	매 체 명	
중 앙 일 간 (31)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일간스포츠 - 농민신문 -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에이엠세븐, 이브닝, City(시티), 스포츠한국	
지 역 일 간 (101)	서울(12)	내외일보, 새한일보(구 대한매일신문)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경향매일, 이투데이, 환경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4)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대구(6)	대구신문, 대구연합일보,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경일보
	경북(4)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안일보
	인천(3)	경도신문, 인천신문, 인천일보
	경기(16)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수원일보, 오늘신문, 일간경기
	광주(15)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남도매일, 전남도민일보, 주간호남일보, 희망일보(구 일간호남)

구 분	매 체 명	
지 역 일 간 (101)	대전(8)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대전투데이
	충북(6)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전북(6)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전북(4)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일간전북타임스
	경남(9)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일간뉴스경남, 한남일보

2) 주간지 : 252개

구 분	매 체 명	
종 합 주 간 (32)	뉴스스아이즈, 뉴스위크한국판, 대한뉴스, 매경ECONOMY, 미래한국, 시사IN(인),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씨앤비(CNB)저널, 주간경향,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믹리뷰,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동아비즈니스 리뷰,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 내막, 시민사회신문, 시사서울, 월드경제,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주간한국	
지 역 주 간 (220)	서울(39)	강남내일신문, 강남저널,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노원신문, 뉴스in, 동북일보,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양천투데이, 영등포신문, 위클리온서울, 은평시민신문, 종로저널, 주간 강남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정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주간 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지역연합신문 강릉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강원(11)	강원영동네트워크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태백신문, 홍천신문
	부산(1)	부산여성뉴스
	울산(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제주(2)	서귀포신문, 제주프레스

구 분		매 체 명
지 역 주 간 (220)	대구(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경북(26)	(영천)시민신문,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새영남신문, (주간)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예천신문, 울진21, 울진신문,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광주, 전남(25)	시민의소리,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남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강진신문, 주간나주신문, 주간순천신문, 주간영광신문, 주간완도신문, 주간장흥신문, 주간함평신문, 주간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대전, 충남(12)	공주신문, 금산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온양신문, 청양신문, 충남시사신문, 홍성신문, 서해안신문, 놀이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충북(12)	영동신문, 음성뉴스,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증평괴산저널,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옥천신문, 삼군신문
	경기(32)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과천시대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뉴스리더, 동부교차로저널,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세종신문, 시흥신문, 아이디분당, 안산정론신문, 안성신문, 안양광역신문, 양주신문, 여주신문, 오산시민신문, 용인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주간현대,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하남신문, 남동신문, 부평신문
	전북(21)	고창코리아,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신문, 익산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주간군산신문, 주간김제신문, 주간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익산투데이, 해피데이고창
	경남(34)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거창중앙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름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창원신문, 창녕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뉴스,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함안정통신문, 함양신문, 황강신문, The 함안신문, 경남여성신문

※ 특수주간(1) : 대한변협신문

3) 월간지 : 25개

구 분	매 체 명
종합월간(12)	경제풍월, 뉴스저널, 서울21,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이코노미플러스, 포브스코리아, 포춘코리아, 폴리피플, 한국논단
여성지(6)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지역월간(7)	피플파워(경남), 굿뉴스피플(광주), 전라도닷컴(광주), 시사전북(광주), 김포뉴스(경기), 전국지방시대(경기), 고흥타임즈(광주)

4) 뉴스통신 : 3개

뉴시스, 연합뉴스, KNS뉴스통신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사과문 게재	2012국선80	CNB저널	64
	사과문 게재	2012국선89	거창신보	71
	사과문 게재	2012국선113	충청신문	78
	사과문 게재	2012국선124	충청리뷰	84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16	경도신문	93
	경 고	2012국선66	수도권일보	96
	경 고	2012국선67	월요신문	98
	경 고	2012국선71	CNB저널	102
	경 고	2012국선88	종로저널	107
	경 고	2012국선90	삼군신문	112
	경 고	2012국선105	문화일보	115
	경 고	2012국선106	동아일보	117
	경 고	2012국선107	서울신문	119
	경 고	2012국선108	조선일보	121
	경 고	2012국선112	남도일보	122
	경 고	2012국선132	상주신문	124
	주 의	2012국선1	영남일보	127
	주 의	2012국선3	경기매일	131
	주 의	2012국선6	울산매일	133
	주 의	2012국선12	충청일보	138
	주 의	2012국선13	보은신문	140
	주 의	2012국선15	우리일보	142
	주 의	2012국선17	CNB저널	144
	주 의	2012국선18	강원리뷰	149
	주 의	2012국선19	완해진신문	152
	주 의	2012국선27	대구일보	154
	주 의	2012국선28	완주신문	157
	주 의	2012국선29	전라일보	160
	주 의	2012국선30	우먼센스	162
	주 의	2012국선33	내외일보	167
	주 의	2012국선34	전광일보	169
	주 의	2012국선35	폴리피플	171
	주 의	2012국선36	'인천일보/경기인천일보	178
	주 의	2012국선38	시민사회신문	180
	주 의	2012국선39	아시아투데이	181
	주 의	2012국선40	함평신문	182
	주 의	2012국선44	충청타임즈	184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주 의	2012국선45	중부일보	187
	주 의	2012국선46	송파신문	189
	주 의	2012국선47	일요시사	191
	주 의	2012국선50	경인매일	194
	주 의	2012국선57	동아일보	196
	주 의	2012국선58	서울경제	198
	주 의	2012국선59	조선일보	200
	주 의	2012국선60	김포신문	202
	주 의	2012국선64	동작신문	203
	주 의	2012국선65	일요신문	205
	주 의	2012국선69	충북뉴스	208
	주 의	2012국선70	한겨레	210
	주 의	2012국선72	일요시사	212
	주 의	2012국선73	파주저널	214
	주 의	2012국선76	중앙일보	216
	주 의	2012국선77	동양일보	218
	주 의	2012국선78	충청리뷰	220
	주 의	2012국선81	일요서울	222
	주 의	2012국선86	새전북신문	224
	주 의	2012국선91	광주일보	226
	주 의	2012국선93	경북자치신문	229
	주 의	2012국선94	김천신문	231
	주 의	2012국선95	대한변협신문	232
	주 의	2012국선101	경향신문	234
	주 의	2012국선102	한겨레	236
	주 의	2012국선104	반월신문	240
	주 의	2012국선109	경남여성신문	242
	주 의	2012국선110	경기일보	244
	주 의	2012국선114	울진신문	246
	주 의	2012국선115	월요신문	248
	주 의	2012국선120	매일신문	250
	주 의	2012국선121	대경일보	252
	주 의	2012국선122	경향신문	254
	주 의	2012국선123	미디어워치	257
	주 의	2012국선125	한겨레	260
	주 의	2012국선126	여성조선	262
	주 의	2012국선133	시대일보	268
	권 고	2012국선2	송파신문	271
	권 고	2012국선7	충청일보	272
	권 고	2012국선8	서울일보	273
	권 고	2012국선9	전라일보	274
	권 고	2012국선10	전북중앙신문	275
	권 고	2012국선11	전북일보	276
	권 고	2012국선14	경북도민일보	277
	권 고	2012국선20	서울경제	279
	권 고	2012국선21	전라일보	280
	권 고	2012국선22	호남신문	283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권 고	2012국선23	충청신문	285
	권 고	2012국선24	새전북신문	287
	권 고	2012국선31	아주경제	289
	권 고	2012국선32	충북일보	291
	권 고	2012국선37	뉴스포스트	293
	권 고	2012국선48	주간한국	295
	권 고	2012국선49	무등일보	297
	권 고	2012국선51	인천신문	300
	권 고	2012국선52	남도일보	301
	권 고	2012국선53	광남일보	309
	권 고	2012국선54	매일신문	311
	권 고	2012국선55	대구연합일보	313
	권 고	2012국선56	공주신문	315
	권 고	2012국선68	주간한국	317
	권 고	2012국선79	경기일보	320
	권 고	2012국선82	무등일보	322
	권 고	2012국선83	전남일보	324
	권 고	2012국선84	서울경제	326
	권 고	2012국선85	광주매일신문	328
	권 고	2012국선87	경향신문	330
	권 고	2012국선92	울산신문	332
	권 고	2012국선103	홍성신문	334
	권 고	2012국선111	광주매일신문	336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시정요구심의	사과문 게재	2012국선75	성윤환 / 상주고향신문	337
	사과문 게재	2012국선116	차영 / 양천신문	341
	사과문 게재	2012국선128	최인기 / 나주신문	346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42	소기숙 / 중부일보	352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43	김종태 / 상산신문	355
	반론보도문 게재	2012국선26	조용균 / 서울신문	359
	경 고	2012국선96	이학영 / 경기헤럴드	362
	경 고	2012국선117	강석진 / 거창신문	365
	경 고	2012국선119	박요찬 / 과천저널	368
	기 각	2012국선25	허동준 / 중앙일보	371
	기 각	2012국선98	서미경 / 동아일보	373
	기 각	2012국선99	서미경 / 서울신문	375
	기 각	2012국선118	강석진 / 거창군민신문	377
	기 각	2012국선127	권선택 / 중도일보	379
	각 하	2012국선5	박석삼 / 모든 언론사	382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4	이한성 / 경북매일신문	383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41	정선진 / 자치안성신문	385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62	이종걸 / 동아일보	387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63	곽진업 / 헤럴드경제	390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97	원혜영 / 부천21	392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100	서미경 / 뉴시스	394

2) 언론사 별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자 체 심 의	CNB저널	주 의	2012국선17	144
		경고	2012국선71	102
		사과문 게재	2012국선80	64
	강원리뷰	주 의	2012국선18	149
	거창신보	사과문게재	2012국선89	67
	경기매일	주 의	2012국선3	131
	경기일보	권 고	2012국선79	320
		주 의	2012국선110	244
	경남여성신문	주 의	2012국선109	242
	경도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16	93
	경북도민일보	권 고	2012국선14	277
	경북자치신문	주 의	2012국선93	229
	경인매일	주 의	2012국선50	194
	경향신문	권 고	2012국선87	330
		주 의	2012국선101	234
		주 의	2012국선122	254
	공주신문	권 고	2012국선56	315
	광남일보	권 고	2012국선53	309
	광주매일신문	권 고	2012국선85	328
		권 고	2012국선111	336
	광주일보	주 의	2012국선91	226
	김천신문	주 의	2012국선94	231
	김포신문	주 의	2012국선60	202
	남도일보	권 고	2012국선52	301
		경 고	2012국선112	122
	내외일보	주 의	2012국선33	167
	뉴스포스트	권 고	2012국선37	293
	대경일보	주 의	2012국선121	252
	대구연합일보	권 고	2012국선55	313
	대구일보	주 의	2012국선27	154
	대한변협신문	주 의	2012국선95	232
	동아일보	주 의	2012국선57	196
		경 고	2012국선106	117
	동양일보	주 의	2012국선77	218
	동작신문	주 의	2012국선64	203
	매일신문	권 고	2012국선54	311
		주 의	2012국선120	250
	무등일보	권 고	2012국선49	297
		권 고	2012국선82	322
	문화일보	경 고	2012국선105	115
	미디어워치	주 의	2012국선123	257
	반월신문	주 의	2012국선104	240
	보은신문	주 의	2012국선13	140
	삼군신문	경 고	2012국선90	112
	상주신문	경 고	2012국선132	124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자 체 심 의	새전북신문	권 고	2012국선24	287
		주 의	2012국선86	224
	서울경제	권 고	2012국선20	279
		주 의	2012국선58	198
		권 고	2012국선84	326
	서울신문	경 고	2012국선107	119
	서울일보	권 고	2012국선8	273
	송파신문	권 고	2012국선2	271
		주 의	2012국선46	189
	수도권일보	경 고	2012국선66	96
	시대일보	주 의	2012국선133	268
	시민사회신문	주 의	2012국선38	180
	아시아투데이	주 의	2012국선39	181
	아주경제	권 고	2012국선31	289
	여성조선	주 의	2012국선126	262
	영남일보	주 의	2012국선1	127
	완주신문	주 의	2012국선28	157
	완해진신문	주 의	2012국선19	152
	우리일보	주 의	2012국선15	142
	우먼센스	주 의	2012국선30	162
	울산매일	주 의	2012국선6	133
	울산신문	권 고	2012국선92	332
	울진신문	주 의	2012국선114	246
	월요신문	경 고	2012국선67	98
		주 의	2012국선115	248
	인천신문	권 고	2012국선51	300
	인천일보/경기인천일보	주 의	2012국선36	178
	일요서울	주 의	2012국선81	222
	일요시사	주 의	2012국선47	191
		주 의	2012국선72	212
	일요신문	주 의	2012국선65	205
	전광일보	주 의	2012국선34	169
	전남일보	권 고	2012국선83	324
	전라일보	권 고	2012국선9	274
		권 고	2012국선21	280
		주 의	2012국선29	160
	전북일보	권 고	2012국선11	276
	전북중앙신문	권 고	2012국선10	275
	조선일보	주 의	2012국선59	200
		경 고	2012국선108	121
	종로저널	경 고	2012국선88	107
	주간한국	권 고	2012국선48	295
		권 고	2012국선68	317
	중부일보	주 의	2012국선45	187
	중앙일보	주 의	2012국선76	216
	충북뉴스	주 의	2012국선69	208
	충북일보	권 고	2012국선32	291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자 체 심 의	충청리뷰	주 의	2012국선78	220
		사과문 게재	2012국선124	84
	충청신문	권 고	2012국선23	285
		사과문 게재	2012국선113	78
	충청일보	권 고	2012국선7	272
		주 의	2012국선12	138
	충청타임즈	주 의	2012국선44	184
	파주저널	주 의	2012국선73	214
	폴리피플	주 의	2012국선35	171
	한겨레	주 의	2012국선70	210
		주 의	2012국선102	236
		주 의	2012국선125	260
	함평신문	주 의	2012국선40	182
	호남신문	권 고	2012국선22	283
	홍성신문	권 고	2012국선103	334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시정요구심의	거창군민신문 / 강석진	기 각	2012국선118	377
	거창신문 / 강석진	경 고	2012국선117	365
	경기헤럴드 / 이학영	경 고	2012국선96	362
	경북매일신문 / 이한성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4	383
	과천저널 / 박요찬	경 고	2012국선119	368
	나주신문 / 최인기	사과문 게재	2012국선128	346
	뉴스스 / 서미경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100	394
	동아일보 / 서미경	기 각	2012국선98	373
	동아일보 / 이종걸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62	387
	부천21 / 원혜영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97	392
	상산신문 / 김종태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43	355
	상주고향신문 / 성윤환	사과문 게재	2012국선75	337
	서울신문 / 조용균	반론보도문 게재	2012국선26	359
	서울신문 / 서미경	기 각	2012국선99	375
	양천신문 / 차영	사과문 게재	2012국선116	341
	자치안성신문 / 정선진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41	385
	중도일보 / 권선택	기 각	2012국선127	379
	중부일보 / 소기숙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42	352
	중앙일보 / 허동준	기 각	2012국선25	371
	헤럴드경제 / 박진업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63	390
	모든 언론사 / 박석삼	각 하	2012국선5	382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397-3114
언론분쟁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팩스 02)397-30893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7083~4 FAX 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763-0020~1 FAX 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676-0360~1 FAX 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525-0778~9 FAX 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211-9022, 9027 FAX 031)211-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255-2878~9 FAX 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286-8081, 8083 FAX 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288-0010, 0981 FAX 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263-1780, 1787 FAX 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 5길(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722-3328, 3352 FAX 064)726-320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인쇄일 2012년 5월 31일

발행일 2012년 5월 31일

발행인 권 성

편 저 :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02-397-3153)

발행처 :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 FAX 02)397-3089

<http://www.pac.or.kr>

<http://www.pac.or.kr>

제 작 : 태성인쇄기획 02)2277-1078

☐ 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대표 02)397-3114 FAX : 02)397-3089
<http://www.pac.or.kr>